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공청회 및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Contents

행사개요 ····· 3

프로그램 ····· 5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발표자료 ····· 7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 33

행사개요
Overview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공청회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일 시 2014. 10. 20(월) 14:00~16:40

장 소 대전광역시청 대강당

주 최 대전광역시

주 관 대전복지재단

프로그램
Program

구분	시 간	소요	내 용	비 고
1 부	14:00~14:03	3′	개회, 국민의례 및 내빈소개	재단 사무처장
	14:03~14:15	12′	인사말	대전복지재단 이사장
			축 사	시장님, 시의회 의장
	14:15~14:35	20′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안) 발표	재단 정책연구팀장
	14:35~15:10	35′	토 론	좌장 / 윤경아 교수
	15:10~15:20	10′	휴 식	
2 부	15:20~15:40	20′	지역대회 식전행사(희망나눔 토크콘서트)	사회자 / 이윤철 아니운서
	15:40~16:00	2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지역대회 개회 및 경과보고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동영상 상영	
	16:00~16:40	40′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우수사례 발표(2개구)	서구 · 유성구협의체
			마무리 및 폐회	사회자 / 이윤철 아나운서

1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발표자료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공청회

- 일시 : 2014. 10. 20.(월) 14:00
- 장소 : 대전광역시청 대강당
- 발표 :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김정득

대전광역시 DAEJEON METROPOLITAN CITY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개요

WELFF

Ⅰ.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개요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개요

-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a. 지역주민의 복지욕구와 지역 특성 등 **지역의 복지현황을 파악하고**
  b. **공공, 민간의 협력과 주민참여를 토대로**
  c. **지역복지서비스를 종합적,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매 4년마다 계획을 수립함**

- **계획작성의 주체 및 수립책임(사회복지사업법 제15조의 4)**
  a. 대전광역시 : 해당부서, 사회복지위원회 / 수립 책임 : 대전광역시장
  b. 5개 자치구 : 해당부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 수립 책임 : 자치구청장
  c. (외부)전문기관 : 욕구조사 등 일부 사안

- **계획수립의 원칙**
  a. **지역성** : 지역고유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는 사업계획 수립
  b. **과학성** :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 기초자료 확보
  c. **일관성** : 상위계획 및 유관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등과 일관성이 확보된 계획
  d. **실천성** : 실천 가능한 계획이 되기 위한 행·재정 계획 수반

Ⅰ.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개요

2. 주요 내용 및 고려사항

주요내용

a. 복지 수요의 측정 및 전망
b. 사회복지시설 및 재가복지의 장단기 공급대책
c. 인력 · 조직 및 재정 등 복지자원의 조달/관리
d. 사회복지 전달체계
e. 사회복지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 제공 방안
f. 지역사회복지에 관련된 통계의 수집 및 정리
g. 사회복지시설종사자의 처우 개선 사항
h. 기타사항

주요 고려사항

a. 사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등 국가시책에 부합
b.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유지
c. 복지욕구와 복지자원에 대한 정확한 진단
d. 지역특성이 반영된 핵심과제 중심의 계획 수립과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e. 비전-전략목표-핵심과제-세부사업 간 체계성/일관성
f. 행 · 재정계획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

Ⅰ.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개요

WELFF 대전복지재단

3. 대전광역시 계획수립 TFT 구성 및 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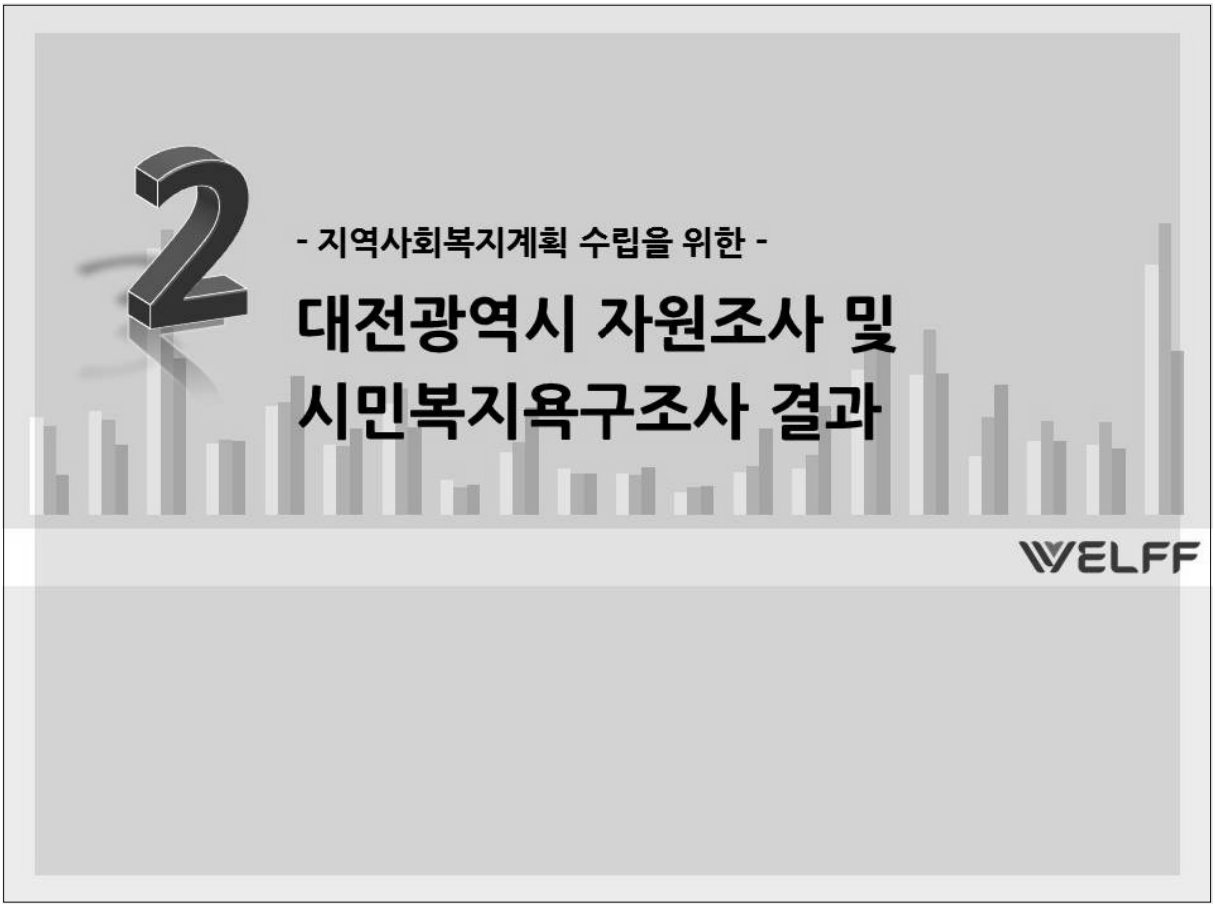
-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계획수립 TF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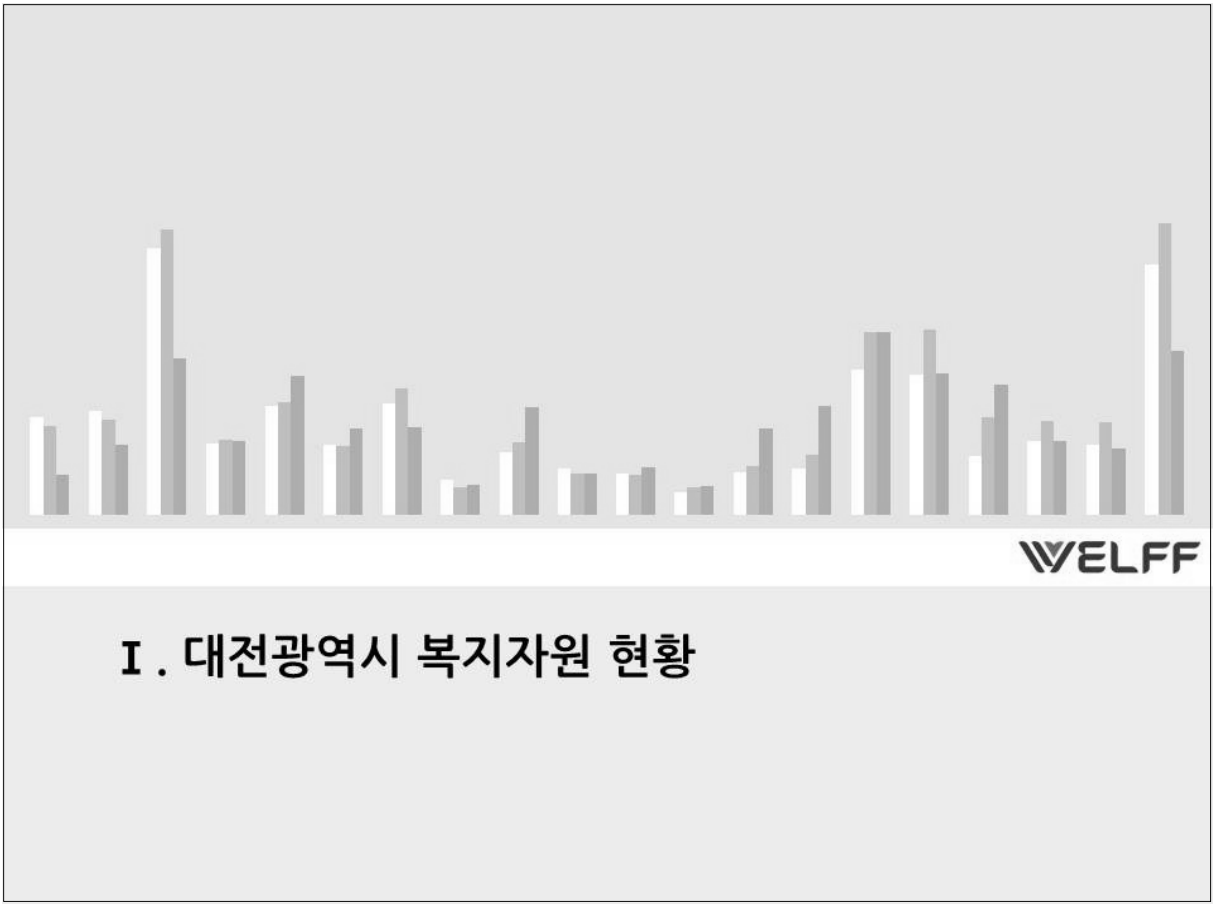
Ⅰ.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개요

WELFF 대전복지재단

3. 대전광역시 계획수립 TFT 구성 및 운영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주 요 역 할
팀 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계획수립 총괄, 지방의회 보고, 의사결정
기획 총괄 (5명)	과장급 공무원	김동선	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 비전, 전략목표, 지표설정 ·우선순위에 따른 핵심사업 선정
	사회복지위원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위원	박성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전문가	김명희	대전복지재단 사무처장	
	지역대표	문창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계획 수립 (6명)	담당 공무원	강규창	복지기획담당 사무관	·지역사회 복지조사의 실시와 결과 분석 ·핵심사업 선정 및 내용작성 ·행정·재정계획수립, 사업추진체계 마련 ·자치구 계획의 조정 및 지원계획 수립
	사회복지위원	김성한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가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가	김정득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지역대표	곽영수	사회복지협의회장	
	지역대표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실장	
평가 분석 (6명)	담당 공무원	이병연	지역복지담당사무관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 분석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 분석 ·자치구 계획 분석평가
	사회복지위원	이민표	대전대 노인보건학과 교수	
	사회복지위원	이채식	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가	조학래	침례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대표	김현채	사회복지사협회장	
	지역대표	황후영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2
-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한 -
대전광역시 자원조사 및
시민복지욕구조사 결과
WELFF


WELFF
Ⅰ. 대전광역시 복지자원 현황

Ⅰ. 대전광역시 복지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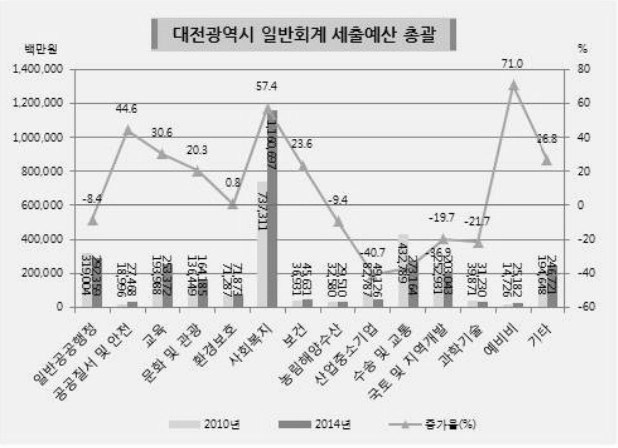
1. 공공자원 - 복지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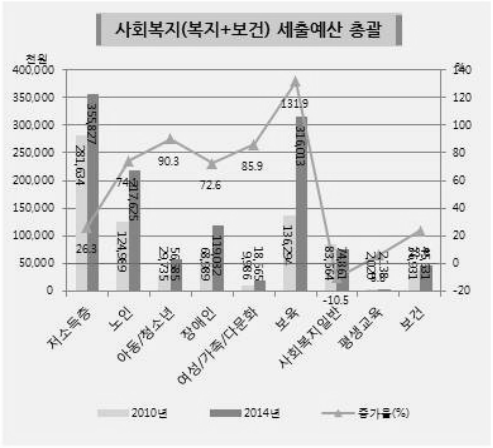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 공공복지예산 - 대전광역시 예산 총괄

▶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 총 금액은 2조 8,735억여원.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은 '사회복지'로 2010년 보다 57.4% 증가.

▶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인 '사회복지'와 '보건' 예산은 2014년 총 1조 2,063억여원으로 2010년에 비해 55.8% 증가.
영역별로는 '보육' 예산이 3,160억여원으로 131.9%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임.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_예산.재정(http://www.daejeon.go.kr)
주 : 2010년 자료_2회 추경 세출예산서(일반+기타), 2014년 자료_본 예산 세출예산서(일반+기타)

Ⅰ. 대전광역시 복지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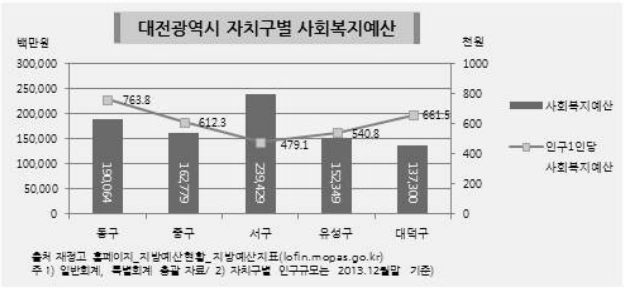
1. 공공자원 - 복지예산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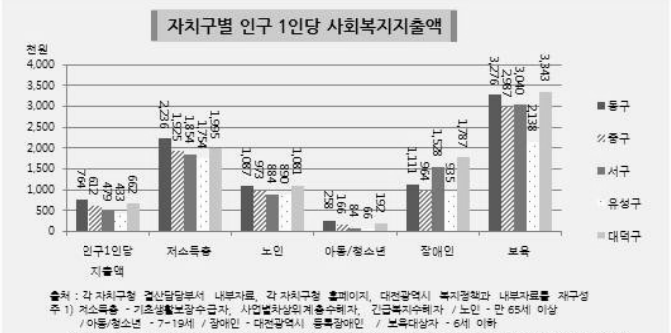
● 공공복지예산 - 자치구별 사회복지 예산 및 인구 1인당 지출액

▶ 자치구별 사회복지예산은
서구가 2,394억여원으로 가장 큼.
그러나,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은
동구가 61.9%로 가장 크며,
인구 1인당 사회복지 예산 규모도 동구가 가장 큼.

▶ 복지분야별 1인당 예산은
동구가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부분에서 가장 많으며,
장애인과 보육대상아동은 대덕구가 가장 많음.



출처 재정고 홈페이지_지방예산현황_지방예산지표(lofin.mopas.go.kr)
주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자료/ 2) 자치구별 인구규모는 2013.12월말 기준)



출처 : 각 자치구청 결산담당부서 내부자료,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를 재구성
주 1)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법차상위계층수혜자 / 긴급복지수혜자 / 노인 - 만 65세 이상
/ 아동/청소년 - 7~19세 / 장애인 - 대전광역시 등록장애인 / 보육대상자 - 6세 이하
2) 유성구는 결산 데이터는 2012년까지만 접근 가능하며 2012년 결산 자료와 2013.12월말 인구 데이터를 활용.

Ⅰ. 대전광역시 복지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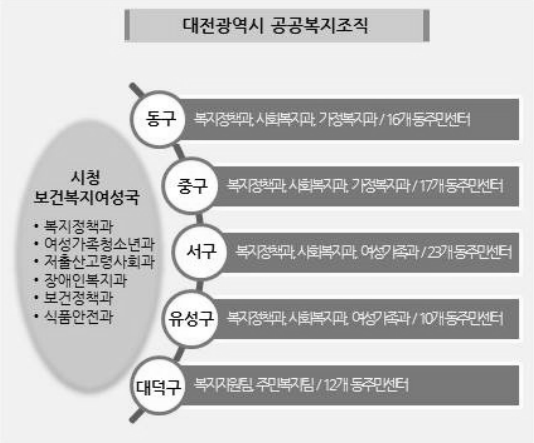
1. 공공자원 - 복지조직 및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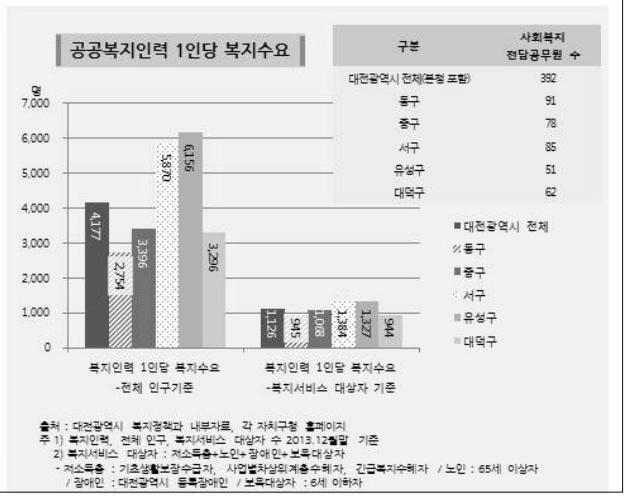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 복지조직 및 인력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은 6개 과로 구성되어 복지와 보건을 총괄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는 동구,중구,서구,유성구가 3개 과, 대덕구는 2개 팀제로 운영되고 있음.

▶ 2013.12월말 기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총 392명이며, 복지인력 1인당 담당해야 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보육대상자)는 약 1,053명.





구분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수
대전광역시 전체(본청 포함)	392
동구	91
중구	78
서구	85
유성구	51
대덕구	62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주 1) 복지인력, 전체 인구,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 2013.12월말 기준
2) 복지서비스 대상자 : 저소득층+노인+장애인+보육대상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법차상위계층수혜자, 긴급복지수혜자 / 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 대전광역시 등록장애인 / 보육대상자 : 6세 이하자

Ⅰ. 대전광역시 복지자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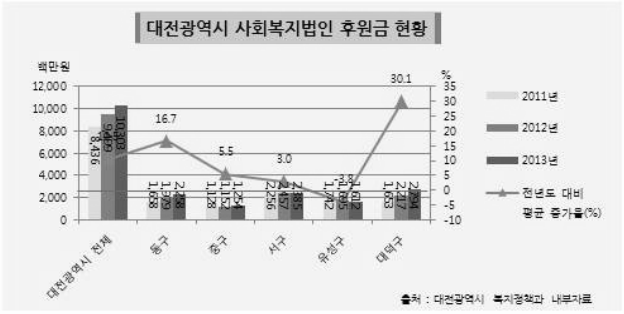
2. 민간자원 - 복지예산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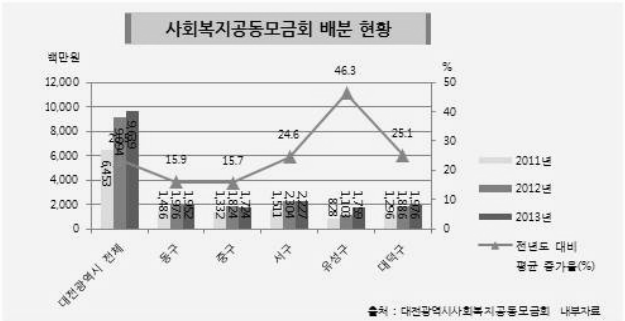
● 민간복지예산 -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및 공동모금회 배분 현황

▶ 정부 및 대전광역시 보조금을 제외한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은 2011~2013년 동안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액되어 2013년 103억여원으로 나타남.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민간기관에 배분되는 예산규모도 평균 23.5%의 증가율을 보이며 2013년 96억여원으로 나타남.
(사회복지법인 후원금과 중복 집계될 가능성 있음)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출처 : 대전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Ⅰ. 대전광역시 복지자원 현황

2. 민간자원 - 복지시설 및 인력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 민간복지시설 및 인력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은 2010년 대비 16.3% 증가한 총 3,054개소(경로당, 어린이집 포함). 서구에 가장 많은 시설이 자리잡고 있으나, 인구대비 기관비율은 가장 낮음.

▶ 민간기관 종사자는 2014.1월 기준, 보육교사를 포함하면 15,626명, 미포함하면 5,753명으로 2010년에 비해 약 40% 정도 증가.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

구분	총계	복지관	노숙인	지역자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보육	정신보건	인구대비 복지기관비율(%)
계	3,054	22	8	5	987(785)	124	24	180	1,680	24	0.199
동구	538	5	6	1	209(159)	30	3	40	241	3	0.215
중구	501	4	1	1	188(143)	18	11	46	227	5	0.189
서구	897	7	-	1	251(196)	29	7	36	557	10	0.180
유성구	691	2	-	1	188(171)	19	-	28	449	4	0.220
대덕구	426	4	1	1	151(116)	28	3	30	206	2	0.208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주 1) 2014.1월말 기준
2) 노인-경로당 수는 괄호로 표기, 루드방크 및 루트마켓 제외

사회복지시설 인력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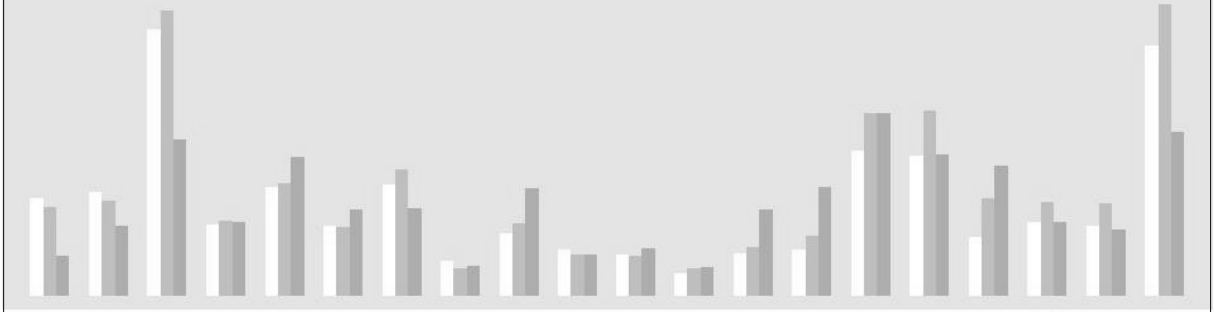
보육시설 미포함

구분	2010년 1월 말	2014년 1월 말	증가율(%)
계	3,971	5,753	44.9
동구	663	1,084	63.5
중구	954	1,212	27.0
서구	1,078	1,394	29.3
유성구	707	1,036	46.5
대덕구	569	1,027	80.5

보육시설 포함

구분	2010년 1월 말	2014년 1월 말	증가율(%)
계	11,109	15,626	40.7
동구	1,898	2,767	45.8
중구	2,075	2,692	29.7
서구	3,298	4,370	32.7
유성구	2,229	3,405	52.7
대덕구	1,614	2,394	48.3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WELFF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연구개요

1. 연구배경 및 목적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5-2018)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마련에 초점을 두었으며,

대전시민 복지욕구에 대한 객관적 실태 및 현황파악을 통해

대전광역시와 5개 기초자치구별 중장기 지역사회복지 전략 및 세부계획을 수립

이를 토대로 시민들의 욕구와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 정책 수립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연구개요

2. 조사과정 및 자료처리

조사실시

- 2014년 3월 10일 ~ 4월 11일(약 6주) 가구방문 면대면 조사
- 총 2,100가구 6,463명 조사완료

조사과정

- 조사표 개발 → 사전 조사 → 대전시민 인구통계자료 확보 및 표본설계 → 조사에 관한 홍보 실시 → 조사원 모집 및 교육 → 면대면 조사 실시 → 조사표 회수 및 검토 → 데이터 입력 및 클리닝 → 데이터 분석

조사내용 분석 및 보완

- 분석 : SPSS Statistics 활용분석(기술통계분석, t검증, ANOVA분석 등)
- 보완 : 본 조사연구의 설문내용 외, 대전광역시 사회지표(2013), 대전광역시 장애인실태조사(2013),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재단내부자료) 자료에 대한 추가 분석 실시.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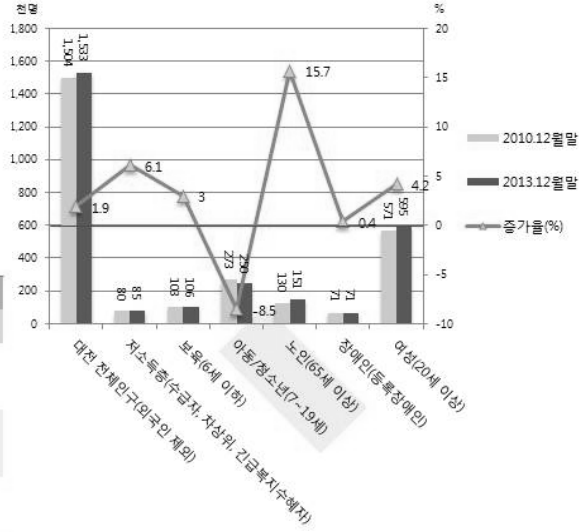
1. 복지대상자 규모

● **대전광역시 복지대상자 인구규모 현황**(2013.12월 말 기준)

▶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수는 1,532,811명
- 2010년(1,503,664명) 보다 1.9% 증가

▶ 복지대상자 영역별로 살펴보면,
아동 · 청소년 인구는 8.5% 감소한 데 반해,
노인인구는 15.7% 증가

구분	2010.12월말	2013.12월말	증가율(%)
대전인구(외국인 제외)	1,503,664	1,532,811	1.9
저소득층(수급자, 차상위, 긴급복지)	80,089	84,953	6.1
보육(만6세 이하)	102,962	106,057	3.0
아동/청소년(만7~19세)	273,062	249,853	-8.5
노인(만65세 이상)	130,245	150,651	15.7
장애인(등록장애인)	71,164	71,441	0.4
여성(만20세 이상)	570,856	594,881	4.2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http://www.daejeon.go.kr), 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2011 대전통계연보
주 1) 저소득층 인구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수혜자, 긴급복지수혜자는 지원사업별로 중복인원이 있을 수 있음.
2) 차상위 계층 수혜자 : 모자가족, 조손 가족, 부자가족, 차상위장애인, 차상위 자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우선 돌봄 차상위청소년 한부모 모자가족, 청소년 한부모 부모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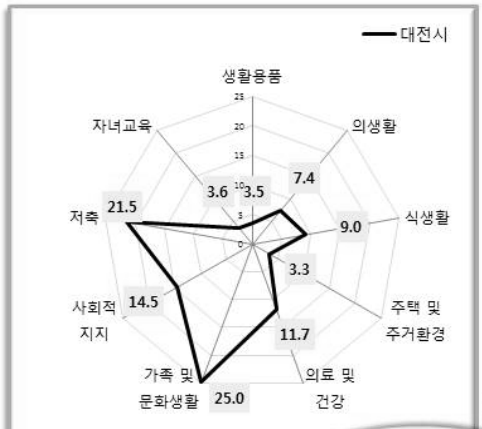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2. 대전시민 생활여건

● **생활여건**

▶ 꼭 필요한데, 안(못)갖고 있는 미충족 비율
▶ 점수가 높을수록 미충족 욕구가 높음. (최고, 100%)



생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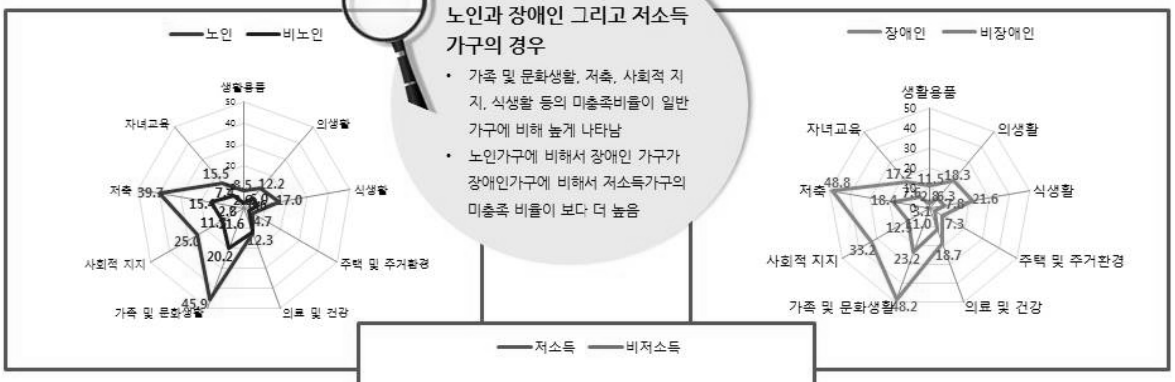
- 가족 및 문화생활, 저축, 사회적지지, 의료 및 건강 순으로 미충족 욕구가 크게 나타남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2. 대전시민 생활여건

● 가구유형별 생활여건

▶ 꼭 필요한데, 안(못)갖고 있는 미충족 비율
▶ 점수가 높을수록 미충족 욕구가 높음. (최고, 100%)



노인과 장애인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경우

- 가족 및 문화생활, 저축, 사회적 지지, 식생활 등의 미충족비율이 일반 가구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노인가구에 비해서 장애인 가구가 장애인가구에 비해서 저소득가구의 미충족 비율이 보다 더 높음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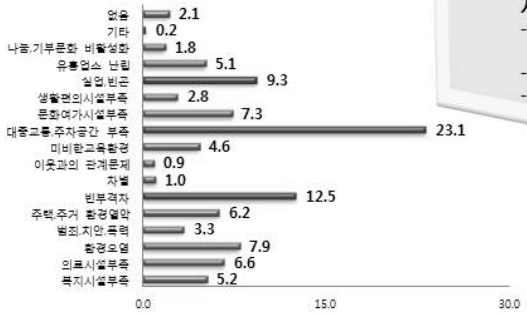
3. 지역사회의 문제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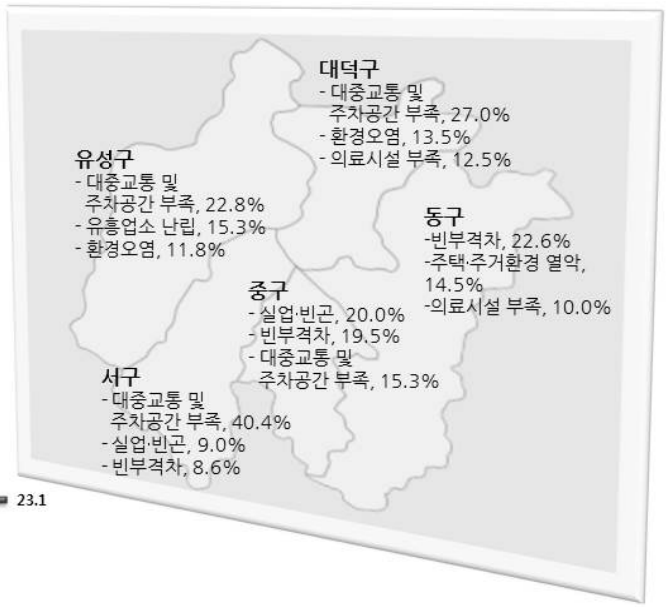
● 가장 큰 지역사회문제

○ 대중교통 및 주차공간 부족, 빈부격차, 실업 및 빈곤 순

○ 서비스 갭 분석 인식조사에서는 문화여가시설 부족, 빈부격차, 실업 및 빈곤문제 등의 순으로 나타남.

대전광역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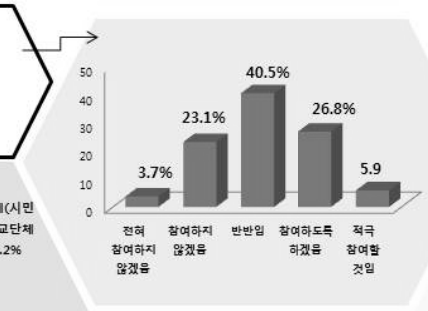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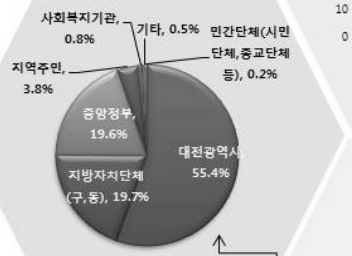
3. 지역사회의 문제와 만족도

● 지역사회의 문제해결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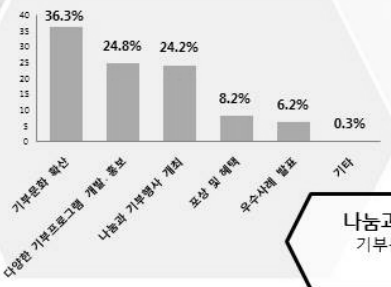
지역사회 문제해결에의 참여의향
40.5%가 참여할 생각과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 반반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남



지역복지 확대와 기부의사
대전시 전체로는 지역사회복지의 확대를 원하지만 기부의사는 없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음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
대전광역시,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문제해결의 중요한 주체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방안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음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4. 대전시민의 복지욕구

● 가장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

○ 저(무)소득,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 자녀양육 및 자녀교육 문제, 신체건강 문제의 순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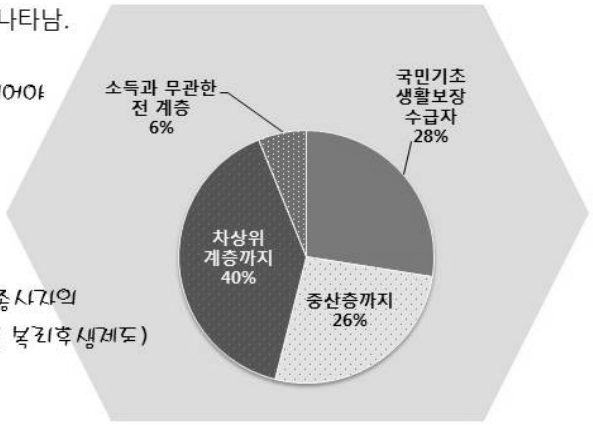
4. 대전시민의 복지욕구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 복지혜택 최소대상 범위

○ 차상위 계층까지라는 응답이 4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그런데, ***서비스 공급자 인식조사***에서는 소득과 무관한 전 계층(시민 전체)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지역복지 인력

○ ***서비스 공급자 인식조사***에서

대전광역시 지역복지발전을 위해서는 복지업무종사자의 과도한 업무량과 낮은 직무만족도(특히 임금 및 복리후생제도) 개선 등 처우개선의 필요성 부각

● 지역복지 전달체계

○ ***서비스 공급자 인식조사***에서

대전광역시 지역복지 전달체계에 대해서 공공과 민간, 민간기관 간의 연계 수준을 중간 이하로 평가.

Ⅱ.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 - 조사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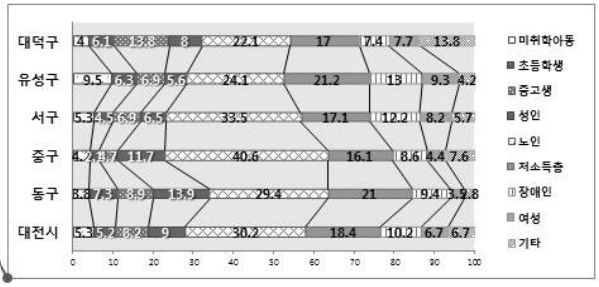
4. 대전시민의 복지욕구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 우선순위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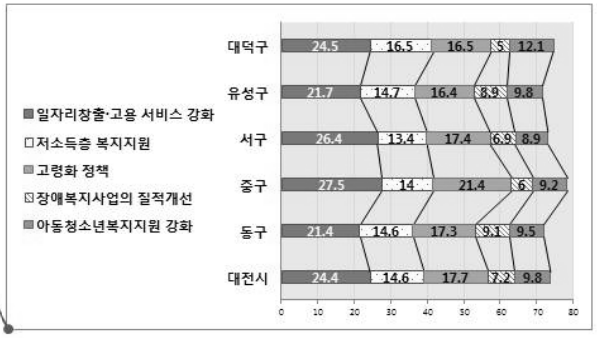
우선순위 사업 대상

-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복지대상자는 '노인(만65세 이상)'
- 2012년의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와 ***공급자 인식조사***에서도 노인으로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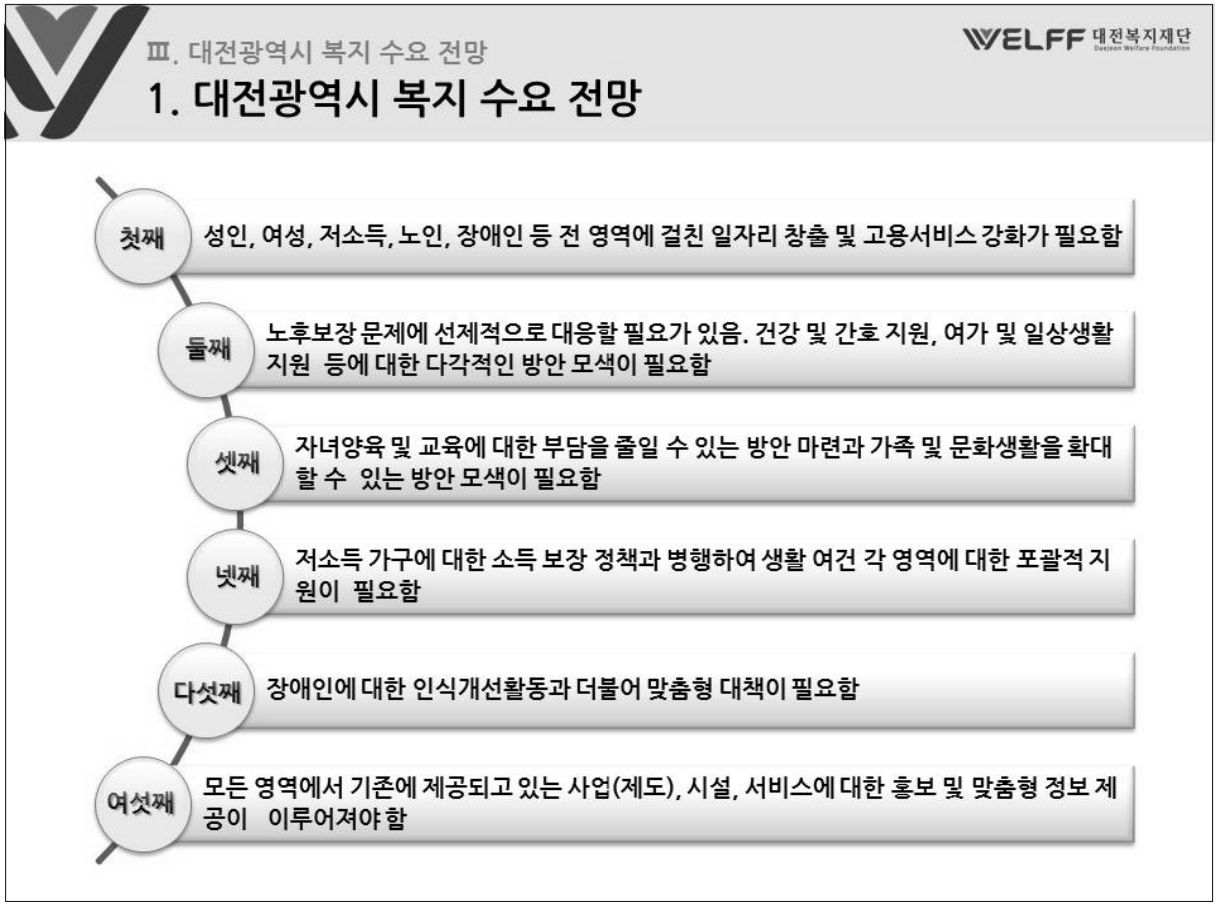


우선순위 사업

-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서비스 강화, 고령화 정책, 저소득층 복지지원 순으로 조사됨
- ***서비스 공급자 인식조사***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서비스 강화, 저소득 복지지원, 고령화 정책 등의 순으로 나타남.



WELFF
Ⅲ. 대전광역시 복지 수요 전망


Ⅲ. 대전광역시 복지 수요 전망
WELFF 대전복지재단
1. 대전광역시 복지 수요 전망
첫째
성인, 여성,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전 영역에 걸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강화가 필요함
둘째
노후보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건강 및 간호 지원, 여가 및 일상생활 지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함
셋째
자녀양육 및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가족 및 문화생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넷째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과 병행하여 생활 여건 각 영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이 필요함
다섯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활동과 더불어 맞춤형 대책이 필요함
여섯째
모든 영역에서 기존에 제공되고 있는 사업(제도), 시설, 서비스에 대한 홍보 및 맞춤형 정보 제공이 이루어져야 함

3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1.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개요

1. 일자리
   /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2. 노인
   /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3. 장애인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대전
4. 여성
   /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살맛나는 도시 건설
5. 아동 · 보육
   /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과 우호적 환경 구축
6. 보건 · 의료
   / 건강불평등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7. 사회적 연대
   / 사회적 연대 기반 구축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1st 일자리 /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복지와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와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gateway)가 형성되지 않아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용률 70% 달성, 여성고용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

▶ 대전광역시 민선 6기 공약 추진 계획 :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단계적 사업 추진 계획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일정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노동시장에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이 필요함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 여성, 노인,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의 공급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은 제한적임

▶ 이러한 수요 공급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선6기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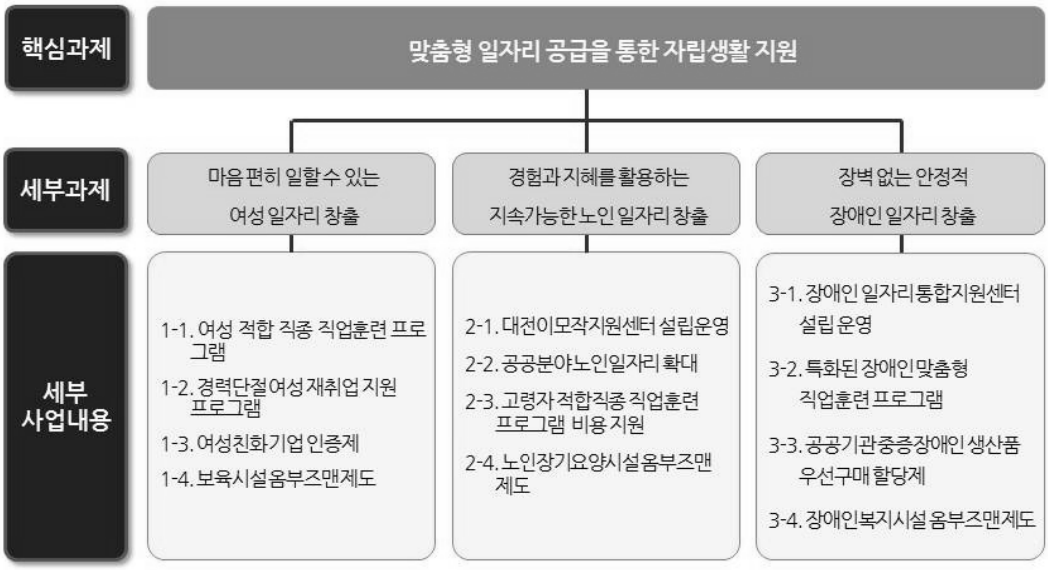
▶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기존의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부문의 일자리 예산과 직업훈련 예산의 증액과 아울러 신규 개발.추진되는 일자리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와 구비로 신규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임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1st 일자리 /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2nd 노인 /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 베이비부머는 조만간 노년기 진입. 노인인구의 절대 수 및 비율 급격한 증가 예상

▶ 자녀동거부양비율감소로 독거노인과 부부가구 노인 비율 증가, 평균수명 증가로 장기요양욕구 지난 노령노인인구 증가, 양극화 현상 두각(활기찬 노후를 원하는 건강하고 경제력 갖춘 노인 vs 건강 및 경제 문제로 사회적 보호 필요로 하는 노인)

▶ 다양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서는 노후소득보장,건강보장,사회서비스 등 노인복지정책을 확대 중이고 대전광역시 민선6기에서는 효문화 진흥, 노인상담 활성화,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등의 정책사업을 단계적 추진 예정

▶ 노인복지증진 도모를 위해 생산적 노후생활 보장, 안전한 노인돌봄체계의 형성, 건강한 노후생활지원 위한 정책 추진 필요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Daejeon Welfare Foundation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2nd 노인 /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6개소에 불과하여 이용자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인력 및 시설자원의 제한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경로당은 시설과 재정자원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녀동거부양 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독거노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적정 수준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중증 노인환자의 요양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비스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 및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제한적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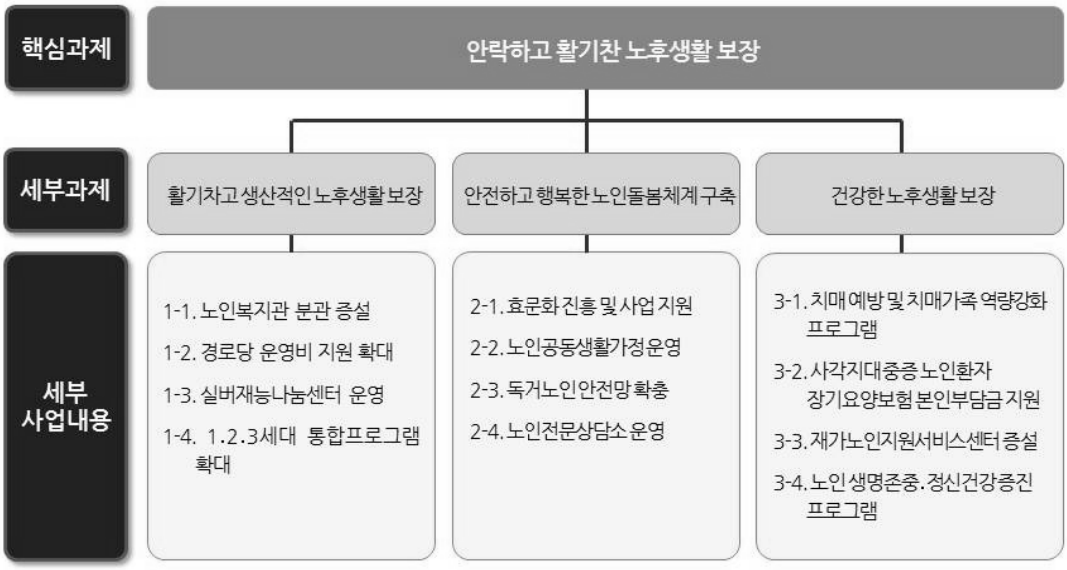
▶ 이러한 수요-공급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의 여가문화 및 자원봉사 활성화 사업, 독거노인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노인돌봄체계의 구축, 정신건강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기존의 노인복지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문 예산의 증액과 아울러 신규 개발·추진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와 구비로 신규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임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2nd 노인 /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3rd 장애인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대전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장애유형에 따라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장애와 관련 없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높지만, 낮은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으므로 의료 보장성 강화와 의료지원 등의 대책 필요

▶ 생활현장에서의 차별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개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강화 등을 위한 사업 필요.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이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키도록 해야 함(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내실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대전 장애인의 경우 교육정도가 매우 낮고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 장애유형에 따라 장기간 다양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 의료비 지원 확대 및 공공주도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의료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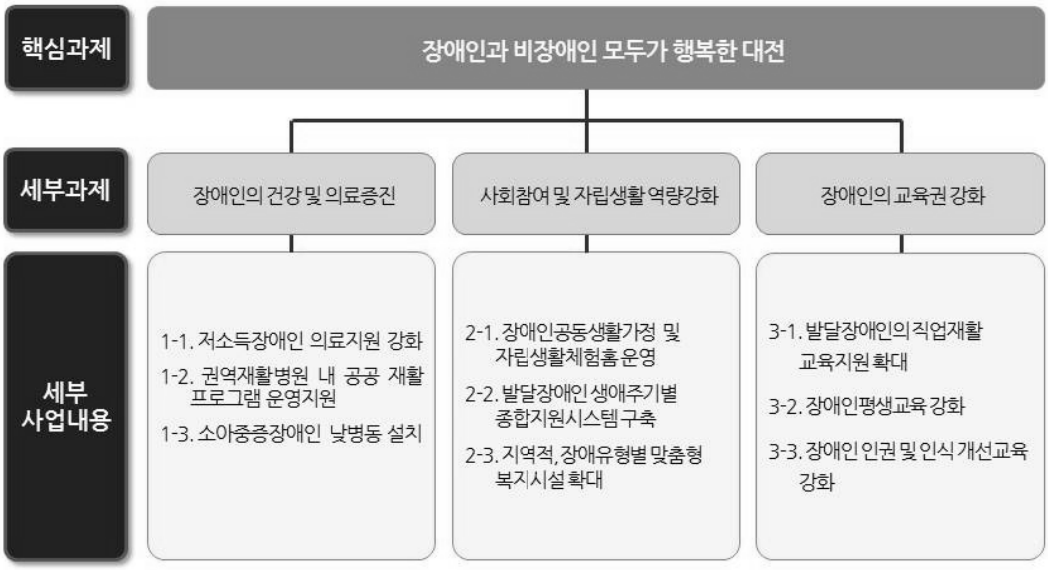
▶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장시간 집중적 치료를 위해 대부분 병원생활하고, 치료 외에 생애주기별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나 특히 제도권을 통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 통합적 서비스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진단부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교육·재활·직업·문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장애성인들을 위한 교육시설 부족하고 지역적 분포의 편재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장애성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해 기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 지원 필요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3rd 장애인 /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대전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4th 여성 /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살맛나는 도시 건설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 중앙정부에서는 임신·분만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경제적 부담경감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민선 6기 공약 추진 계획에 의하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 구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보육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센터 설치와 공공·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실행할 계획임. 이러한 다각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음
  - ▶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 등을 통해 여성친화 도시로써의 자리매김이 더욱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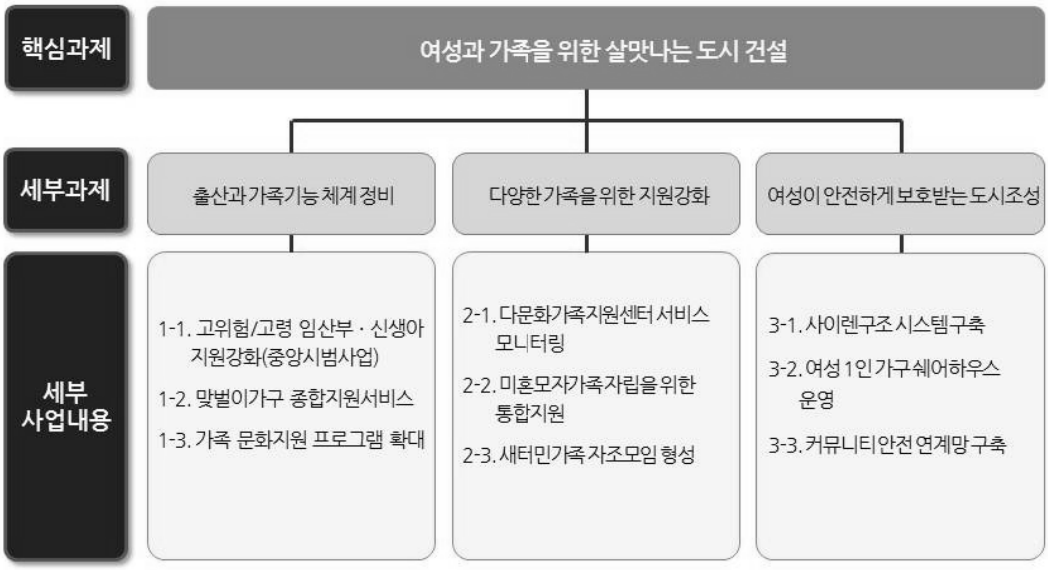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 ▶ 초산 출산연령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산부 건강증진 지원으로는 저소득 여성 임산부에게 초점이 몰림에 따라, 보편적으로 고위험/고령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사업이 확대될 필요가 있음.
  - ▶ 다양한 다문화가족을 위한 교육 및 서비스가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당 하나씩 설치되어 있으며 다양한 국가출신의 이주여성의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모니터링의 필요가 있음.
  - ▶ 20-30대의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하며 이들의 경제력에 의한 주거권 확보가 어렵고, 여성범죄 우려지역에 방법용 CCTV, 가로등, 보안등 설치 개선에도 체감안전도가 낮아 여성의 안전하게 보호받는 도시 조성을 마련할 계획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4th 여성 /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살맛나는 도시 건설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5th 아동·보육 /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과 우호적 환경 구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가족의 소규모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결혼 기피 현상 등으로 자녀의 양육과 돌봄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임. 보육서비스의 확대 공급을 통해 보육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인적자원 형성과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며,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아동정책 대부분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이고 사후대처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과 우호적 환경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지만 보육의 문제와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점차 다양해지고 심각해짐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민선 6기 공약 추진계획에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마더센터 설치,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원 서비스 확대,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등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다양한 특성과 문제를 지닌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아동의 돌봄 체계 강화, 청소년의 역량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5th 아동·보육 /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과 우호적 환경 구축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 대전광역시의 인구대비 어린이집 수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92.7%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으로 나타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개선이 요구됨

▶ 아토피피부염은 영유아기와 소아기에 많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병률이 더 높아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을 통해 바른 먹거리 및 아토피 교육, 급식 · 간식 개선 및 친환경 급식 지원 등을 실시하는 아토핀 전문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와 함께 홀로 남은 아동 특히 빈곤 아동의 증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방과 후 아동의 보호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해체 등의 이유로 가족과 생활할 수 없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아동 공동생활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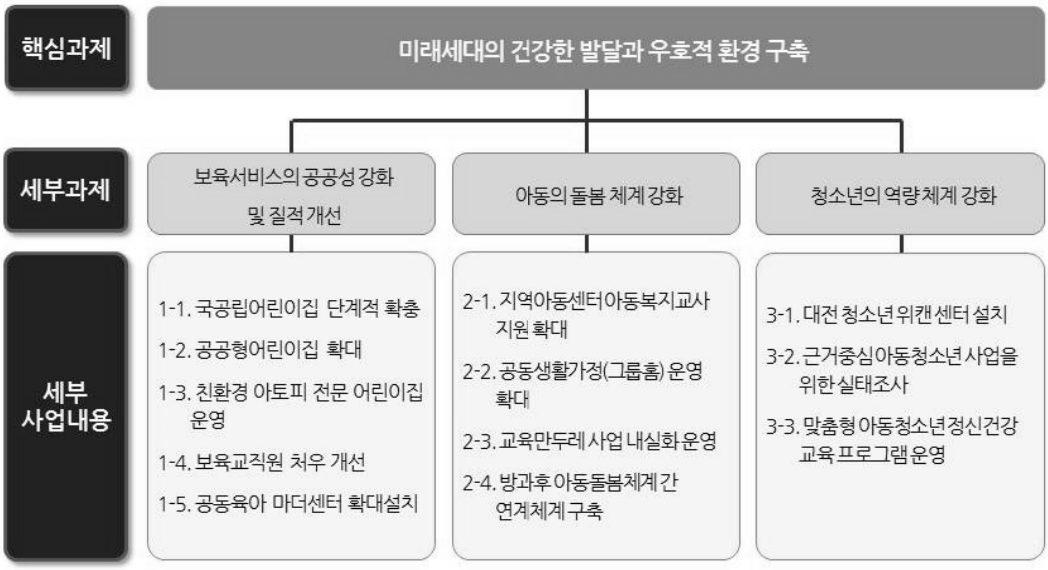
▶ 대전시민 욕구조사결과, 아동청소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진로를 위해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체험이나 직업체험을 위해서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수요-공급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아동의 돌봄 체계 강화, 청소년의 역량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5th 아동·보육 /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과 우호적 환경 구축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6th 보건·의료 / 건강불평등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건강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및 노동환경, 영양부족, 불건전한 건강형태, 경제적 지위 등의 이유로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필요한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 일부는 의료적 욕구가 높지만, 수급자가 되지 못해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의료의 충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안전망한 강화가 필요함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접근성을 낮추며, 정신과적 증상 발생 후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조기 치료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만성화가 초래됨. 또한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을 위한 정신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의 민선 6기 공약 추진계획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공공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치매예방사업,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전시민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6th 보건·의료 / 건강불평등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 대전광역시의 인구대비 의료기관수, 병상수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동구는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전시립의료원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음

▶ 대전시의 취약계층은 전국과 유사하거나 적게 분포하지만, 동구는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수요와 공급 전반적으로 건강관련 지표에서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동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와 함께 기존에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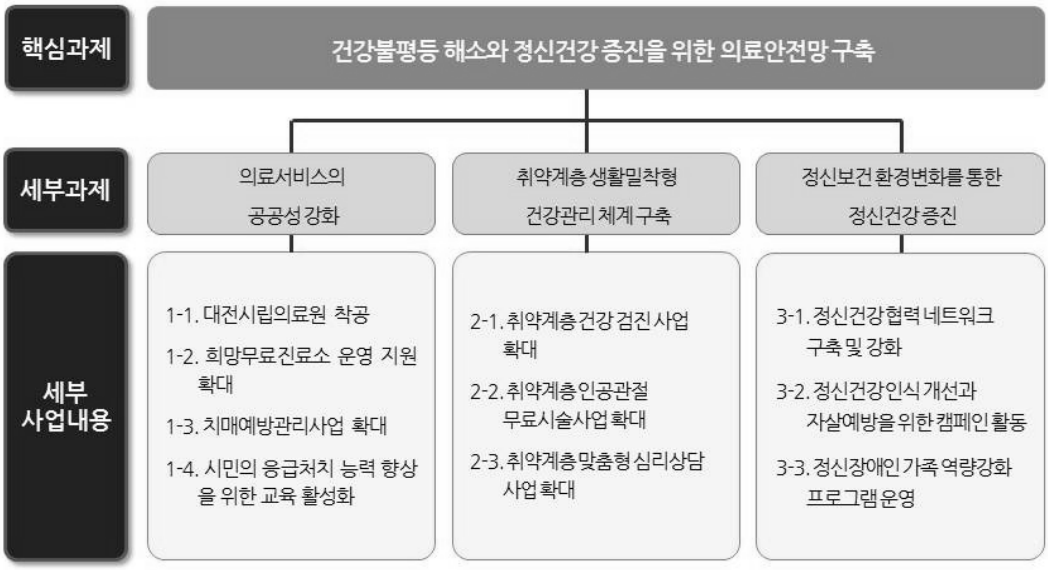
▶ 대전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노인과 같은 특정 연령대의 높은 자살율,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 등 필요도에 비해 낮은 정신건강 상담률 등으로 볼 때,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이러한 수요-공급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여계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정신보건 환경변화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등을 추진하고자 함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6th 보건·의료 / 건강불평등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7th 사회적연대 / 사회적 연대 기반 구축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의 사회복지지출과 비교할 때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수준의 향상은 기대만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음. 현 재정 내에서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증대가 쉽지 않고, 대전의 경우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의 압박이 있음. 현금이나 현물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했던 사회복지패러다임이 가족 구조의 해체나 기능 약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 공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재정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고, 사회복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연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대전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대전시민복지기본선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대전시만의 연차적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 최근 주목 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함. 사회적 자본은 공공성,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등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됨. 또한, 대전은 이미 복지만두레라는 고유의 복지 브랜드를 시도하였고, 민선 5기 말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6기에서는 나눔과 도움을 함께 하는 사회적 연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사회적 연대의 기반에는 지역에서 주위의 도움이 좀더 절실한 취약 1인 및 2인 가구에 대한 상시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7th 사회적연대 / 사회적 연대 기반 구축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방안**

▶ 대전시민복지기본선 마련, 취약 1인 및 2인 가구는 신규예산을 편성하여 기본틀을 구성한 후 사업의 정착, 확대를 꾀해야 함.

▶ 사회적 자본 키우기를 위한 시책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점검 및 확산이 필요. 사회적 자본과 연관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복지만두레는 모두 시민이 수행 주체가 되어야 하고, 시나 구는 지원 주체로 기능하면서 각 활동들이 공동체성을 확장하면서 자발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함. 또한 행사성, 단발성 사업을 재검토하여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사회적 자본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연대 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함.

▶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 개인이 돕는 것에서 나아가 마을이 돕거나, 함께 돕는 문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은 주민이 지역 속에서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함.

▶ 복지만두레는 태동기와 확장기를 거쳐 정립 및 도약기를 준비해야 함.

Ⅲ.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안)

WELFF 대전복지재단

2. 지역사회복지계획 7대 영역 핵심과제 설명

7th 사회적연대 / 사회적 연대 기반 구축

감사합니다

2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안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개요

1.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특징 및 방향

1) 주요특징 및 방향

○ 대전광역시의 지역사회 특성 및 민선 6기 공약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함.

○ 그간 대전광역시는 교통의 요충지에 위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평균 이상의 거주만족도를 보이며 인구이동이 크지 않았으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의 출범으로 이주의향이 다소 늘어나고 있음. 또한, 인구 구성에 있어서 4년 전에 비해 현재 아동·청소년의 인구규모는 감소하고 노인의 인구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향후 노인복지는 주목해야할 부분임.

○ 특히, 새롭게 출범된 민선 6기에는 대전시민의 복지기준선을 마련하여 최저생활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중점을 두며 유아부터 노인까지 건강한 복지도시 조정을 역점방향으로 설정하였기에, 이에 의거하여 생애주기별 주요과제들을 선정하여 추진하고자 함.

○ 또한, 수요분석 결과, ① 성인, 여성,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전 영역에 걸친 일자리 창출 및 고용서비스 강화, ② 노후보장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 및 건강·간호 지원, 여가·일상생활 지원 등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③ 자녀양육 및 교육 부담 감소와 가족 및 문화생활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 ④ 저소득 가구에 대한 소득 보장 정책과 병행하여 생활 여건 각 영역에 대한 포괄적 지원, ⑤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활동과 더불어 맞춤형 대책 수립에 대한 방향 설정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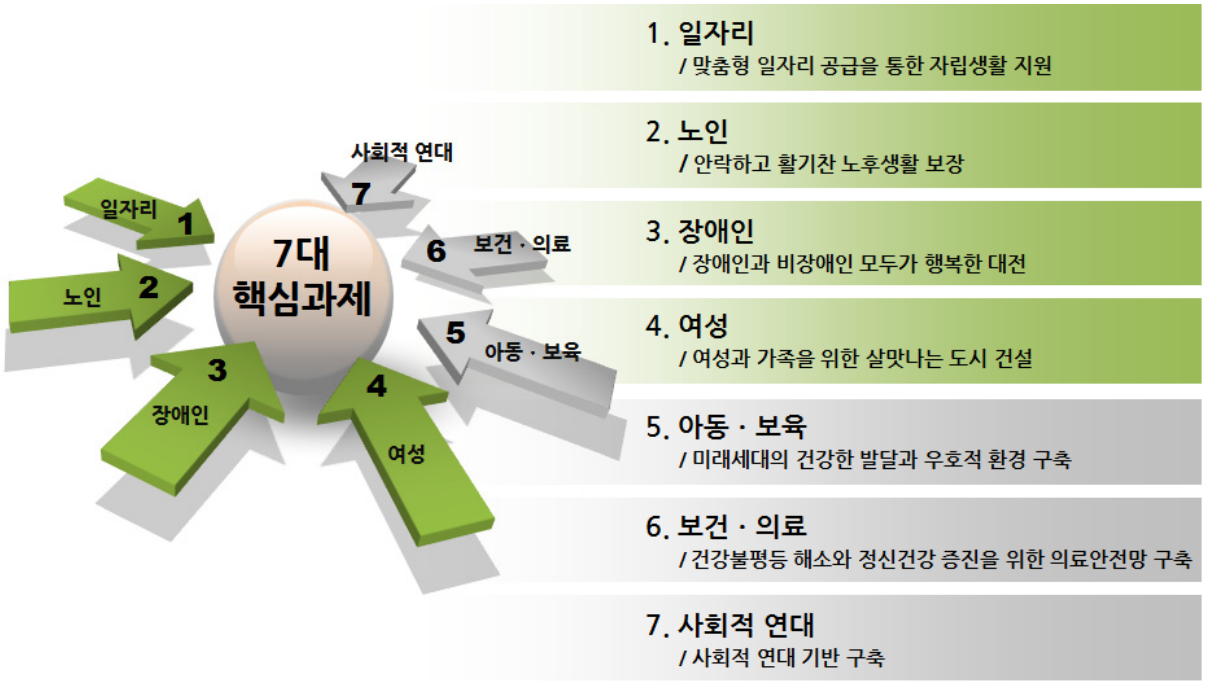
2)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방향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은 참여, 협력, 통합의 원칙을 바탕으로 대전광역시의 복지현안을 실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계획 수립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함.

○ 지역사회는 사회복지정책과 그 정책으로 시행된 복지서비스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이 대면하는 중요한 공간으로 지역사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계획을 적절히 조정하고, 증가하고 있는 시민의 복지욕구를 충족하는 핵심적인 역할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성을 보다 심도 있게 인식함.

○ 이에, 대전광역시의 복지수요를 시민욕구조사, 복지공급자 설문조사, 설명회 및 경청회 개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고 복지재정, 인력, 조직 등 전반적인 지역의 복지공급을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우리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접근해야하는 7대 핵심과제를 도출하여 사업계획을 제시함.

○ 7대 핵심과제는 인구특성별로 접근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보육' 영역과 사업특성별로 접근한 '일자리', '사회적 연대', '보건·의료' 영역으로 구성됨.



3) 통합, 참여, 협력의 실현방안

○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기획·조사·분석·계획수립의 전 단계에서 계획 수립 추진 기관인 대전광역시 담당부서와 계획 수립 연구기관인 대전복지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며 참여성·협력성·통합성 구현을 도모함.

○ 지역성과 시민의 욕구가 반영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광역단위의 층화표집을 통한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2,100가구)를 실시하여 5개 기초자치단체 계획수립의 토대 마련을 지원. 또한, 시민들의 복지욕구와 더불어 가장 현장지향적으로 복지를 실천하고 있는 복지공급자의 의견수렴을 위해 대전광역시 공공 및 민간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층화표집하여 설문조사(500여명)를 실시하고, 복지재정·인력·조직에 대해 공공 및 민간기관의 자료를 통합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함. 유관자 및 시민들의 참여를 북돋기 위해 온라인 의견개진 게시판 마련, 계획수립에 대한 시민설명회 개최 및 의견수렴, 시민욕구조사 결과보고 및 복지사업에 대한 시민의견 경청회 등을 추진하며 다양한 경로로 참여를 유도함.

○ 다 주체간의 협력을 통해 계획 수립의 실천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 및 자치구 담당자와의 간담회 추진하고, 계획 수립 연구기관 내 TF팀 구성 및 학계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의 방향 및 내용을 긴밀하게 논의함. 또한, 대전광역시 계획수립 총괄 TF팀, 영역별 분과 TF팀(구성 중)을 구성하여 민·관·학 협력을 극대화시키고자 노력함. 계획수립 총괄 TF팀

[그림] 제3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단

[그림]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추진단 참여자 구성

계획수립 총괄 TF팀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팀 장		백승국	보건복지여성국장
기획 총괄 (5명)	과장급 공무원	김동선	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위원	류진석	충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사회복지위원	박성옥	건강가정지원센터장
	전문가	김명희	대전복지재단 사무처장
	지역대표	문창기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계획 수립 (6명)	담당 공무원	강규창	복지기획담당 사무관
	사회복지위원	김성한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가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가	김정득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지역대표	곽영수	사회복지협의회장
	지역대표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기획실장
평가 분석 (6명)	담당 공무원	이병연	지역복지담당사무관
	사회복지위원	이민표	대전대 노인보건학과 교수
	사회복지위원	이채식	우송정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전문가	조학래	침례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지역대표	김현채	사회복지사협회장
	지역대표	황후영	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연구진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책임연구원		김정득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장
재단 내부	공동연구원	김기수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원
	공동연구원	주은주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원
	공동연구원	김현진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원
	공동연구원	이리나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원
	연구보조원	전수빈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원
	연구보조원	조정하	대전복지재단 정책연구팀원
재단 외부	공동연구원	권중돈	목원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조학래	침신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성한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대전복지재단 TF팀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총괄	김명희	대전복지재단 사무처장
팀별 담당	김정득,주은주	정책연구팀장/팀원
	이춘성	운영지원팀장
	송은주	복지사업팀원
	조은아	사회서비스팀장
	류지만	복지만두레팀원
	류선화	통합사례관리지원단 팀장

○ 통합적인 계획 수립을 위해 기획단계에서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 세미나, 보건복지부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의 3기 계획 수립 방향을 충분히 이해하고자 함. 또한, 중앙 정책과의 일관성 유지를 위해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복지영역별 중장기 계획을 분석하여 반영하고, 대전광역시 민선 6기 정책 추진방향을 검토하여 반영시킴.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실행방안]

참여성	협력성	통합성
• 층화표집을 통해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수행(2,100가구) • 대전 내 복지제공기관을 층화표집하여 복지공급자 대상 설문조사 수행(500여명) • 계획 수립 연구기관(대전복지재단) 홈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의견수렴 게시판 개설 • 사회복지계 및 시민 대상으로 지역사회복지계획 설명회 및 조사결과 보고회, 의견경청회 장 마련	• 시 및 자치구 담당자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계획 수립 추진사항 논의 • 광역단위 계획수립 연구진이 자치구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 TF팀에 참여하여 협력 지원 • 계획 수립 연구기관(대전복지재단) 내 TF팀을 구성·추진하고, 학계를 중심으로 공동연구진을 구성하여 계획 수립 방향 및 내용 논의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위원 및 사복지계를 대표하여 시 총괄 TF팀 구성 • 공공, 민간, 학계를 아우르는 영역별 분과 TF팀을 구성 중	• 기획단계에서 지역사역사회복지학회 세미나, 보건복지부 설명회 등에 참석하여 보건복지부의 3기 계획 수립 방향 검토 • 사회보장기본계획 및 복지영역별 중장기계획 분석 및 반영 • 대전광역시 민선 6기 정책 추진방향 검토 및 연계 반영

2.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2011-2014) 실행결과 분석

2기 계획 점검내용		제기된 문제	3기 계획에 반영할 개선과제
2 기 계획수립과정 분석	•용역수주 관련	•대전광역시와 대전발전연구원이 수의계약으로 용역수주가 이루어져 계약상의 문제는 없으나, 용역체결 시기가 늦어져 계획수립착수가 당해 연도 8월에 이루어졌고 따라서 계획수립을 위한 기간확보가 어려웠음	•대전복지재단이 계획수립의 총괄을 수행하고 대전광역시 계획수립을 위한 TFT 구성, 각 자치구의 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 등 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학계와 민간, 시민 등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토대로 한 계획수립지향
	•욕구조사 관련	•공동연구진의 회의를 통하여 설문조사도구를 개발하였으나,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 의견 수렴이 미흡했음 •조사대상의 표본추출에 대한 과학성 확보가 미흡함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기본조사항목에 근거하되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개발 및 시민욕구조사의 시행 •대전광역시 및 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고려한 확률표집을 통한 과학성 및 객관성 제고 •대전광역시 및 5개 자치구의 욕구조사를 총괄 수행하여 일관적 지표사용과 분석의 용이함 확보 •자치구 욕구조사를 광역시에서 일괄 수행함으로써 자치구의 조사예산 절감효과 및 협력성 증대
	•자원조사 및 계획수립의 활용 관련	•대전광역시 내부 자료를 주로 활용하여 일반적인 현황 제시에 그치고 있음	•지역자원 진단과 복지공급 자원분석을 통한 수요-공급격차 분석, 지역 간 격차 분석 등의 지역사회 기초자료 내용분석 강화
	•사업개발과정 관련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다양한 사업을 개발하였으나 관련 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예산부족의 사유로 채택되지 못함	•대전광역시의 특성을 반영한 비전과 전략수립, 그리고 욕구에 기반하여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중심으로 세부사업 개발이 바람직함 •계획수립 TF팀을 중심으로 전문가, 시민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세부사업개발
	•광역시 계획수립 관련 사회복지위원회 활동	•계획수립위원회, 세부사업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활동이 미흡하였음	•사회복지위원회 및 시와 자치구 해당 위원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한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의 주체로서의 사회복지위원회의 역할 강화 모색
	•시도 조정권고 관련	•기초자치단체의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조정 권고안을 제시하였으나 단순하게 조정 권고하는 수준에 그침	•보건복지부의 조정권고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상위계획, 대전시계획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상위계획과 일관성을 갖는 계획수립이 바람직함 •조정권고사항은 논의를 통해 계획안을 수정하도록 함 •조정권고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후관리방안 모색이 필요함

	•지역주민 의견수렴 관련	•공청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 20일간 공람 등의 과정을 거쳐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지역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함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홍보전략 수립을 통한 홍보 강화 •지역주민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설명회, 의견 경청회, 전문가 간담회, 사업공모, 공청회 등의 추진
2 기 계획 실행 분석	•사업 실행력 관련	•중요성의 감안하여 대전광역시에서 본 계획에 의거 매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문제없음	•3기 계획수립 과정에서부터 상위계획 및 대전광역시의 관련계획과의 일관성 확보를 위한 노력, 대전광역시의 특성과 실현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한 노력, 시민과 전문가집단의 의견수렴을 통한 욕구 반영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한 계획수립을 위한 노력 강화 •특히 실효성 있는 계획수립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계획이 수반되어야 함 •사업수행에 필요시 조례재정과 예산확보에 대한 명확한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	•매 1년 단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특별한 문제 없음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과의 연계성 확보를 위한 노력 강화
	•실행과정의 협의체 활동 관련	•사회복지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여 심의 의결함으로써 특별한 문제 없음	•우선순위에 기초한 핵심과제 선정 및 세부사업 실행계획에 대해 연차적 예산확보를 통해 계획의 실행가능성 제고
지역주민 의견		•지역사회복지계획에 대한 지역주민의 관심 부족	•홍보강화 등으로 주민의 지속적 관심 유도와 참여를 독려함. 또한 설명회, 의견경청회, 사업공모, 전문가 간담회, 공청회, 의견수렴 게시판 등의 활용을 통한 지역주민의 직간접 참여를 위한 노력 강화
총 괄 평 가		•계획 수립에 사회복지위원회,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의 과정을 거쳤으나 적극적인 참여가 미흡함 •욕구조사의 과정에서 표본추출에 대한 과학성을 확보하여 대표성 있는 조사자료의 확보가 필요함 •자원조사 등 수요와 공급에 대한 격차에 대한 분석 등의 보완이 필요함	•계획 수립에 사회복지위원회, 대전광역시의 해당부서, 관련전문가 등이 적극 참여하여 다양한 주체의 협력을 통한 계획을 수립함 •계획 수립에 시민의 참여, 공급 주체로서의 공공과 민간 서비스 기관들의 참여 강화 •욕구조사, 자원조사 등 과학적인 조사와 분석에 근거한 실효성을 제고한 계획수립

2 지역사회의 수급진단

1. 지역 현황

1) 행정구역 및 인구

대전광역시의 행정구역은 539.6㎢의 면적에 달하며, 행정조직은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5개 기초자치단체, 78개 행정동, 177개 법정동으로 편성되어 있다. 인구는 2013년 12월 말 기준으로 외국인을 포함하면 총 1,547,609명, 내국인만을 계수하면 1,532,811명으로, 이 중 내국인을 기준으로 성비를 살펴보면, 남자는 767,309명, 여자는 765,502명으로 거의 동등한 비율을 보이고 있다.

자치구 중에서는, 유성구가 177.22㎢로 가장 넓은 행정구역을 차지하고 가장 낮은 인구밀도를 나타낸 반면,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자치구는 관공서, 상업시설이 밀집되고 주거 및 교육환경 등으로 인구가 가장 많이 유입된 서구이며, 95.38㎢의 행정구역에 총 인구 수는 498,917명(외국인 제외)이다.

[그림 61]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및 인구밀도

〈표〉 대전광역시 행정구역 및 인구 현황

구분	면적 (㎢)	법정 동 (개)	행정 동 (개)	인구밀도 (외국인 제외)	인구 수 (명) / 외국인 제외			인구 수 (명) / 외국인 포함		
					계	남	여	계	남	여
동구	136.79	45	16	1,832.4	250,653	126,815	123,838	253,823	127,996	125,827
중구	62.13	26	17	4,263.8	264,913	132,053	132,860	266,423	132,586	133,837
서구	95.38	27	23	5,230.8	498,917	246,019	252,898	502,167	247,295	254,872
유성구	177.22	53	10	1,771.6	313,968	158,541	155,427	318,805	161,133	157,672
대덕구	68.46	26	12	2,985.1	204,360	103,881	100,479	206,391	104,853	101,538
계	539.90	177	78	2,838.7	1,532,811	767,309	765,502	1,547,609	773,863	773,746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 주 : 인구밀도 - $1km^2$ 당 인구수(인구수/면적)

대전광역시 인구 수를 살펴보면, 최근 10여 년 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남녀 성별로도 각각 소폭이지만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인구증가율은 2005년에서 2006년 사이, 2009년에서 2010년 사이의 상승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다소 둔화된 양상을 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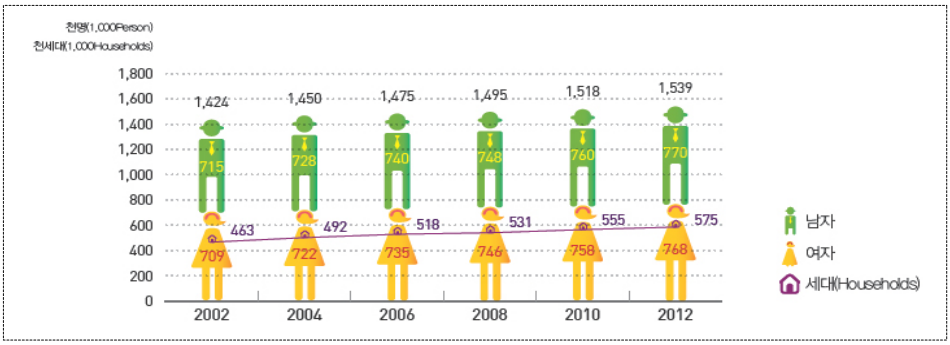
또한 1일 평균 인구동태로 살펴보면, 출생자 수는 2010년부터는 소폭이지만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며, 사망자 수와 혼인 건수 역시 매우 소폭이지만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혼 건수는 2009년부터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표〉 대전광역시 연도별 인구수 및 인구동태

년도	인구 수(명) / 외국인 포함				인구동태							
	계	증가율	남	여	출생(명)	1일 평균	사망(명)	1일 평균	혼인(쌍)	1일 평균	이혼(쌍)	1일 평균
2002	1,424,844	-	715,300	709,544	15,509	42.5	5,730	15.7	9,131	25.0	4,336	11.9
2003	1,438,778	1.0	722,437	716,341	15,573	42.7	5,811	15.9	8,973	24.6	4,923	13.5
2004	1,450,750	0.8	728,463	722,287	14,924	40.9	5,905	16.2	8,857	24.3	3,942	10.8
2005	1,462,535	0.8	733,817	728,718	13,861	38.0	5,742	15.7	9,035	24.8	3,328	10.5
2006	1,475,961	0.9	740,425	735,536	14,388	39.4	5,909	16.2	9,502	26.0	3,287	9.0
2007	1,487,836	0.8	745,359	742,477	15,705	43.0	5,901	16.1	9,684	26.5	3,449	9.4
2008	1,495,048	0.5	748,235	746,813	14,856	40.7	6,105	16.7	9,499	26.0	3,236	8.9
2009	1,498,665	0.2	749,880	748,785	13,915	38.1	5,950	16.3	8,885	24.3	3,433	9.4
2010	1,518,540	1.3	760,409	758,131	14,315	39.2	6,311	17.3	9,351	25.6	3,189	8.7
2011	1,530,650	0.8	765,986	764,664	14,808	40.6	6,336	17.4	9,726	26.6	3,067	8.4
2012	1,539,154	0.6	770,190	768,964	15,279	41.9	6,580	18.0	9,745	26.7	2,938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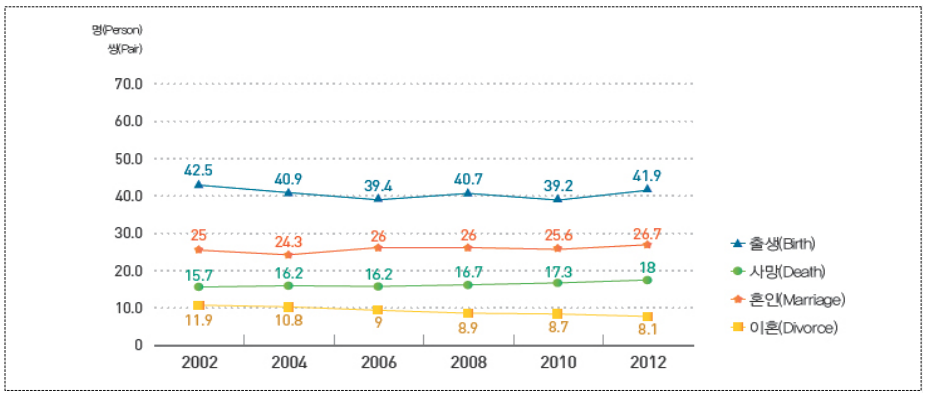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그림] 대전광역시 인구 및 세대 증가 추이(외국인 포함)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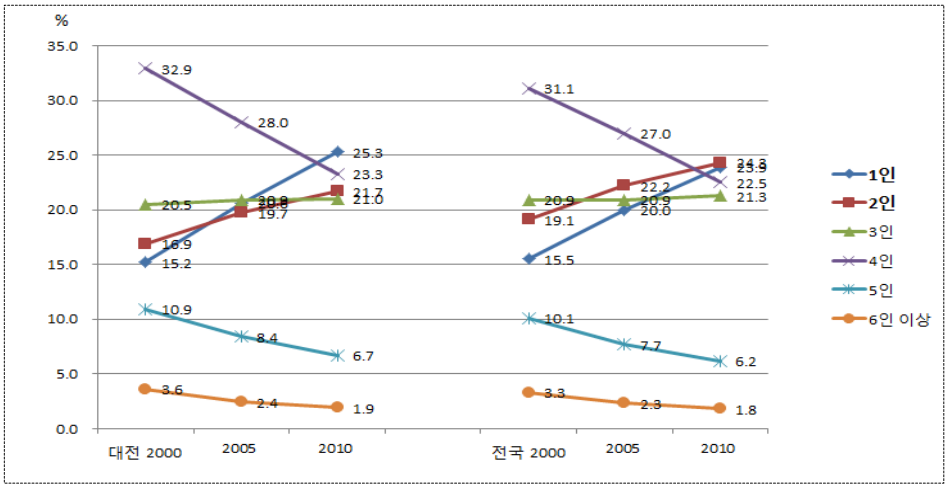
[그림] 대전광역시 1일 평균 인구동태



자료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가구유형을 살펴보면, 2005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 가구 유형은 4인 가구(28.0%)였으나, 2010년에는 1인 가구(25.3%)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였으며, 최근 10여 년 동안 1인 가구의 비중과 2인 가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전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으로 동일하나 1인 가구 비중은 전국에 비해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대전광역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표〉 대전광역시 가구원수별 가구분포

(단위 : 천가구, %, 명)

시도	연도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이상		평균 가구원수 (명)
		n	%	n	%	n	%	n	%	n	%	n	%	
대전	2000	63	15.2	70	16.9	85	20.5	136	32.9	45	10.9	15	3.6	3.2
	2005	99	20.6	94	19.7	100	20.9	134	28.0	40	8.4	12	2.4	2.9
	2010	135	25.3	116	21.7	112	21.0	124	23.3	36	6.7	10	1.9	2.7
전국	2000	2,224	15.5	2,731	19.1	2,987	20.9	4,447	31.1	1,443	10.1	479	3.3	3.1
	2005	3,171	20.0	3,521	22.2	3,325	20.9	4,289	27.0	1,222	7.7	360	2.3	2.9
	2010	4,142	23.9	4,205	24.3	3,696	21.3	3,898	22.5	1,078	6.2	320	1.8	2.7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2) 사회복지대상자 현황

생애주기별 및 사회복지의 주요대상자별 인구규모를 살펴보면, 2013년 12월말 기준으로 만6세 이하의 보육이 필요한 미취학아동은 106,057명으로 전체 인구의 6.9%를 차지하며, 만7-19세의 아동·청소년은 249,853명으로 전체 인구의 16.3%를 차지한다. 복지의 주요이슈로 계속적으로 그 규모가 커가는 만65세 이상의 노인은 150,651명으로 전체 인구의 9.8%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을 포함하는 저소득층은 84,953명으로 5.5%, 등록장애인은 71,441명으로 4.7%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표〉 대전광역시 인구 수 및 복지영역별 대상자 수(2013.12월말 기준)

(단위 : 명, %)

구분	대전인구 (외국인 제외)	복지영역별 대상자									
		보육 (6세 이하)		아동/청소년 (7~19세)		노인 (65세 이상)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차상위계층수혜자, 긴급복지수혜자)		장애인 (등록장애인)	
		인구 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인구 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인구 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인구 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인구 수	전체 인구 대비 비율
대전광역시	1,532,811	106,057	6.9	249,853	16.3	150,651	9.8	84,953	5.5	71,441	4.7
동구	250,653	16,898	6.7	34,262	13.7	32,348	12.9	21,753	8.7	14,960	6.0
중구	264,913	16,511	6.2	39,585	14.9	34,483	13.0	18,316	6.9	14,011	5.3
서구	498,917	32,589	6.5	85,750	17.2	42,495	8.5	21,796	4.4	20,773	4.2
유성구	313,968	27,269	8.7	56,776	18.1	21,120	6.7	8,592	2.7	10,684	3.4
대덕구	204,360	12,790	6.3	33,480	16.4	20,205	9.9	14,496	7.1	11,013	5.4

자료 :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를 재구성
주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차상위계층수혜자, 긴급복지수혜자(차상위계층수혜자는 사업별로 중복 가능. 긴급복지 수혜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중복 가능)

(1) 미취학 아동(6세 미만)

대전광역시 2012년 총 출생아수는 15,279명이며, 이 중 남아가 7,843명(51.3%)으로 여아 7,436명(48.7%) 보다 2.6%p 많았다. 출생성비는 105.5명으로 전국(105.7명)보다 0.2명 낮았고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낮은 수치이다. 출생률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2010년부터는 상승세로 전환하여 꾸준히 소폭 증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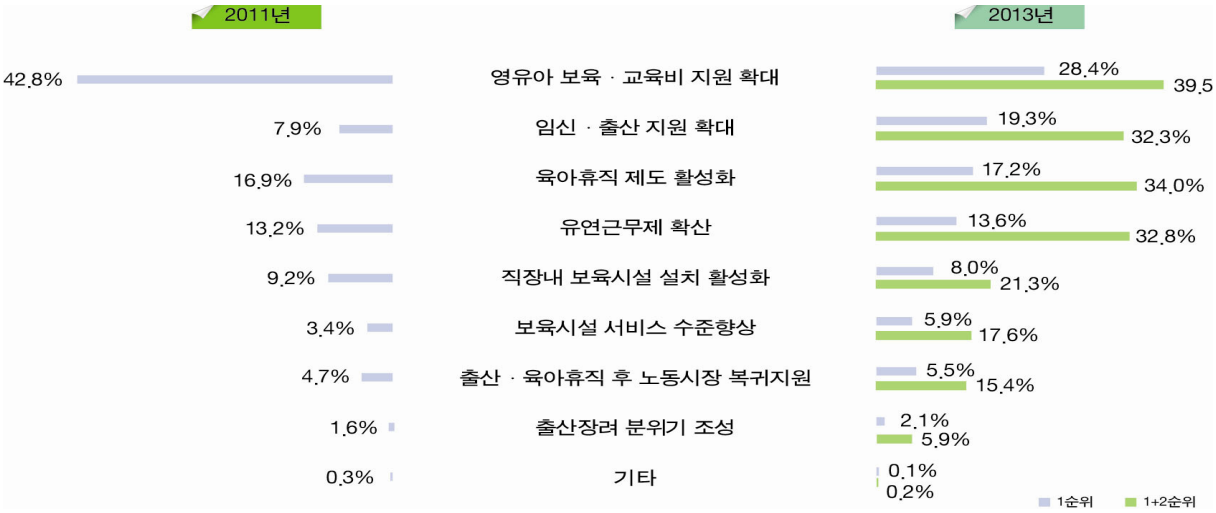
〈표〉 대전광역시 출생아수 및 출생성비

시도	연도	출생아수			출생성비[1)]
		총계	남아	여아	
대전	2000	19,402	10,040	9,362	107.2
	2010	14,315	7,388	6,927	106.7
	2011	14,808	7,657	7,151	107.1
	2012	15,279	7,843	7,436	105.5
전국	2012	471,265	242,121	229,144	105.7
서울		91,526	46,853	44,673	104.9
부산		27,759	14,092	13,667	103.1
대구		20,758	10,679	10,079	106.0
인천		26,118	13,471	12,647	106.5
광주		13,916	7,187	6,729	106.8
울산		11,542	5,948	5,594	106.3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주 : 1) 여아 100명당 남아수

저출산 해소를 위해 대전시민이 가장 원하는 것은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원 확대(28.4%)'이고, 그 다음은 '임신·출산 지원 확대(19.3%)', '육아휴직 제도 활성화(17.2%)'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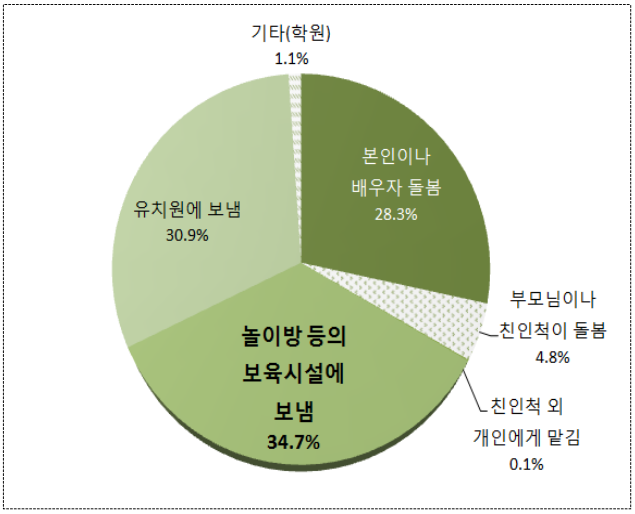
[그림] 저출산 해소를 위한 지원 순위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미취학자녀가 있는 대전광역시 가구는 전체의 8.7%이며, 구별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의 비율은 유성구(11.3%)에서 조금 높았다. 미취학자녀의 돌봄 방법은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과 '유치원에 보낸다'는 응답이 전체의 60% 정도를 차지하였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본다'는 의견은 28.3%로 조사되었다.

[그림] 대전광역시 미취학자녀 돌봄 방법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표〉 대전광역시 미취학자녀가 있는 가구 비율 및 돌봄 방법

구분		미취학자녀 있음	본인이나 배우자 돌봄	부모님이나 친인척이 돌봄	친인척 외 개인에게 맡김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에 보냄	유치원에 보냄	기타(학원)	미취학자녀 없음
2013		8.7	28.3	4.8	0.1	34.7	30.9	1.1	91.3
2013 구별	동구	6.4	26.9	1.0	0.0	43.1	27.4	1.6	93.6
	중구	9.0	37.9	4.9	0.0	31.0	24.6	1.6	91.0
	서구	8.8	27.9	6.0	0.0	40.0	24.8	1.2	91.2
	유성구	11.3	23.8	4.9	0.0	27.5	42.8	1.0	88.7
	대덕구	7.9	24.2	5.7	0.9	34.1	35.2	0.0	92.1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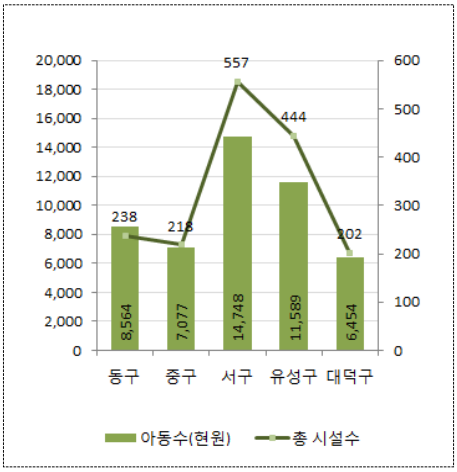
2012년 대전광역시의 보육아동 수는 4만8,432명으로 전년 대비 8.7%, 시설 수는 1,659개소로 전년 대비 3.8%(60개소) 증가하였는데, 보육아동 수 및 시설 수 모두 최근 3년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육시설에 대한 구별 현황은 서구가 33.6%이며, 그 다음 유성구(26.8%), 동구(14.3%), 중구(13.1%), 대덕구(12.2%)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대전광역시 보육아동 수 및 시설 수

구분		아동수 (현원)	총 시설수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직장	가정
2010		42,105	1,535	29	42	443	2	22	997
2011		44,573	1,599	29	42	457	2	25	1,044
2012		48,432	1,659	28	41	455	2	26	1,107
2012 구별	동구	8,564	238	5	10	101	1	3	118
	중구	7,077	218	4	6	93	-	4	111
	서구	14,748	557	9	7	111	-	7	423
	유성구	11,589	444	1	11	92	1	10	329
	대덕구	6,454	202	9	7	58	-	2	126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그림] 대전광역시 보육아동 수 및 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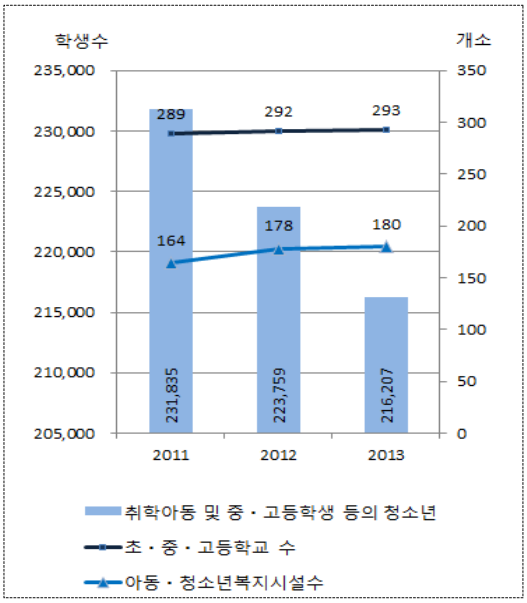
(2) 취학아동 및 중·고등학생 등의 청소년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생 수는 2013년 기준 216,207명이나, 평균 3% 정도 매년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반해, 초·중·고등학교 수 및 아동복지시설 수는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수, 아동복지시설 수

구분		초등학생 수	초등학교 수	아동복지 시설 수
2011		231,835	289	164
2012		223,759	292	178
2013		216,207	293	180
2013 구별	동구	29,411	44	40
	중구	39,036	54	47
	서구	71,109	83	34
	유성구	51,407	73	29
	대덕구	25,244	38	30

[그림] 대전광역시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수, 아동복지시설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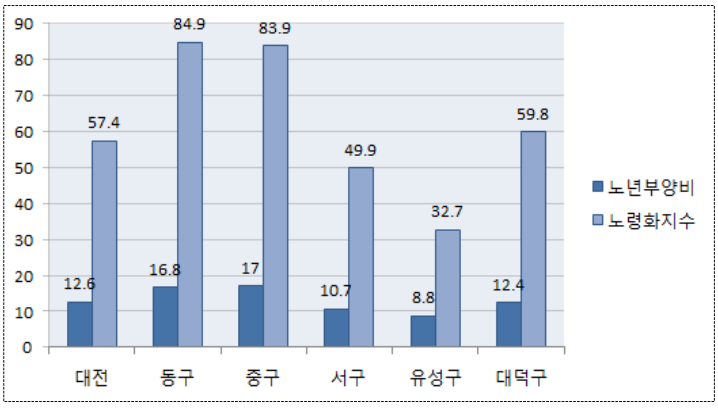
자료 : 대전교육통계 분석자료집(2009~2013)(대전광역시교육청, 2013)과 대전광역시 내부 자료를 재구성

(3) 노인

대전광역시 노령화지수는 전년 대비 4.2%p 증가한 57.4%로 전국(78.4%)보다 21.0%p 낮았으며, 특·광역시 중 3번째로 낮았다. 자치구 중에서는 동구의 노령화지수가 84.9%로 가장 높고, 유성구는 동구보다 2.6배 낮은 32.7%로 나타났다.

2012년 전체적인 총부양비는 33.6%로 전국(36.4%)보다 2.8%p 낮았으며, 2011년 대비 1.0%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노년부양비는 12.6%로 전국(16.0%)보다 3.4%p 낮았고 전년 대비 0.6%p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노인 1인당 생산가능인구'는 전년 대비 1.2명 감소한 7명이었으나, 전국(6.2명) 평균보다 높았고,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12.5명)과 울산(10.2명), 광주(7.4명) 다음으로 높은 수치이다.

[그림]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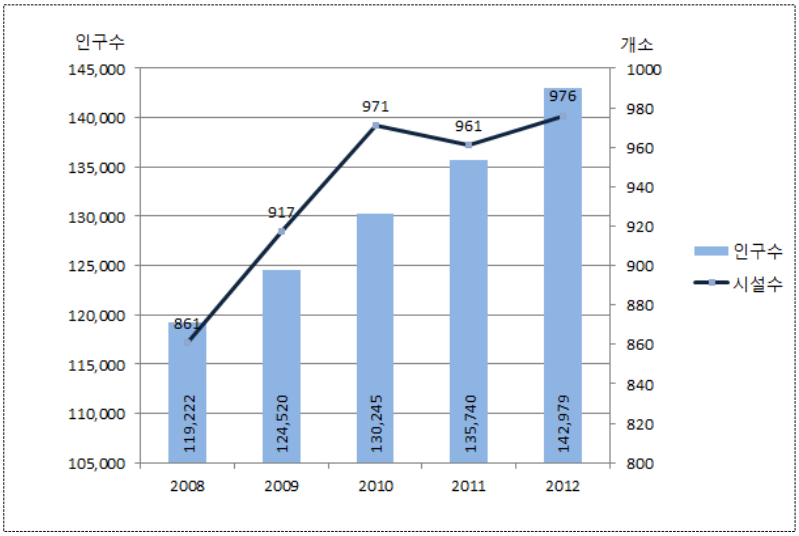
〈표〉 대전광역시 노인관련지표(부양비, 노인1인당생산가능인구, 노령화지수)

시도	연도	총부양비	유소년부양비[1]	노년부양비[2]	노인1인당 생산가능인구[3]	노령화지수[4]
대전	2000	38.9	31.3	7.6	13.2	24.3
	2010	35.1	23.4	11.7	8.5	50.0
	2011	34.6	22.6	12.0	8.2	53.2
	2012	33.6	21.0	12.6	7.0	57.4
전국	2012	36.4	20.4	16.0	6.2	78.4
서울		31.5	17.2	14.3	7.0	82.7
부산		33.3	16.7	16.7	6.0	99.9
대구		34.3	19.6	14.7	6.8	75.0
인천		32.7	20.3	12.5	12.5	61.5
광주		37.1	23.6	13.5	7.4	57.2
울산		31.1	21.3	9.8	10.2	46.0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주 : 1) 유소년인구(0~14세)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
2) 고령인구(65세이상)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100
3) 생산가능인구(15세~64세) ÷고령인구(65세이상)
4) (65세이상인구÷0~14세인구) ×100

대전광역시 만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해마다 평균 4.6%p정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노인복지시설 수 역시 전반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자치구별로 노인 1,000명당 시설 수를 살펴보면, 유성구가 9.4개소로 가장 많고, 중구가 5.6개소로 가장 적었다.

[그림] 대전광역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노인복지시설 수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자료를 재구성

〈표〉 대전광역시 만65세 이상 노인인구수 및 노인복지시설 수

구분		만65세이상 노인인구수 (명)	노인 1,000명당 시설 수 (개소)	총 시설수 (개소)	주거복지	의료복지	재가복지	여가복지	노인보호 전문기관
2008		119,222	7.2	861	8	41	59	752	1
2009		124,520	7.4	917	8	64	76	768	1
2010		130,245	7.5	971	8	91	83	788	1
2011		135,740	7.1	961	7	96	80	802	1
2012		142,979	6.8	976	5	106	84	780	1
2012 구별	동구	31,018	6.4	200	1	21	20	158	-
	중구	32,682	5.6	182	2	21	18	141	-
	서구	40,172	6.4	257	-	37	25	195	-
	유성구	19,901	9.4	187	1	12	3	170	1
	대덕구	19,206	7.8	150	1	15	18	116	-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대전광역시 홈페이지(www.daejeon.go.kr) 자료를 재구성

(4) 기초생활보장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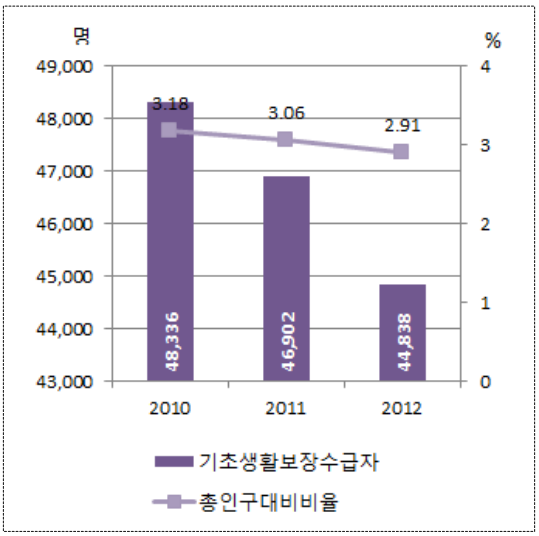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2012년 기준 총 44,838명으로 총 인구의 2.91%이며, 최근 3년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모두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치구별로 인구대비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동구가 4.7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대덕구(3.79%), 중구(3.51%), 서구(2.21%), 유성구(1.45%) 순으로 나타났다.

〈표〉 대전광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구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명)	총인구 대비 비율(%)	일반 수급자	시설 수급자
2010		48,336	3.18	44,580	3,171
2011		46,902	3.06	43,163	3,026
2012		44,838	2.91	40,842	3,013
2012 구별	동구	12,124	4.75	11,155	633
	중구	9,325	3.51	8,788	277
	서구	11,026	2.21	9,977	865
	유성구	4,499	1.45	3,757	630
	대덕구	7,864	3.79	7,165	608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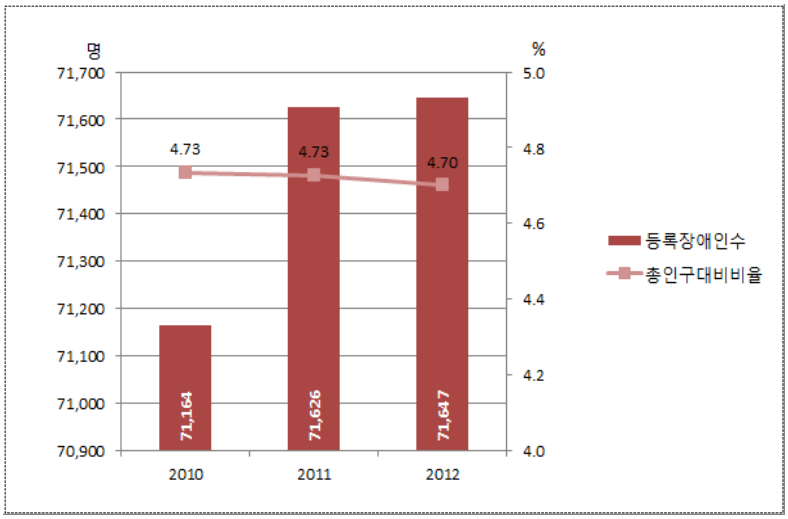
[그림] 대전광역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수



(5) 장애인

대전광역시 등록장애인은 2012년 기준 총 71,647명으로 총 인구의 4.7%이며, 최근 3년간 등록장애인 수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별로는 남자가 58.4%로 여자에 비해 다소 많으며, 장애등급별로는 1-3등급이 39.2%, 4-6등급이 60.8%를 차지하고 있다. 자치구별로 인구대비 등록장애인의 비율을 살펴보면, 동구가 5.9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그 다음은 대덕구(5.4%), 중구(5.33%), 서구(4.18%), 유성구(3.47%)의 순이다.

[그림] 대전광역시 등록장애인 수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김정득 외, 2013)를 재구성

〈표〉 대전광역시 등록장애인 수

구분		등록장애인 수(명)	총인구 대비 비율(%)	성별		장애등급						장애인 시설수	장애인 1,000명당 시설 수
				남자	여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2010		71,164	4.73	41,563	29,601	6,456	9,891	12,142	9,971	14,863	17,841	83	1.17
2011		71,626	4.73	41,862	29,764	6,378	9,689	12,199	10,154	14,937	18,269	95	1.33
2012		71,647	4.70	41,909	29,738	6,287	9,606	12,203	10,098	14,875	18,578	115	1.61
2012 구별	동구	15,079	5.99	8,953	6,126	1,230	2,046	2,641	2,280	3,083	3,799	25	1.66
	중구	14,088	5.33	8,238	5,850	1,134	1,894	2,412	2,045	2,998	3,605	19	1.35
	서구	20,748	4.18	12,063	8,685	1,883	2,660	3,531	2,822	4,306	5,546	26	1.25
	유성구	10,629	3.47	6,108	4,521	959	1,461	1,787	1,425	2,241	2,756	20	1.88
	대덕구	11,103	5.40	6,547	4,556	1,081	1,545	1,832	1,526	2,247	2,872	25	2.25

자료 : 2013 대전의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2013년 대전광역시 장애인 실태조사(김정득 외, 2013)를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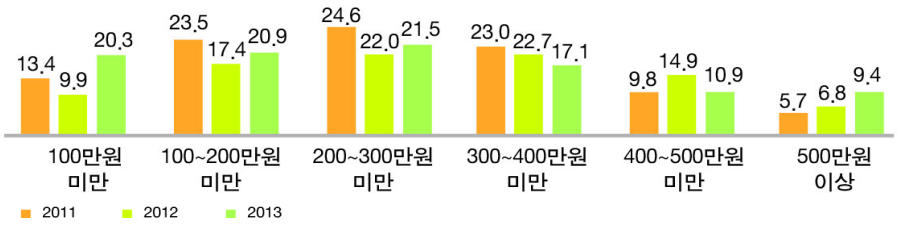
3) 사회경제적 현황 및 지역 현황

대전시민의 사회경제적 현황 파악을 위해 소득과 지출을 살펴보면, 대전시민의 월평균 가구소득은 '200~300만원 미만'이 21.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0~200만원 미만'이 20.9%,

'100만원 미만' 20.3%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이후로 '500만원 이상'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반면, '200~300만원 미만'과 '300~400만원 미만'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100만원 미만'의 비율은 2012년에 감소(3.5%p)하였다가 2013년에 큰 폭으로 증가(10.4%p)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별로 동구는 '100만원 미만(27.3%)'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덕구는 '200~300만원 미만(25.6%)'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림] 월평균 가구소득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표〉 월평균 가구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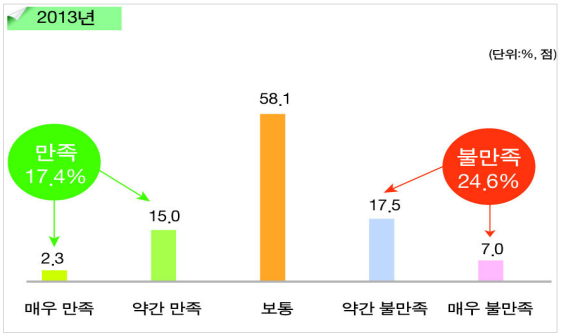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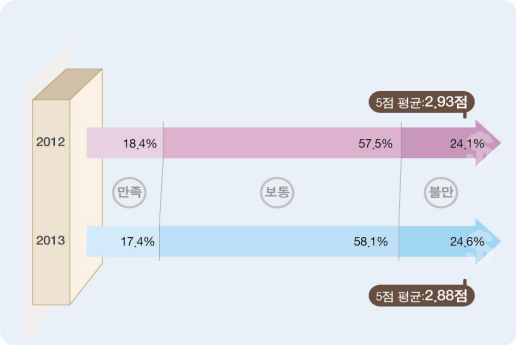
구분		100만원 미만	100~200만원 미만	200~300만원 미만	300~400만원 미만	400~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11		13.4	23.5	24.6	23.0	9.8	5.7
2012		9.9	17.4	22.0	22.7	14.9	6.8
2013		20.3	20.9	21.5	17.1	10.9	9.4
2013 구별	동구	27.3	21.6	23.5	15.2	7.4	5.1
	중구	21.8	22.0	17.1	18.5	10.3	10.3
	서구	15.7	22.8	23.6	16.9	11.4	9.7
	유성구	21.0	16.2	17.7	18.6	15.6	10.9
	대덕구	17.0	21.2	25.6	16.0	9.5	10.8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대전시민은 본인의 소득에 대해 '불만족(24.6%)'한다는 부정 응답이 '만족(17.4%)'한다는 긍정 의견보다 7.2%p 높게 나타났으며, 58.1%가 '보통'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12년 대비하여 볼 때 큰 변화는 없었으나, '매우 불만족' 한다는 비율이 소폭(3.9%p)상승하였다. 구별로 살펴보면, 서구(27.0%)에서의 '불만족' 비율이 비교적 높았으며, 대덕구(11.0%)에서는 타 구에 비하여 '만족'하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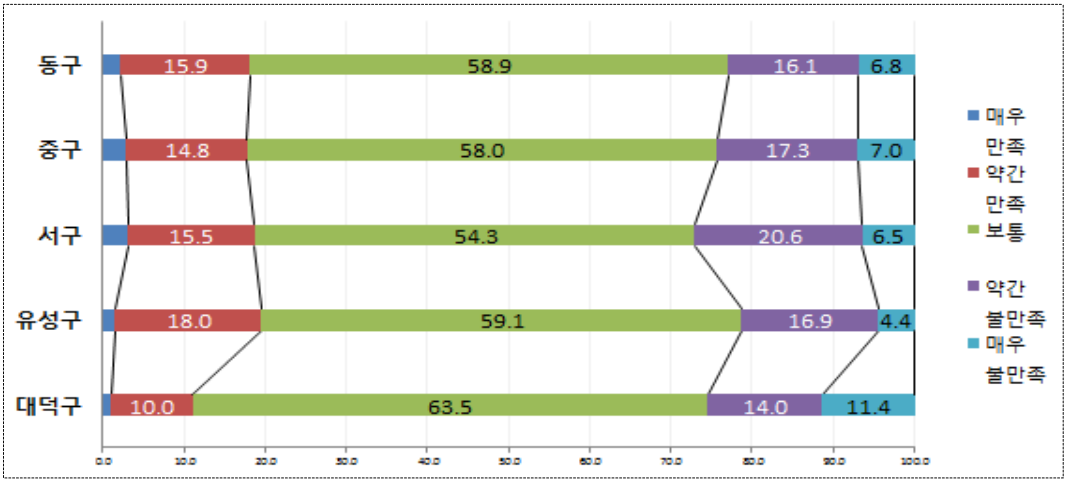
[그림] 소득수준 만족도 : 대전시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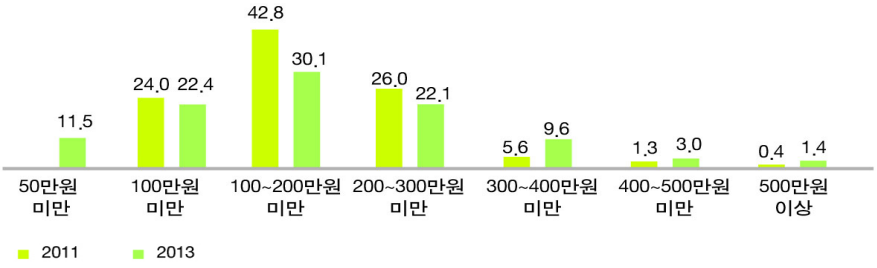
[그림] 소득수준 만족도 : 5개 자치구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대전시민의 월평균 가구지출액은 '100~200만원 미만'이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100만원 미만'이 22.4%, '200~300만원 미만'이 22.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대비 '100~200만원 미만' 지출하는 가구가 크게 감소(12.7%p)한 반면, '100만원 미만'은 증가(9.9%p)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6] 월평균 가구지출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표〉 월평균 가구지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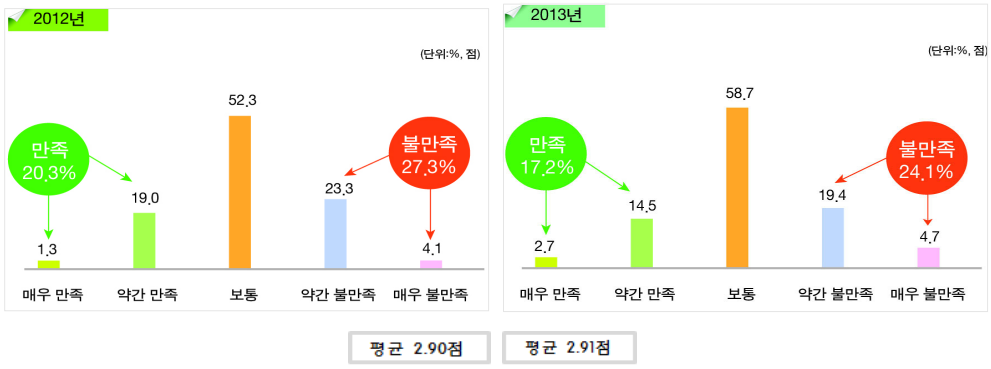
(단위: %)

		5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100~200만 원 미만	200~300만 원 미만	300~400만 원 미만	400~500만 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11		-	24.0	42.8	26.0	5.6	1.3	0.4
2013		11.5	22.4	30.1	22.1	9.6	3.0	1.4
2013 구별	동구	11.5	30.5	32.1	19.2	4.7	1.6	0.5
	중구	8.2	26.6	28.8	21.8	9.8	2.6	2.3
	서구	12.8	18.3	30.9	23.8	9.6	2.8	1.9
	유성구	14.3	16.4	28.3	23.3	12.1	4.3	1.2
	대덕구	10.1	21.2	30.3	21.5	12.0	4.1	0.7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대전시민의 소비생활 만족도는 '만족' 한다가 17.2%, '불만족' 이 24.1%로 나타났으며, 5점 만점 평균에서 2.91점으로 '보통' 수준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에 대비하여 볼 때 '만족' 비율 및 '불만족' 비율이 모두 감소(각각 3.1%p, 3.2%p)하였지만 평균점수는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7] 소비생활 만족도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표〉 소비생활 만족도

(단위: %, 점)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평균
2012		1.3	19.0	52.3	23.3	4.1	2.90
2013		2.7	14.5	58.7	19.4	4.7	2.91
2013 구별	동구	4.4	18.4	55.7	18.5	3.0	3.03
	중구	2.8	12.0	62.9	18.4	3.8	2.92
	서구	2.4	15.5	54.5	22.1	5.5	2.87
	유성구	2.5	18.2	59.9	15.3	4.0	3.00
	대덕구	1.2	8.3	61.6	21.7	7.1	2.75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대전시 고용율과 실업률은 최근 몇 년간 다소 둔화된 상태이나, 고용률은 소폭이나마 증가하고 있고, 실업

률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를 보인다. 경제활동 참가율 역시 소폭 증가하고 있으며, 여성보다는 남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훨씬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청년층의 실업률이 타 연령에 비해 증가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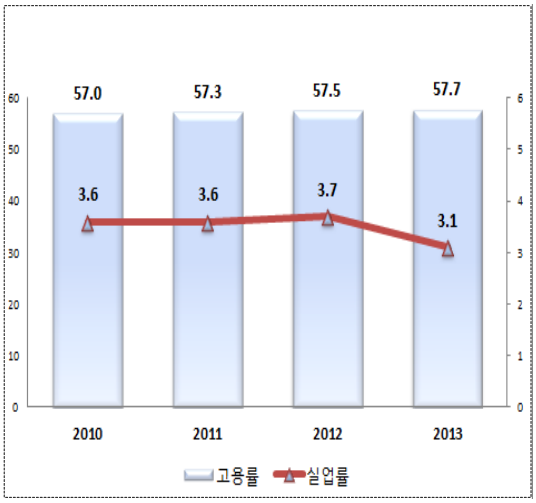
〈표〉 경제활동 참가율 · 고용률 · 실업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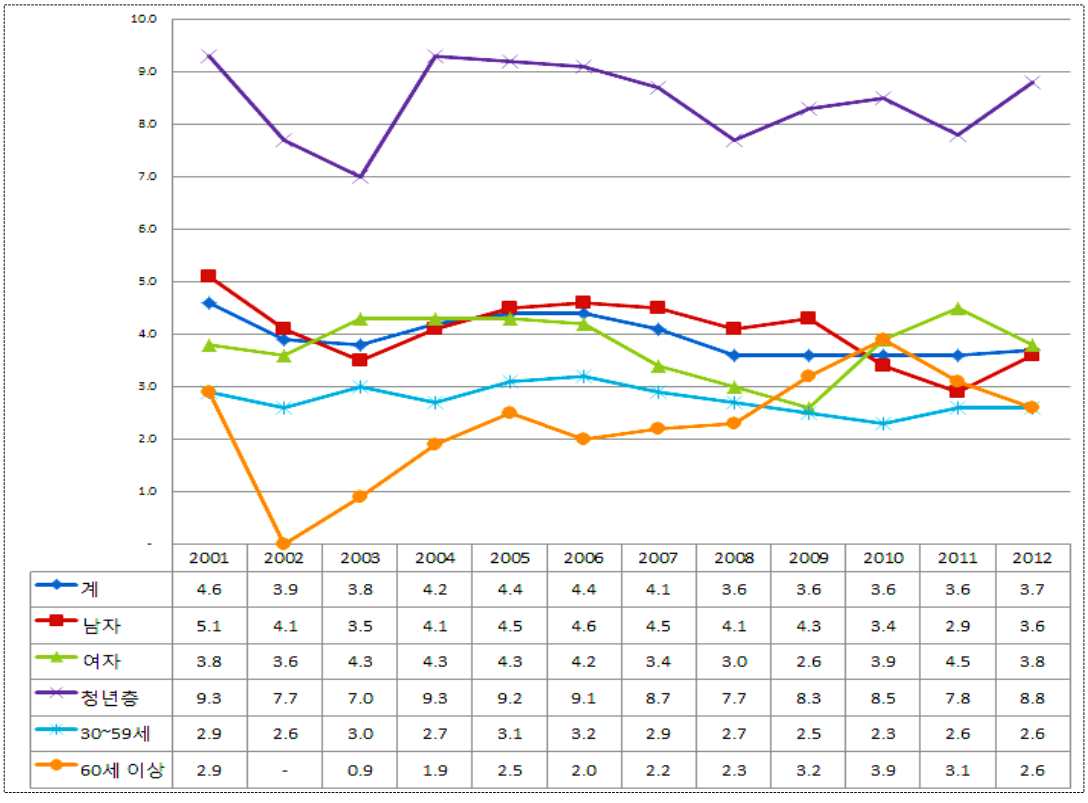
대전광역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2010	계	59.1	57.0	3.6
	남	71.5	69.1	3.4
	여	47.2	45.3	3.9
2011	계	59.4	57.3	3.6
	남	71.1	69.1	2.9
	여	48.1	45.9	4.5
2012	계	59.7	57.5	3.7
	남	71.4	68.8	3.6
	여	48.0	46.7	2.8
2013	계	59.5	57.7	3.1
	남	71.5	69.2	3.3
	여	48.0	46.7	2.8

자료 : 2013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2013)

[그림] 고용률 · 실업률



[그림] 실업률 추이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계	4.6	3.9	3.8	4.2	4.4	4.4	4.1	3.6	3.6	3.6	3.6	3.7
남자	5.1	4.1	3.5	4.1	4.5	4.6	4.5	4.1	4.3	3.4	2.9	3.6
여자	3.8	3.6	4.3	4.3	4.3	4.2	3.4	3.0	2.6	3.9	4.5	3.8
청년층	9.3	7.7	7.0	9.3	9.2	9.1	8.7	7.7	8.3	8.5	7.8	8.8
30~59세	2.9	2.6	3.0	2.7	3.1	3.2	2.9	2.7	2.5	2.3	2.6	2.6
60세 이상	2.9	-	0.9	1.9	2.5	2.0	2.2	2.3	3.2	3.9	3.1	2.6

자료 : 2013 경제활동인구연보(통계청, 2013)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인 여건에 따른 현 거주지에 대한 이사의향에 대해서 대전시 가구 중 31.1%는 이사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그 중(Base=1,242명) 79.4%가 대전지역으로 이사하길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대비 '이사 의향이 있다'는 가구가 크게 증가(10.1%p)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대전 외 충청권 지역'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가구의 증가(6.8%p)가 두드러졌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세종시'로의 이사가 64.4%를 차지하며 다른 지역에 대한 이사의향 보다 월등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표〉 이사 의향 및 이사 희망 지역

구분		이사의향 있음	이사 희망 지역							이사의향 없음
			대전지역	대전외충청권	세종시	내포시	기타충청 지역	서울 및 경기도	기타	
2011		21	82.7	5.8	49.3	11	39.7	10.1	1.3	79
2013		31.1	79.4	12.6	64.4	5.4	30.2	6.6	1.4	68.9
2013 연령별	15-29세	49.2	53.6	17.9	23.6	10.2	66.2	24.4	4.1	50.8
	30-39세	42.2	81.7	10.2	64.3	0	35.7	6.8	1.3	57.8
	40-49세	38.1	81.5	13.8	78.4	6.2	15.4	3.7	1	61.9
	50-59세	28.3	80.8	14.5	75.3	5.8	18.9	3.7	1	71.7
	60세이상	17	91.7	6	64.3	0	35.7	1.5	0.7	83
2013 구별	동구	15.3	75	11.8	69.5	0	30.5	12	1.2	84.7
	중구	32.8	91	5.8	57.2	21.8	20.9	1.7	1.5	67.2
	서구	37.5	82.9	8.7	72	2.5	25.4	7.4	1	62.5
	유성구	37.4	62.7	23.6	57.4	5.3	37.3	10.8	2.9	62.6
	대덕구	29.9	83	14.5	72.8	2.9	24.3	2.5	0	70.1

자료 : 2013 대전광역시 사회지표(대전광역시, 2013)

2. 복지수요의 전망

복지수요의 전망은 대전광역시의 기본 통계[1]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실시된 2014년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황과 욕구가 분석되었음.

1) 조사 개요 및 조사 내용

본 조사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마련에 초점을 두고 수행되었으며, 대전시민의 복지욕구에 관한 일관적이고 객관적인 현황파악과 분석을 위해 대전복지재단에서 조사표 개발, 사전조사, 대전시민 인구통계자료 확보 및 표본설계, 조사에 관한 홍보 실시, 조사원 모집 및 조사원 교육, 면대면 조사 실시, 조사표 회수 및 검토, 데이터입력 및 클리닝 등의 과정을 책임수행 하였음.

(1) 조사표 개발 및 주요 조사내용

○ 본 조사는 보건복지부의 기본 지침조사표를 기본으로 하되,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일부문항을 2012년 대전시민 복지욕구조사표에서 추출하였고 대전시와 각 자치구의 상황에 따라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추가 대상자(성인, 저소득층)와 복지 관련시설 및 사업(제도)문항을 추가함.

○ 그 결과, 가구일반사항 및 가구현황, 삶의 만족도, 생활여건, 지역사회문제와 만족도, 경제·사회적 실태, 생애주기에 따른 대상별(미취학~노인) · 가구특성별(장애인, 저소득층) 욕구 및 관련시설의 평가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으며 시·구민들의 설문이해를 돕기 위해 각 자치구에 해당하는 시설(기관) 및 제도를 명시한 5개 자치구별 조사표를 완성함.

(2) 조사과정 및 자료처리

○ 본 조사에서는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매뉴얼을 바탕으로 시·자치구별 최소 조사 표본가구수를 적용하였고, 5개 자치구 가운데 서구의 인구수가 다른 자치구에 비해 2배정도 많은 것을 고려한 500가구, 그 밖의 나머지 4개 자치구는 각각 400가구 씩 할당하여 총 2,100가구를 표본가구로 결정함.

○ 이는, 2013년 12월 31일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자료를 활용한 확률표집을 통해 2,100가구의 표본을 추출하여 2014년 3월 10일부터 4월 11일까지 약 6주에 걸쳐 실시됨.

○ 그 결과, 조사완료 된 가구 수는 총 2,100가구이며 자치구별로는 동구가 399가구, 중구 400가구, 서구 501가구, 유성구와 대덕구는 각각 400가구임.

1) 『2013 대전의 사회지표』는 행정자료, 통계청 등의 기존 자료에 대한 재분류, 가공 및 『2013 대전광역시 사회조사』를 통한 추가 통계로 구성되어 있음.

(3) 조사결과 분석 및 자료보완

○ SPSS통계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함. 본 조사의 일차적 목적은 시민복지욕구에 관한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도, 백분율, 평균 등 기술통계를 중심으로 분석. 분석의 단위는 기본적으로 가구단위로 하였으나, 특정가구원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해당가구원에 대한 해석을 부가함.

○ 또한, 본 조사연구의 설문내용 외, 보다 다양한 정보원천을 활용하여 대전광역시 복지수요 전망에 관한 정보의 풍부함을 배가함.

2) 시민복지욕구 분석

(1) 조사 대상자의 특성 및 일반 사항 분석

가. 조사 대상자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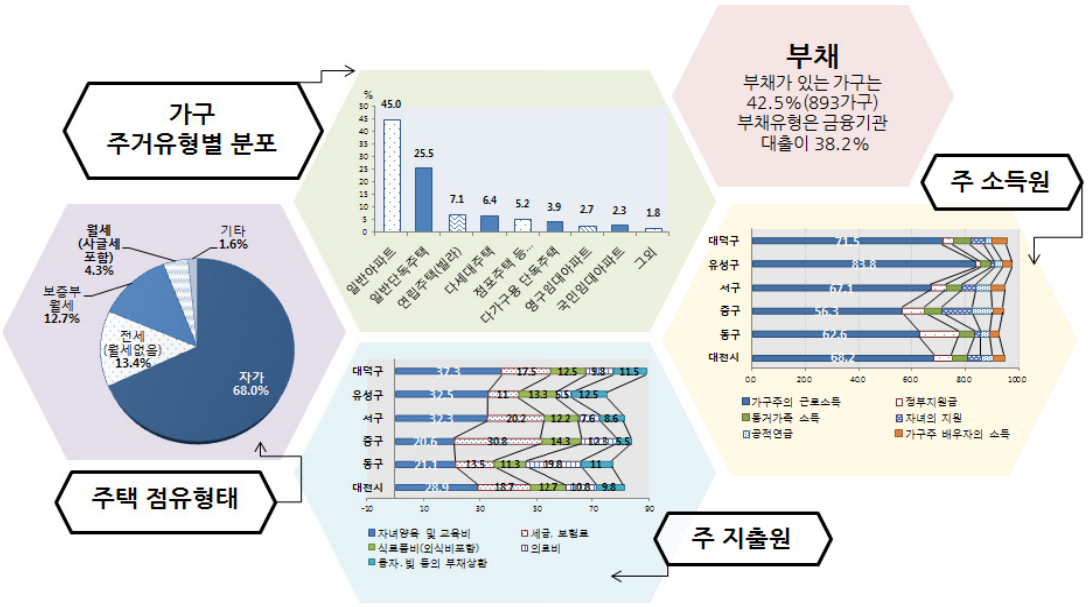
○ 시민욕구조사의 기본적인 조사 및 분석 단위는 가구임. 먼저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를 보면, 1인 가구는 14.2%, 2인 가구 22.6%, 3인 가구 20.7%, 4인 가구 30.3%, 5인 이상 가구는 8.8%, 6인 이상 가구는 3.4%의 분포를 보임. 이는 실제 현황과 차이가 있는데, 1인 가구는 과소 표집 되었고, 4인 이상 가구는 과다 표집 되었음. 2005년까지 대전광역시의 주 가구 유형은 4인 가구(28.0%)였으나, 2010년에는 1인 가구(25.3%)가 가장 주된 가구 유형으로 등장하였으며, 최근 10여 년 동안 1인 가구의 비중과 2인 가구의 비중은 높아지고 있는 반면, 4인 이상 가구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 전국과 비교했을 때, 평균 가구원수는 2.7명으로 동일하나 1인 가구 비중은 전국에 비해 1.4%p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구의 주거유형은 일반아파트에 거주하는 비율이 전체의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주택의 점유형태는 전체 가구 중 자가 가구의 비율이 68.0%, 전세 및 월세를 포함한 임차 가구의 비율은 30.4%를 차지함.

○ 전체가구 중 68.2%의 주 소득원은 가구주의 근로소득이었으며, 가구의 주요 지출 항목은 자녀양육 및 교육비가 28.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조사가구의 42.5%에 해당하는 893가구에서 부채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부채유형은 금융기관대출이 38.2%로 가장 많이 차지함.

[그림] 조사가구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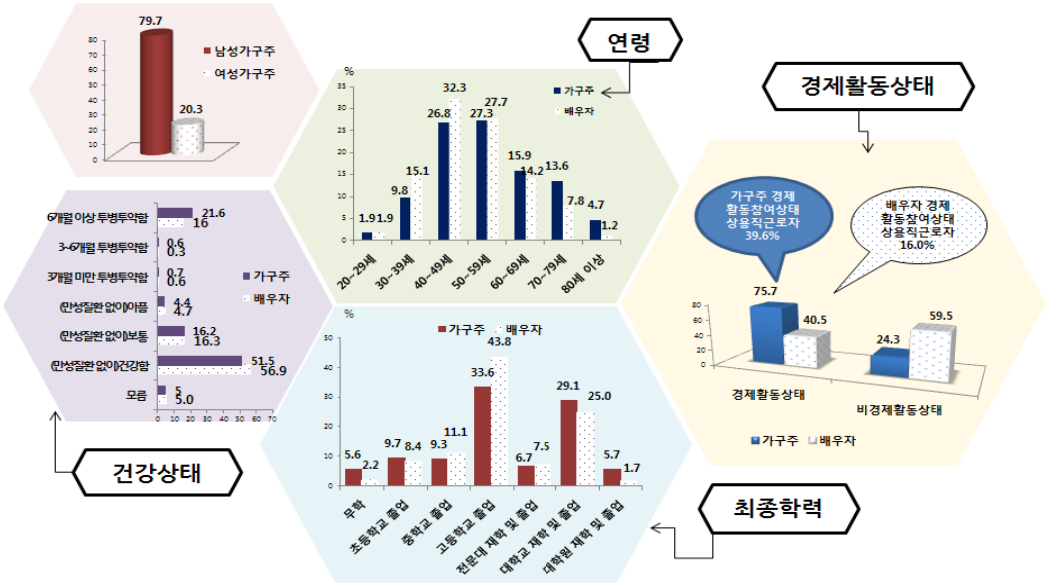
○ 전체 가구의 가구주 성비는 남성이 79.7%, 여성이 20.3%로 남성 가구주 가구가 여성보다 4배 가량 많았으며,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55세, 가구주배우자의 평균연령은 51세로 나타남.

○ 가구주 및 가구주배우자의 교육수준은 고등학교 졸업이 각각 33.6%, 4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주의 경제활동 참여 상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인 비율이 39.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비경제활동상태인 가구주의 비율은 24.3%로 나타남. 가구주배우자는 59.5%가 비경제활동상태에 있었으며, 경제활동 중인 가구주배우자 중에서는 상용직 임금근로자가 16.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가구주와 가구주배우자의 건강상태는 건강하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으나, 6개월 이상 투병·투약하는 비율도 각각 21.6%, 16.0%로 파악됨.

[그림] 조사대상자의 일반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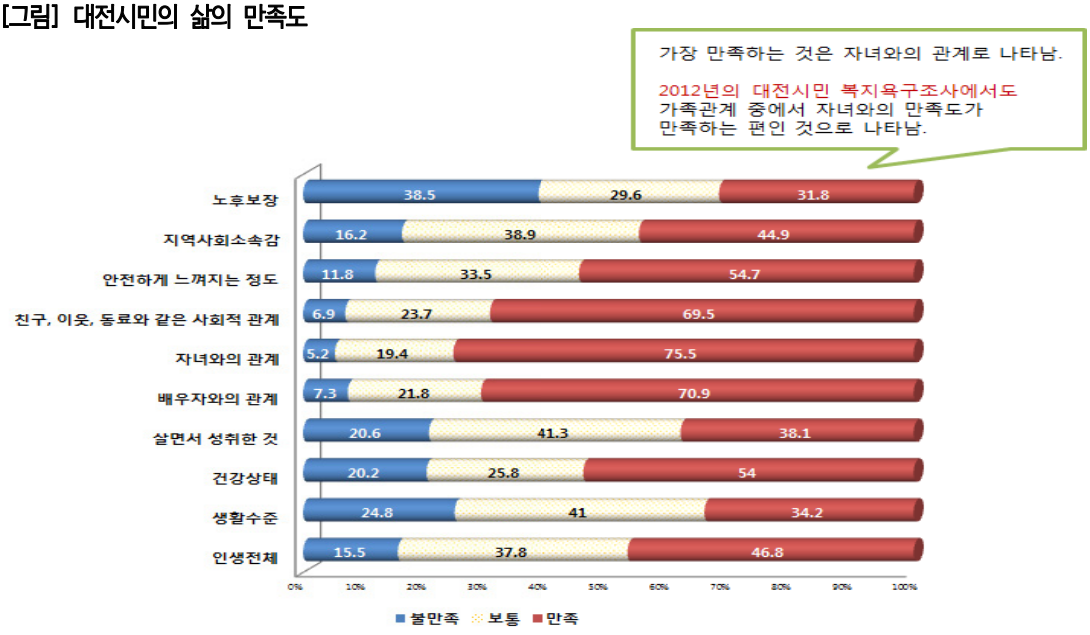


나. 삶의 만족도

○ 삶의 만족도 항목 중에서 가장 만족하다고 나타난 것은 자녀와의 관계로 75.5%가 만족하는 편이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함. 그 다음은 배우자와의 관계(70.9%), 친구 등의 사회적 관계(69.5%), 안전(54.7%)의 순으로 나타남.

○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대해서는 34.2%가 만족, 24.8%가 불만족으로 나타났으나, 노후보장의 경우에는 31.8%가 만족, 38.5%가 불만족한 것으로 응답하여 불만족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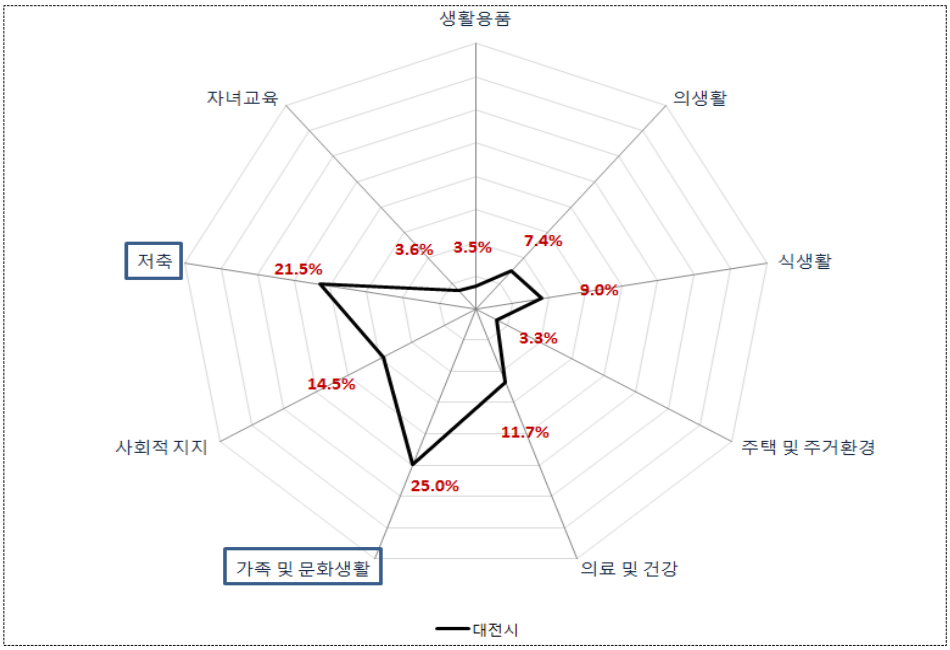
[그림] 대전시민의 삶의 만족도



다. 생활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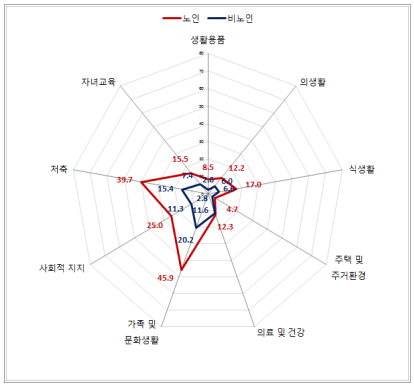
○ 욕구 미충족 비율이 가장 높은 영역은 가족 및 문화생활이 25.0%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은 저축(21.5%), 사회적 지지(14.5%), 의료 및 건강(11.7%)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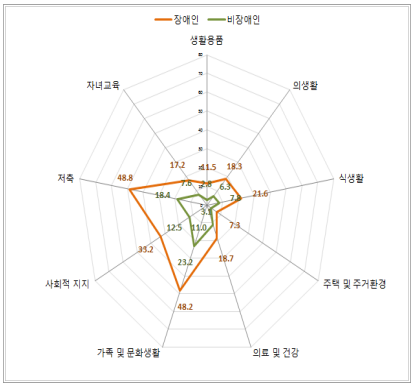
[그림] 욕구 미충족 정도 : 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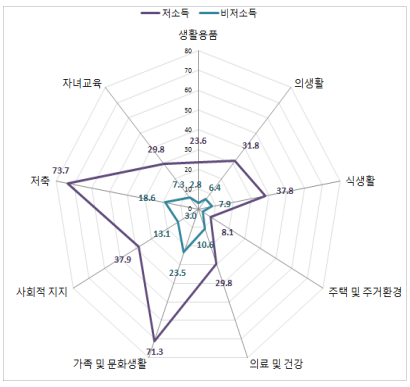


○ 가구유형별 욕구 미충족 현황으로는 전반적으로 비노인가구에 비해 노인가구가, 비장애인가구에 비해 장애인가구가, 비저소득가구에 비해 저소득가구의 미충족 욕구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

[그림] 가구유형별 욕구 미충족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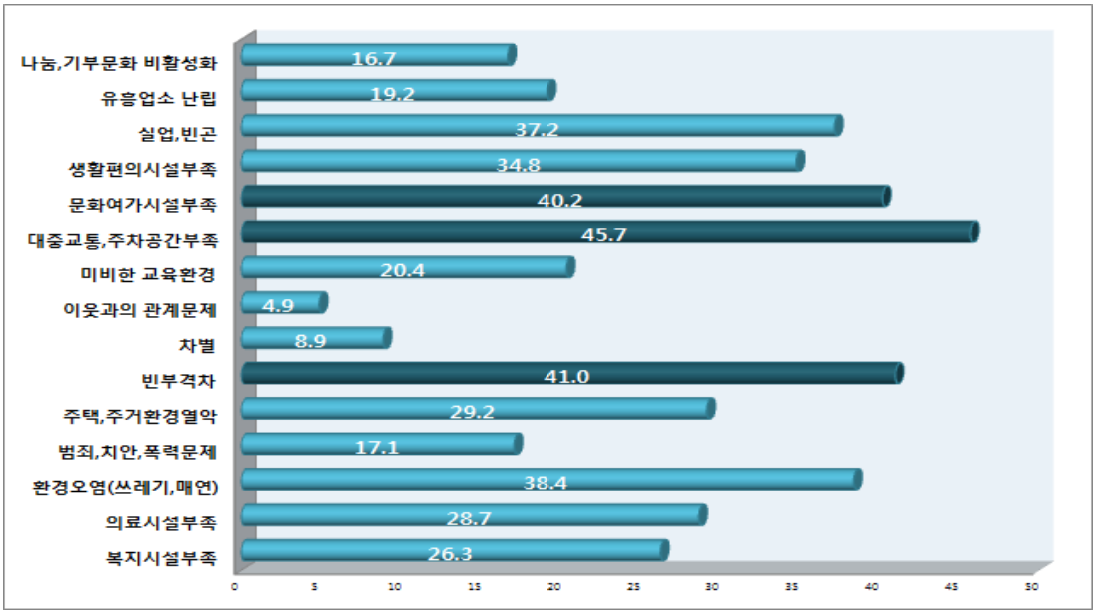




라. 지역사회의 문제와 만족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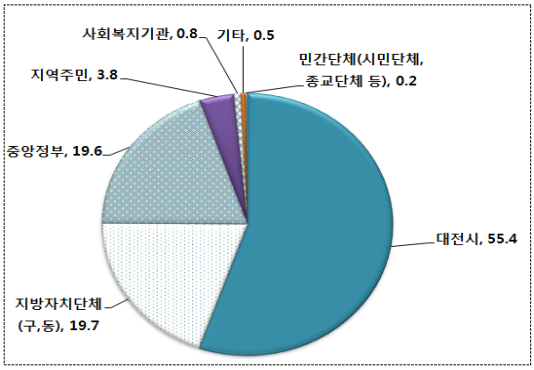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절반에 이르는 45.7%가 대중교통과 주차공간부족에 대해서 심각한 편이거나 매우 심각한 지역문제라고 응답함. 그 다음은 빈부격차(41.0%), 문화·여가시설부족(40.2%), 환경오염(38.4%), 실업·빈곤(37.2%), 생활편의시설부족(34.8%), 주택·주거환경열악(29.2%), 의료시설부족(28.7%), 복지지설부족(26.3%), 미비한 교육환경(20.4%), 유흥업소난립(19.2%), 범죄·치안·폭력(17.1%), 나눔·기부문화 비활성화(16.7%), 이웃과의 관계(4.9%), 차별(8.9%)의 순이었음.

[그림] 지역사회의 문제의 심각성 : 대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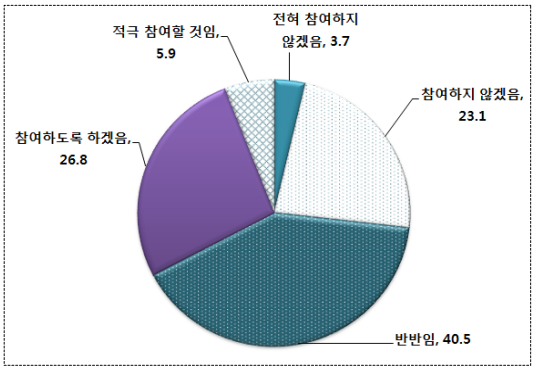
❍ 조사대상의 절반이상이 지역사회 문제해결의 주체로 대전시(55.4%)를 꼽았지만 지방자치단체(19.7%)와 중앙정부(19.6%) 역시 문제해결의 중요한 주체라고 응답함. 지역주민과 사회복지관 및 민간단체 등의 역할에 대해서는 5%정도로 조사됨.

[그림] 지역사회 문제해결 주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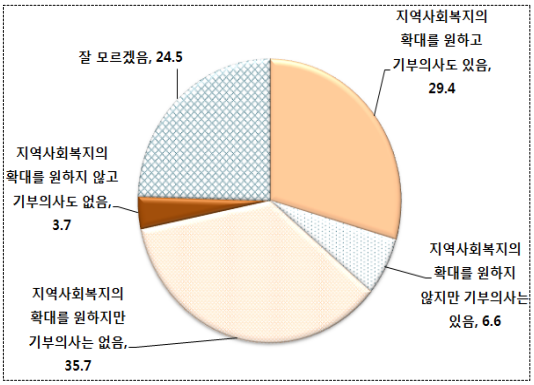


○ 하지만 시민 개인이 직접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참여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40.5%가 참여할 생각과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 반반이라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32.7%이고 참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이 26.8%로 나타나, 참여하겠다는 의견이 조금 높게 나타남.

[그림] 지역사회 문제해결에의 참여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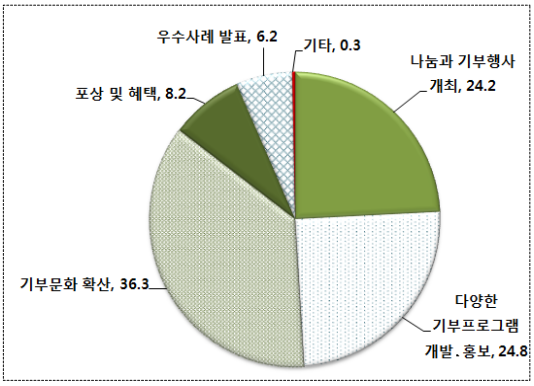


[그림] 지역복지 확대와 기부의사



○ 지역사회복지 확대와 기부의사에 관한 응답결과는 지역사회복지의 확대를 원하지만 기부의사는 없다는 응답이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 다음은 지역사회복지의 확대를 원하고 기부의사도 있다는 응답이 29.4%였으며, 응답자의 4/1가량은 잘 모르겠다는 유보적인 답변을 함.

[그림]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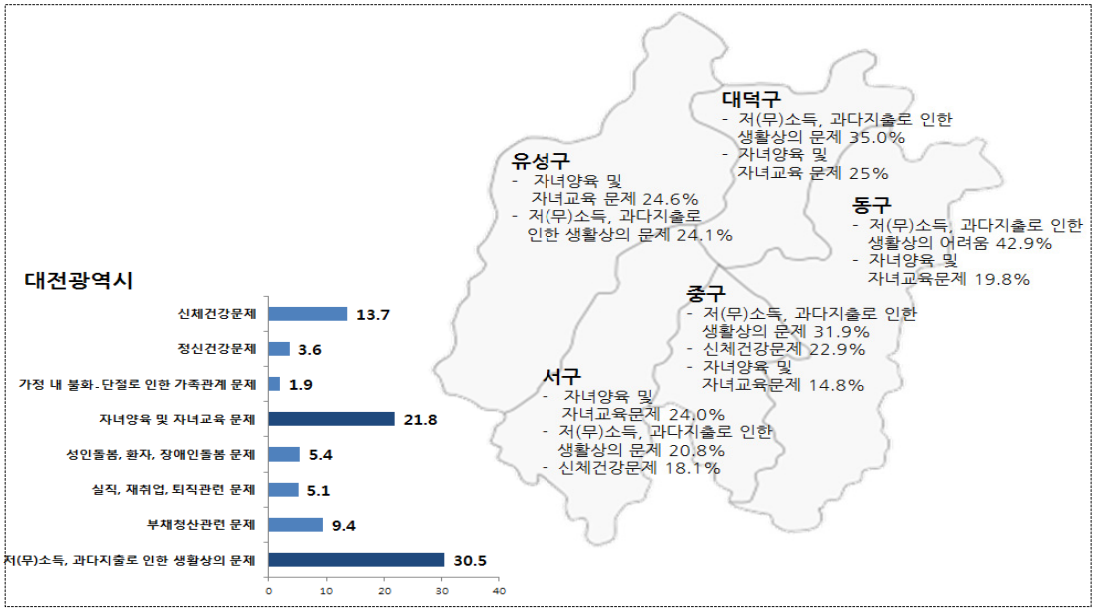
○ 나눔과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기부문화 확산이라는 응답이 36.3%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다양한 기부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24.8%), 나눔과 기부행사 개최(24.2%)의 순으로 나타남.

(2) 대전시민의 복지 욕구

가. 일반 가구의 복지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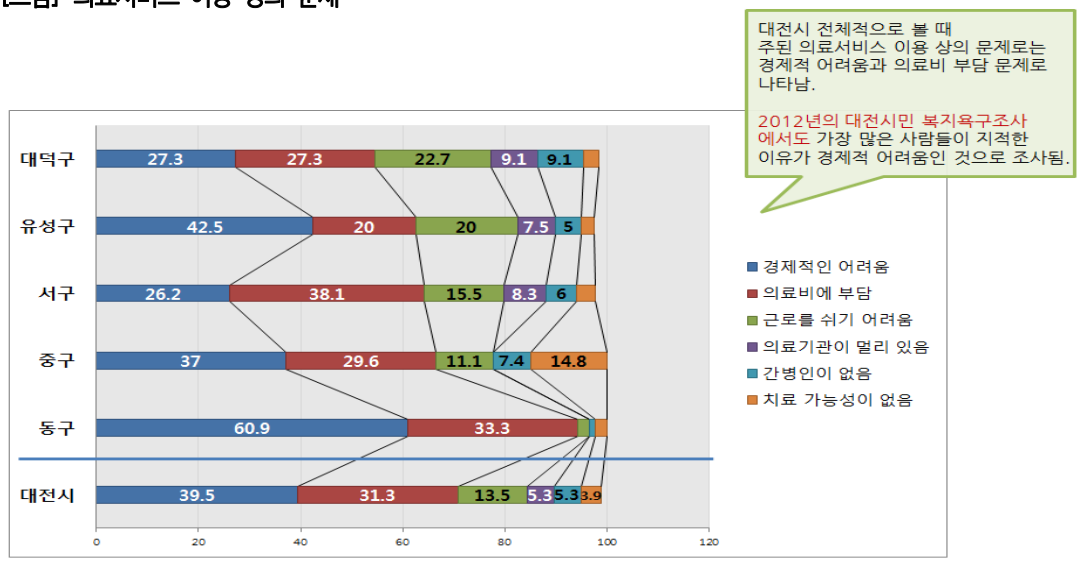
○ 생활상의 문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 하나를 선택하도록 한 결과, 저(무)소득이나 과다지출로 인한 생활상의 문제라는 응답이 3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녀양육 및 교육(21.8%), 신체적·정신적 건강문제(13.7%), 부채청산(9.4%)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가장 심각한 생활상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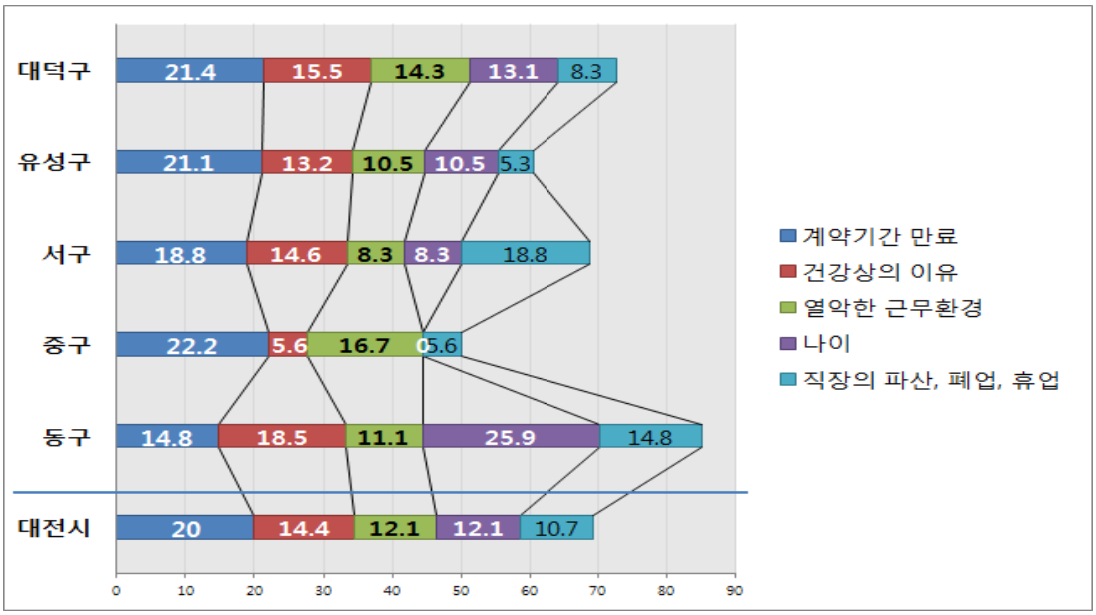
○ 주된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문제로는 경제적 어려움과 의료비 부담 문제로 각각 39.5%와 31.3%가 응답함.

[그림] 의료서비스 이용 상의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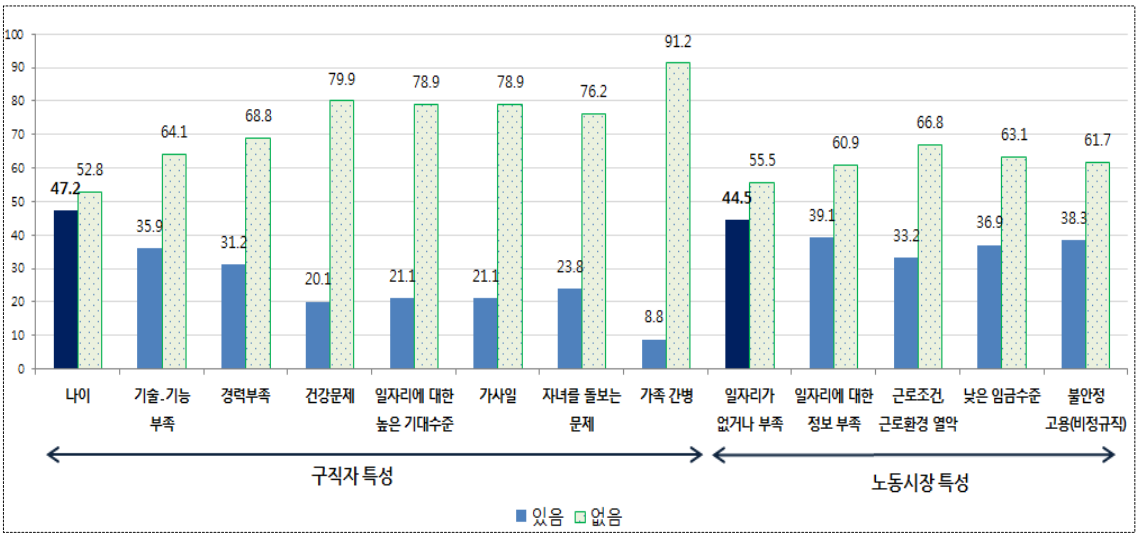
○ 실직을 경험한 가구구성원의 주요 실직 사유는 계약기간 만료(20.0%)가 가장 큰 이유로 응답되었으며, 건강상 이유(14.4%)와 나쁜 근무환경(12.1%), 나이(12.1%), 직장의 파산·폐업·휴업(10.7%), 출산·육아(9.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실직 사유



○ 또한, 2013년 한 해 동안 구직경험이 있었던 407가구에 대해 구직 시 어려움을 겪었는지의 여부를 구직자와 노동시장의 측면에서 조사한 결과, 구직자 특성가운데 구직 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나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47.2%), 노동시장특성과 관련한 구직관련 문제는 일자리가 없거나 부족한 것(44.5%)이라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구직관련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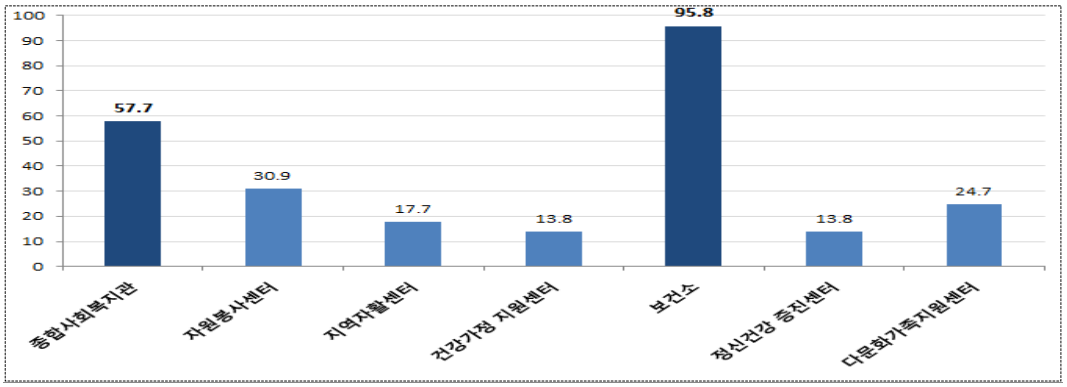
○ 사회복지관련 시설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보건소로 95.8%가 알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사회복지관(57.7%), 자원봉사센터(30.9%), 다문화가족지원센터(24.7%), 지역자활센터(17.7%),

건강가정지원센터와 정신건강증진센터(13.8%)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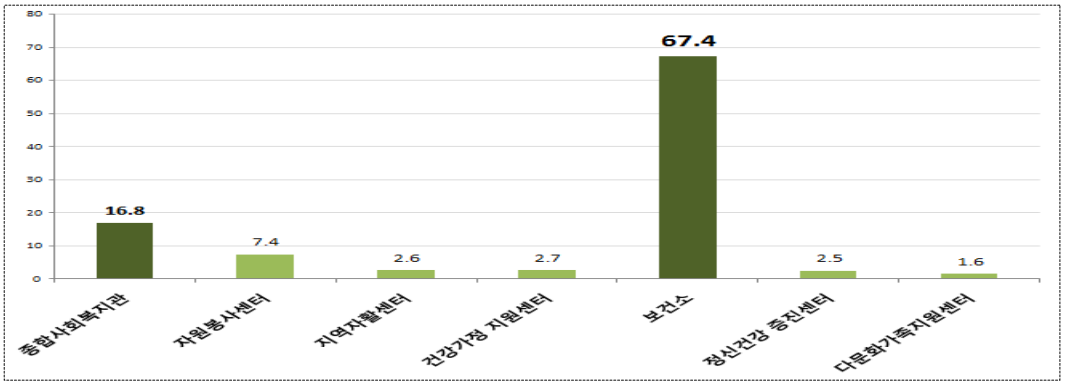
○ 이용경험은 비교적 저조한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보건소가 67.4%, 종합사회복지관은 16.8%가 이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이나 기관의 이용경험은 10%미만이었음. 그러나 이들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향후 이용의향은 이용경험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 한편 이러한 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내용이나 방법을 모르는 것(36.8%~69.1%)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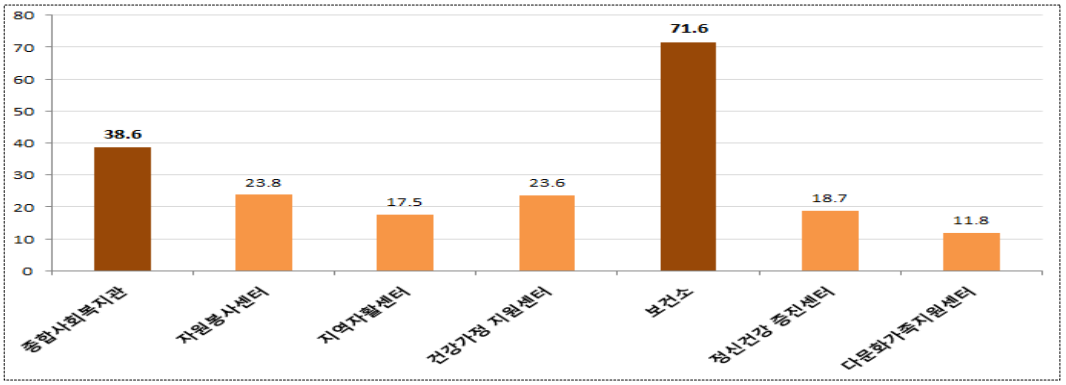
[그림]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관한 인지도



[그림]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관한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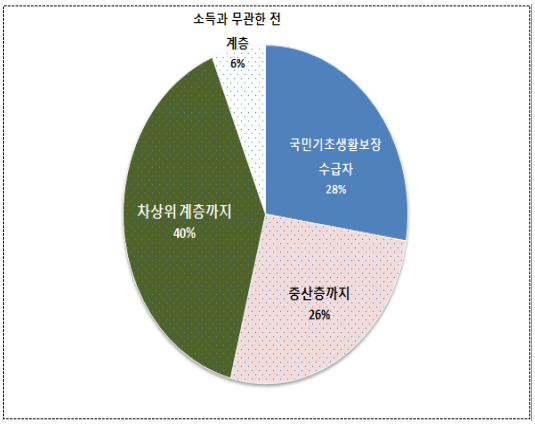


[그림] 사회복지관련 시설에 관한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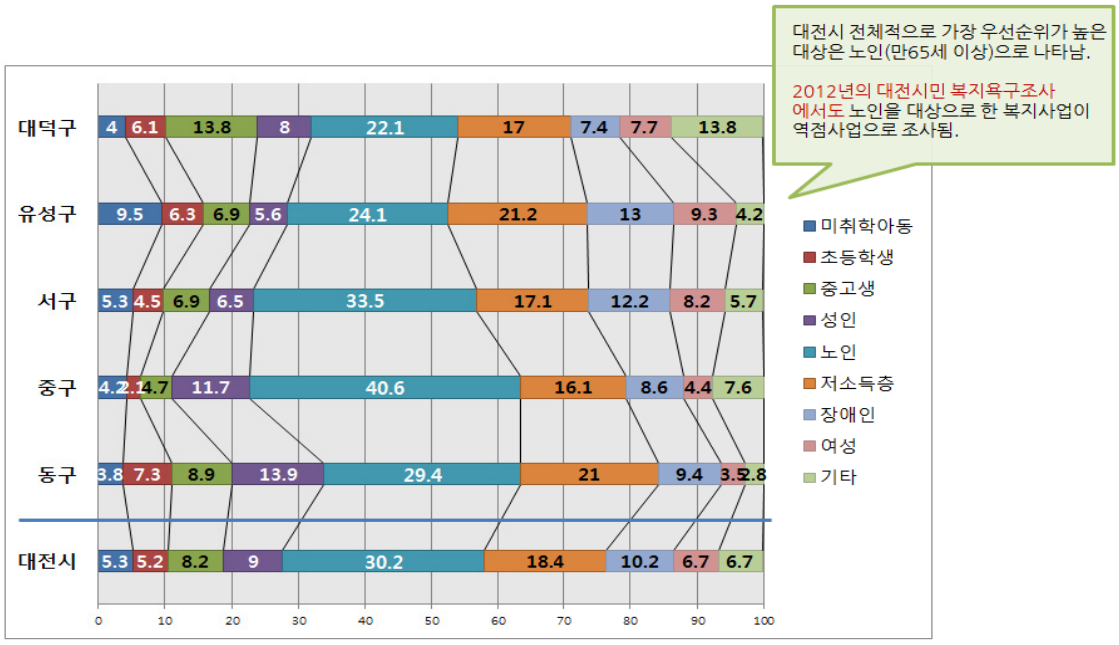
○ 복지혜택 최소 대상범위로 가장 많이 꼽힌 대상은 차상위 계층까지로 39.9%가 응답하였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27.5%), 중산층까지(26.4%), 소득과 무관한 전 계층(6.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복지혜택 최소 대상범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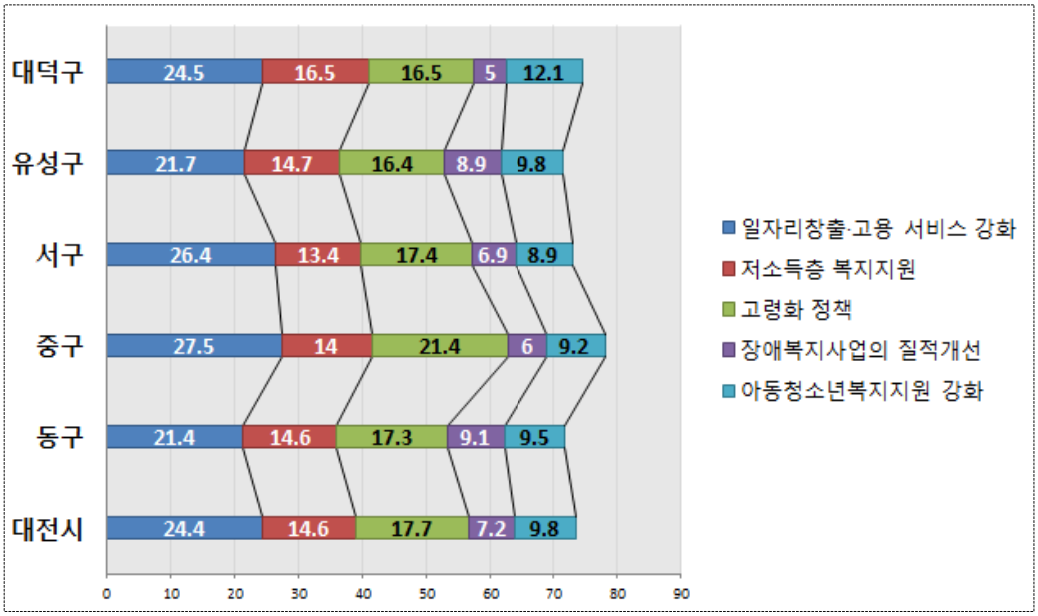
○ 복지서비스 제공의 우선순위대상을 파악해 본 결과, 노인(만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30.2%), 저소득층(18.4%), 장애인(10.2%), 만19~64세의 성인(9.0%), 중·고등학생(8.2%), 여성(6.7%), 미취학아동(5.3%), 초등학생(5.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복지서비스 제공 우선순위 대상



○ 또한, 우선순위가 높은 복지서비스 사업으로 조사된 것은 일자리창출 및 고용서비스 강화(24.4%)와 고령화 정책(17.7%), 저소득층 복지지원(14.6%)순으로 조사됨.

[그림] 우선순위 사업(다중응답)



나. 미취학 아동가구의 복지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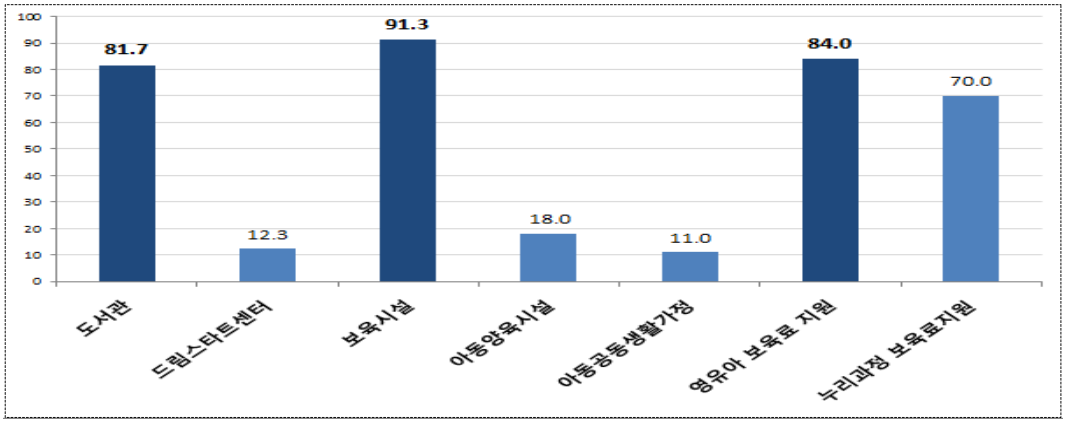
○ 미취학 아동이 있는 경우 보육방법은 놀이방 등의 보육시설이 34.7%, 유치원이 30.9%이었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돌보는 경우가 28.3%이었음.

○ 미취학 아동복지 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인지도 분석결과, 대부분의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구는 보육시설(91.3%), 영유아 보육료지원(84.0%), 도서관(81.7%), 누리과정 보육료지원(70.0%)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반면, 드림스타트센터, 아동양육시설, 아동공동생활가정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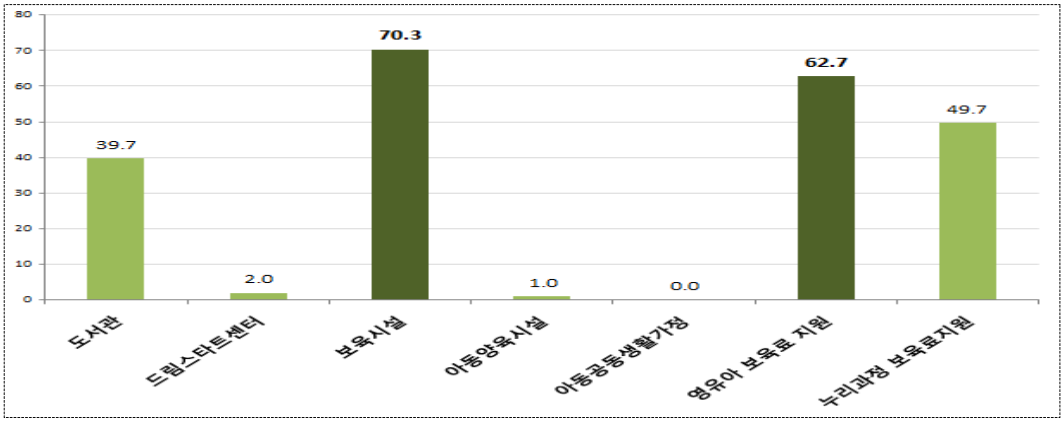
○ 이용경험은 보육시설 70.3%, 영유아 보육료지원 62.7%, 누리과정 보육료지원 49.7%, 도서관 39.7%가 이용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그 외 사업 및 제도의 경우에는 이용경험이 없거나 낮음. 또한 향후 이용의향에 대해서는 대체로 이용경험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대개의 시설과 사업(제도) 이용 시 불편사항 또는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내용·방법을 모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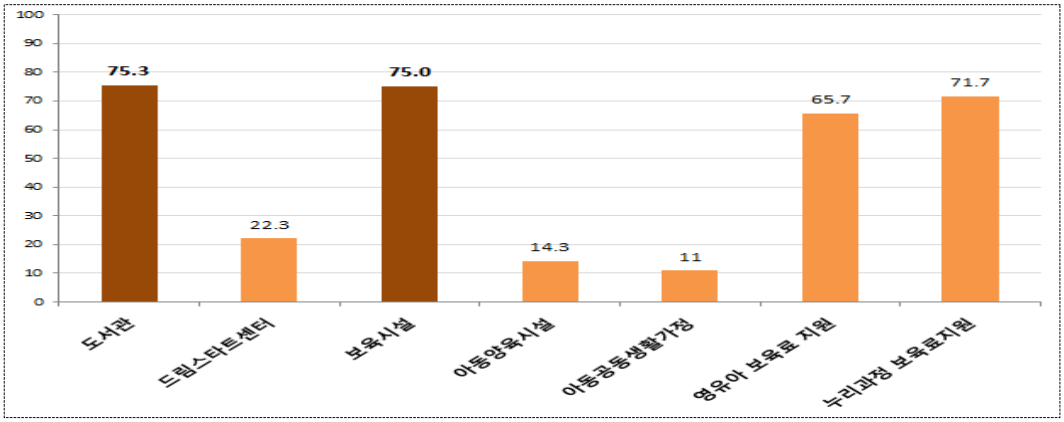
[그림] 미취학 아동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인지도



[그림] 미취학 아동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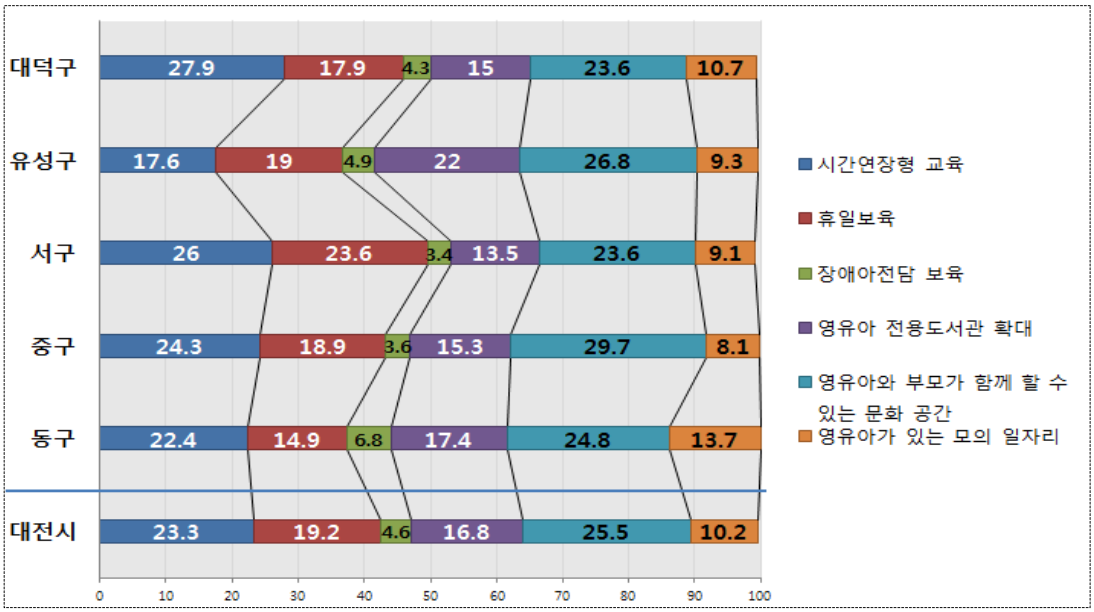


[그림] 미취학 아동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의향



○ 미취학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는 영유아와 부모가 함께할 수 있는 문화 공간마련에 대해 25.5%가 응답하였으며, 시간연장형 교육(23.2%), 휴일보육(19.2%), 영유아 전용도서관 확대(16.8%), 영유아가 있는 모의 일자리(10.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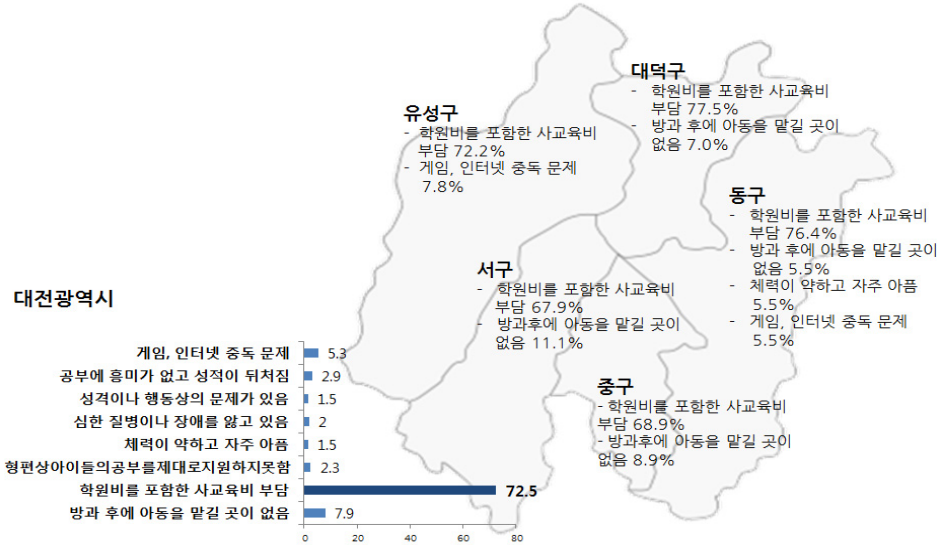
[그림] 미취학 아동양육과 관련하여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다중응답)



다. 초등학생가구의 복지욕구

○ 초등학생 자녀와 관련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사교육비 부담에 72.5%가 응답함. 다음으로는 방과 후 아동을 맡길 곳이 없다(7.9%), 게임이나 인터넷 중독문제가 있다(5.3%)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초등학생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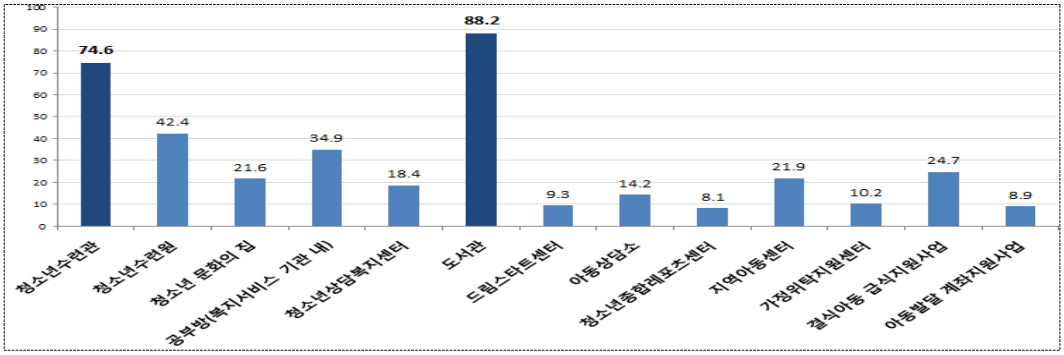


○ 초등학생 대상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인지도 분석결과, 인지도가 가장 높은 시설은 도서관으로, 88.2%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청소년수련관(74.6%), 청소년수련원(42.4%), 공부방(34.9%), 결식아동급식지원사업(24.7%)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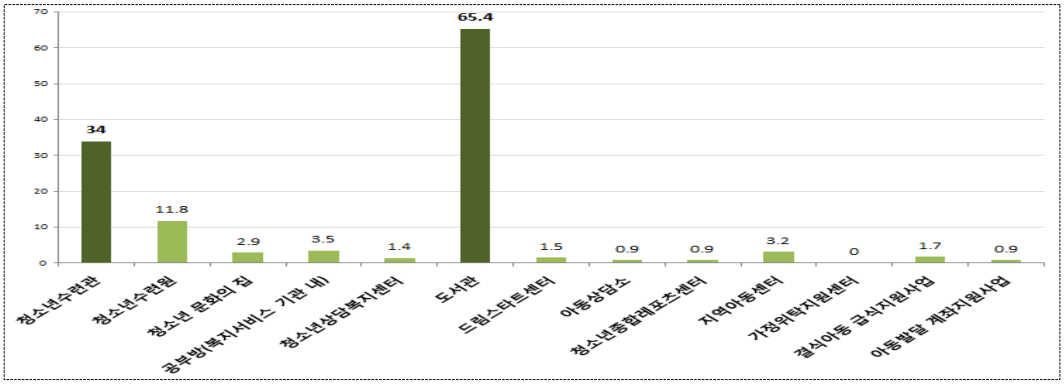
○ 이용경험은 도서관(65.4%)과 청소년수련관(34.0%)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낮게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이용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초등학생 대상 사회복지 관련 시설 및 사업의 불편사항이나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시간부족, 대중교통이용 불편,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때문인 것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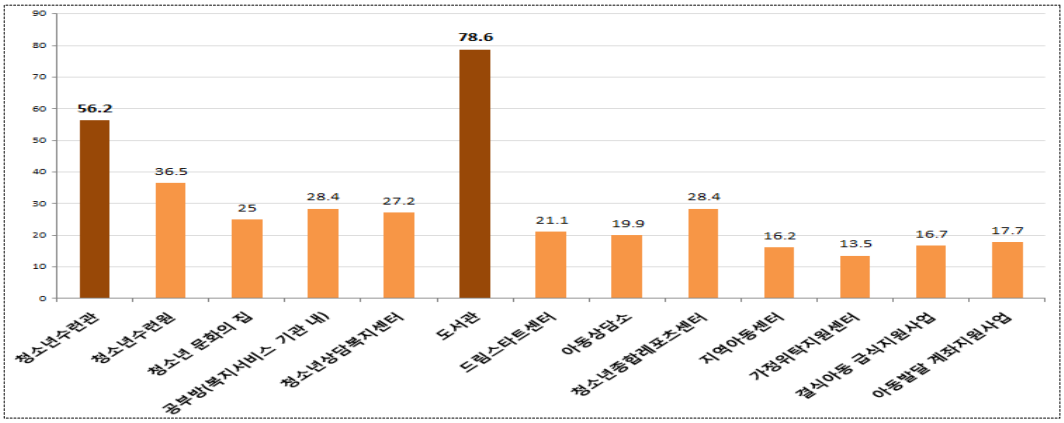
[그림] 초등학생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인지도



[그림] 초등학생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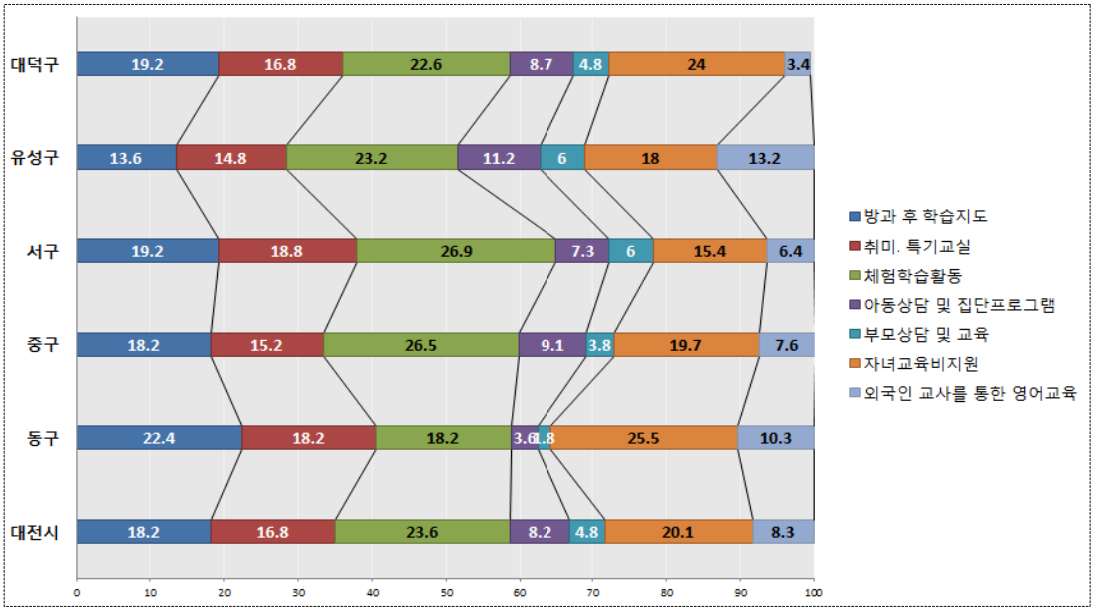


[그림] 초등학생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한 향후 이용의향



○ 초등학생 자녀양육과 관련한 복지서비스 중 가장 우선순위로 지목된 것은 체험학습(23.6%)이었으며, 자녀교육비지원(20.1%), 방과 후 학습지도(18.2%), 취미·특기교실(16.8%) 등이 그 다음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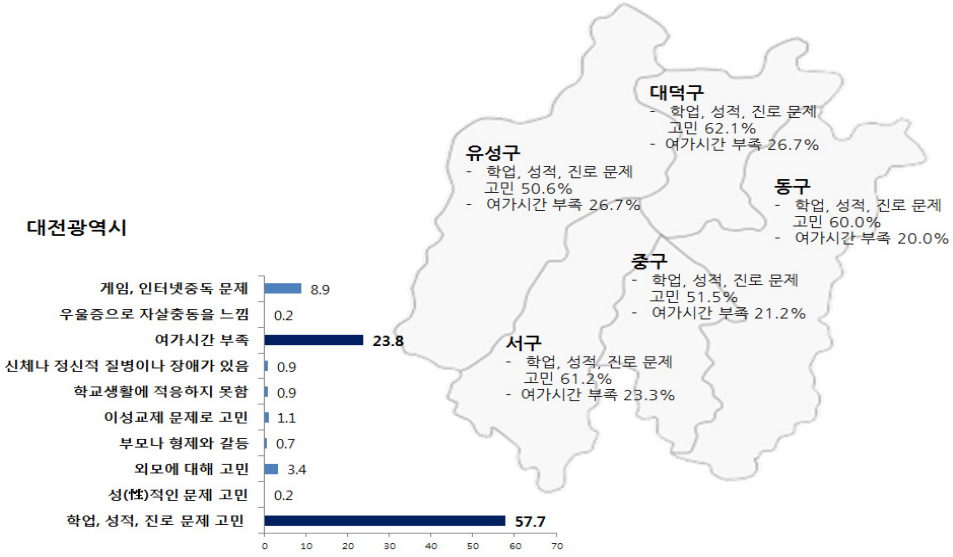
[그림] 초등학생 양육관련 우선순위 서비스(다중응답)



라. 중·고등학생 등 청소년가구의 복지욕구

○ 청소년 자녀관련 문제로 가장 심각한 것은 학업·성적·진로 문제 고민에 57.7%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여가시간 부족(23.8%), 게임·인터넷 중독 문제(8.9%)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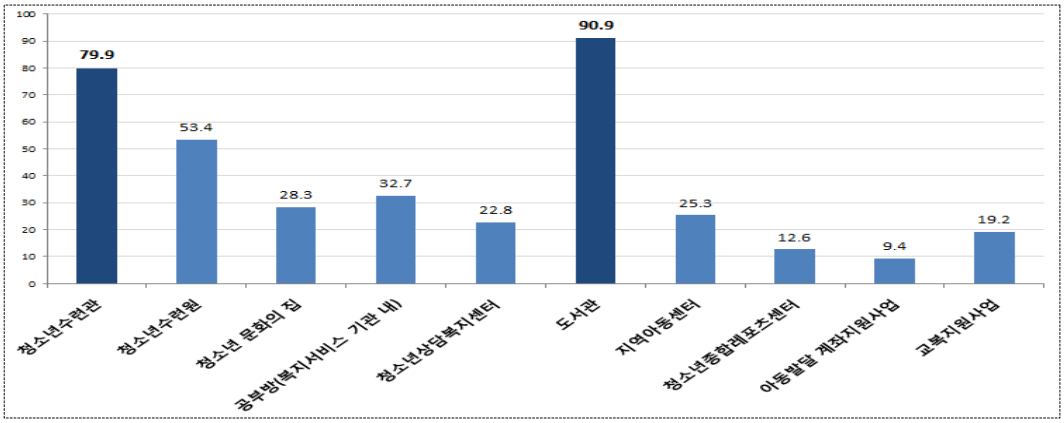
[그림] 청소년관련 가장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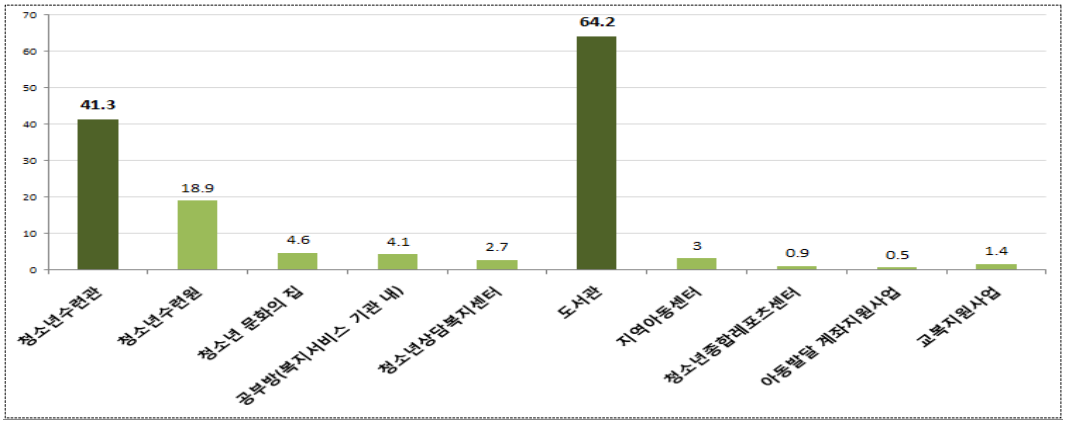
○ 청소년관련 시설 및 사업에 대한 인지도 분석결과, 가장 많이 알고 있는 시설은 도서관으로 90.9%가 안다고 응답함. 그 다음은 청소년수련관(79.9%), 청소년수련원(53.4%), 공부방(32.7%), 청소년문화의집(28.3%), 지역아동센터(25.3%), 청소년상담복지센터(22.8%) 등의 순으로 나타남.

○ 이용경험은 도서관(64.2%)과 청소년수련관(41.3%)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이용경험에 비해 대체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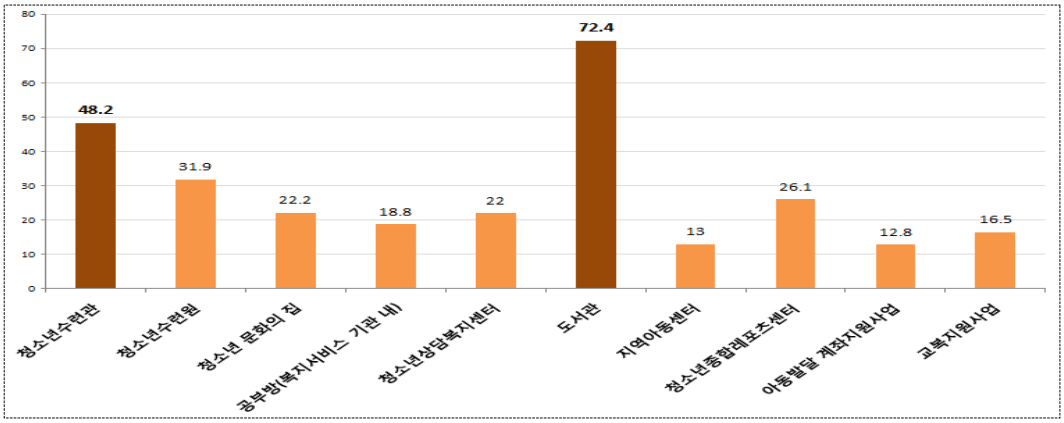
[그림] 청소년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인지도



[그림] 청소년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한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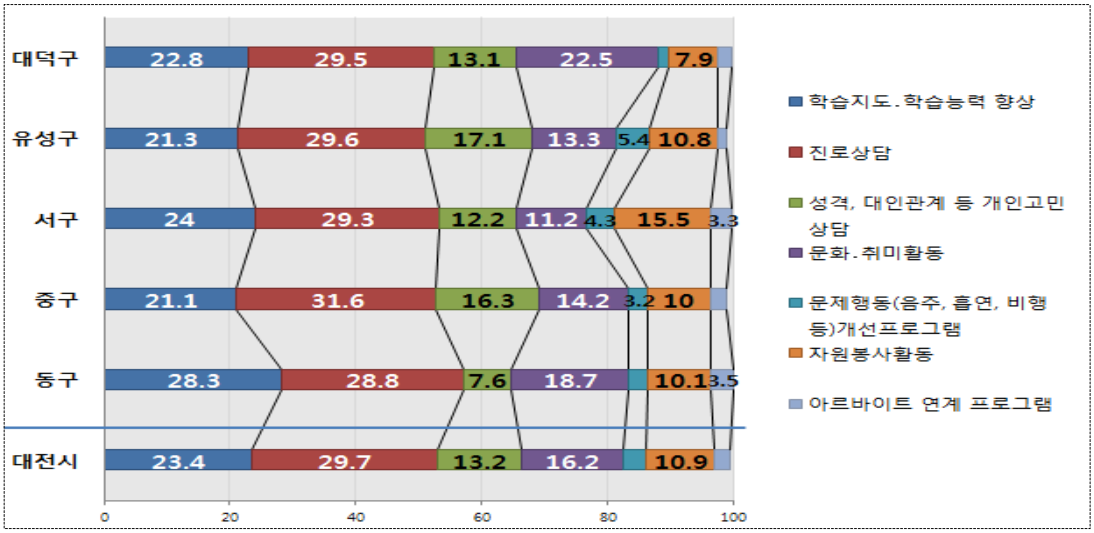
[그림] 청소년관련 시설 및 사업에 관한 향후 이용의향



○ 청소년관련 시설이용의 불편사항이나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로는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가장 높았고,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바쁘고 시간부족, 대중교통 및 접근이용의 불편 등에도 응답률이 높았음.

○ 청소년 자녀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는 진로상담으로 29.7%가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학습지도·학습능력 향상(23.4%), 문화·취미활동(16.2%)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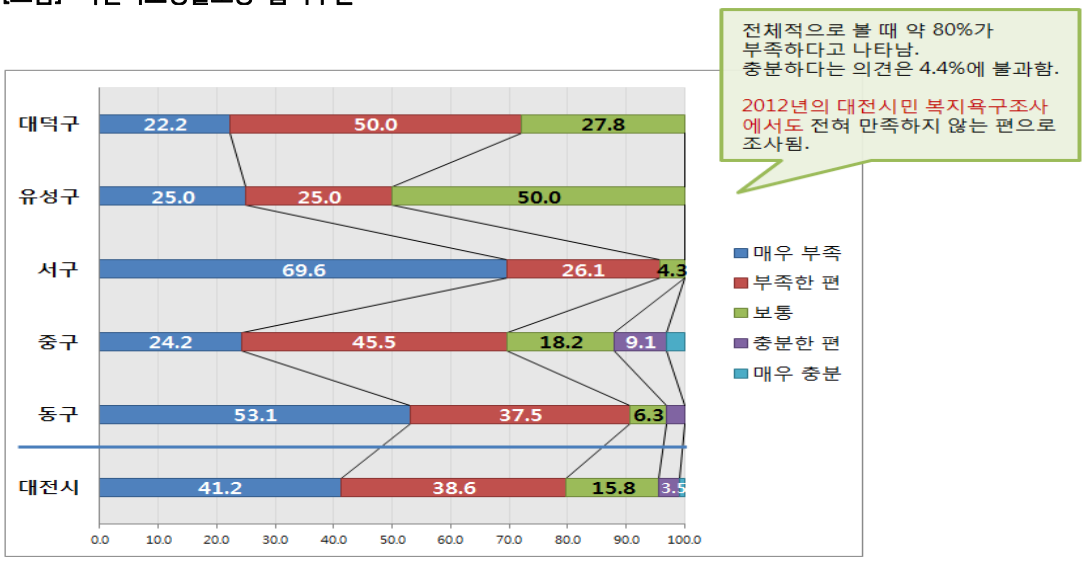
[그림] 청소년 자녀에게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다중응답)



마. 저소득층가구의 복지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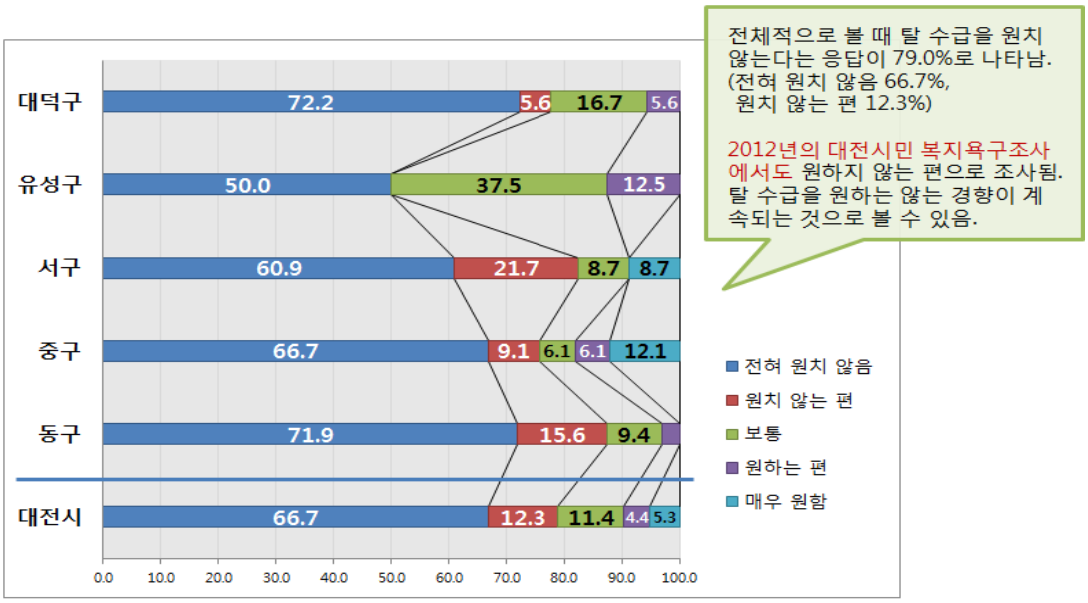
○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분석결과, 약 80%가 부족하다(매우 부족하다 41.2%, 부족한 편이 38.6%)고 응답하였으며, 충분하다는 의견은 4.4%에 불과함.

[그림] 국민기초생활보장 급여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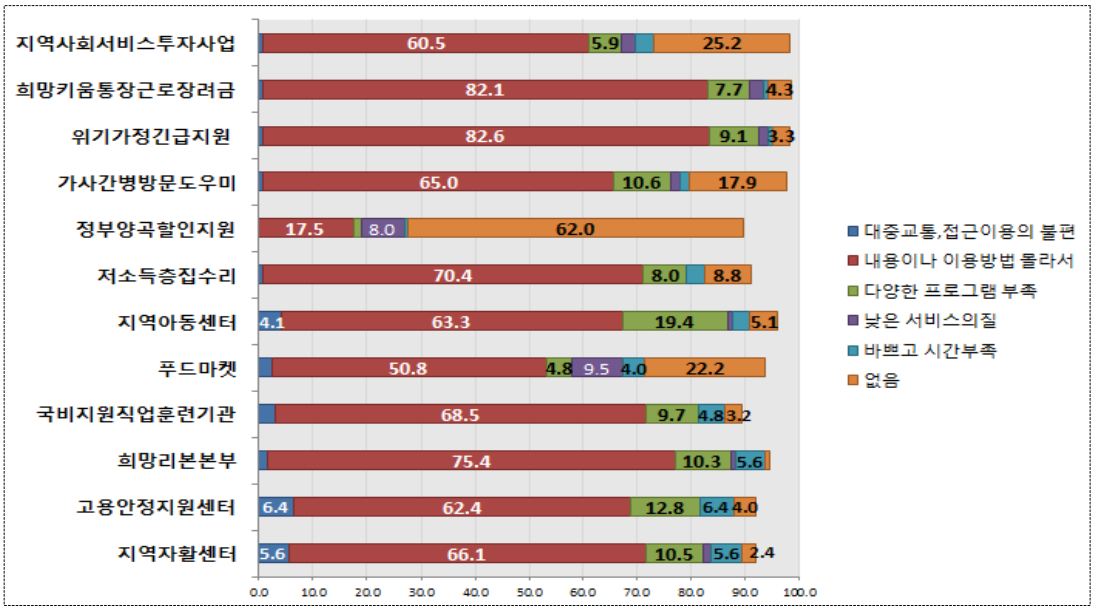
○ 반면에 수급권자의 탈수급 욕구는 비교적 낮은 것으로 밝혀짐. 대전시 전체적으로 볼 때 탈수급을 원치 않는다는 응답이 79.0%(전혀 원치 않음 66.7%, 원치 않는 편 12.3%)에 달함.

[그림] 탈수급 욕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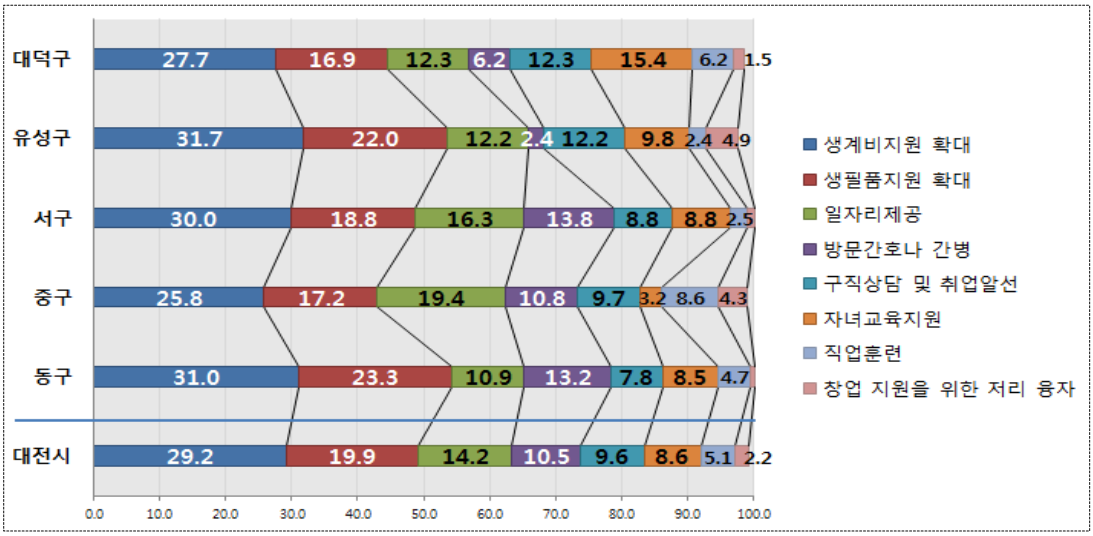
○ 저소득층 관련 시설 이용의 주된 장애요인은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이나 이용방법을 모르는 것이 가장 큰 요인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부족 등이 주된 이유로 나타남. 대부분의 시설 및 사업(제도)에 대한 이용방법과 서비스내용에의 인지도가 낮은 것이 문제점으로 나타남.

[그림] 저소득층 관련 사업(제도) 이용 시 불편사항 또는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



○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한 서비스 중 우선순위가 가장 높게 응답된 것은 생계비지원 확대(29.2%)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생필품지원 확대(19.9%), 일자리제공(14.2%), 방문간호나 간병(10.5%), 구직상담 및 취업알선(9.6%), 자녀교육지원(8.6%), 직업훈련(5.1%) 등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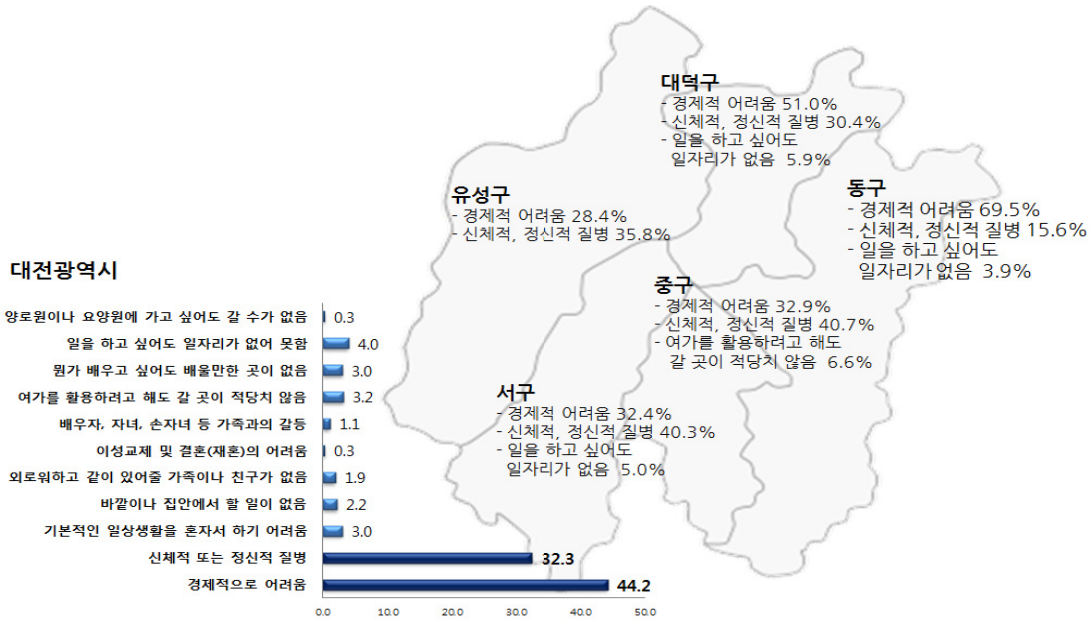
[그림] 저소득층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다중응답)



바. 노인가구의 복지욕구

○ 가장 심각한 노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 44.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건강문제로 32.3%가 응답하였고 다른 항목들은 5%미만으로 낮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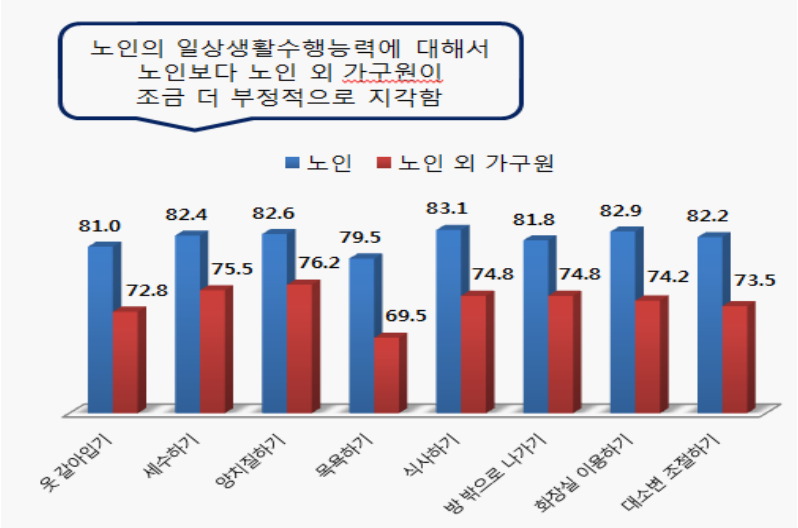
[그림] 가장 심각한 노인 문제



○ 65세 이상 노인의 절반(50.6%)은 생활비를 본인 및 배우자가 마련하고 있고, 자녀 또는 친척 도움(37.4%), 정부 및 사회단체(8.8%) 순이었음. 본인 및 배우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은 연금 및 퇴직급여(50.6%),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34.4%), 재산소득(10.2%) 순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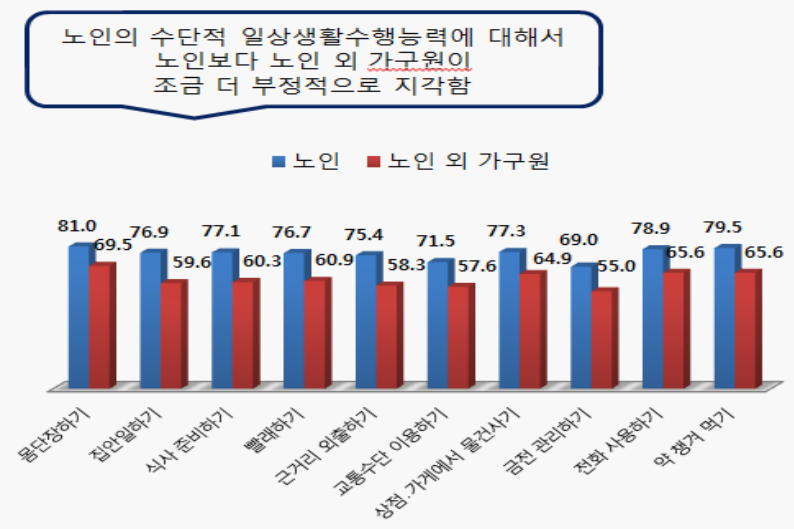
○ 노인의 기본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완전자립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양치질하기와 식사하기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목욕하기로 응답함.

[그림] 노인의 일상생활수행능력 : 노인과 노인 외 가구원의 응답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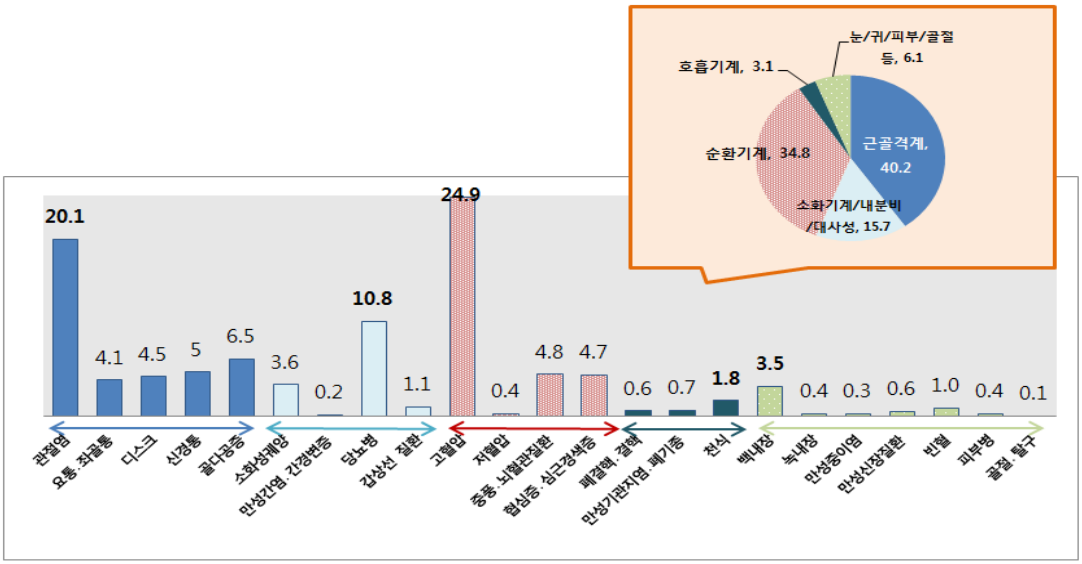
○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에 대한 완전자립비율이 가장 높은 항목은 약 챙겨먹기와 몸단장하기로 응답하였으며, 가장 낮은 항목은 금전관리와 교통수단 이용하기로 응답함.

[그림] 노인의 수단적 일상생활수행능력 : 노인과 노인 외 가구원의 응답 비교



○ 노인가구의 87.0%에 해당하는 555가구는 만성질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노인가구원에게 가장 많은 만성질환은 근골격계 질환으로 40.2%가 응답함. 그 다음은 순환기계 질환(34.8%), 소화기계/내분비/대사성 질환(15.7%), 눈/귀/피부/골절 등의 질환(6.1%), 호흡기계 질환(3.1%)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3개월 이상 앓고 있는 질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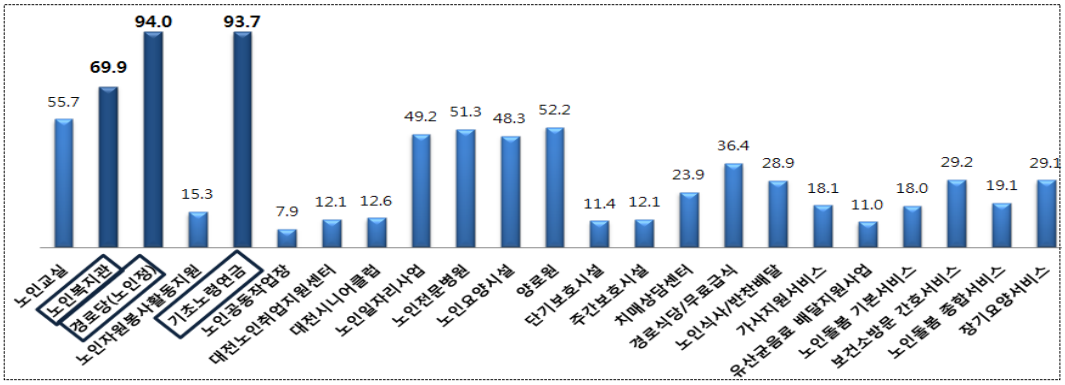


○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것은 경로당이었으며 94.0%가 안다고 응답함. 그 다음은 기초노령연금(93.7%), 노인복지관(69.9%), 노인교실(55.7%), 노인일자리사업(49.2%), 노인자원봉사활동지원(15.3%), 대전시니어클럽(12.6%), 대전노인취업지원센터(12.1%), 노인공동작업장(7.9%)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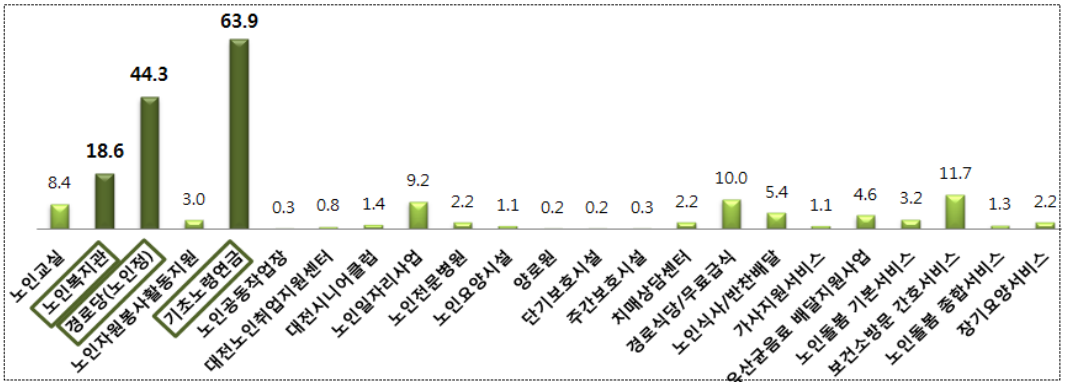
○ 이용경험은 기초노령연금이 63.9%로 가장 높았으며, 경로당(44.3%), 노인복지관 (18.6%)등의 순으로 나타남. 향후 이용의향은 이용경험이 높은 시설이나 사업(제도)이 높게 나타났으며, 대체로 이용경험에 비해 높게 나타남.

○ 노인복지관련 시설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대개의 시설 및 사업(제도)의 내용이나 방법을 모르거나 다양한 프로그램 부족, 그리고 본인이 바쁘거나 시간 부족이 이유인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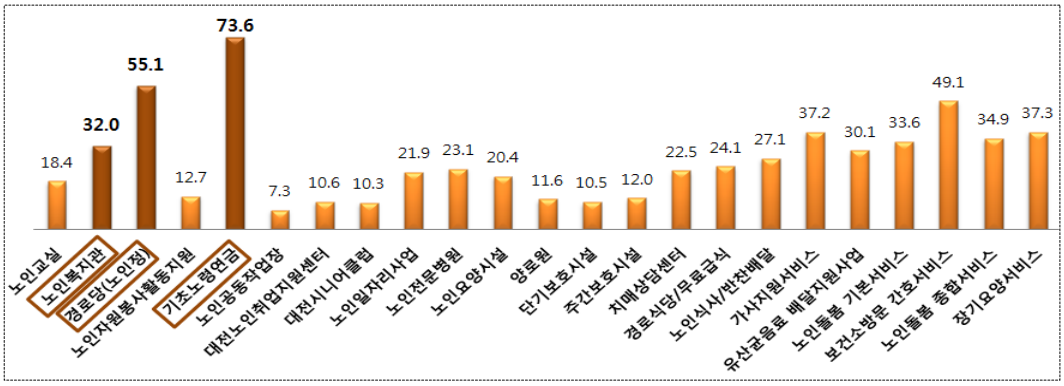
[그림]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인지도



[그림]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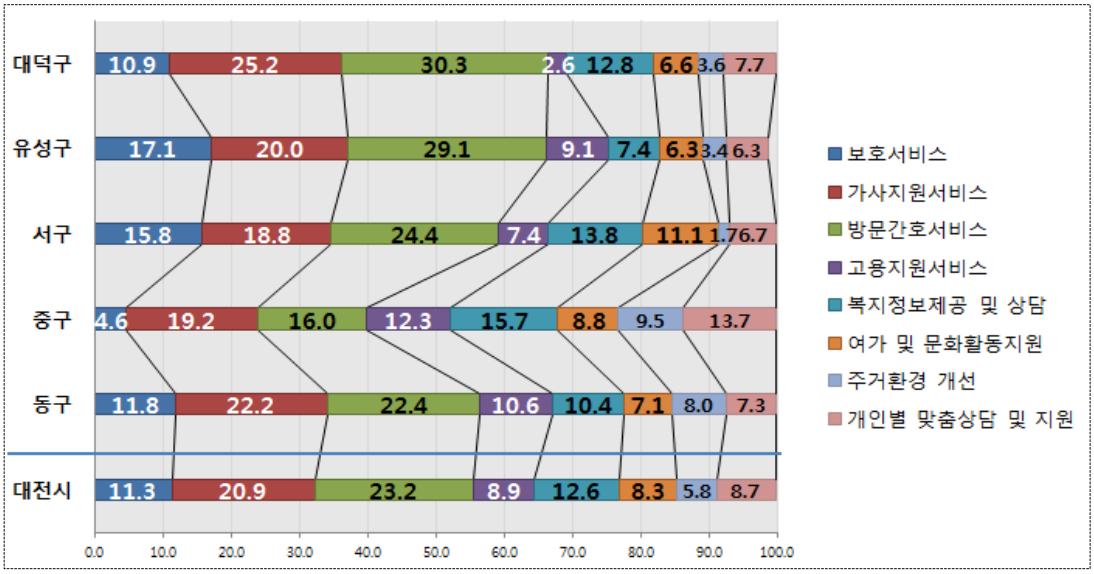


[그림] 노인복지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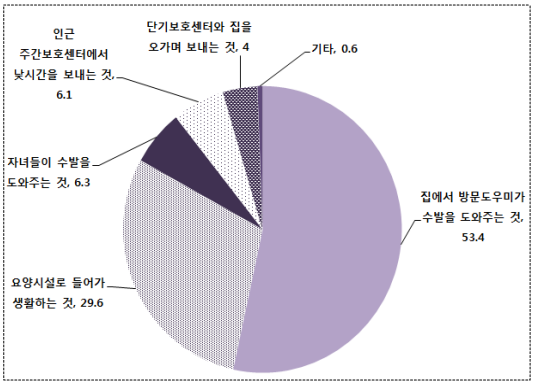
○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되는 서비스는 방문간호서비스가 23.2%로 가장 높았으며, 가사지원서비스(20.9%),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12.6%), 주간·단기보호서비스(11.3%), 고용지원서비스(8.9%), 개인별 맞춤상담 및 지원(8.7%), 여가 및 문화 활동지원(8.3%) 등이 그 다음 순으로 나타남.

[그림]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다중응답)



○ 노인가구원이 건강상태나 기능이 떨어져 다른 사람의 수발이 필요할 때 어디서 누구로부터 수발을 받고 싶은가를 조사한 결과는, 방문도우미 서비스가 53.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요양시설로 들어가 생활하는 것(29.6%)과 자녀로부터 수발을 받는 것(6.3%)의 순으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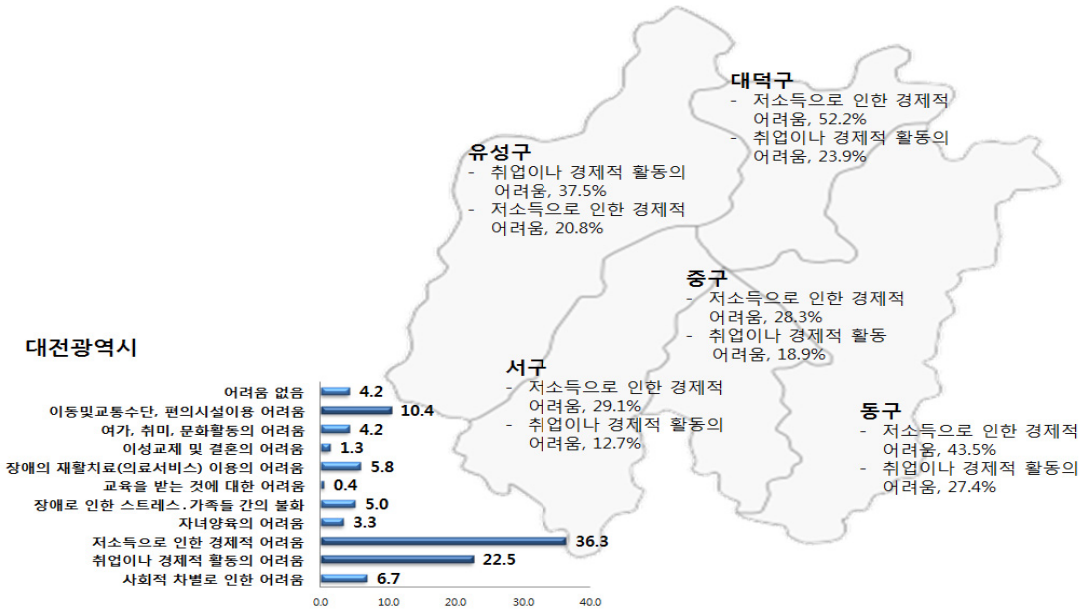
[그림] 받고 싶은 수발서비스



사. 장애인가구의 복지욕구

○ 장애인가구의 심각한 문제는 저소득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36.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취업이나 경제적 활동의 어려움(22.5%), 이동교통수단·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10.4%)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장애인의 가장 심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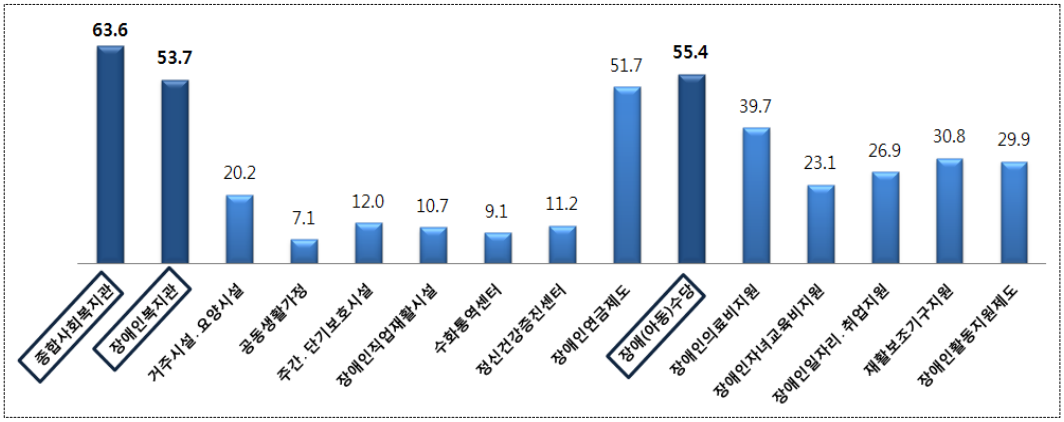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및 사업 중 인지도가 가장 높은 프로그램은 종합사회복지관으로 63.6%가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장애(아동)수당(55.4%), 장애인복지관(53.7%), 장애인연금제도(51.7%), 장애인의료비 지원(39.7%), 재활보조기구지원(3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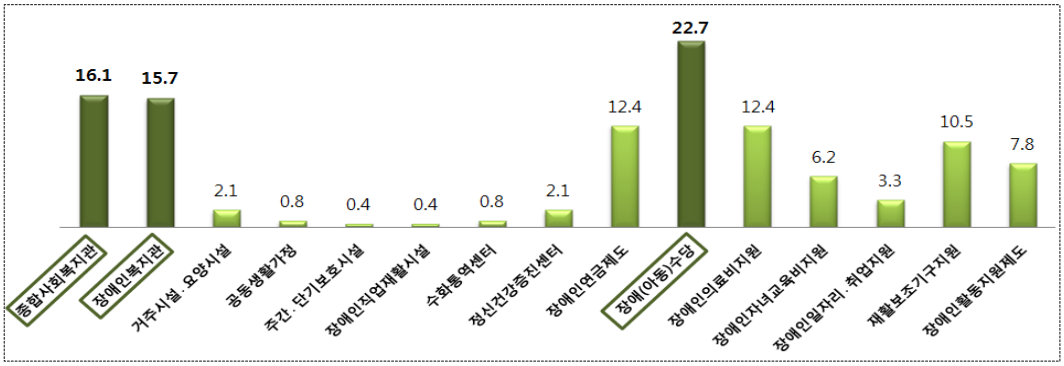
○ 이용경험은 22.7%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장애(아동)수당을 제외한 대개의 항목에서는 낮게 나타났으며, 향후 이용의향은 대체로 이용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각 시설별로 이용 시 불편사항이나 이용하지 않는 주된 이유를 조사한 결과, 주요 장애요인은 거리가 멀고 교통이 불편한 것(23.3%~27.6%)과 이용방법을 잘 모름(12.3%~32.7%), 필요한 서비스의 부재(12.8%~29.5%)로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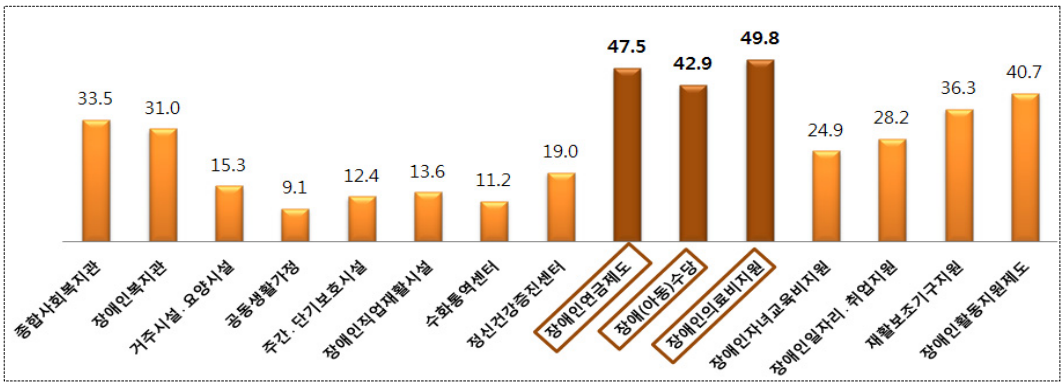
[그림]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인지도



[그림]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이용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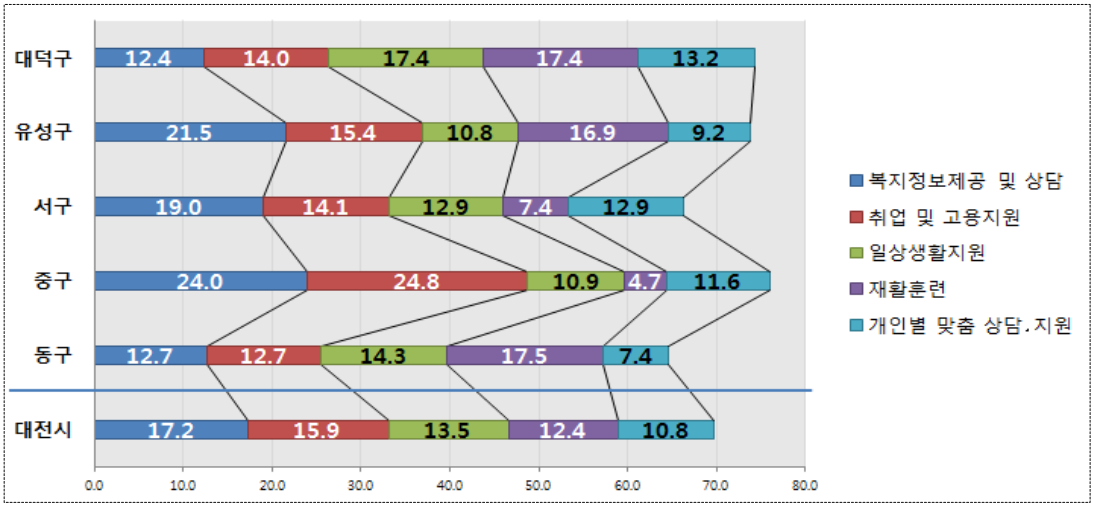


[그림] 장애인복지관련 시설 및 사업(제도)에 관한 향후 이용의향



○ 장애인의 복지향상을 위해 가장 우선되는 서비스는 복지정보제공 및 상담으로 17.2%가 응답하였으며, 그 다음은 취업 및 고용지원(15.9%), 일상생활지원(13.5%), 재활훈련(12.4%), 개인별 맞춤 상담 및 지원(10.8%) 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장애인 복지향상을 위해 우선순위가 높은 서비스(다중응답)



3. 복지공급의 전망

1) 지역자원의 진단

(1) 지역자원의 현황

가. 공공자원

① 복지예산

○ 2014년도 대전광역시의 일반회계로 편성된 세출예산의 총 금액은 2014년 2조 8,735억여 원으로 제2기 대전광역시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던 2010년 당시의 2조 5,642억여 원에서 12.1% 증가됨.

○ 영역별로 살펴보면, 2014년을 기준으로 예산금액의 비중이 가장 큰 영역은 '사회복지'로 2010년보다 57.4% 증가하였으며 다른 그 다음으로 높은 비중으로 차지하는 '일반공공행정(10.2%)', '수송 및 교통(9.5%)'의 약 4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0년에도 '사회복지'는 28.8%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었으나 2014년에는 타 영역과의 비중 격차가 더 커졌으며, 2,3순위의 비중을 차지하던 '일반공공행정'과 '수송 및 교통'의 예산은 감소되는 양상을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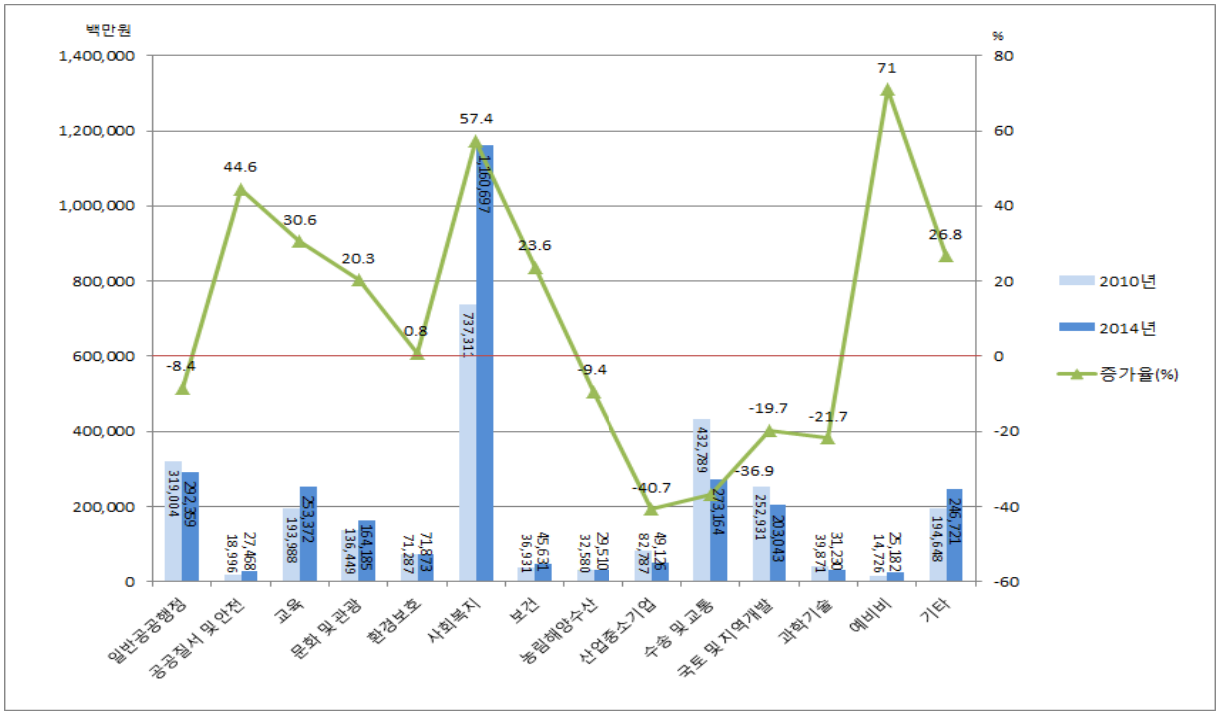
○ 이는 신사회적 위험에 따른 사회환경적 변화에 따라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민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한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 있음.

〈표〉 대전광역시 일반회계 세출 총괄

(단위 : 천원, %)

구분	2010년		2014년		증가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계	2,564,297,000	100.0	2,873,563,000	100.0	12.1
일반공공행정	319,003,578	12.4	292,359,319	10.2	-8.4
공공질서 및 안전	18,995,844	0.7	27,468,281	1.0	44.6
교육	193,988,414	7.6	253,372,090	8.8	30.6
문화 및 관광	136,448,752	5.3	164,185,131	5.7	20.3
환경보호	71,287,229	2.8	71,873,099	2.5	0.8
사회복지	737,310,616	28.8	1,160,696,595	40.4	57.4
보건	36,931,074	1.4	45,631,087	1.6	23.6
농림해양수산	32,579,642	1.3	29,510,268	1.0	-9.4
산업중소기업	82,787,078	3.2	49,126,152	1.7	-40.7
수송 및 교통	432,788,569	16.9	273,163,795	9.5	-36.9
국토 및 지역개발	252,930,941	9.9	203,043,084	7.1	-19.7
과학기술	39,870,968	1.6	31,230,540	1.1	-21.7
예비비	14,726,293	0.6	25,182,485	0.9	71.0
기타	194,648,002	7.6	246,721,074	8.6	26.8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_예산·재정(daejeon.go.kr)
주 1) 2010년 자료_2회 추경 세출예산서(일반회계, 특별회계)
2) 2014년 자료_본 예산 세출예산서(일반회계, 특별회계)



○ 대전광역시 전체 예산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예산인 '사회복지'와 '보건'을 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예산은 총 1조 2,063억여 원으로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던 2010년에 비해 55.8% 증가하였으며, 영역별로는 '보육' 예산이 2014년 3,160억여 원으로 131.9% 증가하며 가장 두드러진 변화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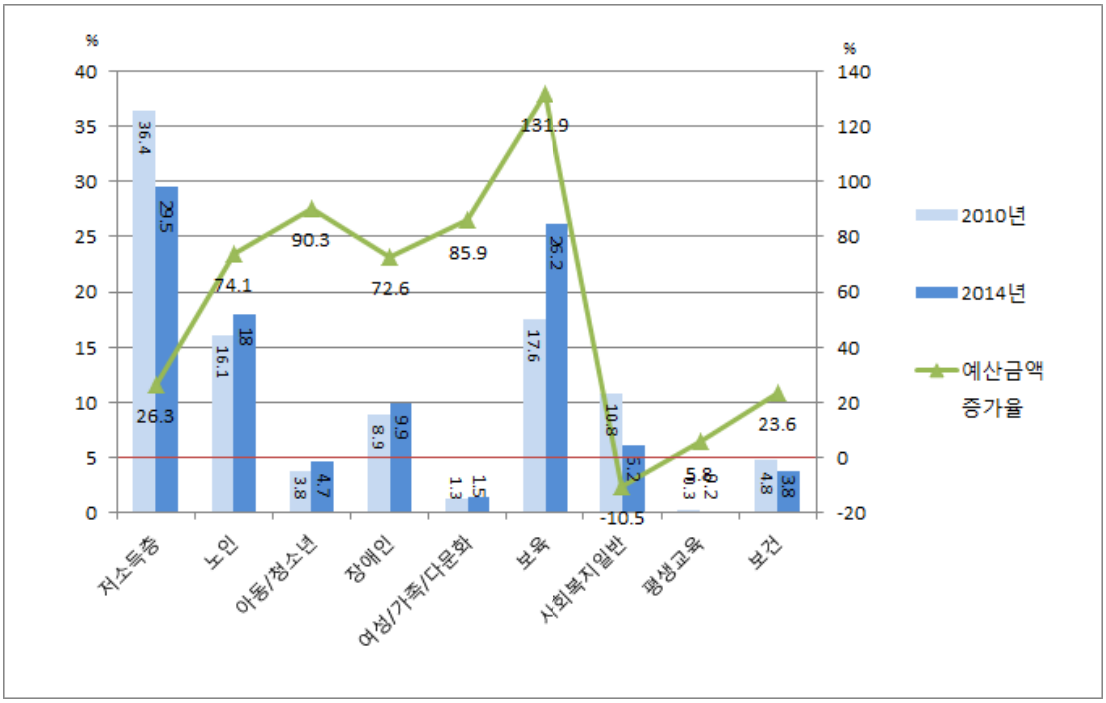
○ 2014년 예산 비율로 살펴보면, '저소득층'이 29.5%로 가장 크며, 그 다음 '보육(26.2%)', '노인(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0년 예산 비율의 순위와 동일하며 비율 정도 간 다소의 조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표〉 대전광역시 분야별 공공 사회복지 예산 현황(사회복지+보건)

(단위 : 천원, %)

구분	2010년		2014년		증가율(%)
	예산	비율	예산	비율	
계	774,241,690	100.0	1,206,327,682	100.0	55.8
저소득층	281,633,716	36.4	355,827,495	29.5	26.3
노인	124,988,864	16.1	217,625,144	18.0	74.1
아동/청소년	29,735,091	3.8	56,585,313	4.7	90.3
장애인	68,988,875	8.9	119,081,831	9.9	72.6
여성/가족/다문화	9,985,845	1.3	18,565,449	1.5	85.9
보육	136,294,045	17.6	316,013,031	26.2	131.9
사회복지일반	83,664,114	10.8	74,860,559	6.2	-10.5
평생교육	2,020,066	0.3	2,137,773	0.2	5.8
보건	36,931,074	4.8	45,631,087	3.8	23.6

출처 : 대전광역시 홈페이지_예산재정(www.daejeon.go.kr)
주 1) 2010년 자료_2회 추경 세출예산서(일반회계, 특별회계) / 2) 2014년 자료_본 예산 세출예산서(일반회계, 특별회계)



○ 예산현황을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서구의 사회복지예산이 2,394억여 원으로 가장 크며, 다음 동구 1,900억여 원, 중구 1,627억여 원, 유성구 1,523억여 원, 대덕구 1,372억여 원의 순으로 나타남.

○ 그러나 총 예산 대비 사회복지예산은 동구가 61.9%로 가장 크며, 그 다음 서구(58.3%), 중구(56.8%), 대덕구(51.4%), 유성구(44.4%)의 순임.

○ 인구 1인당 사회복지예산 규모도 동구가 76만여 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남. 그러나 그 다음 대덕구(66만여 원), 중구(61만여 원), 유성구(54만여 원), 서구(47만여 원) 순으로 확인되어 인구규모가 가장 큰 서구가 사회복지예산 금액이나 비율은 높으나 인구 1인당 예산금액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남.

〈표〉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예산 현황(2014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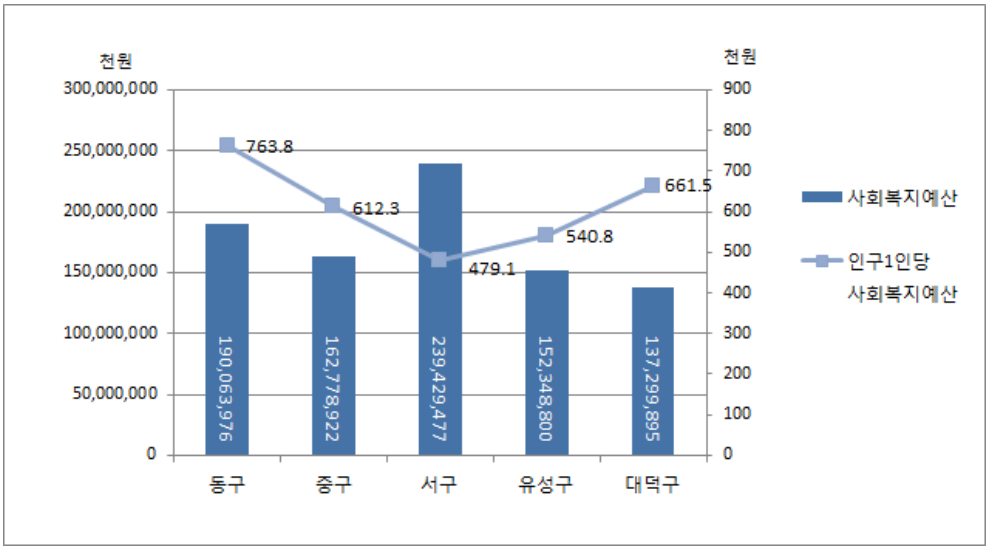
(단위 : 천원, %)

구분	총 예산	사회복지예산	사회복지예산 비율	인구1인당 사회복지예산
동구	307,188,157	190,063,976	61.9	763.8
중구	286,792,000	162,778,922	56.8	612.3
서구	410,518,302	239,429,477	58.3	479.1
유성구	343,175,033	152,348,800	44.4	540.8
대덕구	267,041,000	137,299,895	51.4	661.5

출처 : 재정고 홈페이지_지방예산현황_지방예산지표(lofin.mopas.go.kr)

주 1) 일반회계, 특별회계 총괄 자료

2) 자치구별 인구규모는 2013.12월말 기준



○ 보다 상세하게 자치구별로 복지분야별 1인당 예산을 살펴보면, 저소득층에 대한 1인당 지출액은 동구(2,235천여 원)와 대덕구(1,995천여 원)가 대전광역시 평균치를 상회하였고, 중구(1,925천여 원)는 거의 유사, 서구(1,854천여 원)와 유성구(1,753천여 원)는 평균치를 하회함.

○ 노인에 대한 1인당 지출액 역시 저소득층에 대한 지출액과 동일한 양상을 보였는데, 동구(1,086천여 원)와 대덕구(1,081천여 원)가 대전 평균치를 상회하였고, 중구(972천여 원)는 유사, 서구(884천여 원)와 유성구(890천여 원)는 평균치를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대전광역시 자치구별 1인당 공공 사회복지 지출액(2013 12월 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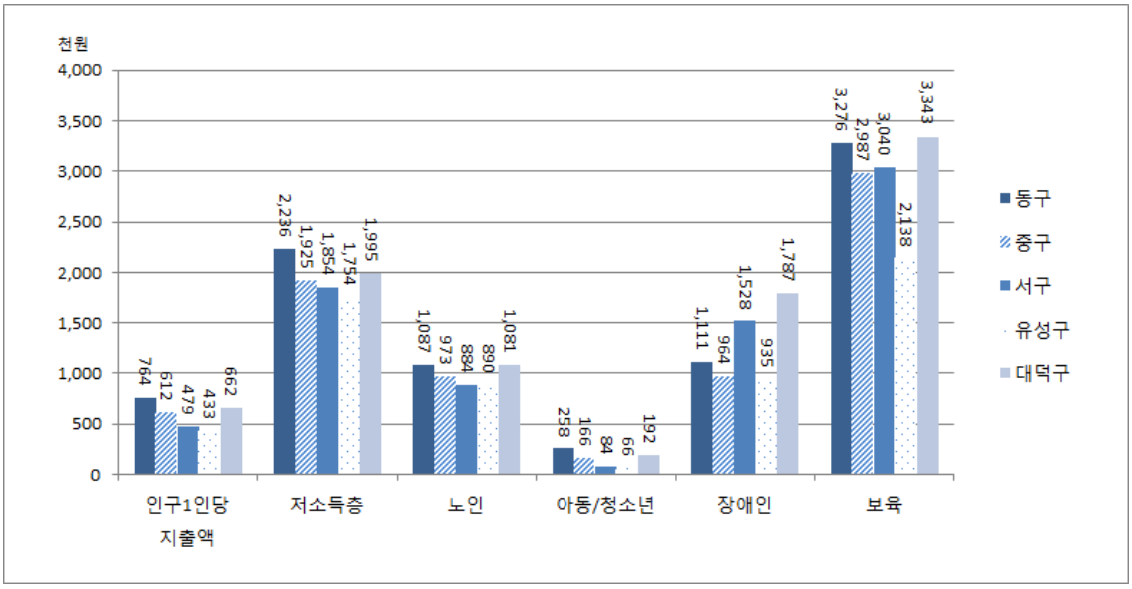
(단위 : 원, %)

구분	인구 1인당 지출액	분야별 1인당 지출액				
		저소득층	노인	아동/청소년	장애인	보육
대전광역시 평균	590,038	1,952,837	983,019	153,462	1,264,934	2,956,815
동구	763,815	2,235,526	1,086,575	257,841	1,110,941	3,275,832
중구	612,305	1,925,145	972,917	166,370	964,049	2,986,907
서구	479,106	1,854,359	884,314	84,494	1,528,306	3,040,020
유성구	433,433	1,753,777	890,034	66,295	934,620	2,138,156
대덕구	661,530	1,995,378	1,081,256	192,308	1,786,752	3,343,160

출처 : 각 자치구청 결산담당부서 내부자료,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를 재구성

주 1)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차상위계층수혜자, 긴급복지수혜자(차상위계층수혜자는 사업별로 중복 가능. 긴급복지 수혜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중복 가능)
노인 - 만 65세 이상
아동/청소년 - 7~19세
장애인 - 대전광역시 등록장애인
보육대상자 - 6세 이하

2) 유성구는 결산 데이터는 2012년까지만 접근 가능하여 2012년 결산 자료와 2013.12월말 인구 데이터를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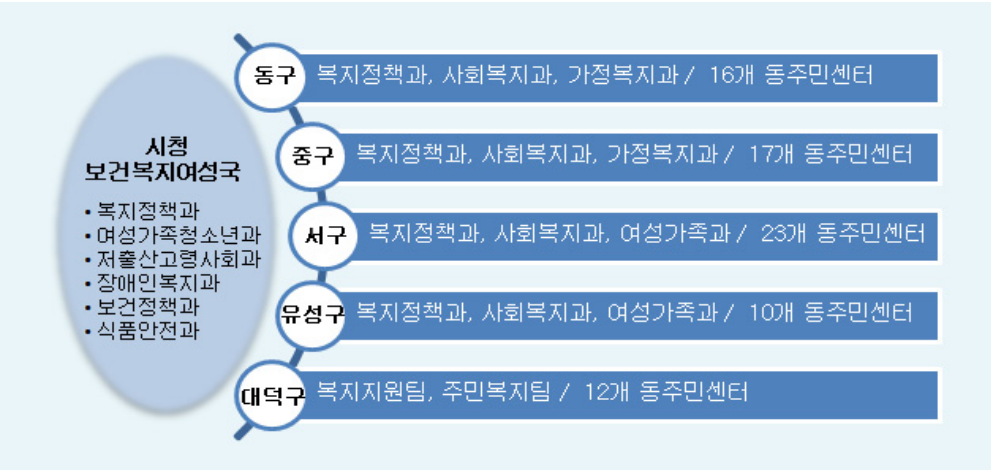


② 복지조직 및 인력

○ 대전광역시 보건복지여성국은 복지정책과, 여성가족청소년과, 저출산고령사회과,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식품안전과의 6개 과로 구성되어 복지와 보건을 총괄하고 있으며, 자치구별로는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가 3개 과, 대덕구는 2개 팀제로 운영되고 있음.

○ 또한 각 자치구별로 최소 10개에서 최대 23개의 동주민센터를 운영을 통해 최일선에서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있음.

[그림] 대전광역시 공공복지조직



○ 대전광역시 공공 사회복지인력을 살펴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2013년 기준 392명으로 2010년 보다 40% 증가하였고, 자치구별로는 서구가 51.8%, 동구가 49.2%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다른 자

치구들도 30% 정도 이상씩 증원되었음.

○ 지난 2011년 정부가 계속적인 복지수요 증대에 대응하기 위해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과 함께 2014년까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7,000명까지 확충할 것을 발표한 이후 계속적인 증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줌.

○ 그러나, 이러한 확충에도 불구하고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복지업무를 감당하기가 역부족. 그래서 자치구별로 행정직을 복지업무에 배치하며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직과 행정직을 통틀어 공공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2013년 공공복지업무 담당공무원은 743명으로 2010년 대비 1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53.8%, 대덕구가 49.3%로 가장 많이 증가함.

〈표〉 대전광역시 공공 사회복지인력 현황

(단위 : 명, %)

구분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공공복지업무담당공무원(사회복지직, 행정직 전체 총괄)				
	2010.12월말		2013.12월말		증가율(%)	2010.12월말		2013.12월말		증가율(%)
	현원	비율	현원	비율		현원	비율	현원	비율	
계	280	100.0	392	100.0	40.0	629	100.0	743	100.0	18.1
본청	20	7.1	25	6.4	25.0	156	24.8	121	16.3	-22.4
동구	61	21.8	91	23.2	49.2	117	18.6	170	22.9	45.3
중구	61	21.8	78	19.9	27.9	129	20.5	135	18.2	4.7
서구	56	20.0	85	21.7	51.8	104	16.5	131	17.6	26.0
유성구	38	13.6	51	13.0	34.2	52	8.3	80	10.8	53.8
대덕구	44	15.7	62	15.8	40.9	71	11.3	106	14.3	49.3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해야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기에 그 수치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수혜자),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 6세 이하의 보육대상자를 주요 복지서비스대상자로 설정, 사회복지전담공무원 1인당 담당하는 복지서비스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1,053명 정도로 파악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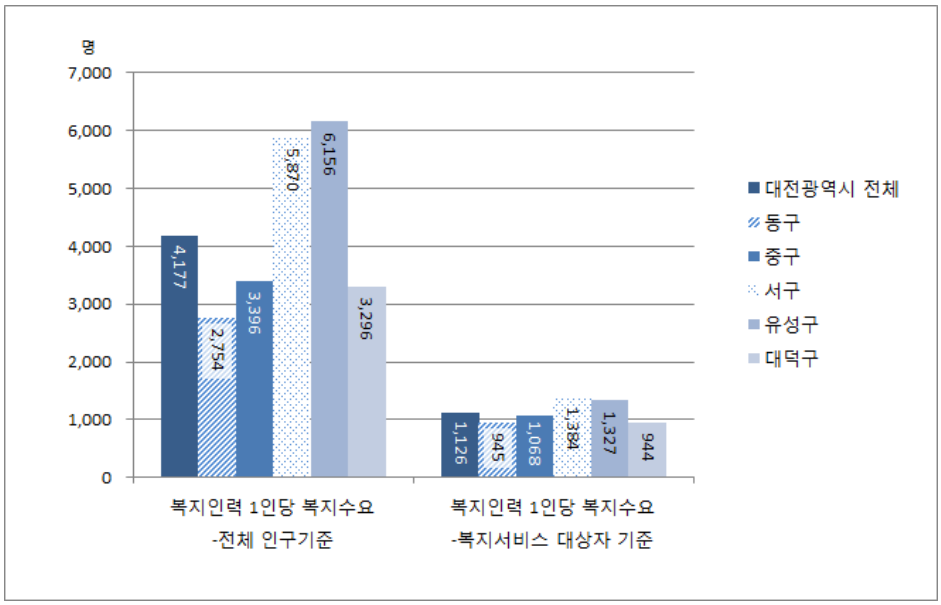
○ 자치구별로는 인구규모가 가장 많은 서구가 1,384명으로 가장 많고, 대덕구가 943명으로 가장 적게 나타남.

〈표〉 대전광역시 공공 사회복지 인력 1인당 복지수요

(단위 : 명)

구분	복지인력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복지수요		복지인력 1인당 복지수요	
		전체 인구	복지서비스 대상자	전체 인구기준	복지서비스 대상자 기준
대전광역시 전체(본청 포함)	392	1,532,811	413,102	3,910.2	1,053.8
동구	91	250,653	85,959	2,754.4	944.6
중구	78	264,913	83,321	3,396.3	1,068.2
서구	85	498,917	117,653	5,869.6	1,384.2
유성구	51	313,968	67,665	6,156.2	1,326.8
대덕구	62	204,360	58,504	3,296.1	943.6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각 자치구청 홈페이지
주 1) 복지인력, 전체 인구,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 2013.12월말 기준
2) 복지서비스 대상자 : 저소득층+노인+장애인+보육대상자
-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차상위계층수혜자, 긴급복지수혜자(차상위계층수혜자는 사업별로 중복 가능. 긴급복지 수혜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중복 가능)
- 노인 : 65세 이상자
- 장애인 : 대전광역시 등록장애인
- 보육대상자 : 6세 이하자



나. 민간자원

① 복지예산

❍ 민간복지기관을 통해 운영되는 순수한 민간복지예산을 파악하기 위해 정부 및 대전광역시 보조금을 제외하고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의 후원금은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시행되었던 2011~2013년 동안 평균 10.5%의 증가율을 보이며 꾸준히 증액되어 2013년 103억여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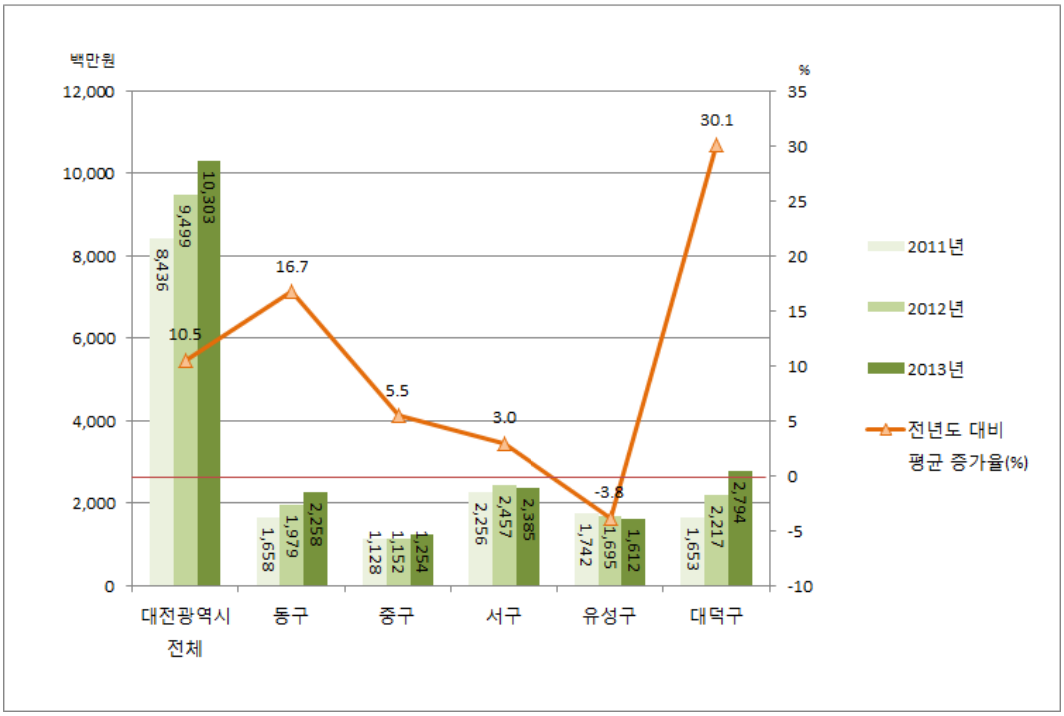
❍ 2013년을 기준으로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대덕구의 후원금이 27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도 30.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동구(22억여 원), 서구(23억여 원), 유성구(16억여 원), 중구(12억여 원)의 순으로 나타남.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현황

(단위 : 천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
계	8,435,527	9,499,343	10,302,793	10.5
동구	1,657,982	1,979,082	2,258,486	16.7
중구	1,127,832	1,151,890	1,254,159	5.5
서구	2,255,560	2,456,655	2,384,647	3.0
유성구	1,741,575	1,695,112	1,611,613	-3.8
대덕구	1,652,577	2,216,604	2,793,888	30.1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중 복지분야별 비율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아동', '장애인', '사회복지관' 분야의 후원금이 전체의 80% 정도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 '정신보건', '노숙인', '자활' 분야는 모두 10% 미만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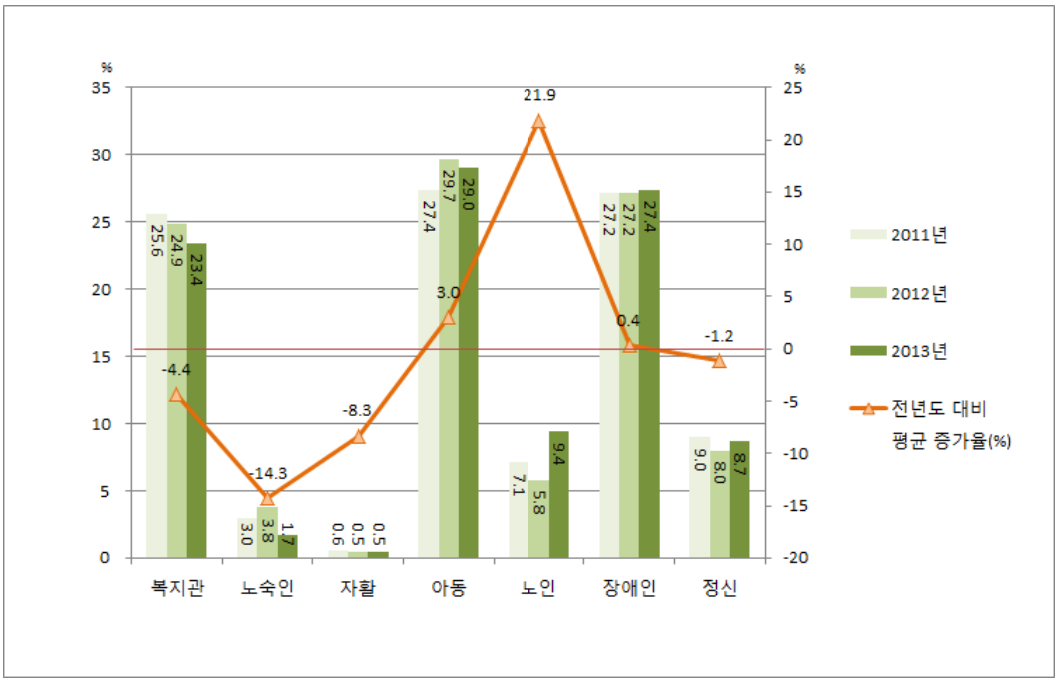
○ 그러나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은 '노인' 분야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법인 후원금 비율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감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
계	100.0	100.0	100.0	-	-
사회복지관	25.6	24.9	23.4	-1.1	-4.4
노숙인	3.0	3.8	1.7	-0.7	-14.3
자활	0.6	0.5	0.5	-0.1	-8.3
아동	27.4	29.7	29.0	0.8	3.0
노인	7.1	5.8	9.4	1.2	21.9
장애인	27.2	27.2	27.4	0.1	0.4
정신보건	9.0	8.0	8.7	-0.2	-1.2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모금을 통해 민간복지기관으로 배분된 현황을 살펴보면[2],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평균 23.3%의 증가율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2013년 기준 96억여 원.

❍ 자치구별로는 민간복지기관이 가장 많은 서구가 22억여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대덕구, 동구, 유성구, 중구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은 유성구가 46.3%로 가장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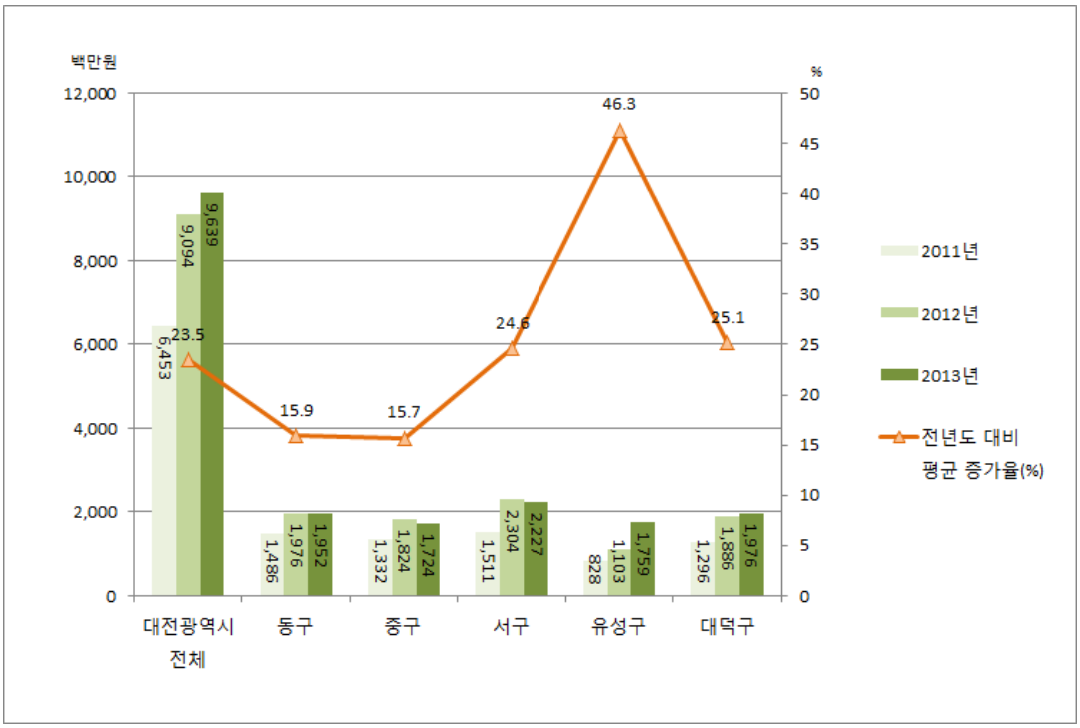
2) 사회복지법인 후원금과 중복 집계될 가능성이 있으나, 민간의 정확한 복지재정 규모 파악이 용이하지 않으므로 추가적으로 파악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현황

(단위 : 원,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
계	6,453,405,652	9,093,549,027	9,638,522,740	23.5
동구	1,486,020,551	1,975,658,277	1,951,638,610	15.9
중구	1,331,922,323	1,824,454,480	1,723,943,352	15.7
서구	1,511,494,956	2,304,021,512	2,227,182,732	24.5
유성구	828,392,725	1,103,047,190	1,759,451,606	46.3
대덕구	1,295,575,097	1,886,367,568	1,976,306,440	25.2

출처 : 대전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 분야별 배분 비율을 살펴보면, 2013년 기준으로 '지역사회' 분야에 대한 비율이 43.6%로 가장 높으며, 그 다음 '아동·청소년(24.5%)', '노인(13.8%)', '장애인(11.5%)', '여성·다문화(6.5%)'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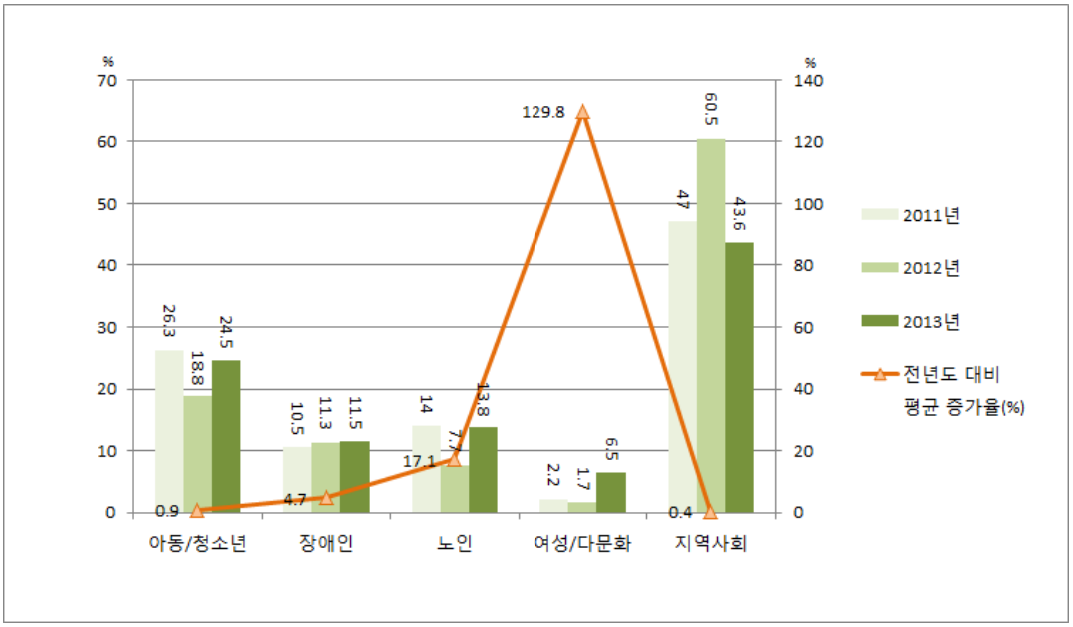
○ 그러나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은 '여성·다문화' 분야가 129.8%로 가장 높음.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 비율

(단위 : %)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감	전년도 대비 평균 증가율(%)
계	100.0	100.0	100.0	-	-
아동/청소년	26.3	18.8	24.5	-0.9	0.9
장애인	10.5	11.3	11.5	0.5	4.7
노인	14.0	7.7	13.8	-0.1	17.1
여성/다문화	2.2	1.7	6.5	2.2	129.8
지역사회	47.0	60.5	43.6	-1.7	0.4

출처 : 대전광역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내부자료



② 복지시설 및 인력

❍ 2014. 1월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 민간사회복지시설은 2010년 대비 16.3% 증가한 3,054개소[3]로 인구규모가 가장 큰 서구에 897개소로 가장 많은 시설이 자리 잡고 있음.

❍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구에는 다른 지역보다 '노숙인', '장애인' 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고, 중구에는 '여성'과 '아동·청소년' 시설이 많이 배치되어 있음. 서구에는 '복지관'과 '노인', '장애인' '보육', '정신보건' 시설이, 유성구에는 '보육' 시설, 대덕구에는 '장애인' 시설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포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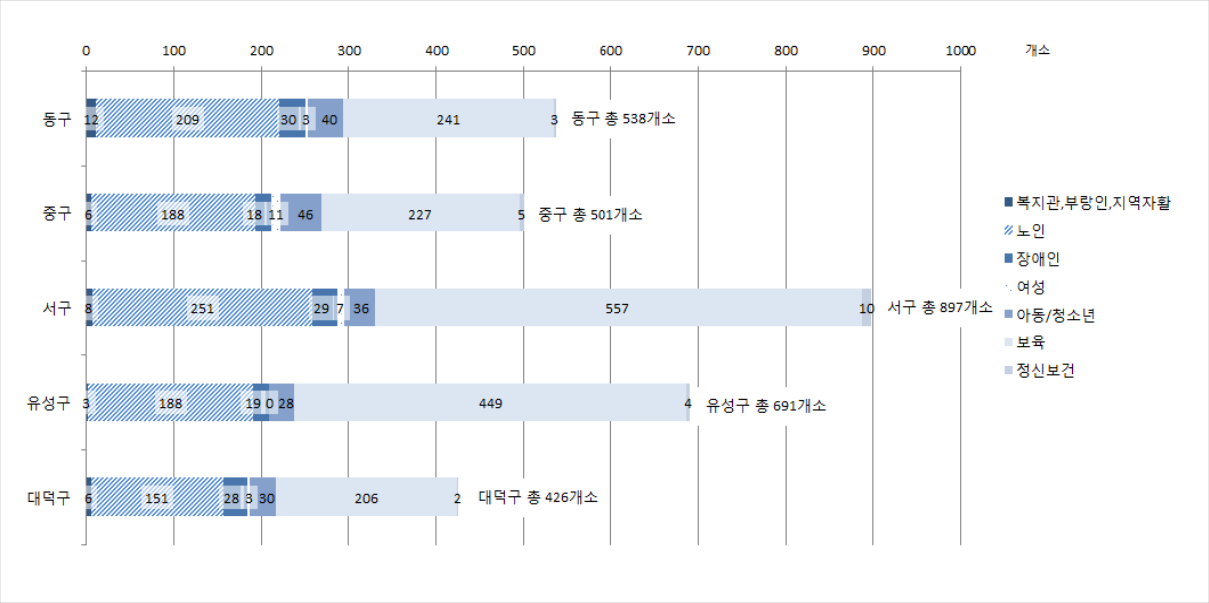
3) 복지의 외현 확대를 염두하여 노인복지시설 분야에 경로당, 보육시설분야에 어린이집도 포함하여 계수.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현황(2014년 1월말 기준)

(단위 : 개소)

구분	총계	복지관	노숙인	지역자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보육	정신보건
계	3,054	22	8	5	987(785)	124	24	180	1,680	24
동구	538	5	6	1	209(159)	30	3	40	241	3
중구	501	4	1	1	188(143)	18	11	46	227	5
서구	897	7	-	1	251(196)	29	7	36	557	10
유성구	691	2	-	1	188(171)	19	-	28	449	4
대덕구	426	4	1	1	151(116)	28	3	30	206	2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주 : 노인-경로당 수는 괄호로 표기, 푸드뱅크/푸드마켓 제외



❍ 복지수요 확대에 따라 민간복지시설도 계속 증가하였는데, 2010년에 비해 2014. 1월말 기준 16.3%의 증가율을 보였고, 시설유형별로는 개소 수가 적은 '여성' 시설이 166.7%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2010년 당시에는 없던 '성폭력, 가정폭력' 등에 대한 대응시설이 신설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임. 그 다음은 '장애인(49.4%)', '노숙인(33.3%)', '정신보건(26.3%)'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증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2010.1월말	2014.1월말	증감	증가율(%)
총계	2,627	3,054	427	16.3
복지관	21	22	1	4.8
노숙인	6	8	2	33.3
지역자활센터	4	5	1	25.0
노인	931	987	56	6.0
장애인	83	124	41	49.4
여성	9	24	15	166.7
아동/청소년	164	180	16	9.8
보육	1,513	1,680	167	11.0
정신보건	19	24	5	26.3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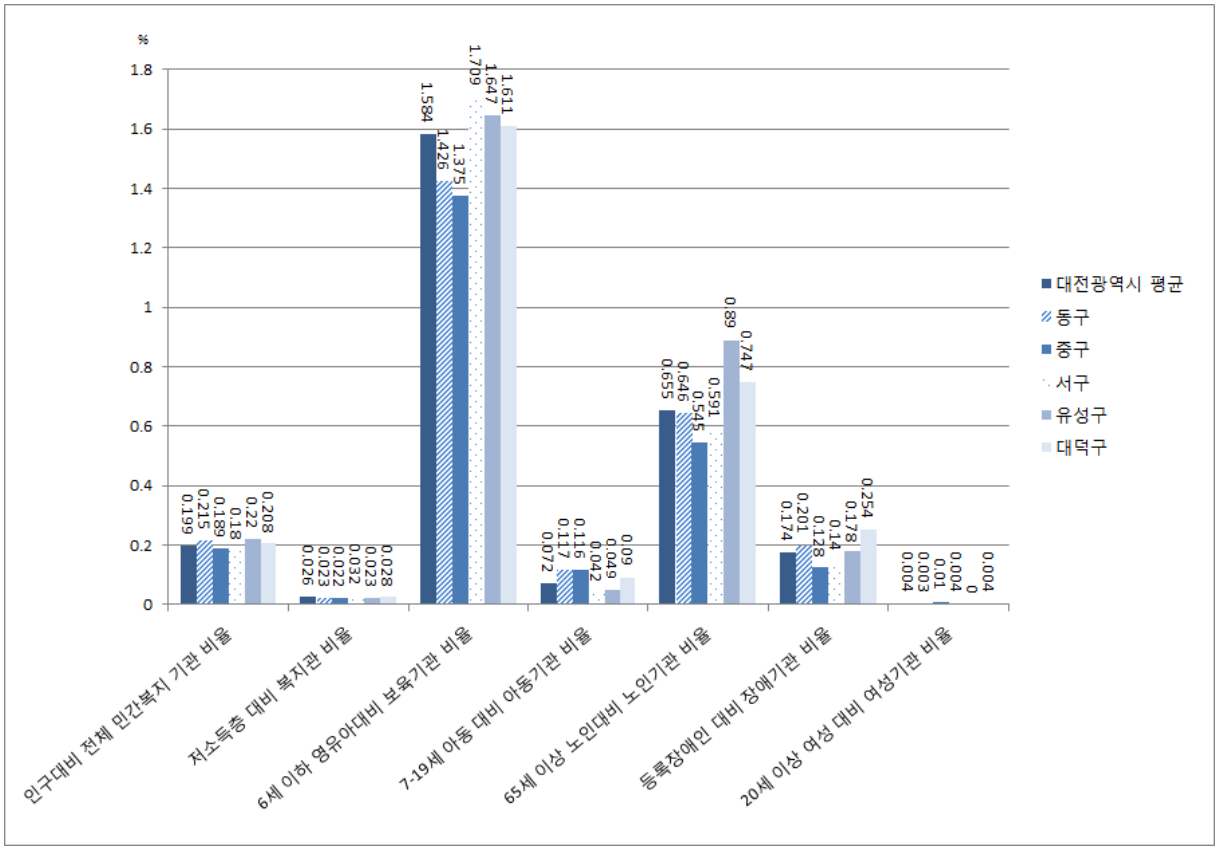
○ 민간복지시설 수가 인구규모에 비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기 위해 대전광역시 및 자치구 주민등록인구 및 복지서비스대상자 인구 규모별 기관 비율을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전체 인구 대비 민간복지시설 비율은 0.199%이며, 복지서비스대상자 대비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비율은 '보육시설'이 1.584%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노인시설(0.655%)', '장애인시설(0.174%)', '아동시설(0.072%)', '복지관(0.026%)', '여성시설(0.004%)'의 순으로 나타남.

〈표〉 자치구별 복지서비스대상자 대비 기관 비율

(단위 : %)

구분	인구대비 전체 민간복지시설 비율	복지서비스대상자 대비 해당서비스 제공시설 비율					
		저소득층 대비 복지관	6세 이하 영유아 대비 보육시설	7-19세 아동 대비 아동시설	65세 이상 노인 대비 노인시설	등록장애인 대비 장애인시설	20세 이상 여성 대비 여성시설
평균	0.199	0.026	1.584	0.072	0.655	0.174	0.004
동구	0.215	0.023	1.426	0.117	0.646	0.201	0.003
중구	0.189	0.022	1.375	0.116	0.545	0.128	0.010
서구	0.180	0.032	1.709	0.042	0.591	0.140	0.004
유성구	0.220	0.023	1.647	0.049	0.890	0.178	0.000
대덕구	0.208	0.028	1.611	0.090	0.747	0.254	0.004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_인구통계(daejeon.go.kr)
주 1) 민간복지기관 수 2014.1월말 기준, 대상자별 인구수 2013.12월말 기준
2) 유성구는 여성복지시설 부재
3) 저소득층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업별차상위계층수혜자, 긴급복지수혜자(차상위계층수혜자는 사업별로 중복 가능. 긴급복지 수혜자는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과 중복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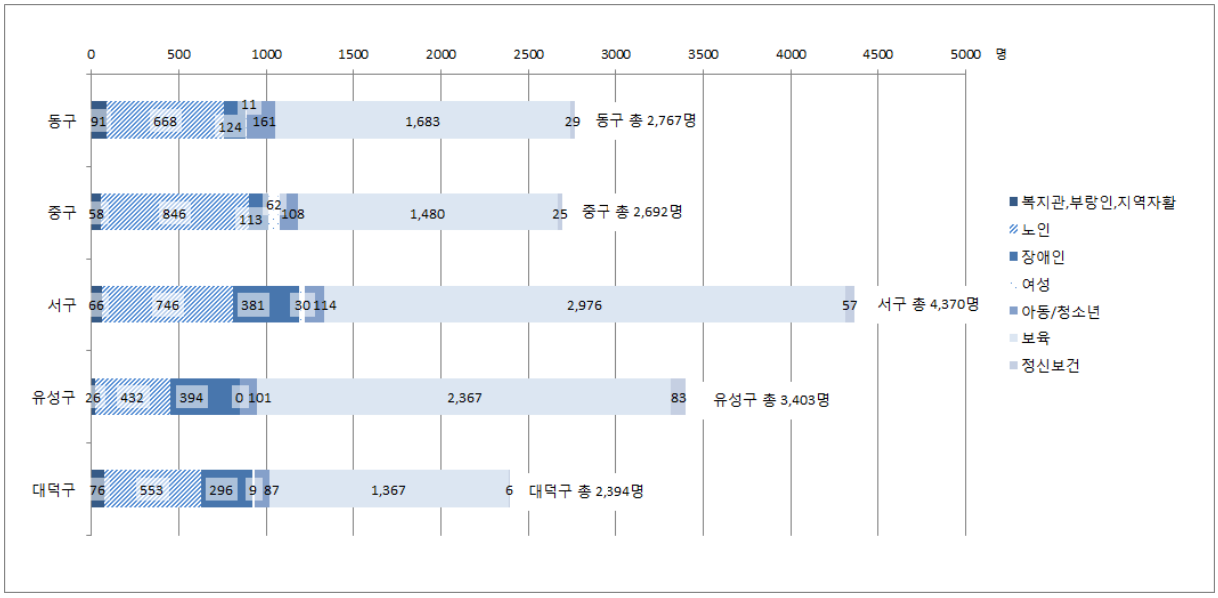
○ 민간부분에서 사회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주요 인력은 각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임.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을 살펴보면, 2014. 1월말 기준 총 15,626명으로 '보육시설' 종사자가 9,873명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 '노인(3,245명)', '장애인(1,308명)', '복지관(21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2014년 1월말 기준)

(단위 : 명)

구분	총계	복지관	노숙인	지역자활	노인	장애인	여성	아동/청소년	보육	정신요양	사회복귀
계	15,626	216	60	41	3,245	1,308	112	571	9,873	130	70
동구	2,767	48	32	11	668	124	11	161	1,683	24	5
중구	2,692	45	4	9	846	113	62	108	1,480	0	25
서구	4,370	57	0	9	746	381	30	114	2,976	32	25
유성구	3,403	22	0	4	432	394	0	101	2,367	74	9
대덕구	2,394	44	24	8	553	296	9	87	1,367	0	6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아이사랑보육포탈(childcare.go.kr)
주 : '아동/청소년' 중 지역아동센터종사자 수는 자치구별 자료 부재. 전체 종사자 수(336명)을 5개로 균등히 나누어 포함시킴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 제2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이 수립되던 2010년과 비교하면 약 40%의 인력이 증원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유성구가 52.7%로 가장 많이 증원되었고, 인원 수는 시설 수가 가장 많은 서구가 4,370명으로 가장 많음.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인력 변화 현황

구분	2010년 1월 말	2014년 1월 말	증가율(%)
계	11,109	15,626	40.7
동구	1,898	2,767	45.8
중구	2,075	2,692	29.7
서구	3,293	4,370	32.7
유성구	2,229	3,403	52.7
대덕구	1,614	2,394	48.3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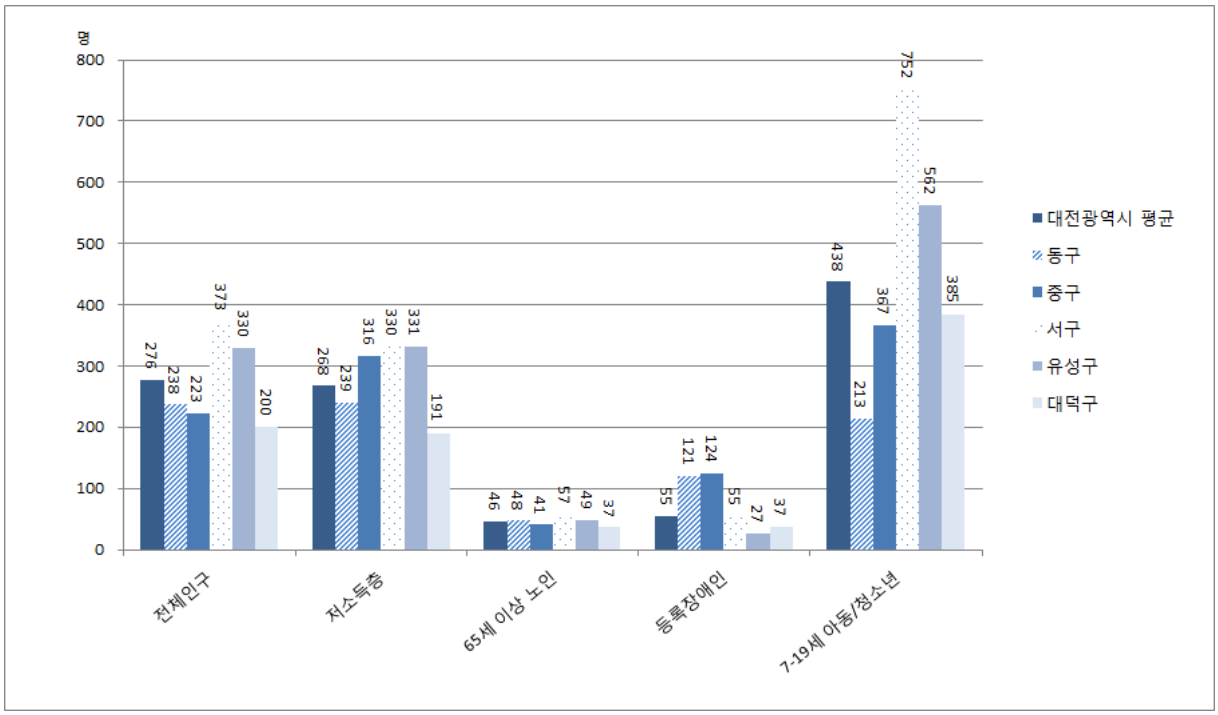
○ 사회복지시설 1인당 담당해야하는 복지서비스 대상자 수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차이를 가져오기에 그 수치를 가늠해볼 필요가 있음.

○ 본 조사에서는 저소득층(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수혜자), 65세 이상의 노인, 등록장애인, 7-19세의 아동·청소년, 20세 이상의 여성을 주요 민간복지서비스대상자로 설정하여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인당 담당하는 해당복지서비스별 대상자 수를 살펴보면, '20세 이상 여성'을 복지서비스 대상자로 하는 사회복지시설종사자는 1인당 평균 5,311명을 담당해야 하고, '7-19세 아동·청소년' 시설 종사자는 1인당 평균 437명, '저소득층' 시설 종사자는 268명을 담당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됨.

〈표〉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종사자 1인당 담당 복지서비스대상자 수

구분	저소득층[4]	65세 이상 노인	등록장애인	7-19세 아동/청소년
대전광역시 평균	268.0	46.4	54.6	437.6
동구	239.0	48.4	120.6	212.8
중구	315.8	40.8	124.0	366.5
서구	330.2	57.0	54.5	752.2
유성구	330.5	48.9	27.1	562.1
대덕구	190.7	36.5	37.2	384.8

출처 : 대전광역시 복지정책과 내부자료, 대전광역시 홈페이지_인구통계(daejeon.go.kr)
주 1) 저소득층 = 저소득층 인구 / 복지관 종사자 + 자활센터 종사자 + 노숙인시설 종사자
2) 복지대상자별 인구규모 2013.12월말 기준, 종사자 수 2014. 1월말 기준



다. 기타 자원

○ 공공과 민간복지시설 및 종사자 이외에 기타 자원으로 자원봉사자를 살펴보면, 2013년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로 등록되어 있는 실인원 수는 57,103명으로 2009년 대비 1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자료에 의하면,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에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서 활동하고 있는 자원봉사자의 규모도 상당하여 2013년 총 106,974명으로 집계되었는데, 자치구별로는 유성구가 22,378명으로 가장 많음.

○ 자원봉사자들의 평균 활동시간은 20.18시간으로 2009년 대비 10.5% 증가된 것을 알 수 있음.

4) 저소득층 인구/복지관+지역자활

〈표〉 대전광역시 자원봉사자 현황

구분	실인원 수			연 평균 활동 시간		
	2009.12월 말	2013.12월 말	증가율(%)	2009.12월 말	2013.12월 말	증가율(%)
전국	1,081,041	1,306,759	20.9	19.26	21.02	9.1
대전	51,695	57,103	10.5	18.26	20.18	10.5

출처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홈페이지(vms.or.kr)

〈표〉 자치구별 자원봉사자 활동인원 수(2013.12월 말 기준)

	합계	동구	중구	서구	유성구	대덕구
인원수	106,974	17,391	19,160	31,020	22,378	17,025

출처 : 대전광역시자원봉사센터 내부자료

(2) 지역자원의 네트워크 현황

○ 지역사회 내 복지자원 연계 및 소통을 위한 네트워크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2014.5월 대전광역시 공공 및 민간복지시설을 유형별로 층화표집하여 복지공급자 5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함.

○ 공공 및 민간기관의 연계 현황을 공공 간, 공공과 민간 간, 민간 간 연계 정도에 대해 5점 척도(1점 : 연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5점 : 연계가 매우 잘 이루어진다)로 측정하여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의 복지공급자는 '시청과 구청', '구청과 민간기관', '시청과 민간기관' 간 연계가 3점(보통이다)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민간기관의 복지공급자는 '시청과 구청', '구청과 민간기관', '같은 지역 내 민간기관' 간 연계가 3점(보통이다) 이상이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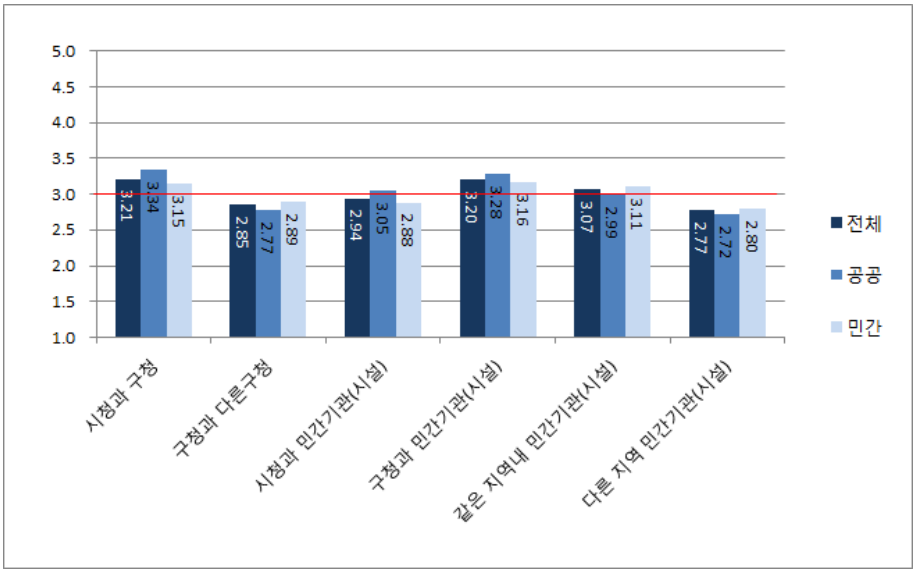
○ 공공기관, 민간기관 모두 4점(대체로 이루어진다) 이상의 연계 정도는 보이지 않았고, 대부분의 연계를 보통으로 평가하는 경향을 보임.

〈표〉 공공기관 민간기관의 연계(대전 전체)

단위: n(%)

분류	공공						민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이루어진다	매우 잘 이루어진다	평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이루어진다	매우 잘 이루어진다	평균*
시청과 구청	1(0.7)	17(12.0)	67(47.2)	47(33.1)	10(7.0)	3.34	9(3.1)	42(14.3)	151(51.5)	78(26.2)	13(4.4)	3.15
구청과 다른 구청	9(6.3)	40(28.2)	69(48.6)	22(15.5)	2(1.4)	2.77	12(4.1)	74(25.3)	148(50.5)	52(17.7)	7(2.4)	2.89
시청과 민간기관	0(0.0)	26(18.4)	84(59.6)	29(20.6)	2(1.4)	3.05	13(4.4)	71(24.2)	56(53.2)	44(15.0)	9(3.1)	2.88
구청과 민간기관	0(0.0)	16(11.3)	72(51.1)	50(35.5)	3(2.1)	3.28	4(1.4)	53(18.1)	143(48.8)	78(26.6)	15(5.1)	3.16
같은 지역 내 민간기관	3(2.1)	29(20.7)	75(53.6)	32(22.9)	1(0.7)	2.99	7(2.4)	55(18.8)	145(49.5)	72(24.6)	14(4.8)	3.11
다른 지역 민간기관	8(5.7)	42(30.0)	72(51.4)	17(12.1)	1(0.7)	2.72	23(7.9)	78(26.7)	136(46.6)	45(15.4)	10(3.4)	2.8

* 평균 : 5점 척도(①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이루어진다, ⑤매우 잘 이루어진다)로 평균점수 산출



○ 인적·물적 자원 교환, 사업관련 정보, 공동사업 추진, 통합사례관리 등 기관 간 연계 내용에 대해 살펴본 결과, 공공기관의 공급자는 '통합사례관리(클라이언트 의뢰 등)' 영역만 3점(보통이다) 이상으로 평가했고, 민간기관의 공급자는 모든 영역에서 3점(보통이다) 이하라고 조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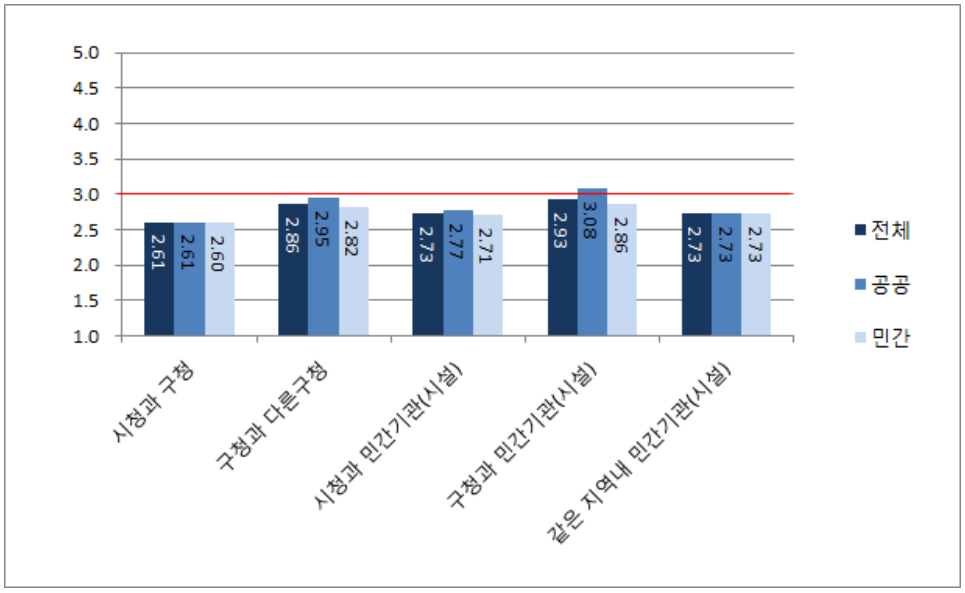
○ '인적·물적 자원 교환', '사업관련 정보', '공동사업 추진' 등의 영역에서는 공공기관과 민간기관 모두 대체로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가늠해 볼 수 있음.

〈표〉 기관 간 연계 내용(대전 전체)

단위: n(%)

분류	공공						민간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이루어진다	매우 잘 이루어진다	평균*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보통이다	대체로 이루어진다	매우 잘 이루어진다	평균*
인적 자원 교환	12(8.5)	48(33.8)	65(45.8)	17(12.0)	0(0.0)	2.61	34(11.6)	99(33.8)	113(38.6)	43(14.7)	4(1.4)	2.60
사업 관련 정보	1(0.7)	32(22.5)	82(57.7)	27(19.0)	0(0.0)	2.95	19(6.5)	82(28.0)	132(45.1)	52(17.7)	8(2.7)	2.82
공동 사업 추진	5(3.5)	39(27.7)	82(58.2)	14(9.9)	1(0.7)	2.77	26(8.9)	89(30.4)	130(44.4)	39(13.3)	9(3.1)	2.71
통합사례관리 (클라이언트 의뢰 등)	2(0.4)	24(16.9)	80(56.3)	33(23.2)	3(2.1)	3.08	24(8.2)	71(24.2)	133(45.4)	53(18.1)	12(4.1)	2.86
물적 자원교환	6(4.2)	46(32.4)	71(50.0)	18(12.7)	1(0.7)	2.73	25(8.5)	79(27.0)	149(50.9)	30(10.2)	10(3.4)	2.73

* 평균 : 5점 척도(①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②대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③보통이다, ④대체로 이루어진다, ⑤매우 잘 이루어진다)로 평균점수 산출


5.0
4.5
4.0
3.5
3.0
2.5
2.0
1.5
1.0
2.61
2.61
2.60
2.86
2.95
2.82
2.73
2.77
2.71
2.93
3.08
2.86
2.73
2.73
2.73
시청과 구청
구청과 다른구청
시청과 민간기관(시설)
구청과 민간기관(시설)
같은 지역내 민간기관(시설)
전체
공
민간

4. 관련계획의 검토

1) 사회보장기본계획(2014~2018)

비전	더 나은 내일, 국민 모두가 행복한 사회
정책목표	✓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 일을 통한 자립 지원 ✓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

미래세대의 건전한 성장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
▪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 ▪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 지원	▪ 의료보장성 강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 주거안정 대책 강화 ▪ 서민가계 생활비 경감
편안하고 활력있는 노후	**다양한 욕구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 노후소득 보장 강화 ▪ 노후의 건강 및 안전 제고 ▪ 안정되고 보람있는 노후생활 지원	▪ 저소득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 지원 ▪ 농어업인 사회안전망 및 정주여건 개선 ▪ 다양한 형태의 가족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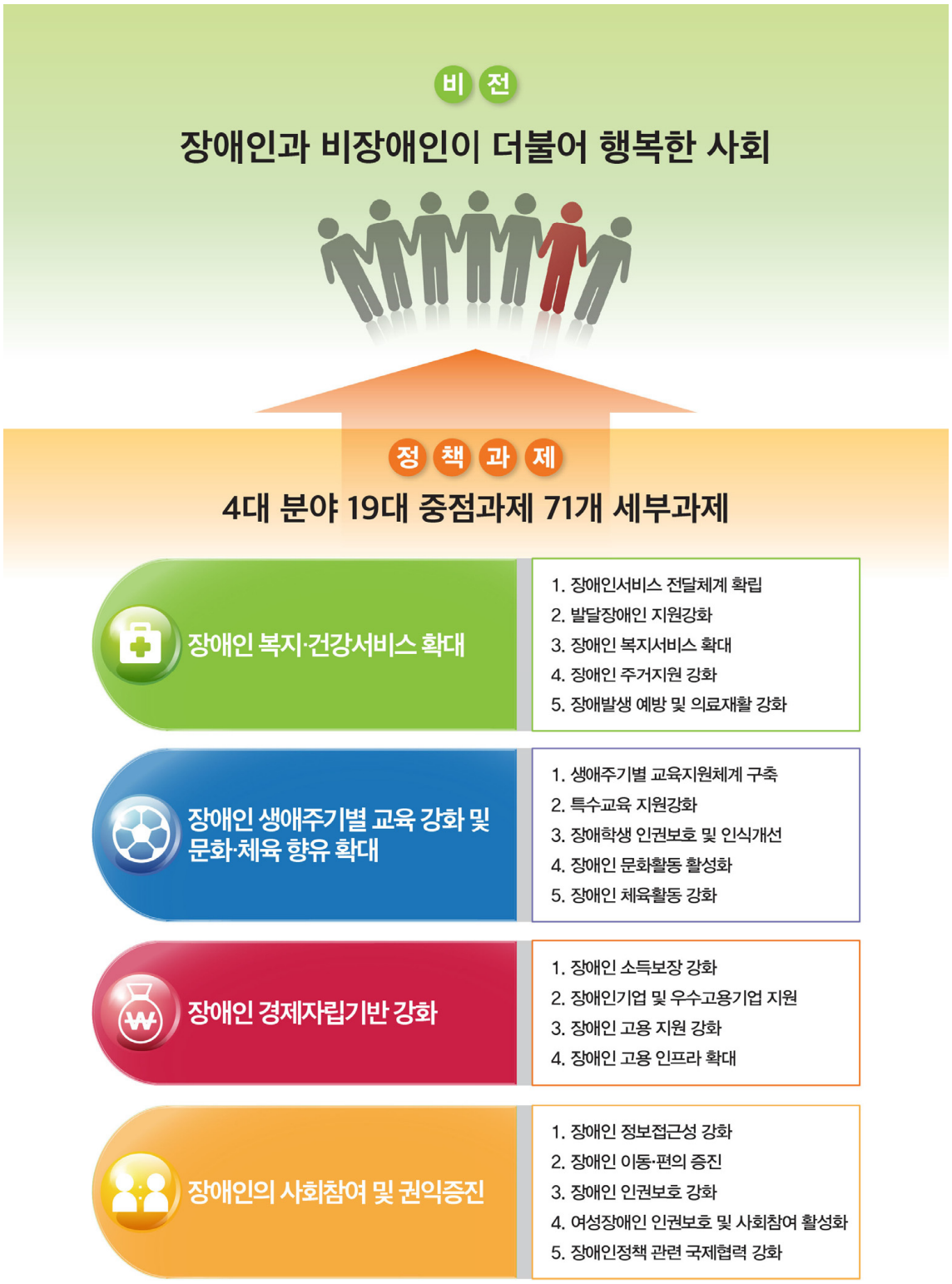
일을 통한 자립 지원

고용–복지 연계
▪ 청년의 조기 노동시장 진입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맞춤형 재취업 지원 ▪ 중장년의 더 오래 일하기 및 퇴직 후 재취업 지원 ▪ 근로빈곤층의 자립 및 생활안정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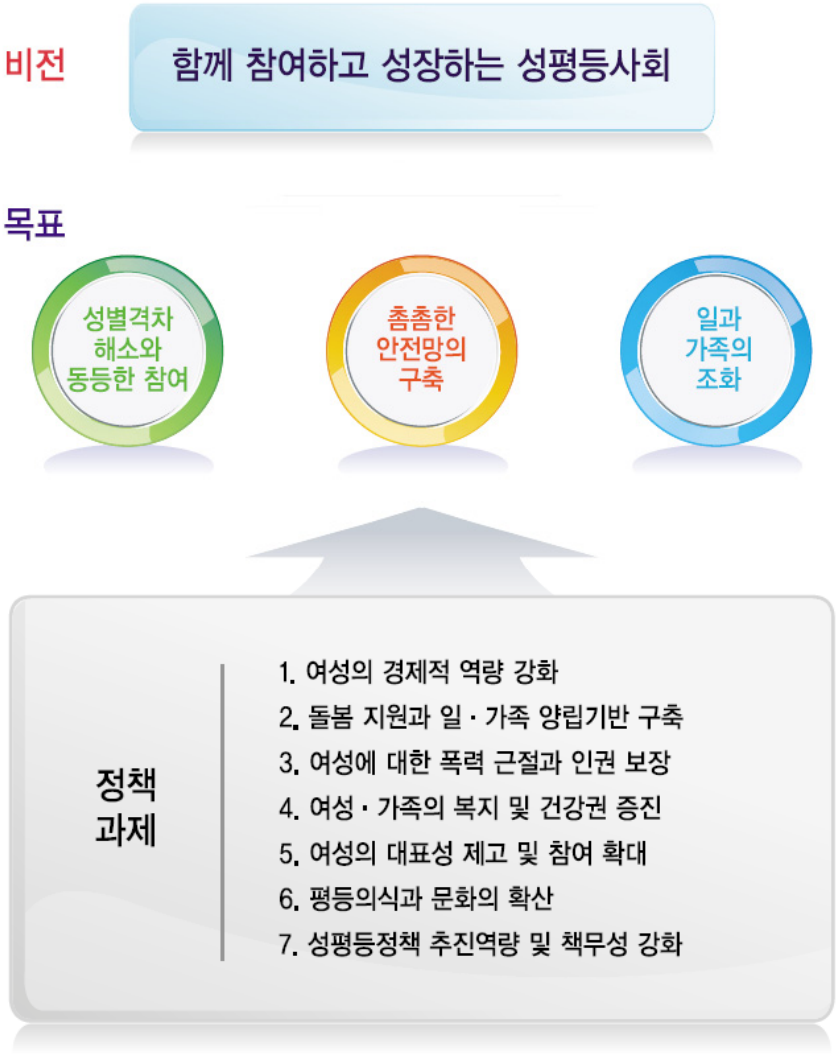
지속가능한 사회보장기반 구축

사회보장제도의 지속가능성 제고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
▪ 사회보장제도의 효율적 운영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 확대 ▪ 중앙과 지방정부의 적정 복지재정 분담 ▪ 공적 연금 재정 안정화	▪ 지방자치단체 복지행정체계 개편 ▪ 사회복지공무원 확충 및 처우 개선 ▪ 공공과 민간분야 협력 활성화 ▪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한 혁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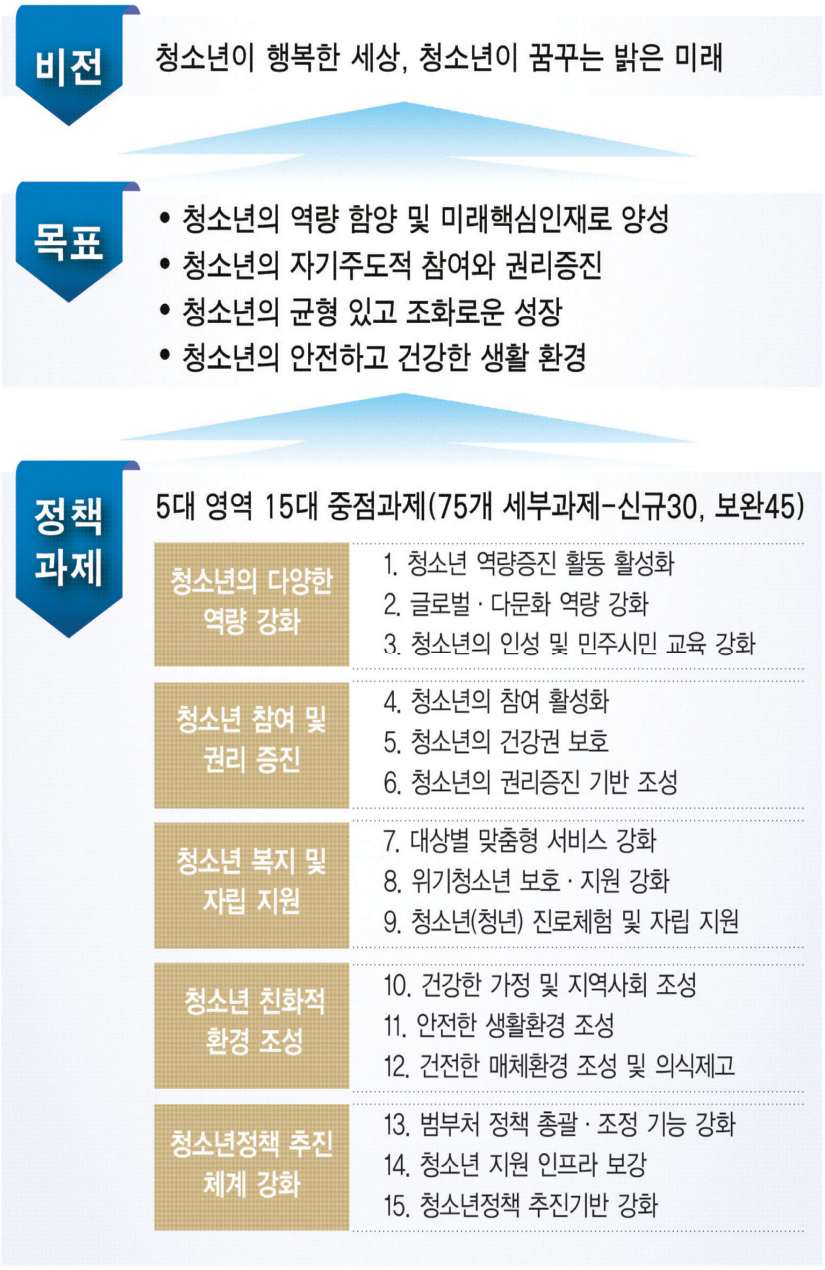
2)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3~2017)



3) 제4차 여성정책 기본계획(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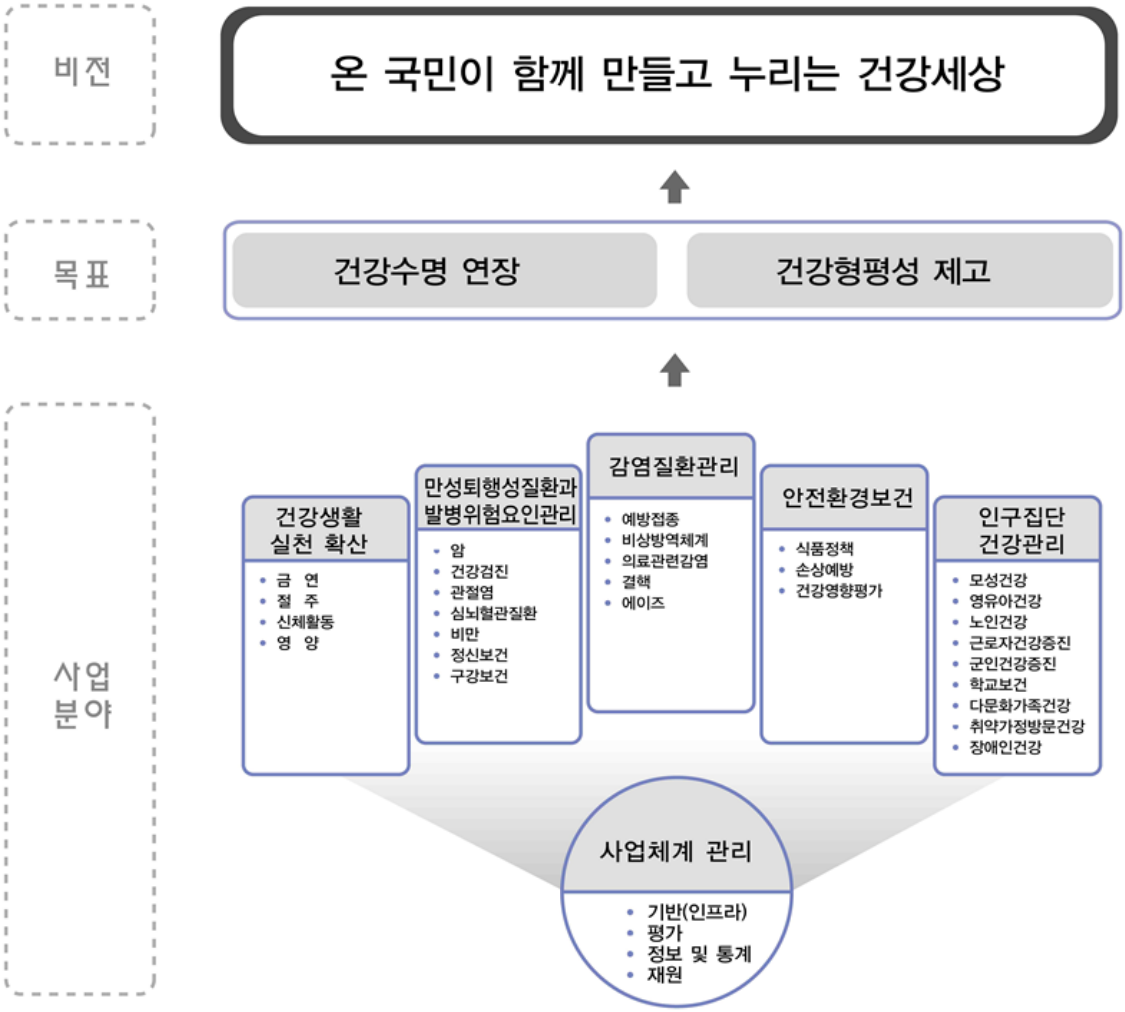


4) 제5차 청소년정책 기본계획(2013-2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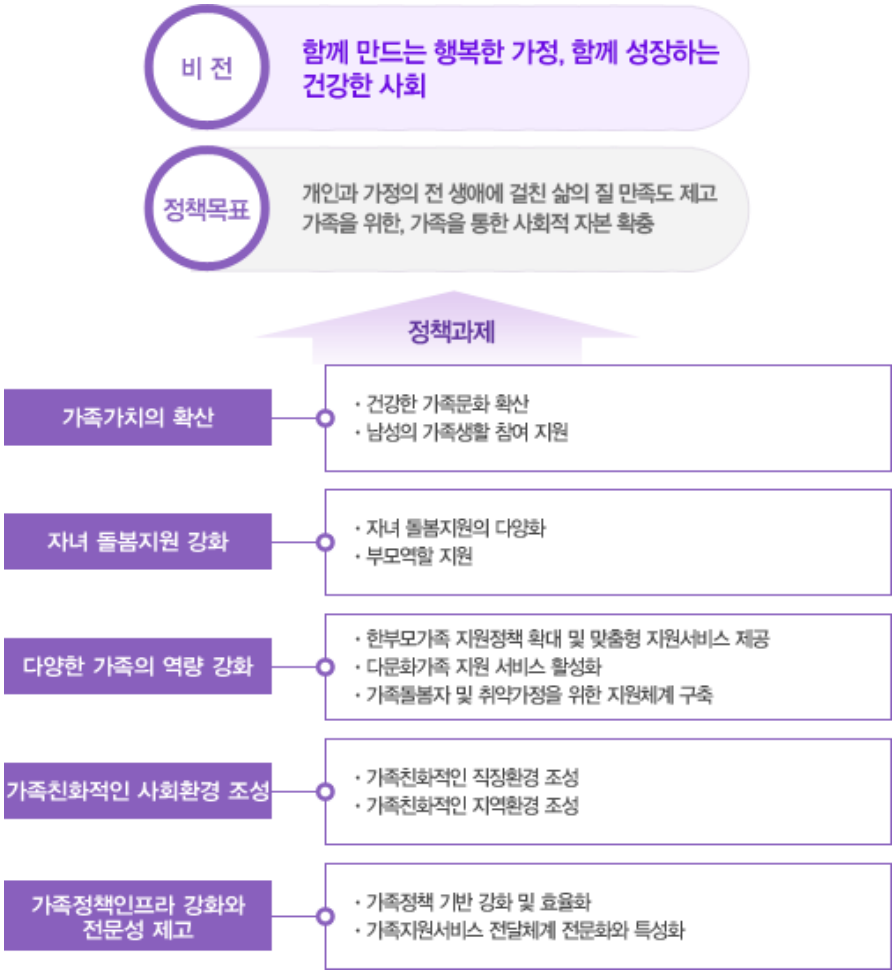


5)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새로마지플랜2015(2011~2015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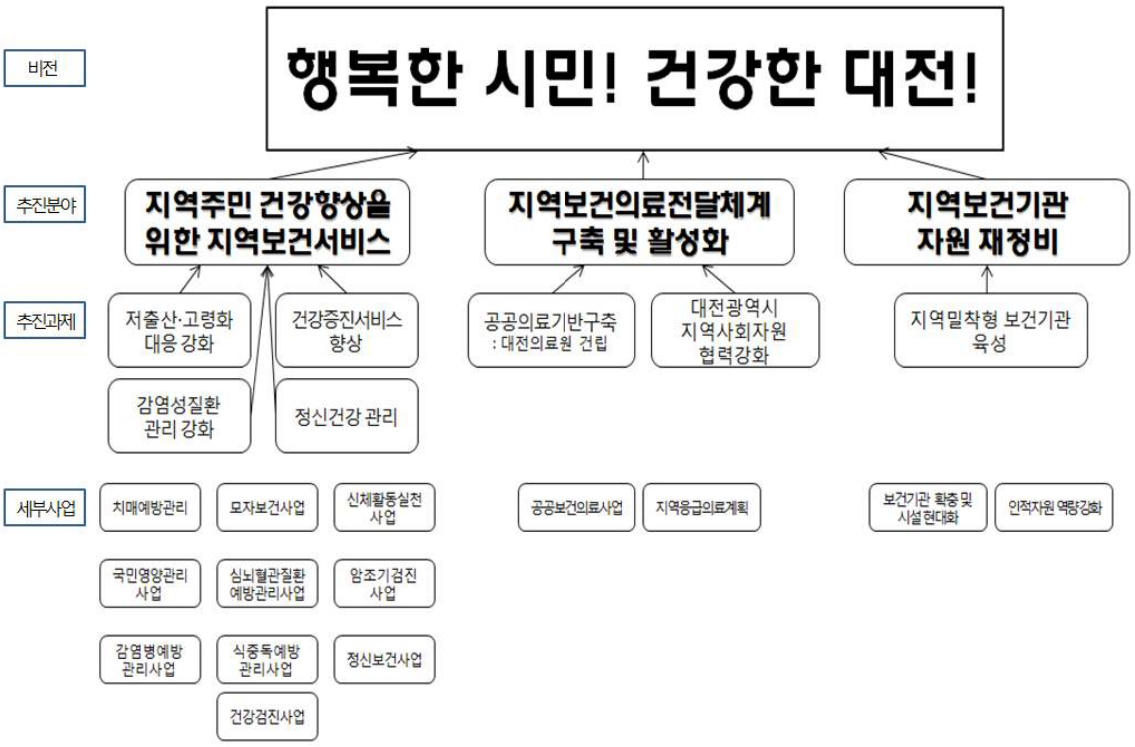
6)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1-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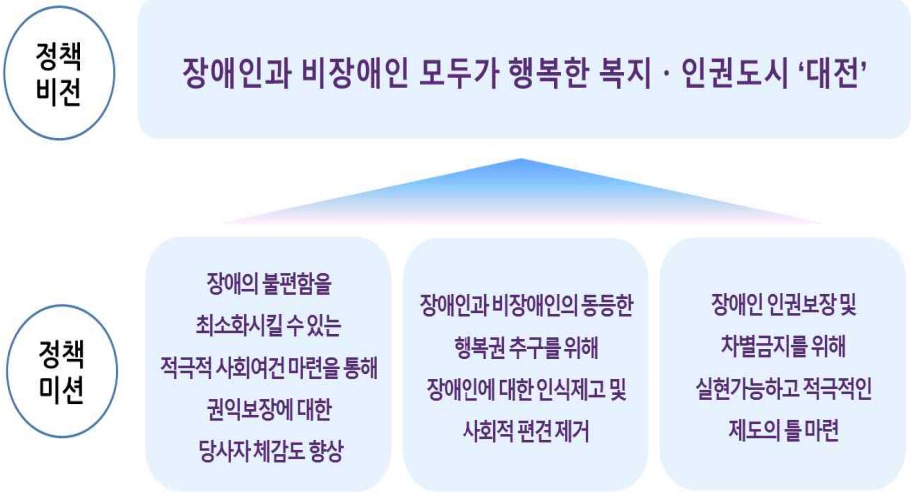
7) 제2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 (2011-2015)



8) 대전광역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안)(2015-2018)



9) 대전광역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기본계획(2013)



10) 대전광역시 민선6기 시장의 복지정책 방향 및 사업계획

▶ 비전 : 시민을 행복하게, 대전을 살맛나게

▶ 목표 :
- 시민안전 행복도시
- 창조경제 과학도시
- 함께하는 복지도시
- 품격높은 문화도시
- 지속가능 미래도시
- 시민참여 통합도시

분야	주요 내용
영유아	•보육의 공공성 강화 •초록펜 학습지원 서비스 •자율적 공동육아 공동체 육성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 확대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
아동·청소년	•대전 위캔 센터 설치 •청년희망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노인	•지속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 •대전이모작 지원센터 설치 •안심카페 운영 •노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경로당 운영비 확대지원
여성	•맘 편한 여성일자리 창출 •여성가족정책센터 기능강화 •성주류화 정책 적극 실행 •여성친화도시 조성 •폭력피해자 인권보호
장애인	•맞춤형 장애인 일자리 창출 •소아 중증장애인 낮 병동 설치 •여성장애인 지정병원 운영 •장애인 콜택시 확대운영 •발달장애인 현 위치 확인서비스 시행 •저상버스 확대
종합	•대전 사회복지 기준선 마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대전 시립의료원 착공 일자리 창출 범시민협의체 구성운영

3 제3기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및 핵심과제

1. 지역사회복지계획의 비전, 전략목표 및 핵심과제

2. 핵심과제별 세부사업계획

• 핵심과제1.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1.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그동안 고용과 복지 서비스는 분산적이고 개별저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수급자의 복합적 문제해결과 자립 지원에 한계를 보여 왔으며, 복지와 고용서비스 간의 연계와 통합을 도모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gateway)가 형성되지 않아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의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중앙정부에서는 맞춤형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고용률 70% 달성, 맞춤형 취업지원 및 고용서비스망 강화, 여성고용활성화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민선 6기 공약 추진 계획에 의하면 여성,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등으로 인하여 여성, 장애인, 노인은 노동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여 자립생활에 필요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됨으로써, 일정 수준의 보호와 지원이 가능한 사회적 노동시장에서 맞춤형 일자리 공급이 필요함

2) 현황 및 대응 방안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여성, 노인,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일자리의 개발, 취업알선과 직업훈련 등에 대한 수요는 매우 높은 반면, 이러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맞춤형 일자리의 공급과 취업알선과 직업훈련은 제한적임

○ 이러한 수요 공급의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민선6기에서는 여성, 노인, 장애인의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개발,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음

○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기존의 여성, 노인, 장애인복지 부문의 일자리 예산과 직업훈련 예산의 증액과 아울러 신규 개발·추진되는 일자리 공급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와 구비로 신규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임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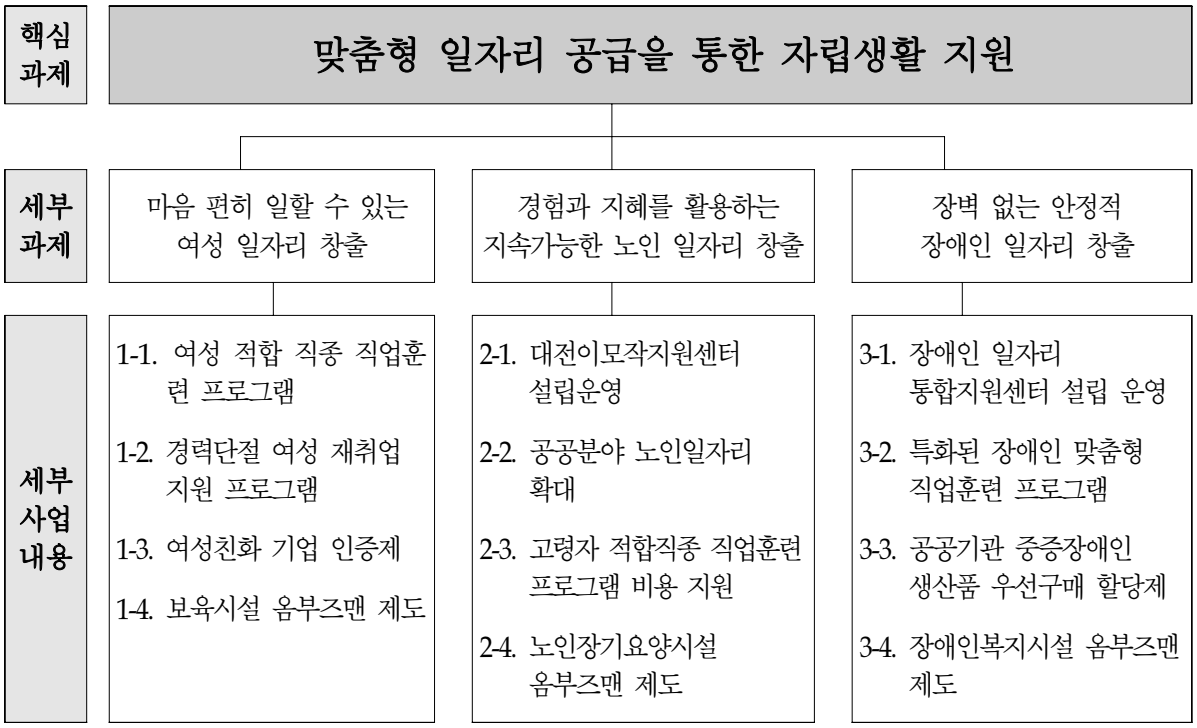
○ 맞춤형 일자리 공급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이라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으로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장벽 없는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이라는 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기존에 제공되던 일자리 사업의 확대와 아울러 신규사업을 편성함

○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여성 적합직종 직업 훈련프로그램, 경력 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여성친화 기업 인증제, 보육시설 옴부즈맨(ombudsman) 제도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여성친화 기업 인증제는 지역 지속사업으로 확대 추진하여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는 여성친화적 노동여건을 조성하고자 하며, 미취업여성의 직업역량개발과 취업촉진,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활성화 그리고 취업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은 기존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자 함

○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베이비부머 재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 노인장기요양시설 옴부즈맨 제도 운영이라는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베이비부머 재취업·창업지원 프로그램과 노인장기요양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은퇴를 앞둔 예비노년층의 지속적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경험과 역량이 뛰어난 노인세대의 경제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이와 아울러 고령자의 경제활동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노인의 소득보전과 사회참여기회의 확대를 목적으로 한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자 함

○ 장애 없는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상용품 우선구매 할당제, 장애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 운영이라는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의 설립운영을 통하여 장애인이 필요한 직업훈련, 일자리 정보, 구직상담과 취업알선, 사후적응지원서비스 등을 원스톱서비스(one-stop service)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며, 장애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를 운영하여 당사자에 의한 인권보호 기능의 강화와 경제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며, 장애인 직업훈련과 생산용품 우선구매 제도의 강화를 통하여 장애인의 직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공급의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4) 세부사업 개요

(1)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여성 적합 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	250	250	250	250
	성과목표	직업훈련 인원 2,200명	직업훈련 인원 2,200명	직업훈련 인원 2,200명	직업훈련 인원 2,200명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프로그램	예산	1,760	1,760	1,760	1,760
	성과목표	직업훈련, 인턴, 취창업자수 6,000명	직업훈련, 인턴, 취창업자수 6,000명	직업훈련, 인턴, 취창업자수 6,000명	직업훈련, 인턴, 취창업자수 6,000명
여성친화 기업 인증제	예산	5	5	5	5
	성과목표	인증 및 협약업체 15개	인증 및 협약업체 15개	인증 및 협약업체 15개	인증 및 협약업체 15개
보육시설 옴부즈맨 제도	예산	20	60	120	120
	성과목표	모형 개발 연구	옴부즈맨 100명 양성	옴부즈맨 50명 파견 활동	옴부즈맨 50명 파견 활동

(2)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2,100	2,100	550	500
	성과목표	부지확보	센터 건축	이용자 수 4,000명	이용자 수 6,000명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확대	예산	22,000	22,000	27,000	27,000
	성과목표	일자리 10,300개	일자리 10,300개	일자리 12,350개	일자리 12,350개
고령자 적합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지원	예산	-	150	200	250
	성과목표	조례 제정	비용지원자 300명	비용지원자 400명	비용지원자 500명
노인장기요양시설 옴부즈맨 제도	예산	20	60	120	120
	성과목표	모형 개발 연구	옴부즈맨 100명 양성	옴부즈맨 50명 파견 활동	옴부즈맨 50명 파견 활동

(3) 장벽 없는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운영	예산	-	330	130	130
	성과목표	조사 및 기관 선정	이용자 수 300명	이용자 수 300명	이용자 수 300명
장애인 맞춤형 직업훈련 프로그램	예산	70	75	80	85
	성과목표	훈련 이수자 30명, 자격증 취득률 50%	훈련 이수자 40명, 자격증 취득률 55%	훈련 이수자 50명, 자격증 취득률 60%	훈련 이수자 60명, 자격증 취득률 60%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할당제	예산	160	170	180	190
	성과목표	우선구매 1% 이상	우선구매 1% 이상	우선구매 1% 이상	우선구매 1% 이상
장애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	예산	20	60	120	120
	성과목표	모형 개발 연구	옴부즈맨 100명 양성	옴부즈맨 50명 파견 활동	옴부즈맨 50명 파견 활동

1.2 세부사업 계획

1.2.1. 세부 과제 1.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는 여성 일자리 창출

1) 세부사업 1-1 : 여성 적합 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 추진배경
  - ○ 여성의 고학력화, 취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여성 취업에 대한 욕구는 지속적으로 강화될 전망이지만, 여전히 여성의 고용률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질 높은 여성 적합직종의 일자리 공급 확대와 아울러 여성의 직업적 역량 강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 기존 여성직업훈련 프로그램은 여성의 생애주기와 직업역량을 고려하지 않고 보건 및 사회복지분야의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중심의 여성 일자리로의 취업지원이 주류를 이룸
- 사업내용(활동)
  - ○ 청년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여대생 커리어개발지원사업으로 젠더의식 강화, 개인별 커리어 개발, 직무능력훈련을 실시함
  - ○ 여성 과학인의 취업 및 연구역량 강화사업을 위해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바이오 융복합 전문인력, New IT 전문인력 양성교육 등의 교육지원사업을 실시함
  - ○ 미취업·실업 중장년 여성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대전여성인력개발센터에 전문직종, 사회서비스, 소규모 창업 관련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연간 500명이 직무능력 훈련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함
  - ○ 결혼이민 여성 직업역량 강화를 위해 결혼이민여성에게 적합한 직종개발, 직업교육 및 훈련 그리고 취업연계 프로그램을 운영함

2) 세부사업 1-2 :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지원 프로그램

- 추진배경
  - ○ 여성고용율이 낮은 가운데서도 30대 후반 여성의 고용률은 낮아지고 중고령시기의 여성고용률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으며,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을 나타내는 M커브가 오랫동안 개선되지 않고 있음
  - ○ 경력단절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출산전후 휴가, 육아휴직, 보육서비스의 강화와 함께 경력단절 여성의 직업역량 강화, 구직상담, 취업알선 등의 종합적 재취업성공을 위한 고용지원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함
- 사업내용(활동)
  - ○ 고학력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하여 리더십 강화교육, 기업 인사회계 교육과정 운영
  - ○ 경력단절 여성 직업훈련을 위하여 인생설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실시
  - ○ 경력단절 여성의 취업정착을 위한 새일인턴 사업을 시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 지원

○ 여성 새로일하기 센터 직업훈련과정 이수자에 대한 창업지원 교육의 강화
○ 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 여성을 방문하여 취업상담, 취업지도, 취업알선서비스를 제공

3) 세부사업 1-3 : 여성친화기업 인증제

• 추진배경
○ 여성의 직업역량을 개발하고 여성 적합 직종의 일자리를 확대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근무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여성의 고용유지에 한계가 발생함
○ 이에 여성을 위한 근로환경의 개선, 여성 채용, 인사 교육에서의 양성평등 노력, 모성(母性) 여성을 배려하는 직장문화를 조성한 기업을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여 여성이 일하기 좋은 사회를 조성하고 이들 기업의 모범사례를 확산 보급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여성 채용 확대, 여성 인재양성, 여성을 위한 근로환경 개선, 기업의 채용·인사·교육에서의 양성평등 실현 노력, 일과 가정의 양립 및 모성 여성에 대한 배려 등을 위한 노력이 우수한 기업체를 여성친화기업으로 인증하고 협력을 체결함

4) 세부사업 1-4 : 보육시설 옴부즈맨 제도

• 추진배경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보육시설의 확대 설치와 더불어 보육시설의 안전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의 행정지도감독, 보육시설 평가 및 인증제만으로는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한계가 있음
○ 이에 보육서비스의 이해당사자인 보육시설 이용 부모로 구성된 옴부즈맨을 양성하여 지역 내 보육시설에서의 안전, 인권보호, 서비스 질 점검 등의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보육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보육시설 이용 부모를 옴부즈맨으로 양성·파견하여, 지역 내 보육시설의 안전, 인권보호, 서비스의 질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보육환경의 조성과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1.2.2. 세부 과제 2.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지속가능한 노인 일자리 창출

1) 세부사업 2-1 : 대전이모작지원센터 운영

• 추진배경

○ 대전광역시의 베이비부머 인구는 213,212명으로 65세 노인인구 인구보다 약 6만 명 정도가 많고, 이들이 은퇴 이후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지역경제의 성장둔화는 물론이거니와 실업률의 증가, 예비노인층의 빈곤가구 전락 등의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측됨

○ 그러나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일자리 사업, 고용노동부의 고령자 취업지원 사업 등과 같은 현재 고령자취업지원 프로그램을 통하여 베이비부머의 사회공헌, 창업, 재취업을 지원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이들 신노년층의 고용욕구를 반영한 새로운 고용지원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베이비 부머 세대의 제2인생 설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노후생활설계, 창업 및 재취업에 필요한 교육훈련과 고용지원서비스를 제공함

○ 은퇴 시니어들의 사회참여 및 공헌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 및 민간부문의 사회공헌 일감을 발굴하여 연계함

○ 베이비 부머의 경제활동과 사회공헌 활동 지원뿐 아니라 평생교육,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자발적 커뮤니티(community) 활동을 지원함

2) 세부사업 2-2 : 공공분야 노인일자리 확대

• 추진배경

○ 노년기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어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의 공급을 늘려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일을 통한 소득보충, 건강증진, 고독과 소외 등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예방하고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그러나 노인의 경우 직업적 경험은 풍부하나 직업역량과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노동시장이 노인친화적 환경이 아닌 관계로 정상적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공공부문의 노인일자리 공급을 늘려나가 노인의 소득창출과 사회참여 및 공헌의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노인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고 있는 공익형, 교육형, 복지형 등의 사회공헌형 일자리를 10,000-12,000개를 창출하여 노인의 소득창출 및 사회공헌 기회를 확대함

○ 대전광역시 지역사업인 등하교 교통지도, 교내 취약지역 순찰, 학생상담활동, 학교폭력 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꿈나무 지킴이 일자리를 매년 300-350개 창출하여 아동복지 및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함

3) 세부사업 2-3 : 고령자 적합직종 직업훈련 프로그램 비용 지원

• 추진배경

○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고령자 적합직종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고령자 기준 고용률을 제시하고 있으나, 민간기업의 비협조와 고령자의 직업역량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령자의 고용률은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 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직업적 경험은 풍부하나 직업역량과 기술이 낙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고령자 적합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재취업이나 전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고령자 적합직종에 대한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은퇴를 준비하거나 은퇴한 55세 이상의 고령자를 대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고령자적합직종으로의 전직과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내 직업훈련기관, 대학 등과 연계하여 직업훈련을 강화함

○ 특히 생산직 등 청년층의 참여가 미흡한 인력부족 직종을 중심으로 대기업 훈련시설, 대학, 민간훈련기관 등과 연계하여 채용 연계형 직업훈련을 실시하며, 직업훈련비 중 본인부담금 일부 지원

4) 세부사업 2-4 : 노인장기요양시설 옴부즈맨 제도

• 추진배경

○ 2007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함께 노인의료복지시설과 재가노인복지시설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노인학대 등의 인권침해 사례의 발생이 증가하고 서비스의 질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시설평가에 국한되어 있어 상시적 서비스 점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이해당사자인 노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을 양성하여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시설에서의 안전, 인권보호, 서비스 질 점검 등의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노인장기요양시설의 환경과 서비스를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노인장기요양시설서비스의 이해당사자인 노인을 옴부즈맨으로 양성·파견하여, 지역 내 노인장기요양시설의 안전, 인권보호, 서비스의 질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노인요양시설 환경의 조성과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1.2.3. 세부 과제 3. 장벽 없는 안정적 장애인 일자리 창출

1) 세부사업 3-1 :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설립 운영

• 추진배경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장애인주차구역 단속보조, 발달장애인 일자리 357개에 연간 13억 2,700만원의 재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장애인행정도우미 일자리 153개에 연간 24억 4,700만원을 투입하고 있으며, 그 외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단, 장애인복지공장 등 직업재활시설 15개소를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장애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는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며, 장애인은 일자리에 대한 정보부족, 취업과정에서의 차별적 처우 등으로 인하여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장애인을 위한 일자

리 개발, 일자리 정보제공, 취업 지원 등의 장애인 고용 종합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 사업내용(활동)

○ 장애인 맞춤형 일자리의 개발과 장애인 일자리 정보 제공, 구직상담-직업능력 평가-직업재활 계획 수립-취업알선-직장적응에 이르는 장애인 취업 전반에 대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함

2) 세부사업 3-2 : 특화된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등 중증장애인의 경우 직무기술과 역량의 제한으로 인하여 적절한 일자리를 갖기가 어려움

○ 대전광역시에서는 대학, 장애인복지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과 연계하여 장애인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결과 157명의 중증장애인이 직업훈련을 수료하였으며 이들 중 상당수는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취업하는 성과를 거둠

○ 이에 중증장애인의 장애유형별 맞춤형 직업훈련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활동)

○ 중증 장애인의 욕구와 능력에 맞는 특화된 직업훈련 프로그램 개발하고 복지일자리 제공기관과 연계한 맞춤형 직업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

3) 세부사업 3-3 : 공공기관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할당제

- 추진배경

○ 장애인 복지공장,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등의 장애인 생산품의 판로개척의 어려움으로 생산품의 재고가 쌓이고, 이는 다시 장애인의 생산활동을 감소시켜 결국에는 장애인 일자리의 축소라는 결과를 낳음

○ 이에 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농후한 민간업체보다는 공공기관에서 중증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할당제를 실시하여, 장애인 생산품의 소비를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일자리의 확대 공급에 기여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대전광역시, 구 및 시 산하 사업소 등 공공기관에 대하여 총 구매액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을 1% 이상 우선구매하도록 할당제를 실시하고 그 실적을 공개함

4) 세부사업 3-4 : 장애인복지시설 옴부즈맨 제도

- 추진배경

○ 대전광역시에는 장애인 생활시설, 직업재활시설, 지역재활시설 등 총 121개소의 장애인복지시설이 운영되고 있으나, 장애인 인권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시설서비스의 질을 점검할 수 있는 체계가 시설평가에 국한되어 있어 상시적 서비스 점검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이에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으로 구성된 옴부즈맨을 양성하여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에서의 안전, 인권보호, 서비스 질 점검 등의 상시적 감시체계 구축이 요구되며, 이를 통하여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환경과 안전보호, 서비스의 질을 신속하면서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음

• 사업내용(활동)

○ 장애인복지시설 이용의 이해당사자인 장애인을 옴부즈맨으로 양성·파견하여, 지역 내 장애인복지시설의 생활안전, 인권보호, 서비스의 질에 대한 상시적 감시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장애인복지시설의 환경 조성과 시설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핵심과제2.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

2.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대전광역시의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50.651명으로 전체 인구의 9.8%를 차지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 213,212명이 조만간 노년기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인구의 절대수와 비율은 급격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노인인구의 양적 증가와 함께 질적 변화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녀동거부양 비율의 감소로 인하여 독거노인과 부부가구 노인의 비율이 증가하며, 평균수명의 증가로 인하여 장기요양욕구를 지닌 고령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활기찬 노후생활을 영위하고자 건강하고 경제력을 갖춘 노인인구와 건강과 경제문제로 인하여 사회적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인구로 나뉘어져 노인인구의 양극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노인인구 구조의 변화와 함께 노인문제도 점차 다양해지고 심각해짐에 따라 중앙정부와 대전광역시에서는 노후 소득보장, 건강보장, 사회서비스 등의 노인복지정책을 빠른 속도로 확대해 가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민선 6기 공약 추진 계획에 의하면 효문화 진흥, 노인상담 활성화,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경로당 운영비 확대 지원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다양한 특성과 문제를 지닌 노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생산적 노후생활 보장과 안전한 노인돌봄체계의 형성 그리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2) 현황 및 대응 방안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대표적 노인여가복지시설인 노인복지관이 6개소에 불과하여 이용자 과밀현상이 발생하고 있고 인력 및 시설자원의 제한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경로당은 시설과 재정자원의 열악성으로 인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음

○ 자녀동거부양 의식의 약화로 인하여 독거노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독거노인에게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가사 및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적정 수준의 충분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아름다운 전통문화인 효를 장려하여 시민의 세대간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형성과 효행의식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조례가 부재한 상황임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통하여 중증 노인환자의 요양과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도모하고 있으나 노인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비스 공급량의 부족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고 있으며, 치매 및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은

제한적임

○ 이러한 수요-공급의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노인의 여가문화 및 자원봉사활성화사업, 독거노인 안전망 확충 등을 통한 노인돌봄체계의 구축, 정신건강 및 장기요양서비스의 확충 등을 추진하고자 하며, 이에 소요되는 재정은 기존의 노인복지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부문 예산의 증액과 아울러 신규 개발·추진되는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시비와 구비로 신규 편성하여 확보할 계획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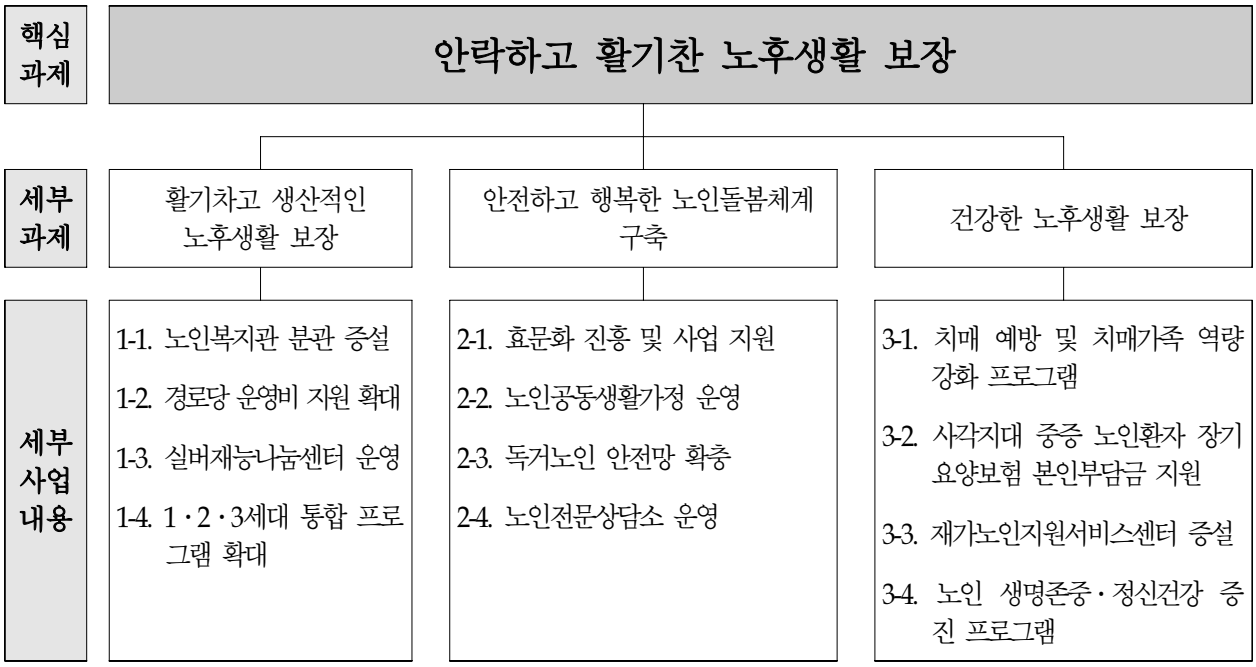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 안락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으로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보장, 안전하고 행복한 노인돌봄체계 구축,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이라는 3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기존에 제공되던 노인복지서비스의 확대와 아울러 신규사업을 편성함

○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 증설,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 실버재능나눔센터 설립 운영, 1·2·3세대 통합 프로그램이라는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실버재능나눔센터의 설립 운영은 신규사업으로서 노인의 전문적 재능과 기술을 활용하여 노인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고자 하며, 노인복지관 분관의 증설, 경로당 운영비 지원 확대를 통하여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기능과 서비스를 강화하고자 하며, 민간복지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시시하고 있는 세대통합프로그램을 확대 시행하여 세대간 소통과 공동체 사회 형성에 기여하고자 함

○ 안전하고 행복한 노인돌봄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효문화 조례 제정,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독거노인 안전망 확충, 노인전문상담소 설치라는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독거노인 안전망 확충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은 모두 지역 자체 신규사업으로서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효행장려, 농촌지역 노인의 상호간 돌봄체계 구축, 노년기의 심리사회적 문제 해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신규예산 편성을 통하여 추진하고자 함

○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서는 치매예방 및 치매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사각지대 중증 노인환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증설, 노인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프로그램이라는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 중에서 치매예방사업은 기존의 사업을 확대하고 치매가족 역량강화사업은 지역 자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여 치매가족의 부양능력을 강화하고자 하며, 나머지 사업은 기존 사업의 대상과 서비스 내용을 확대 시행하고자 함



4) 세부사업 개요

(1)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보장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노인복지관 분관	예산	-	750	750	750
	성과목표	승인 및 재정확보율	분관 1개소 운영	분관 1개소 운영	분관 1개소 운영
경로당 운영비 지원	예산	943	943	943	943
	성과목표	월 40만원 지원	월 40만원 지원	월 40만원 지원	월 40만원 지원
실버재능 나눔 센터 운영	예산	-	150	100	100
	성과목표	위탁기관 선정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1개소 운영
1·2·3세대통합 프로그램 확대	예산	75	75	75	75
	성과목표	프로그램 참여자 500명	프로그램 참여자 500명	프로그램 참여자 500명	프로그램 참여자 500명

(2) 안전하고 행복한 노인돌봄체계 구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효문화 진흥 및 사업 지원	예산	2,100	550	550	500
	성과목표	조례제정, 효문화 진흥원 건립 및 사업비 지원	효문화 진흥원 사업비 지원	효문화 진흥원 사업비 지원	효문화 진흥원 사업비 지원
노인공동생활가정 운영	예산	87	114	54	54
	성과목표	공동생활가정 운영 5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공동생활가정 10개소
독거노인 안전망 확충	예산	150	150	250	250
	성과목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3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3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5개	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 5개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예산	260	100	100	100
	성과목표	상담소 설치	상담건수 1,000건	상담건수 1,000건	상담건수 1,000건

(3)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치매예방 및 치매가족 역량강화프로그램	예산	150	150	150	150
	성과목표	조사 및 기관 선정	이용자 수 300명	이용자 수 300명	이용자 수 300명
사각지대 중증노인환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예산	-	150	150	150
	성과목표	조례 제정	지원자 150명	지원자 150명	지원자 150명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증설	예산	300	500	700	600
	성과목표	센터 2개 증설	센터 2개 증설	센터 2개 증설	지속 운영 지원
생명존중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예산	200	250	250	250
	성과목표	선별조사 5,000명	참여노인 300명	참여노인 300명	참여노인 300명

2.2 세부사업 계획

2.2.1. 세부 과제 1. 활기차고 생산적인 노후생활 보장

1) 세부사업 1-1 : 노인복지관 분관

- 추진배경

○ 노인인구의 증가, 노년기의 여가활용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이용 노인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제한된 시설과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노인복지관 이용의 과밀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베이비부머의 은퇴와 아울러 노인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다양한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노인복지관의 증설이 필수적임

○ 현재 노인의 여가문화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시설로는 노인복지관 이외에 경로당, 사회복지관, 평생교육센터, 문화센터 등이 있으나, 이들 기관의 경우 노인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이 매우 적은 관계로 노인의 여가 및 문화생활 욕구를 충족하는데 한계가 있음

○ 따라서 각 구별로 노인복지관 분관을 설치하여 노인의 여가문화생활 지원과 종합적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활동)

○ 현재 2개 노인복지관이 있는 동구와 노인복지관 분관을 운영하고 있는 대덕구를 제외한 3개구에 노인복지관 분관 설치를 지원함

2) 세부사업 1-2 : 경로당 운영비 지원

- 추진배경

○ 대전광역시의 경로당은 786개소로서 지역사회 노인의 휴식처와 사회적 교류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

행하고 있으나, 공간부족, 여가 문화 프로그램의 미흡뿐 아니라 운영비 지원액이 월 30만원에 불과하여 경로당의 기능과 운영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경로당의 부식비 등 운영비 지원액을 인상하여 경로당의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경로당의 부식비 등 운영비 지원액을 현행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인상 지원하여 노인의 경로당 여가프로그램의 이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3) 세부사업 1-3 : 실버재능나눔센터 운영

• 추진배경

○ 건강하고 경제적 여유가 있는 고학력 노인과 전문기술과 경험을 갖춘 노인인구가 증가하고 이들의 사회공헌에 대한 동기가 높아지고 있으나, 노인의 재능이나 기술,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봉사처를 개발하고 연계해줄 수 있는 인프라가 매우 취약함

○ 자원봉사센터와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등에서 소수의 노인에게 자원봉사 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노인의 재능이나 지식, 기술 수준이나 봉사 희망사항과는 무관한 봉사활동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노인의 자원봉사 및 사회공헌 동기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함

○ 또한 전문노인자원봉사 프로그램은 전직 공무원, 교사, 예술인 등 특정 전문분야의 재능과 지식을 주로 활용하며, 봉사 수요처에서 필요한 작은 재능과 기술을 가진 노인은 전문자원봉사 참여기회를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이들의 재능과 기술이 사장되고 있음

○ 이에 노인의 재능과 지식, 기술, 경험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능봉사자 발굴, 등록, 봉사교육, 수요처 연계, 활동 평가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재능나눔센터의 운영이 요구됨

• 사업내용(활동)

○ 노인인구 중에서 재능나눔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노인봉사자를 발굴하고, 이들의 재능과 기술을 데이터베이스화 함과 아울러 이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처의 발굴을 통하여, 노인의 재능봉사활동을 연계하고, 자원봉사자 교육, 활동 평가 및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재능나눔센터를 설립 운영함

4) 세부사업 1-4 : 1· 2· 3세대 통합 프로그램

• 추진배경

○ 노인을 동거 부양하는 비율이 줄어들어 독거가구와 부부가구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자녀, 친구, 이웃과의 교류가 줄어들어 고독과 소외감을 느끼는 노인이 늘어나고 있으며, 평생을 통해 터득한 지혜와 경험, 문화를 후세대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 자녀세대와 손자녀 세대 역시 윗세대와의 교류 기회가 축소됨에 따라 가치관, 문화,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고 학습하고 사회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

○ 이로 인해 세대간의 분절현상과 소통단절의 문제가 발생하고, 노인에 대한 부정적 편견이 더욱 강화

되고 있으므로, 세대간의 소통과 통합을 촉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실시가 필요함

- 사업내용(활동)
  - ○ 노인, 성인자녀, 손자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 교육, 여가활동, 문화교류, 봉사활동 등의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세대간의 소통과 통합을 촉진하되, 프로그램 공모를 거쳐 각 구별로 1개 기관을 선정하여 세대통합프로그램을 실시함

2.2.2. 세부 과제 2. 안전하고 행복한 노인돌봄체계 구축

1) 세부사업 2-1 : 효문화 진흥 및 사업 지원

- 추진배경
  - ○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 의식이 약화됨에 따라 세대간의 교류와 소통이 단절되고 이로 인해 세대간 갈등을 비롯한 다양한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 이에 세대간 소통을 통한 공동체 문화 형성과 효문화 유산의 장려 및 진흥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여, 공동체 사회의 복원과 지역 노인돌봄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 효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하여 효문화 관련 사업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효문화 진흥원을 건립 운영함
  - ○ 효문화 진흥원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효실천교육, 효전문인력 양성, 저소득 노인을 위한 경로행사, 효행 청소년단 운영, 효 봉사활동, 학술세미나 및 효행록 발간, 효 문화캠프 등을 통하여 시민의 효행 의식 제고와 효문화의 확산과 전승에 기여함

2) 세부사업 2-2 : 노인 공동생활 가정 운영

- 추진배경
  - ○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 추세로 인하여 노년기의 고독감 및 소외감 감소와 고독사, 자살 등의 예방대책의 마련이 필요하지만,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노인의 경우 사회적 교류와 관계망의 재건이 쉽지 않은 실정임
  - ○ 농촌지역의 경우 아직 공동체 사회의 미풍양속이 남아 있고 이웃간의 교류가 활발하다는 점에서 공동생활을 통한 상호간 돌봄체계의 형성이 용이하므로, 농촌지역 독거노인의 상호간 돌봄체계 형성을 위한 공동생활 가정의 운영 필요성이 높음
- 사업내용(활동)
  - ○ 구별 1개소씩 농촌지역 경로당을 개조하여 공동생활 가정을 설치하되, 이에 소요되는 리모델링비용, 운영비 및 냉난방비를 지원함

3) 세부사업 2-3 : 독거노인 안전망 구축

- 추진배경
  - ○ 독거노인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사회적 교류와 관계가 단절된 독거노인이 늘어남에 따라 고독사, 자살 예방을 위한 돌봄서비스의 강화가 필요함
  - ○ 현재 독거노인 6,500명에 대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780세대에 온라인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독거노인 응급안전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은둔형 독거노인, 고독사와 자살위험군 독거노인에 대한 돌봄서비스가 부족한 상황임
  - ○ 이에 독거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재건하고, 고독사와 자살의 위험요인을 제거 또는 완화하기 위한 전문적 개입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구됨
- 사업내용(활동)
  - ○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은둔형 독거노인, 고독사 고위험군 노인, 거동불편 자살 위험군, 우울증 및 자살위험군 노인을 대상으로 종합적 사례관리서비스, 우울증 치료 및 투약, 집단상담 프로그램, 자조모임 등의 전문적 집단개입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독사와 자살을 예방함

4) 세부사업 2-4 : 노인전문상담소 운영

- 추진배경
  - ○ 노인 인구 증가와 함께 노인문제 또한 다양화되고 있으며, 빈곤, 질병 등 기본 생활과 관련된 문제뿐 아니라 고독, 소외, 우울, 치매 등의 다양한 심리사회적 문제를 호소하는 노인들이 증가하고 있음
  - ○ 현재 노인의 심리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복지대책으로는 대전광역시노인복지관에 설치된 노인전용상담실이 전부이며, 이 역시도 전문상담인력의 부족과 시설 및 재정자원의 부족으로 노인의 심리상담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전문상담소로 확대개편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 노인전문상담소에서의 개인상담, 집단상담, 가족상담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순회방문 전문상담사와 노인상담사를 배치하여 경로당과 노인복지관 방문상담, 거동불편 노인 가정방문 상담을 실시하여 노인의 건강, 가족 및 정서적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행복한 노후생활의 영위를 지원함

2.2.3. 세부 과제 3. 치매 예방 및 치매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1) 세부사업 3-1 : 치매 예방 및 치매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 추진배경
  - ○ 대전광역시의 치매인구 수는 13,755명에 이르고 있으며, 부양가족은 그 3배에 이를 것으로 추계되

고 있으나,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치매노인 수와 부양가족의 규모는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현행 치매 관련 노인복지정책은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이 있으나 이들 급여나 서비스 이용은 경도인지장애 발생 시점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치매증상이 겉으로 드러난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치매가족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치매 특별등급 신설로 인하여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늘어났지만, 여전히 부양에 따르는 부담을 겪고 있어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에 치매노인의 보호부양을 맡기려는 성향이 강하여, 치매노인 보호에 소요되는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음

• 사업내용(활동)

○ 경도 인지장애 증상을 보이는 중장년과 노인을 대상으로 하여 인지기능 강화와 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로의 전환을 예방하고 가정과 지역사회에서의 자립적 생활을 지원함

○ 치매가족 간호교육, 자조모임과 휴식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치매가족의 노인 부양역량을 강화함

○ 치매 예방 및 치매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치매상담센터,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후, 그 효과성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함

2) 세부사업 3-2 : 사각지대 중증 노인환자 장기요양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 추진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의하면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 중 기초수급권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시설급여 및 재가급여 이용시 본인부담금을 지원하고 있음

○ 그러나 차상위계층 중증 노인환자는 장기요양등급 1-3등급 인정자라고 하더라도 어떤 지원도 받을 수 없어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본인부담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차상위 계층 중증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도입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등급판정절차를 거쳐 1-3등급 인정자인 차상위 노인환자를 대상으로 본인부담금의 30%를 시비를 확보하여 지원함

3) 세부사업 3-3 :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 증설

• 추진배경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으로 증증 노인환자의 장기요양욕구는 어느 정도 해소되었지만, 기존의 재가노인서비스 기관이 대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가노인복지시설로 편입됨에 따라,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지 못한 저소득 노인, 일상생활이 어려우면서 가족 등으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노인은 서비스 사각지대에 처하게 됨

○ 이에 대전광역시에서는 9개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를 운영하여 755명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기초자치단체별로 기관 수와 서비스 이용인원의 편차가 존재하여,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

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의 증설이 요구됨

- 사업내용(활동)

○ 구별 3개 재가노인지원센터를 목표로 하여 6개소의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센터를 증설하여 1,200명의 저소득 거동불편 및 일상생활 동작 제한노인에게 가사지원, 일상생활 지원, 상담, 주거환경개선, 여가활동 지원, 노인 및 보호자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

4) 세부사업 3-4 : 노인 생명존중 및 정신건강 증진 프로그램

- 추진배경

○ 대전광역시 노인실태조사에 의하면 우울증으로 의심되는 비율은 13.7%이며, 자살충동이나 자살생각을 하는 노인의 비율은 4.9%에 이르고 있으며, 노인의 자살위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2년 시행됨에 따라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구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자살예방 사업을 강화하고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노인 자살예방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노인 자살위험군과 우울증 환자는 쉽게 발견되지 않아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지역사회의 노인 자살위험군으로 추정되는 빈곤노인, 질병노인,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선별조사(screening test)를 통해 자살위험군을 선별해 내고, 이들에 대한 게이트키퍼(gatekeeper) 파견, 우울증 치료 및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노인의 자살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대전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와 구별 정신건강증진센터를 중심축으로 하여 노인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을 전개하되, 자살위험군 노인의 발견과 서비스 접근도를 높이기 위하여 구별 노인복지관에 전문상담원 1명과 노인일자리사업 형태의 게이트키퍼 5명씩을 배치하여, 노인 우울치료 및 자살예방 전문상담 프로그램을 시행함

• 핵심과제3.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대전 •

3.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고, 원래 장애와 관련이 없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비율도 높지만, 낮은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의료 보장성 강화와 의료지원 등의 대책이 매우 필요함.

○ 그동안 장애인은 다양한 생활현장에서 여전히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제도적인 개선과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의 인권의식 강화 등을 위한 사업이 필요함.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홍보를 통해 장애인 당사자들의 자신의 권리에 대한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장애인 인권 및 권리보호를 위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내실화를 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함.

○ 대전 장애인의 경우 교육정도가 매우 낮고 직업훈련과 평생교육 참여율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보고되었음. 이에 장애의 특성과 생애주기를 고려한 교육 참여의 확대를 위해 교육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함. 맞춤형 직업훈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되어야 하며, 중증장애인들에게는 장애유형에 맞는 직업지도와 직업적응훈련 등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지원이 더욱 필요함. 또한 장애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장애인 특성을 고려한 특별 교육과정 확대 편성 및 운영, 프로그램 홍보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함.

2) 현황 및 대응 방안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장애인들은 장애유형에 따라서 장기간 다양한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으나 소득에 비해 과중한 의료비 부담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남에 따라, 이러한 욕구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의료비 지원확대와 공공이 주도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의료보장성 확대방안을 마련토록 해야 함.

○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장시간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병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 이외에도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하는데, 특히 제도권을 통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음. 이에 중증 발달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통합적서비스 지원 시스템 구축을 통해 중증 장애아동의 진단부터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의료·교육·재활·직업·문화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함.

○ 장애성인들을 위한 성인교육 시설이 매우 부족하며 지역적 분포의 편재로 인해 서비스 접근성이 매우 떨어짐. 장애성인의 개별화된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도록 기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장애성인의 평생교육지원을 위한 특화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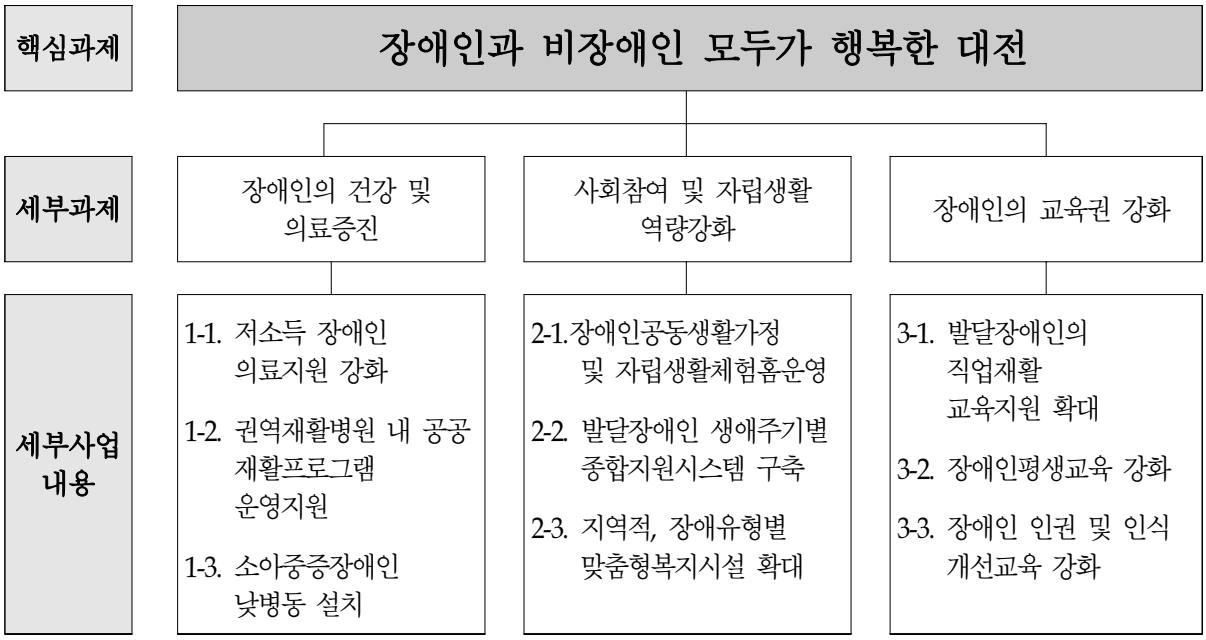
사회서비스 개발 및 운영 등을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증진이라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으로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 권역재활병원 내 공공 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소아중증장애인 낮병동 설치라는 3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탈시설장애인의 자립생활체험홈 운영지원,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지역적·장애유형별 맞춤형복지시설 확대를 도모하고자 함

○ 장애인의 교육권 강화를 위해서는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지원 확대, 장애인평생교육강화 및 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사고의 전환을 위해 필요한 장애인인식개선 교육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4) 세부사업 개요

(1)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증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저소득 장애인 의료지원 강화	예산	1,170	1,220	1,280	1,340
	성과목표	5,000명	전년대비 5% 대상 확대	전년대비 5% 대상 확대	전년대비 5% 대상 확대
권역재활병원 내 공공재활프로그램 운영지원	예산	124	130	140	150
	성과목표				
소아중증장애인 낮병동 설치	예산	300	400	400	500
	성과목표	3개병원 35병상	4개병원 50병상	4개병원 50병상	5개병원 65병상

(2) 장애인의 역량강화를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장애인 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예산	95	95	105	120
	성과목표	6개소	6개소	7개소	8개소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예산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종합지원시스템 운영
	성과목표	예산확보	만 2세미만 중증장애아동	당해연도 초진 아동 전체 확대	당해연도 초진 아동 전체 확대
지역적, 장애유형별 맞춤형복지시설 확대	예산				
	성과목표	1개소 확대	-	1개소 확대	-

(3) 장애인의 교육권 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교육지원 확대	예산	50	50	110	120
	성과목표	직무매뉴얼 발간 및 직업체험연수체계 구축	직장체험 연수기관 10개 지정	직무매뉴얼 발간 및 직장체험 연수기관 전년대비 20% 확대	직장체험 연수기관 전년대비 20% 확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예산	136	136	140	140
	성과목표	교육지원 230명	교육지원 240명	교육지원 250명	교육지원 250명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교육	예산	38	39	39	40
	성과목표	2,000명	2,000명	2,000명	2,000명

3.2 세부사업 계획

3.2.1. 세부 과제 1. 장애인의 건강 및 의료증진

1) 세부사업1-1 : 저소득 장애인 의료 지원

• 추진배경

○ 생활이 어려우나 취업을 한 저소득 장애인의 경우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의료비가 생활 안정을 위협하는 요소로 작용함.

○ 취업 등으로 인해 소득기준이 초과되어 의료비급여 지원 대상에서 탈락하는 경우 경제 활동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 장애인의 독립적 사회생활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

○ 따라서 합리적인 지원대상자 선정을 통해 취업한 장애인의 의료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마련이 필요함.

• 사업내용

○ 취업한 장애인 가운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의료급여 본인부담금을 지원함

2) 세부사업1-2 : 권역재활병원 내 공공재활 프로그램 운영지원

• 추진배경

○ 대전충청권역 재활병원 건립을 통해 장애인 재활병원 병상수를 확충하였으나, 장애발생초기 적절한 재활치료, 퇴원 후 지역사회재활로 이어지는 지속적인 재활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활의료체계는 아직 미흡함.

○ 특히 재활을 통하여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병원기반 재활프로그램 및 지역사회 재활의료서비스 프로그램이 부족한 실정임.

• 사업내용

○ 지역사회 재활 병·의원 시설 등 재활관련 기관 간 MOU체결 등 네트워크 구축

○ 조기사회복귀를 위한 지원, 장애인 재활운동, 건강관리, 안전교육 및 방문재활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공공재활 프로그램 보건소 보급 및 운영

3) 세부사업1-3 : 소아중증장애인 낮병동 설치

• 추진배경

○ 중증 장애아동의 경우 장시간 집중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병원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고, 치료와 동시에 생애주기별로 다양한 지원을 필요로 함.

○ 특히 제도권을 통한 교육기회를 갖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어 중증 장애아동의 치료와 교육이 병행될 수 있은 낮병동의 확대 설치가 필요함.

• 사업내용

○ 재활치료를 위한 소아 낮병동 확대

3.2.2. 세부 과제 2.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 역량강화

1) 세부사업2-1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및 장애인자립생활 체험홈 운영

• 추진배경

○ 자립생활을 강조하는 최근의 패러다임은 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의 탈시설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대를 가져왔으나, 장애인의 탈시설화를 위한 구체적 지원정책은 매우 제한적인 실정임.

○ 특히 현재 대전 30개소 운영 중인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대부분이 법인이 아닌 개인시설로 운영되어 인력 및 재정 등 운영상 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기대하기 어려움.

• 사업내용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실태 조사

○ 지역 사회복지 전공 대학원 실습과목 연계와 인력뱅크를 통한 행정업무 지원체계 마련

○ 노무·회계 등 전문가컨설팅 수시 제공을 통해 기관운영 지원

2) 세부사업2-2 :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1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적절한 발달과 원활한 사회통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장애를 최대한 조기에 발견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 됨.

○ 발달장애인의 경우 발병이 출생이후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따라서 장애진단을 받은 이후 장애당사자 뿐 아니라 가족전체 구성원에 대한 심리지원과 치료·교육·재활 등 장애특성과 생애주기별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분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발달장애인으로 진단받는 순간부터 의료·교육·사회서비스·재활·복지 전반에 걸쳐 당사자와 가족에 대한 통합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내 생애주기별 종합지원 TF팀 설치 운영

○ 만5세 미만 발달장애인 가족 전담 복지코디네이터 지정제 실시

○ 지역사회 공공 및 민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으로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연계를 통한 통합서비스 제공

3) 세부사업2-3 : 지역적, 장애유형별 맞춤형 복지시설 확보

• 추진배경

○ 2014년 6월 현재 대전시의 장애인복지관은 동구, 중구, 서구, 대덕구 각 1개소, 유성구 2개소가 있음. 이동과 접근에 제약이 많은 장애인들이 자신의 구에 속한 복지관일지라도(예를 들어 동구의 밀알복지관은 삼성동에 위치해 판암동, 산내동 등의 장애인이 이용하기 어려움) 서비스 접근 용이성이 떨어짐

○ 자치구별 지역적 여건뿐만 아니라 장애유형을 고려한 균형적 복지시설 확대가 필요함

• 사업내용

○ 자치구별, 장애유형별 인구를 고려한 복지서비스 시설 확대

3.2.3. 세부 과제 3. 장애인의 교육권 강화

1) 세부사업3-1 : 발달장애인의 직업재활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학생들의 고등학교 졸업 후 진로는 일반적으로 고등부 전공과 1~2년 과정을

다니거나 장애인복지관에서 실시하는 3~5년의 직업재활훈련 프로그램에 입소하는 것임.

○ 현재 발달장애인 대학에서 직업교육을 통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등록금이 비싸 진학하는 장애인은 제한적임. 이에 발달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직업재활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사업내용

○ 맞춤형 장애인 직업훈련 서비스 제공

○ 장애유형을 고려한 장애인일자리 직무매뉴얼 개발

○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직장체험 연수 체계 구축

2) 세부사업3-2 : 장애인평생교육 강화

• 추진배경

○ 장애성인의 개인별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고 성인교육 시설도 부족하여 가정이나 시설에서 방치되고 있는 성인 장애인들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지원 강화 및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

• 사업내용

○ 교육기회를 놓친 장애성인의 초·중등교육 지원

○ 장애성인을 위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확대 및 지원 인프라 구축

3) 세부사업3-3 : 장애인 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 추진배경

○ 법률 제정 등 차별금지·인권보장을 위한 제도 구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권침해와 차별사건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장애인 인권의 사각지대 여전히 존재함

○ 장애인권리협약 8조에서는 당사국이 가족단위를 포함하여 사회 전반에서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향상시키고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고양시키기 위한 즉각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 장애인의 인권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교육이 지역사회 내에서 이루어져야 함

• 사업내용

○ 사회복지관련 종사자, 초·중고학생, 일반 시민 등 대상별 장애인인권 및 인식개선 교육

○ 장애인에게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전문가 양성 교육 실시

• 핵심과제4. 여성과 가족을 위한 살맛나는 도시 건설 •

4.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출산·자녀양육을 위한 제도 개선과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으나 정책에 대한 수요자 체감도가 높지 않음. 핵가족과 맞벌이가구가 보편화되면서 돌봄서비스에 대한 맞춤형 설계와 지원체계

○ 중앙정부에서는 임신·분만에 대한 의료지원 강화, 임신·출산에 대한 경제적 부담경감, 안심하고 양육할 수 있는 여건 조성 등의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의 민선 6기 공약 추진 계획에 의하면 여성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음

○ 구체적으로 여성가족정책센터의 기능 강화를 통해 성 주류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보육지원을 위해 공동육아 센터 설치와 공공·민간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실행할 계획임. 이러한 다각적인 중앙 및 지방자치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출산율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여전히 보고되고 있음

○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참여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제거하는 노력 등을 통해 여성친화 도시로써의 자리매김이 더욱 필요함

2) 현황 및 대응 방안 – 수요 - 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초산 출산연령이 증가하면서 고위험 산모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임산부 건강증진 지원으로는 저소득 여성 임산부에게 서비스가 집중되고 있음에 따라, 보편적 복지서비스 확대차원의 일환으로 고위험/고령 산모에 대한 건강관리사업 추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여러 국가로부터 이주해 와서 살아가는 다문화가족을 위해 이미 교육 및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다양한 국가출신의 이주여성의 욕구에 대응하기에는 몇몇 주요국가의 이주여성을 위한 서비스만 제공되는 현실임. 이에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공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과 프로그램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 마련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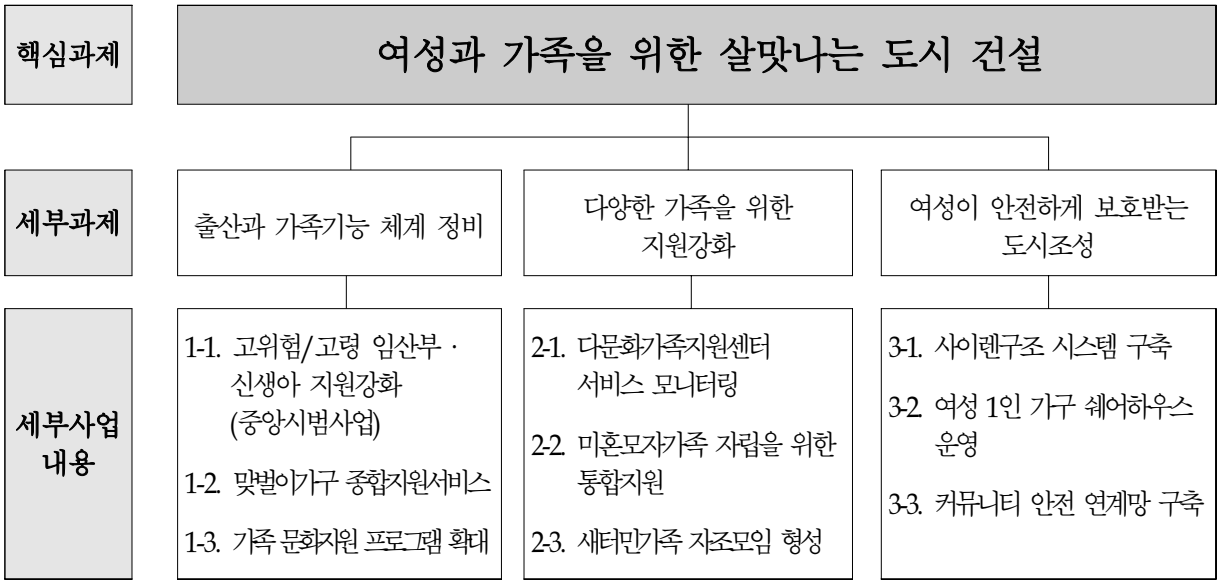
○ 여성 1인가구의 경제활동 비율이 남성에 비해 높으며, 특히 20-30대의 여성의 경우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1인가구가 증가추세에 있으나 주거비용과 주거안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여성범죄 우려지역에 방법용 CCTV, 가로등, 보안등 설치 등의 확대와 더불어 여성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도시 안전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요구됨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 출산에 대한 의식변화를 통해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이 갖고 있는 순기능 강화를 위해 가족기능 강화라는 핵심과제를 선정하였고, 세부사업으로 고위험/고령 임산부·신생아 지원강화, 맞벌이가구 종합지원서비스, 가족 문화지원 프로그램 확대라는 3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현대사회에서 다문화가족, 미혼모자가족, 새터민가족 등 다양한 형태의 가족구조가 늘어나면서 이들을 위한 사업의 확대가 이루어져왔음. 보다 더 수요자의 욕구에 부응하는 서비스 제공을 위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서비스 모니터링, 미혼모자가족의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 새터민가족들의 적응을 위한 자조모임 지원사업 등 3개의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임

○ 여성이 안전을 느낄 수 있고 보호받는 도시조성을 위해서 성·가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를 위한 연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이렌구조 시스템 구축, 20~30대 여성 1인가구의주거비용과 주거안전을 위해 여성 1인 가구 쉐어하우스 운영, 지역 커뮤니티 안전 연계망 구축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4) 세부사업 개요

(1) 출산과 가족기능 체계 정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고위험/고령 임산부 · 신생아 지원강화	고위험임산부 진료비 지원확대	예산				
		성과목표	고위험/고령 임산부 진료비 지원기준 마련	100명	전년도 대비 120%	전년도 대비 120%
	미숙아 집중치료실 확대	예산				
		성과목표	집중치료 기관 및 병실 수 확장	전년도 대비 110%	전년도 대비 110%	전년도 대비 110%
맞벌이 가구 가사지원서비스		예산	1,286			
		성과목표	보고서 발간	매뉴얼 제공	만족도 80% 이상	만족도 80% 이상
가족문화지원 프로그램 개발		예산				
		성과목표	통합문화이용권 발급 수	전년대비 120% 발급	전년대비 120% 발급	전년대비 120% 발급

⑵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모니터링	예산	1,313			
	성과목표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80% 이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80% 이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80% 이상	이용자 서비스 만족도 80% 이상
미혼모자가족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	예산				
	성과목표	공동가정 추가 운영	공동가정 추가 운영	공동가정 추가 운영	공동가정 추가 운영
새터민가족 자조모임 형성	예산				
	성과목표	새터민가족 자조모임 형성	자조모임 내 3개 동호회 운영	자조모임 내 4개 동호회 운영	자조모임 내 5개 동호회 운영

⑶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도시조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사이렌구조 시스템 구축	예산				
	성과목표	지역 성가정폭력 상담 및 정보 자원 취합	피해자를 위한 자원 연계망 구축	통합시스템 매뉴얼 제공	사이렌구조 시스템 운영
여성1인 가구 쉐어하우스 운영	예산				
	성과목표	여성1인가구 쉐어하우스 수요보고서 발간	여성1인가구 쉐어하우스 지역선정	여성1인가구 쉐어하우스 건립 및 시범운영	시범운영 효과성 검증 및 보고서 발간
커뮤니티 안전 연계망 구축	예산				
	성과목표	안전지수 지표개발	안전체감도 평가	안전체감도 평가	안전체감도 평가

4.2 세부사업 계획

4.2.1. 세부과제 1. : 출산과 가족기능 체계 정비

1) 세부사업 1-1 : 고위험/고령 임산부・신생아 지원강화

• 추진배경

○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결혼 및 출산연령이 높아졌으며, 난임부부와 고위험/고령 임신의 결과로 및 미숙아·저체중아 등의 출산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태아 분만과 산모의 건강관리를 위한 지원 제도 도입이 바람직함. 특히 고위험 산모 및 신생아 치료를 위한 전문적 집중치료실 확보가 필요함.

○ 35세 이상 고령산모 : (2000) 42천명(6.7%) → (2005) 46천명(10.6%) → (2011) 85천명(19.0%)

○ 37주 미만 미숙아 출생수(100명당) : (2000) 3.8명 → (2011) 6.0명

○ 2,500g 미만 저체중아 출생수(100명당) : (2000) 3.8명 → (2005) 4.3명 → (2011) 5.2명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2000-2011)

○ 대전 신생아기 사망률 2.0로 전국 사망률 1.7보다 높으며, 영아사망률도 3.2로 전국 3.0보다 높게 나타남

• 사업내용(활동)

○ 고위험/고령산모에게 보다 안전한 분만환경을 제공하고 고위험 임산부의 진료에 대해 질병의 중증도, 가정 내 부담정도, 치료효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 의료비를 지원함.

○ 특히 미숙아, 심장이상 등 선천성 질환을 가진 고위험 신생아를 집중치료 할 수 있도록 대학병원 내 신생아 집중치료실 설치를 확대·지원함

2) 세부사업 1-2 : 맞벌이가구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 추진 배경

○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급변하는 가족 내외적인 변화로 인하여 맞벌이가구의 가족기능이 크게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맞벌이가구에 대한 가사 및 양육의 어려움 경감을 위해 종합지원서비스체계 구축이 필요함

• 사업 내용(활동)

○ 사업타당성 검토 연구를 통한 맞벌이가구 종합지원 서비스 제공 근거 자료 마련

○ 인력 및 예산지원 체계, 전달체계, 서비스 제공 등의 매뉴얼 개발

○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신규사업을 통해 바우처 특화사업으로 개발(가사 지원 바우처, 자녀양육 지원 바우처, 역량강화 지원 바우처 등)

○ 전문가 평가 지표 개발 및 실시

3) 세부사업 1-3 : 가족 문화지원 프로그램 확대

• 추진배경

○ 2014년 대전광역시 시민복지욕구조사에서 생활여건의 여러 영역가운데 '가족 및 문화생활'에 대한 미충족욕구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예전의 국가성장모델에서 개개인의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전환되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볼 수 있음.

○ 문화예술은 개인의 발전과 잠재능력, 자존감을 고취시키고 공동체를 변화시키며 범죄, 건강, 사회통합에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타인과의 협동 및 소통능력 향상, 타인에 대한 포용력 증가, 개인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기여함(보건사회연구원, 2014).

• 사업내용(활동)

○ 문화누리카드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 확대

○ 기획사업 대상자 확대 및 지원금액 확대

○ 대전문화재단을 통한 대전시민 통합문화이용권 개발

4.2.2. 세부과제 2. 다양한 가족을 위한 지원강화

1) 세부사업 2-1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모니터링

• 추진배경

○ 현재 대전 5개 자치구별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운영 중이나, 서비스의 질에 대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며, 소수 국가출신에 대한 편중된 서비스에서 벗어나 좀 더 다양한 국가출신에 대한 지원프로그램이 개발·제공되어야 함.

○ 다문화인구 현황(2013. 1월 기준)

구 분	총 계			결혼이민자(국적미취득자)			혼인 귀화자(국적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4,909	393	4,516	3,440	350	3,090	1,469	43	1,426
동 구	1,068	83	985	760	72	688	308	11	297
중 구	921	57	864	652	50	602	269	7	262
서 구	1,223	102	1,121	858	91	767	365	11	354
유성구	764	95	669	560	87	473	204	8	196
대덕구	933	56	877	610	50	560	323	6	317

• 사업내용(활동)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비스 모니터링을 통해 이용자 욕구에 적절히 부응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아가 여러 국가출신의 다양한 대상자 특성에 맞는 특화 사회서비스사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함.

2) 세부사업 2-2 : 미혼모자가족 자립을 위한 통합지원

• 추진배경

○ 청소년 및 혼전임신으로 임신과 양육을 고민하는 지역사회의 미혼모에게 자립 및 양육할 수 있는 환경 제공이 필요

○ 현재 대전광역시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중 미혼모를 위한 시설 4개. 이 가운데 공동생활가정은 단 1곳뿐이어서 출산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취업 및 가사, 양육지원이 가능한 공동생활가정의 확대가 필요함

구분	시설명	소재지	이용대상
미혼모자 공동생활가정	대전클로버	중구	2세미만의 영유아를 양육하는 미혼모로서 일정기간 숙식보호와 자립지원을 필요로 하는자 보호기간 : 1년
미혼모자시설	아침뜰	중구	미혼의 임산부 및 출산 후(6개월 미만)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 보호를 필요로 하는 희망자 보호기간 : 1년
	대전 자모원	대덕구	
	햇살누리	서구	

• 사업내용(활동)

○ 건강가정지원센터와 함께 진행

○ 미혼모자가족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을 늘려 보호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 출산 후 독립 미혼모자가정을 원하는 경우 취업, 생계, 주거, 자녀양육, 정서, 가정경영 등에 대한 통합적인 지원을 통해 자립생활이 가능하도록 함

3) 세부사업 2-3 : 새터민가족 자조모임 형성

• 추진배경

○ 현재 대전광역시에서 북한이탈주민/새터민가족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다양하게 있음

- 정착 지원체계
- 직업훈련 무료지원
- 기타 지원정책

○ 새터민가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으나, 공동체의식과 지역 소속감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부족하여 지역사회 참여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구분	영·유아 보육료 지원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교육비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자금 대여	25세 미만 청소년 학부모대상 양육비 지급
지원대상	영·유아 가구소득 하위 70%이하 가정의 0세~만5세 미만 자녀	세대주인 모 또는 부와 그에 의하여 영육되는 만18세 미만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정 (소득인정액기준 최저생계비 130% 이하 가정)	저소득 한부모 가족으로서 근로능력 및 자립자활 의지가 뚜렷하고 현실성 있는 사업계획을 제시하는 자	25세 미만의 청소년 학부모 가구의 양육비 지급 (소득인정액 기준 최저생계비 150% 이하가구)
지원범위	보육료 전액 지급	(아동양육비) 12세 미만(월5만원) (고교생학비) 입학금 및 수업료	(대여기준) 1인당 2,000만원 이내, 연리3% 고정금리, 5년거치 5년상환	(아동양육비) 최대 5년간 월 15만원 지급 (고등학교 입학시) 입학금 및 수업료 (검정고시 학원 등록시) 연 154만원 이내 (기초수급권자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하나센터 사후지원 프로그램

건강관리 및 위기대응	취업지원	직업훈련지원	진학지원
건강검진 지원 및 긴급상황 시 유관기관 연계 지원	지역사회 내에서 북한이탈주민 관심 구인업체 발굴 및 사업장 동행면접 지원	지역에 맞는 직업훈련 정보제공 및 직업훈련 기관과 연계지원	- 정규학교 편입학 학령기 청소년/학습지도 프로그램 연계 - 중학교 미 졸업 학령기 초과 청소년/검정고시, 대안학교 등 연계 - 중학교 졸업 청소년/생애진로 설계의 관점에서 진학지도

• 사업내용(활동)

○ 새터민가족들 간의 자조모임 형성 사업을 통하여 기존의 새터민가족과 지역의 새로운 새터민가족이 서로 멘토멘티가 되어주며, 다양한 동호회 활동으로 새터민가족 커뮤니티를 구성하고 다양한 정보의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지원

4.2.3. 세부과제 3. 여성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도시 조성

1) 세부사업 3-1 : 사이렌구조 시스템 구축

- 추진배경
  - ○ 성·가족폭력의 신고가 익명성 보장에 대한 의심 및 불안감으로 활발하게 신고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응급상황을 은밀하게 중앙신고센터로 연결하도록 함으로 피해자 당사자 또는 목격자가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함.
  - ○ 신고 된 내용은 시스템을 통하여 성·가족폭력에 대한 폭력발생지역, 상황형태, 연령대 등의 데이터로 구축이 가능하며,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폭력예방체계 구축에 활용 가능함.
- 사업내용(활동)
  - ○ 시 차원에 중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피해자의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역연계망을 즉시 가동토록 함. 이후 성·가정폭력 사례에 대한 정보를 취합하여 지역사회 폭력 예방 체계 구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세부사업 3-2 : 여성 1인가구를 위한 쉐어하우스 운영

- 추진배경
  - ○ 이혼, 만혼, 저출산 등의 문제로 여성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여성 1인 가구의 주거지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2012년 대전여성가족통계에 따르면 이웃에 대한 신뢰감을 기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 여성의 62.1%로 매우 높게 나타남에 따라 안전함에 대한 여성의 체감도는 매우 낮았음.
  - ○ 독일 및 유럽에서는 여성전용 주거단지인 '코하우징(협동조합주택)'을 조성하여 다양한 1인 가구원끼리 서로 돌봄을 주고받는 형태의 상호 돌봄 공동체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사업내용(활동)
  - ○ 여성 쉐어하우스 건축 및 운영
  - ○ 여성 쉐어하우스 설립을 위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안 제시
  - ○ 여성 쉐어하우스를 유지관리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운영방안 도입
  - ○ 쉐어하우스 기반의 여성 자립지원
  - ○ 여성 1인 가구의 지역공동체 참여 프로그램 지원

3) 세부사업 3-3 : 커뮤니티 안전 연계망 구축

- 추진배경
  - ○ 서울시 미혼여성 1인 가구 550명 조사결과 혼자 생활하면서 어렵고 곤란한 점에 대해 성폭력 등 범죄에 대한 불안감 76.5%

○ 여성이 체감하는 불안요소는 거주지를 둘러싼 도시에서 오는 환경적인 요소(재건축, 주택 외 거주환경, 열악한 방범 및 조명 시스템), 공동주택건물(다세대 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이웃 주민에 대한 신뢰나 커뮤니티 부재로 인한 불안감,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경찰 행정력에 대한 불신 등

• 사업내용(활동)

○ 대전광역시 여성친화도시사업과 연계 추진

○ 안전한 지역 조성 : CCTV 설치 확대, 가로등 개선, 위급전화 설치, 주차장 및 골목 등의 사각지대에 방범, 순찰 등 치안인력 배치 및 활동 강화

○ 주거지역 인구대비 지구대 설치 확대

○ 안전지수 지표 개발

○ 여성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구성, 관련부서 협력 등 여성안전 분위기 확산

• 핵심과제5.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과 우호적 환경 구축 •

5.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가족의 소규모화, 맞벌이 가구의 증가, 결혼 기피 현상 등으로 자녀의 양육과 돌봄 기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는 추세임. 보육서비스의 확대 공급을 통해 보육정책의 획기적인 발전이 있지만,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면서 일과 가족생활을 양립해야 하는 취업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양육의 문제는 매우 심각한 문제임

○ 아동청소년정책은 아동청소년 개개인의 기본 역량을 강화하여 양질의 인적자원 형성과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갖추려는 것이며, 취약위기 아동청소년에게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적임.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아동정책 대부분은 요보호아동 중심의 선별적이고 사후대처적인 사업에 치중하고 있으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청소년의 수도 증가하고 있어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과 우호적 환경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임

○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수가 줄어들지만 보육의 문제와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점차 다양해지고 심각해짐에 따라 대전광역시의 민선 6기 공약 추진계획에도 보육의 공공성 강화, 공동육아 마더센터 설치,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지원 서비스 확대, 대전 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등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음

○ 다양한 특성과 문제를 지닌 영유아 · 아동 · 청소년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아동의 돌봄 체계 강화, 청소년의 역량 체계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2) 현황 및 대응 방안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대전광역시의 인구대비 어린이집수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전체 어린이집의 92.7%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으로 나타나,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와 질적 개선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국 · 공립 어린이집과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가 요구되고 있음

○ 아토피피부염은 영유아기와 소아기에 많이 발생하는 피부 질환으로 초등학교 입학 전 유병률이 더 높아 아토피 없는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수요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을 운영을 통해 바른 먹거리 및 아토피 교육, 급식 · 간식 개선 및 친환경 급식 지원, 보육교직원과 학부모 대상 아토피 교육 등을 실시하는 아토핀 전문 어린이집을 설치할 필요가 있음

○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와 함께 홀로 남은 아동 특히 빈곤 아동의 증가에 따라 지역아동센터와 방과후아카데미를 통해 방과 후 아동의 보호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력과 예산의 부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또한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의 해체 등과 같은 이유로 가족과 생활할 수 없

는 아동이 증가함에 따라 기존의 중대규모의 아동생활시설에 비해 일반가정에 가까운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공동생활시설(그룹홈)의 사회적 책임이 증가할 것이 예상됨으로 아동 공동생활시설의 단계적 확충이 필요함

○ 근거에 기반한 대전지역 아동청소년의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주기적으로 진행될 필요가 있음. 대전시민 욕구조사결과, 아동청소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진로와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상담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 진로를 위해서는 상담뿐만 아니라 다양한 진로체험이나 직업체험을 위해서는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같은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하며, 학교와 지역사회의 연계가 필요함.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전 청소년 위켄센터의 설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러한 수요-공급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아동의 돌봄 체계 강화, 청소년의 역량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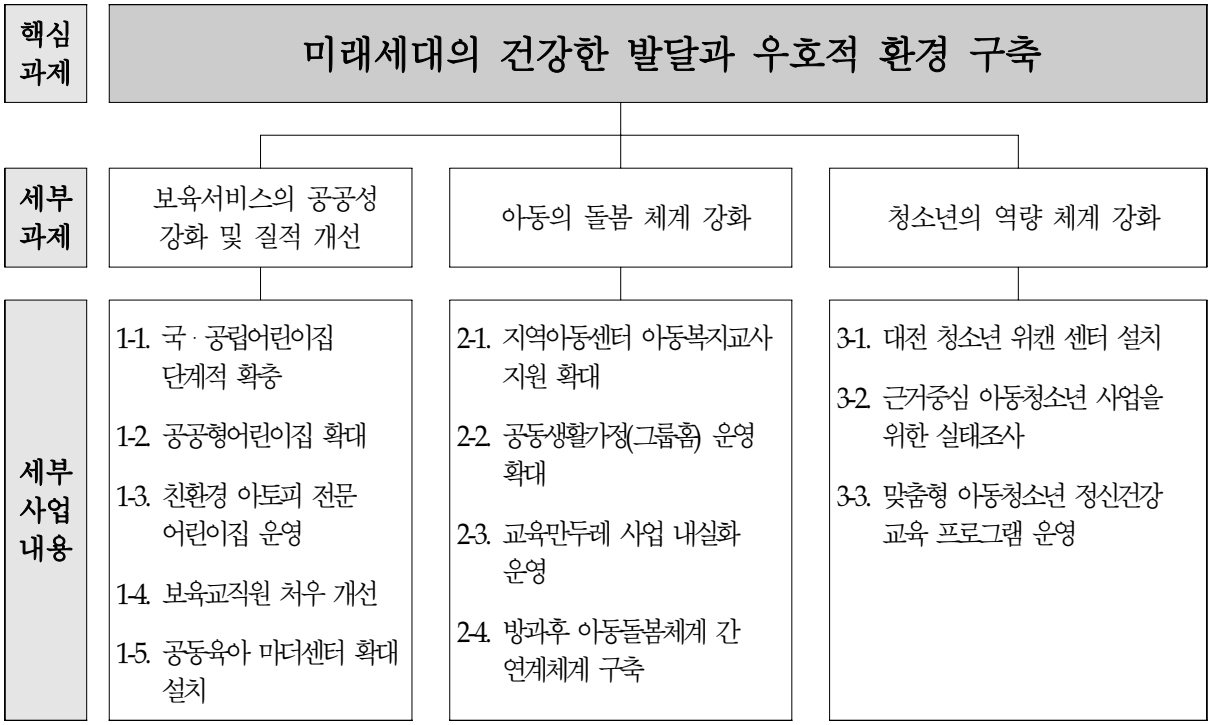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 미래세대의 건강한 발달과 우호적 환경 구축이라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으로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아동의 돌봄 체계 강화, 청소년의 역량 체계 강화라는 3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기존의 시행하던 사업의 확대와 아울러 신규사업을 편성함

○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을 위해서는 국 · 공립 어린이집 단계적 지속적 확충,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과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해 부모가 안심하고 유아를 맡길 수 있는 안전한 보육환경 구축을 위한 세부사업은 기존 사업을 확대, 강화하고자 함

○ 아동의 돌봄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확대, 공동생활가정 운영 확대, 교육만두레 사업 내실화 운영, 방과후 아동돌봄체계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세부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 중에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확대와 방과후 아동돌봄체계 간 연계체계 구축 등의 사업은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여 아동의 돌봄체계의 다양화와 지역사회 아동돌봄체계의 연계를 통해 사업의 연계와 프로그램을 상호 교환하고자 함

○ 청소년 역량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대전청소년 위캔센터 설치, 근거중심 아동청소년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맞춤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의 세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이러한 사업들은 기존의 사업을 보완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진로와 직업 탐색의 길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하며, 대전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4) 세부사업 개요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 확충	예산	502.9	502.9	502.9	502.9
	성과목표	1개소 증설	1개소 증설	1개소 증설	1개소 증설
공공형어린이집 확대	예산	373.8	373.8	373.8	373.8
	성과목표	7개소 증설	7개소 증설	7개소 증설	7개소 증설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	예산	210	210	420	210
	성과목표	1개소 증설	1개소 증설	2개소 증설	1개소 증설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예산	2,160	3,240	4,320	5,400
	성과목표	1인 월 20천원	1인 월 30천원	1인 월 40천원	1인 월 50천원
공동육아 마더센터 확대 설치	예산	150	230	270	270
	성과목표	1개소 증설	2개소 증설	1개소 증설	5개소 운영

(2) 아동의 돌봄 체계 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확대	예산	600	600	600	600
	성과목표	44명 추가178명 교사	178명	178명	178명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확대	예산	22	44	66	88
	성과목표	1개소 증설	1개소 증설	1개소 증설	1개소 증설
교육만두레 사업 내실화 운영	예산	1,115	1,115	1,115	1,115
	성과목표	대상기관 확대	대상기관 확대	대상기관 확대	대상기관 확대
방과후 아동돌봄체계 간 연계체계 구축	예산	3	3	3	3
	성과목표	협의회 4회 개최	협의회 4회 개최	협의회 4회 개최	협의회 4회 개최

(3) 청소년의 역량 체계 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대전 청소년 위캔 센터 설치	예산	1,500	500	500	500
	성과목표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근거중심 아동청소년 사업을 위한 실태조사	예산	44	-	-	-
	성과목표	1,400명 아동청소년조사	-	-	-
맞춤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예산	50	50	50	50
	성과목표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5.2 세부사업 계획

5.2.1. 세부 과제 1.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및 질적 개선

1) 세부사업 1-1 : 국·공립어린이집 단계적·지속적 확충

- 추진배경
  - ○ 보호정책의 전달체계인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이 공공의 성격을 갖출 수 있도록 체계 정비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보육시장의 신뢰를 얻고 양육환경을 개선하는 가장 빠른 길은 국·공립어린이집을 지속적으로 확충함으로써 사보육 중심에서 공보육 중심으로 전환하여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함
  - ○ 정부는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서 국공립보육시설을 이용아동 대비 30% 수준으로 확충하는 계획을 발표하였고, 실제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는 높지만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음
  - ○ 대전광역시는 지난 4년 동안 국·공립어린이집은 전혀 증설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대전에는 3개동에는 어린이집이 미설치된 지역으로 나타나 이들 지역을 포함하여 지역별 편차 완화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이 평균 이하인 지역을 중심으로 균형 배치하여 최소한의 공적 보육전달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 국·공립어린이집 개소를 위한 예산 확보
  - ○ 아동수, 접근성, 저소득층 비율 및 보육시설 공급 현황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분석을 토대로 우선 설치 필요지역 선정
  - ○ 신축장소는 신축 공공청사 주민복지시설, 국민임대주택 단지 내 혹은 공동주택 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보육시설을 공공 보육시설로 전환 추진, 혹은 민간 건축물을 매입하여 리모델링 추진할 수 있음

2) 세부사업 1-2 : 공공형 어린이집 확대

- 추진배경
  - ○ 제2차 저출산고령화기본계획에서는 제1차의 기본계획의 기본적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기존 저소득층 위주 지원에서 탈피하여 맞벌이 가구와 베이비붐 세대로 대상울 확대하면서 민간 육아시설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공공형 어린이집을 도입하기로 함
  - ○ 국 · 공립어린이집의 지속적 확충을 통한 보육의 공공성 강화와 함께 일정한 기준을 통해 선정된 민간 · 가정어린이집이 안정적인 운영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정부로부터 운영비를 지원받아 국 · 공립어린이집 수준의 보육기반으로 기능하도록 하여 전반적인 보육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
- 사업내용(활동)
  - ○ 보건복지부의 연차 사업계획을 참고하여 매년 7개소의 민간 · 가정어린이집을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되,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와 연계하여 평가
  - ○ 대표성 있는 선정위원회를 구성
  - ○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보육시설 평가인증 등급화 외에도 명확하고 투명한 선정기준의 제시하여 선정

3) 세부사업 1-3 : 친환경 아토피 전문 어린이집 운영

- 추진배경
  - ○ 아토피피부염은 영유아기에 많이 발생하는 피부질환으로 지속적인 가려움과 반복적인 발병으로 환자에게 육체적, 정신적 고통은 물론 가족 모두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만성질환임
  - ○ 아토피피부염은 대기 및 실내 공기 오염 증가, 생활환경 악화, 집먼지 진드기 노출, 모유 수유 감소, 인스턴트 식품 증가 등에 따라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 이처럼 아토피피부염은 초등학교 입학전 유병률이 더 높아 영유가 생활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건강과 생활환경 개선을 통합하여 아토피성 질환을 예방하는 것과 아토피 안심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의 관심과 요구가 높은 것에 부응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연계하여 어린이집 신축 시부터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도록 설계에 반영 요구
  - ○ 어린이집 기능보강 사업과 연계하여 각 구별로 증 · 개축이 필요한 국공립 및 사회복지법인 시설을 우선으로 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통해 아토피로 인한 영유아의 고통해소와 부모 부담 완화
  - ○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아토피 예방관리 교육과 실습을 통해 아토피 영유아에 대한 상시적인 관리체계 구축

4) 세부사업 1-4 :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 추진배경
  - ○ 보육서비스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과제로 보육환경 개선과 함께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문제는 계속 제기되어 왔음. 특히 우수한 보육교사의 확보 및 전반적인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도 보육

교직원의 처우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보육교직원의 처우를 단계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의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단계적으로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비 보조(월 50천 → 월 100천원)

5) 세부사업 1-5 : 공동육아 마더센터 확대 설치

• 추진배경

○ 공동육아는 기관 보육의 대안적 기능과 보완적 기능을 수행하므로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주목하여 육아지원을 다각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내 돌봄 역량을 강화하여 돌봄 공동체를 형성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함

○ 기관 보육 위주의 육아지원정책 하에서 지역 돌봄 공동체를 추구하고, 부모들의 다양한 보육 수요에 부합하기 위한 육아지원의 다각화와 개별가족 위주의 고립된 육아로 인한 양육부담 해소를 위한 최적의 방법으로 제기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전업주부들의 품앗이 육아에 대한 욕구의 충족을 위한 주민 자치 공동육아 공모 지원을 통해 공동육아 돌봄 문화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성이 있음

• 사업내용(활동)

○ 자녀들의 안전한 놀이 활동을 위한 공간 제공을 위해 지역의 유휴 공간(주민센터,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을 활용한 공동육아 마더센터 2017년까지 4개소 증설을 위한 장소 확보

○ 양육관련 정보 제공 및 육아상담, 부모교육, 가족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주민자치 공동육아 공모 10개소 지원

○ 도서, 장난감, 교구 등 양육관련 물품 비치 및 대여

○ 이용 부모 간, 이용부모와 지역주민 간의 품앗이 활동을 통해 자녀 돌봄의 공백 보완

○ 학습지도, 놀이, 체험활동, 등하교 안심동행 품앗이 등을 통해 자녀 양육 지원

5.2.2. 세부 과제 2. 아동의 돌봄 체계 강화

1) 세부사업 2-1 :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법 내 아동복지시설로서는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용시설로서 지역사회 보호와 가족지원이 가능한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시설로서 매우 큰 의미를 지니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운영 초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충분하지 않은 정부지원아래 개별 기관이 이를 보충하는 방식으로 재정이 충당되고 있는 현실은 인건비와 운영비의 부족, 서비스의 질 저하, 전문 인력의 이직이라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음

○ 이런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의 다양한 욕구 특히, 아동에게 국어, 영어, 수학뿐만 아니라 예체능 활동 프로그램을 통한 정서함양 및 건전한 성장발달 지원을 위해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기초생활수급자 · 저소득층 대상의 일자리 지원으로 아동복지교사를 선발하여 지역아동센터의 프로그램 진행을 지원하고 있음

○ 대전지역에서도 지역아동센터의 확대와 함께 변화되는 교과과정에 부합하기 위해 매년 7~8명의 아동복지교사를 확대 · 지원하여 200명 정도의 아동복지교사가 활동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아동센터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내용(활동)

○ 기존의 아동복지교사(134명) 외에 초록펜 학습교사 44명을 추가로 선발하여 배치

○ 초록펜 학습교사는 기존의 학습지원 1센터 1교사 배치 외에 5센터 1교사를 예체능 중심으로 배치하여 주 1회 저소득층 아동의 학습과 예체능을 지원

○ 중 · 고 · 대학생 초록펜 동아리 조직 및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와 매칭

○ 대전지역아동센터지원단은 초록펜 학습교사와 동아리활동 지원, 학습교사 및 자원봉사자 배치와 교육, 모니터링 및 간담회 실시

2) 세부사업 2-2 :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운영 확대

• 추진배경

○ 2008년 이후 세계적으로 경기침체가 지속되어 많은 가족이 해체와 같은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는 많은 아동청소년이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이는 것을 의미함.

○ 대규모 집단시설 위주의 보호에서 소규모 가정형태 보호로의 전환 강조 및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보호를 위한 새로운 보호형태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의 수가 늘어나고 정부의 지원이 확대되는 것은 탈시설화 및 정상화와 지역사회보호를 실천한다는 배경 때문임

○ 그룹홈은 친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아동청소년을 일반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보호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기 때문에 향후 그룹홈의 사회적 책임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 사업내용(활동)

○ 기존의 14개 그룹홈에서 아동복지법 제50조 규정에 의해 신고한 공동생활가정(그룹홈)을 매년 1개소씩 추가로 설치 지원하되, 남녀분리형과 남녀혼합형을 고려하여 설치

○ 추가로 설치되는 그룹홈 중에서 1개소는 대전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학대피해아동의 일시보호와 치료를 돕는 학대피해아동 그룹홈으로 설치하여 운영

○ 교육만두레사업과 연계하여 학습지원 교사가 주 1~2회 그룹홈 방문, 초 · 중학생에게 국어, 영어, 수학 등을 교육함

3) 세부사업 2-3 : 교육만두레 사업 내실화 운영

- 추진배경
  - ○ 신사회적 위험의 대두와 함께 사회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 자녀는 전통적인 사회적 위험 문제 뿐 아니라 신사회적 위험 문제로 접근해야 실효성이 있음. 특히, 아동은 미래의 시민노동자이므로 사회의 미래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교육 기회의 감소는 성인이 된 후 생산성을 저하시키고 실업에 처할 위험을 높이기 때문에 빈곤의 악순환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음
  - ○ 이처럼 저소득층 자녀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 대학졸업자 및 대학원생에게 취업 전 일자리 알선 및 사회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만두레 사업이 필요함
  - ○ 현재 교육만두레 사업은 22개 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진행되지만, 각 복지관의 상황에 따라 대상학생의 수나 학년에서 편차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교과목의 제한으로 일자리 창출이라는 목적과 거리가 있는 경우도 발생함
  - ○ 이에 따라 교육만두레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사업의 효율성을 위해 대상기관의 확대와 교과목의 확대를 통해 대학졸업자와 대학원생의 일자리 창출과 대상학생의 수를 확대함으로써 사업의 효율성과 내실화를 도모하고자 함
- 사업내용(활동)
  - ○ 기존의 학습지원 교사 100명은 22개 사회복지관에 배치되어 저소득층 아동에게 월 40시간 국어, 영어, 수학을 교육
  - ○ 기존의 학습지원 교사의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22개 사회복지관 외에도 14개의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도 주 1~2회 월 8시간 정도 활동하도록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
  - ○ 학습지원교사는 기존의 사회복지관과 가장 인접한 아동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 배치하여 학습을 지원하며, 상대적으로 자원이 부족한 그룹홈과 사회복지관 간의 연계 역할 수행
  - ○ 분기 혹은 반기별로 학습지원교사의 간담회 및 워크샵을 통해 애로사항 파악

4) 세부사업 2-4 : 아동돌봄체계(지역아동센터, 방과후아카데미, 온종일돌봄학교 등) 간 연계체계 구축 및 활성화

- 추진배경
  - ○ 부모의 맞벌이나 가족해체 증가 등 가족형태의 다양화로 인해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아동이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부처별로 지역아동센터(보건복지부), 방과후 아카데미(여성가족부), 초등돌봄교실(교육부) 등을 운영하고 있음
  - ○ 하지만 기관 간의 칸막이로 인해 지역별 · 사업별 수급 불균형, 이용자 중복 및 사각지대 발생, 서비스 간의 질적 차이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체감도 제고에 한계가 있음
  - ○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대전지역 아동돌봄협의회의 구성 · 운영이 필요함. 이 협의회를 통해 부처별 아동돌봄체계를 연계함으로써 중복 서비스 조정, 사각지대 해소 및 수요자 중심의 돌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사업내용(활동)

○ 보건복지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의 방과후 아카데미, 교육부의 온종일돌봄교실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대전지역 아동돌봄협의회를 구성

○ 분기별 1회 이상 협의회를 개최하여 각 부처의 사업대상 및 내용 조정을 통해 현재 배정된 예산과 인력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하는 동시에 중기적으로 예산 절감과 사각지대의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

○ 각 사업별 이용자 현황과 프로그램 공유를 통해 지역별로 방과후 아동돌봄체계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5.2.3. 세부 과제 3. 청소년의 역량 체계 강화

1) 세부사업 3-1 : 대전 청소년 위캔(We can) 센터 설치

• 추진배경

○ 다른 시기와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진로 및 직업체험의 기회는 미래의 직업선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하고 창의적인 청소년 직업체험 공간 및 프로그램의 제공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와 함께 학교밖 청소년의 급속한 증가와 시설퇴소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 하지만 학교에서 진로체험 및 진로교육 운영이 매우 미흡할 뿐만 아니라 단순 활동 · 일회성 행사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어 직업세계의 역동성이나 다양성을 체험할 기회가 부족하기 때문에 청소년의 진로 및 취업을 지원할 센터의 필요성이 증가함

• 사업내용(활동)

○ 대전청소년위캔센터의 설치 장소 및 규모, 운영방법, 소요예산 검토 및 위탁운영자 모집 및 선정

○ 부서별 담당자를 청소년 직업체험교육, 창의적 진로지도, 취업 및 창업지원 등으로 배치

○ 사회취약계층의 학업중단청소년과 시설퇴소청소년을 위한 진로, 자립, 취업 연계를 위한 부서와 담당자를 확보하여 청소년 진로 및 취업과 관련된 기관(가정위탁지원센터, 인애자립생활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수련시설,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등)과의 유기적 협력체계 구축

○ 청소년 직업체험 확대를 위한 민간 기관과의 MOU 체결

○ 청소년 우호기업 위촉을 통한 양질의 직업체험 기회 및 일자리 제공

2) 세부사업 3-2 : 근거중심 아동 · 청소년 사업을 위한 아동 · 청소년 실태조사

• 추진배경

○ 아동 · 청소년기는 인간의 생애단계에서 가장 많은 신체적 · 정신적 변화를 경험하는 시기로서 정체성의 혼란과 정서적 불안 등 많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 이러한 발달상의 문제에 직면하여 아동 · 청소년들이 발달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사회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건강한 자아상을 확립하도록 돕는 일은 중요한 과제임

○ 이에 대전지역 아동 · 청소년에 대한 종단적인 패널조사를 실시하여 그들이 시간의 연속선상에서 어떤 성장과 발달 과정을 거치게 되는지, 또한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문제들과 그 주된 요인은 무엇인지에 대한 연구를 통해 맞춤형 아동 · 청소년복지정책의 방향성 제시를 위한 기조자료와 지표를 생산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대전지역 아동 · 청소년 중 확률표집을 통해 선정된 1,400여명을 대상으로 일반특성, 가족 및 친구관계, 학교생활, 정신건강, 인권의식을 비롯한 실태 및 욕구조사를 실시함

○ 향후 연속적 · 체계적인 연구를 위해 패널 데이터를 토대로 한 종단적 연구를 4년 주기로 실시하여 아동 · 청소년 욕구 및 정책 개발에 기여함

3) 세부사업 3-3 : 맞춤형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인간발달 단계에서 전환기인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정신건강 문제의 양상은 다양하며 일상생활에서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심리적 장애의 형태로 나타남. 특히 우울, 불안, 자살 충동 등과 같은 정서장애는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 만성화되어 장기적으로 심각한 적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 실제로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관련하여 정신건강 등의 정서 발달은 신체 건강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관심의 대상이었음.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정신장애 및 문제행동은 매우 흔할 뿐만 아니라 일생에 걸쳐 영향을 주며, 급격한 생활환경의 변화로 정신건강상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아동청소년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대전광역시 교사의 학생에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도 결과에 따르면, 정서행동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접하면서 가장 힘든 점은 부모의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부족이 가족 높고, 전문기관의 의뢰 시 어려움 점도 부모의 비협조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학교에 배정된 보건교육 시간을 활용하거나,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아카데미, 청소년시설, 사회복지관, 건강가정지원센터 등으로 찾아가는 맞춤식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과 부모들에게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는 정신건강,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신건강 서비스 관련기관이 어디에 있는지, 어떻게 이용하는지, 정신건강 관련 전화에 대한 안내, 정신질환에 대한 낙인효과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 사업내용(활동)

○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맞춤형 찾아가는 정신건강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88-9191, 1577-0199, 129 등) 등의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 조기 발견 및 개입 프로그램을 알림

○ 맞춤형 찾아가는 정신건강 교육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그 효과성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함

• 핵심과제6. 건강불평등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의료안전망 구축 •

6.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으로 향후 보건의료수요에 대한 급격한 양적 · 질적 변화의 요구가 있는 반면,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한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한 견고한 의료적 사회안전망 구축도 필요함

○ 건강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열악한 주거환경 및 노동환경, 영양부족, 불건전한 건강형태, 경제적 지위, 개인의 특성 등의 이유로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은 필요한 건강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과 동일하기 때문에 취약계층 중 일부는 의료적 욕구가 높지만, 수급자가 되지 못해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제약을 받는 것처럼 취약계층에 대한 기본 의료의 충족을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과 안전망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어 중앙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의료 안전망에 대한 강화의 필요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공의료기관의 확충이 필요함

○ 일반적으로 정신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정신질환 치료에 대해 접근성을 낮추며, 정신과적 증상 발생 후 치료 시작까지의 기간이 길어질 경우에는 조기 치료시점이 늦어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의 만성화가 초래됨. 또한 우리 사회는 정신질환이나 그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에 대한 편견이 상당히 큰 편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및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 개선과 지역사회 중심의 생활을 위한 정신보건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대전광역시의 민선 6기 공약 추진계획과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에도 공공의료기반 구축을 위한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치매예방사업, 지역사회중심 정신보건 협력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정책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대전시민의 건강불평등 해소와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체계 구축, 정신건강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

2) 현황 및 대응 방안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 대전광역시의 인구대비 의료기관수, 병상수는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동구는 병원급 이상의 공공의료기관이 없는 의료취약지역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으로 대전시립의료원의 설립이 요구되고 있음

○ 대전시의 취약계층은 전국과 유사하거나 적게 분포하지만, 동구는 취약계층이 상대적으로 많고 수요와 공급 전반적으로 건강관련 지표에서 열악한 상태를 보이고 있어 동구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 대책이 필요함. 이와 함께 기존에 취약계층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건강관리 체계를 확대함으로써 취약계층의 의료 안전망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음

○ 대전시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아동청소년, 노인과 같은 특정 연령대의 높은 자살율, 높은 스트레스 인지율 등 필요도에 비해 낮은 정신건강 상담률 등으로 볼 때, 정신건강에 대한 관리가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므로 정신건강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관리가 요구됨. 특히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 해소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활동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확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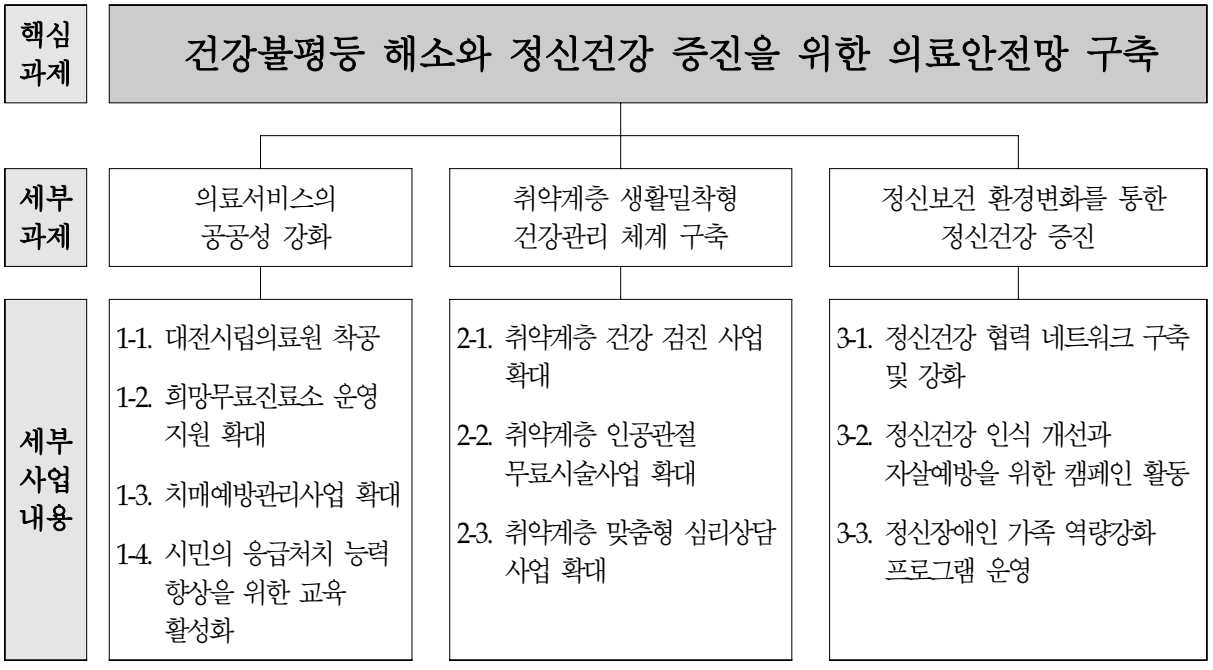
○ 이러한 수요-공급 격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취약계층의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정신보건 환경변화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등을 추진하고자 함

3) 핵심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라는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세부사업으로 대전시립의료원 착공, 희망무료진료소 운영 지원 확대, 치매 발견 및 예방관리사업 확대,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라는 4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기존에 제공되던 의료서비스의 확대와 아울러 신규사업을 편성함

○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건강검진 사업 확대, 취약계층 인공관절 무료시술사업 확대, 취약계층 맞춤형 심리상담 사업 확대라는 3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기존 사업의 내실화와 안정화를 도모하여 취약계층에 실질적인 의료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함

○ 정신보건 환경변화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서는 정신건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 정신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3개 세부과제를 선정하여 기존의 미흡한 정신건강 관리 분야의 체계 구축과 구체적인 사업을 전개하고자 함



4) 세부사업 개요

(1)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대전시립의료원 착공	예산	-	100	5,600	30,700
	성과목표	승인 및 재정확보율	제도 기반마련	사전절차 이행	착공
희망무료진료소 운영 지원 확대	예산	80	88	96	105
	성과목표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치매 발견 및 예방관리사업 확대	예산	837	916	1,003	1,099
	성과목표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이용자 수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예산	11	41	41	41
	성과목표	교육기관 50개소	교육기관 50개소 자동제세동기 50대	교육기관 50개소 자동제세동기 50대	교육기관 50개소 자동제세동기 50대

(2)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취약계층 건강검진사업 효율성 제고	예산	100	100	110	110
	성과목표	9,200명	9,200명	9,500명	9,500명
취약계층 인공관절 무료시설사업 운영	예산	50	50	50	50
	성과목표	100명	100명	100명	100명
취약계층 맞춤형 심리상담 사업 단계적 확대	예산	71	74	77	77
	성과목표	74명	76명	78명	80명

(3) 정신보건 환경변화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정신건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예산	3	3	3	3
	성과목표	참여기관 수 회의개최 수	참여기관 수 회의개최 수	참여기관 수 회의개최 수	참여기관 수 회의개최 수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예산	30	30	30	30
	성과목표	참여인원 수	참여인원 수	참여인원 수	참여인원 수
정신장애인 가족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예산	20	20	30	30
	성과목표	참여인원수 만족도	참여인원 수 만족도	참여인원 수 만족도	참여인원 수 만족도

6.2 세부사업 계획

6.2.1. 세부 과제 1. 의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1) 세부사업 1-1 : 대전시립의료원 착공

- 추진배경
  - ○ 대전광역시의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 명당 의원급 이상 의료기관수는 140개소, 병상 수는 1,425병상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높은 수준이지만,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수는 3개소, 병상 수는 640병상으로 다른 광역시에 비해 낮은 것으로 조사됨
  - ○ '14년 현재 전국 13개 시도에 33개 지방의료원이 지자체 조례로 설립되어 운영 중이지만, 대전광역시에는 지방의료원이 없는 실정임
  - ○ 제3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Health Plan 2020) 목표인 건강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대전광역시 자치구 중에서 취약계층이 가장 많이 거주하며, 보건의료취약성 점수가 가장 높은 동구의 취약성 완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 ○ 민선 6기에는 치료보다 예방관리를 통해 시민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시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의료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임기 내 대전시립의료원 착공을 공약한 바 있음
- 사업내용(활동)
  - ○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기본계획수립, 의료원 설립 T/F팀 구성, 실무협의회 구성,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국비확보 추진 등)
  - ○ 대전시립의료원 설립을 위한 건립 기반 마련(전담부서 신설, 설립추진위원회 구성, 건립재원 결정, 지방재정 투융자 협의 및 심사, 각종 용역계획 수립, 부지계획 수립, 조례제정 및 공포 등)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 ○ 대전시립의료원 건립 준비 및 착공(시립의료원 건립 부지 결정,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및 의결, 시립의료원 건립 세부 계획 수립,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기술심사위원회 심의, 의료원 경립공사 발주 및 입찰공공, 의료장비 도입 및 운영계획 수립 연구용역, 교통영향평가 심의, 건축허가, 착공 등)

2) 세부사업 1-2 : 희망무료진료소 운영지원 확대

- 추진배경
  - ○ IMF 경제위기 이후 노숙인의 주목과 함께 우리나라 주거취약계층의 독특한 주거 향식 중 하나인 쪽방에 대한 관심도 사회적으로 부각되고 있음. 쪽방 주민 중에는 공공부조 수급자도 많지만 주민등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도 다수 확인되기 때문에 기존의 공공복지 체계의 사각지대에 처한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있음
  - ○ 대전광역시에 많은 의료서비스 취약계층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취약계층은 대전역 근교의 쪽방생활자 및 거리노숙인 등은 열악한 생활환경과 오랜 노숙으로 인한 만성질환, 정신질환, 결핵 등 다양한 질병과 의료적 문제를 가지고 있음
  - ○ 이러한 쪽방생활자 및 거리노숙인과 같은 소외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활동 및 의료적 진료, 긴

급환자 수송 등과 같은 의료적 지원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므로 기존의 희망무료진료소 운영을 확대하여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희망무료진료소에서의 일반진료, 치과진료, 한방진료, 물리치료, 외래진료, 입원진료 등의 의료적 서비스 제공과 함께 사회복지사와의 상담을 통해 쪽방생활자 및 거리노숙인의 건강과 정서적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실시함

3) 세부사업 1-3 : 치매 발견 및 예방관리 사업 확대

• 추진배경

○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로 '13년 57.6만 명의 치매노인이 '24년에는 100만명을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며, 치매로 인한 가정 부양능력의 약화, 의료비의 급증에 따른 개인과 사회적 부담도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현행 치매 관련 노인복지정책은 치매 선별검사와 진단검사,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치매치료비 지원, 치매상담센터 운영 등이 있지만, 이들 급여나 서비스 이용은 경도인지장애 발생 시점부터가 아니라 치매증상이 겉으로 드러난 이후에 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특히 대전시는 지난 4년간('10~'13) 노인인구가 16%(130천명→151천명) 증가하는 동안 치매노인은 23%(13천명→16천명) 증가하였음. 또한 대전시의 치매 유병률(2013년 추정치)은 9.25%로 전국 7대 도시 중 2위에 해당하며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 유병률도 지속적으로 증가, 2050년에는 13.17%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어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사업내용(활동)

○ 대전광역시치매센터운영과 5개구의 치매상담센터를 통해 치매 관련 상담, 치매등록, 조기검진, 치매치료 관리비를 지원

○ 대전 시민에게 치매예방 교육 상담 및 홍보 강화

○ 치매 조기검진 사업의 대상은 대전 중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되 저소득층에 우선권을 부여하며, 보건소에서 거점병원을 지정·연계하여 치매선별검사, 진단검사, 감별검사 실시

○ 치매 치료 관리비 지원은 대전 시민 중 만 60세 이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50% 이하)에게 처방받은 약제에 대한 보험급여 분의 본인부담 비용 지원(연간 36만원 상한 범위 내)

4) 세부사업 1-4 : 시민의 응급처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활성화

• 추진배경

○ 보건복지부(2008) 조사결과 국내 심정지 환자는 인구 10만 명당 40~42명이 발생하며, 2010년 기준으로 전국에서 23,000명의 심정지 환자가 발생하여 이중 95%가 사망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심정지 발생 시 목격자에 의한 심폐소생술 실시비율이 낮아 외국에 비해 생존율이 떨어짐

○ 심폐소생술 인지율은 95.2%로 높지만, 실제 시행가능비율은 18.4%로 낮음(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조사, 폴리시앤리서치, 2011). 또한 심정지 환자를 돕기 위해 자동제세동기(AED)가 전국에 6,500여대가 설치되었고 대전에도 100여대 정도가 설치되어 있지만 자동제세동기를 사용한 실적은 거의 없는 실정임

○ 따라서 영유아 자녀를 가진 부모, 노인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 내 응급처치 이론, 실습교육 등을 제공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응급처치 능력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특히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도 거의 실시되지 않거나 일회성 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그 실효성을 거두기가 어려움.

○ 이러한 자동제세동기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생명을 살리는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 일반시민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법에 대한 맞춤형 교육을 소방서와 대한심폐소생협회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제6기 대전광역시 지역보건의료계획과 연계하여 기존의 법정교육대상자(구급자 등의 운전자, 산업안전관리책임자, 보건교사, 기타 응급 처치교육이 필요한 자 등) 외에도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이용자인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실시

○ 심폐소생술 및 자동제세동기 종류별(고정형, 이동형 등) 사용방법을 우선적으로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와 복지기관 이용 주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교육을 주기적·반복적으로 실시

○ 대전응급의료정보센터와 공동으로 관내 자동제세동기의 운영과 실태 현황을 파악하고, 응급장비 구비 의무시설에 대한 구비를 독려함. 또한 사회복지기관이나 구비를 원하는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자동제세동기를 지속적으로 보급하는 동시에 관리책임자 지정 및 교육 실시

6.2.2. 세부 과제 2. 취약계층 생활밀착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

1) 세부사업 2-1 :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검진 사업 효율성 제고

• 추진배경

○ 최근 저출산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이 증가하면서 위험요인의 조기발견 및 치료가 가능한 건강검진에 대한 요구가 증가와 함께 건강검진을 통해서 의료비 절감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됨

○ 2007년 도입된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사업은 생애전환기 연령에 해당되는 만 40세와 66세 연령에 해당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한 포괄적인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생애주기에 적절한 맞춤형 건강진단으로 개편, 사후관리를 강화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 하지만 저소득층과 같은 취약계층은 빈곤으로 인해 생애전환기 이전에 맞춤형 건강검진으로 건강보호 및 질환의 조기 발견 및 치료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저소득층 중에서 50세 이상의 중장년기의 남성과 30세 이상의 저소득층 여성에 대해 맞춤형 조기건강검진을 통해 건강격차

해소의 필요성이 요구됨

• 사업내용(활동)

○ 검진대상

- 30세 이상 저소득층 여성(골다공증검진, 갑상선기능검사)
- 50세 이상 저소득층 남성(전립선암검사)

○ 검진내용

- 골다공증검사(골밀도 측정, 혈액검사), 갑상선기능검사
- 전립선암검사(혈액검사)

○ 검진사후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보건소 등의 만성질환 관리체계와의 연계를 통한 건강행태 개선 강화

2) 세부사업 2-2 : 취약계층 인공관절 무료 시술 사업 운영

• 추진배경

○ 퇴행성관절염은 노화와 관련하여 나타나는 만성질환으로 관절의 통증, 강직, 부종 및 일상생활의 움직임에 제한이 있으며, 특히 체중부하가 된 관절에 더 크게 영향을 주게 되면서 노인의 삶의 질을 저하시키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함

○ 우리나라의 퇴행성관절염의 유병률은 여자가 남자보다 4배 정도 더 높고, 60세 이상 노인에서는 25.3%, 70대는 41.5%로 나타나며, 점진적으로 관절 연골이 퇴화되면서 다른 조직에도 염증의 발생을 일으켜 신체적 기능 제한을 동반함

○ 특히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 받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은 인공관절에 시술을 간절히 원하지만, 치료비의 문제 때문에 인공관절 시술을 받지 못하는 상황임

○ 이에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퇴행성관절염으로 고통 받는 저소득층 노인들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이들에게 무료로 인공관절 시술을 함으로써 의료적 불평등 완화를 통한 통증 없는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사업대상 : 대전 거주 60세 이상 의료급여 1종, 2종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 지원방법 : 보건소 신청(대상자)→병원의뢰(보건소)→시술 및 시술비 신청(병원)→시술비 지급(보건소)

○ 지원기준 : 시술비 및 간병비 지원

○ 지원내용 : 시술비 본인부담금 급여부분(전액), 비급여부분(30%) 지원
간병비 독거(40만원 한도), 비독거(20만원 한도)

3) 세부사업 2-3 : 취약계층 맞춤형 심리상담 사업 단계적 확대

• 추진배경

○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5가지 장애유형 중 지적장애와 자폐성장애인을 말하는 발달장애인은 인지력 부족으로 자립이 어렵고, 스스로 권리보호가 곤란하여 국가·사회적으로 특별한 배려가 필요함. 전국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지적장애의 83.5%와 자폐성장애의 93.6%는 일부 또는 거의 모든 일상생활 영역에서 부모나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일반적으로 발달장애는 대부분 아동기에 발현된 장애가 성인기에도 완화되지 않고 일생동안 지속되어 부모 및 가족의 부담이 무거운 장애유형임. 이처럼 발달장애인가족은 장애자녀의 치료 및 교육 관련 비용 지출 등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지니고 있으며, 여가시간의 부족 및 대인관계의 교류 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경향과 함께 주돌봄자의 사후를 대비한 발달장애인 자녀에 대한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 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심한 우울 증상(51.9%)을 보이거나 삶의 만족도 낮아(1.6%) 발달장애인 가족의 정서적 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전국 발달장애인실태조사, 2011)

○ 이러한 발달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라는 맥락을 담은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 발달장애인 부모에게 전문 심리상담과 자조모임을 형성하도록 도움으로써 발달장애인의 양육과 부양에 따른 심리적 부담 완화 및 지지체계 형성, 발달장애인 가족의 기능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

• 사업내용(활동)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부모나 가족 중 우울증이 의심되는 대상자

○ 지원기준 : 소득기준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 지원내용 : 개별 심리상담 지원(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 등)

6.2.3. 세부 과제 3. 정신보건 환경변화를 통한 정신건강 증진

1) 세부사업 3-1 : 대전시민 정신건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강화

• 추진배경

○ 최근의 사회변화는 정신건강 문제의 크기와 심각성을 더욱 증가시키고 있는데, 과거 정신건강의 문제는 만성중증정신질환자 영역에 한정되었으나, 최근에는 과도한 스트레스, 4대 중독(알코올중독, 도박중독, 인터넷중독, 마약중독)의 문제, 자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노인정신건강 등 다양한 정신건강영역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지만, 그 심각성에 비하여 충분한 개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관내 정신의료기관, 대전광역시정신건강증진센터, 자치구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자살위기 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전화 등이 있지만, 이런 정신건강 관련 체계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지 못한 실정임

○ 정신보건영역에서도 시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해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이로써 지역사회 내에 퍼져 있는 독립된 서비스 조직들 간의 지원관계를 구축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결·통합함으로써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 이에 기존에 구축된 자살예방협의체를 포함하여 대전시, 관내 병원, 관할 소방서·경찰서, 정신건강증진

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학교보건실, 보건소, 관련 NGO 등이 대전시민 정신건강 증진이란 공유된 목표를 가지고 대전시민 정신건강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임

- 사업내용(활동)
  - ○ 정신건강 관련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및 체결기관 간담회 및 정기적 모임
  - ○ 중독관련 협력체계 구축, MOU 체결 및 체결기관 간담회 및 정기적 모임
  - ○ 자살예방협의체 운영 및 회의
  - ○ 정신건강, 중독, 자살 등과 관련된 포럼 개최

2) 세부사업 3-2 : 정신건강 인식 개선과 자살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성화

- 추진배경
  - ○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우울증이 증가하는 등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수준이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으며, 초발 정신질환에 대한 조기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학습장애, 성인기 만성정신질환으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음.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를 보면, 현재는 일부 적극적인 부모의 자녀만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며, 적절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이처럼 정신건강 문제는 조기에 발견하여 개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부모, 학교, 지역사회의 관련 기관이 이러한 문제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함.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의 경우를 보면, 현재는 일부 적극적인 부모의 자녀만 도움을 받게 되는 상황이며, 적절한 서비스를 찾기 위해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되는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 이를 위해서는 적절한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홍보가 강화되는 동시에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홍보와 교육이 필요함. 즉 실천적인 정신건강 홍보사업을 강화하여 정신건강에 대한 이해 및 검진에 대한 시민들의 정확한 인식 제고를 도모하는 캠페인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 문화공연, 인권존중 캠페인 및 정신건강 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정신건강의 날 행사 개최
  - ○ 공공시설 화장실에 정신건강 캠페인 사업
  - ○ 학생과 학부모, 시민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정신건강 교육과 연계하여 정신건강,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캠페인,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88-9191, 1577-0199, 129 등) 접근성 강화를 위한 맞춤식 홍보를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전개

3) 세부사업 3-3 : 정신장애인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 추진배경
  - ○ 보건복지부의 조사 결과 2011년 기준 대전광역시민의 정신질환 평생유병률은 27.6%이며, 특히 성

인 여성 10명 중 1명은 평생 한 번 이상 우울증 등을 포함한 기분장애를 경험하는 것으로 예측됨. 그러나 이들 중 15.3%만이 정신과의사, 비정신과의사, 기타 정신전문가에게 정신건강 문제를 의논하거나 치료받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각 정신질환에 따라 특성이나 유병률 등에 차이가 있지만, 한 가정에서 정신장애를 가진 가족구성원의 존재 자체는 큰 충격과 혼란을 야기하며, 정신질환 발병에 따른 외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과정에서 심리 정서적 소진, 경제적 · 정서적 · 신체적 어려움 등을 경험하고 있음

○ 실제로 2011년 대전광역시 지역정신건강조사에 따르면 정신장애인 가족의 정신건강 상태는 10개 항목 모두에서 평균점수(2.5점)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나 정신장애인 가족의 정신건강은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나 이들 가족의 정신건강 및 부담 감소를 위한 서비스가 필요함

○ 이처럼 가족들이 가족원의 정신장애에 따른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장기간 경험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정신장애인에게 그대로 전달되어 병에 대한 절망적인인식을 갖게 만들고 재발이나 재입원에도 부정적인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신장애인 가족을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사업내용(활동)

○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 자조모임, 휴식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여 정신장애인 가족의 부양역량을 강화함

○ 정신장애인 가족이나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가족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정신건강증진센터 등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모사업을 거쳐 시범사업을 실시 후, 그 효과성을 기반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함

• 핵심과제7. 사회적 연대 기반 구축 •

7.1. 개요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의 사회복지지출과 비교할 때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지출이 획기적으로 증가하지 않는 한 사회복지 수준의 향상은 기대만큼 달성하기가 쉽지 않음. 현 재정 내에서 중앙 정부의 사회복지지출 비중 증대가 쉽지 않고, 대전의 경우도 사회복지에 대한 재정의 압박이 있음. 현금이나 현물을 중심으로 저소득층을 주 대상으로 했던 사회복지패러다임이 가족 구조의 해체나 기능 약화, 저출산, 고령화 등의 사회 변화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복지 공급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면, 지역을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가 자체적으로 공동체성을 회복하여 재정의 부족함을 채워 나가고, 사회복지 발전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사회적 연대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우선, 대전 지역에서 어느 정도의 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인 대전시민복지기본선이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한 대전시만의 연차적 목표 설정 및 성과 평가가 수반되어야 함.

○ 최근 주목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에 대한 관심도 높여야 함. 사회적 자본은 공공성, 호혜성, 신뢰, 네트워크 등의 개념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회복지 발전의 중요한 디딤돌이 됨. 또한, 대전은 이미 복지만두레라는 고유의 복지 브랜드를 시도하였고, 민선 5기 말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을 선도적으로 시행한 바가 있음.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민선 6기에서는 나눔과 도움을 함께 하는 사회적 연대를 확산시킬 필요가 있음.

○ 한편, 사회적 연대의 기반에는 지역에서 주위의 도움이 좀더 절실한 취약 1인 및 2인 가구에 대한 상시 돌봄 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2) 현황 및 대응 방안 – 수요-공급 격차 분석 및 대응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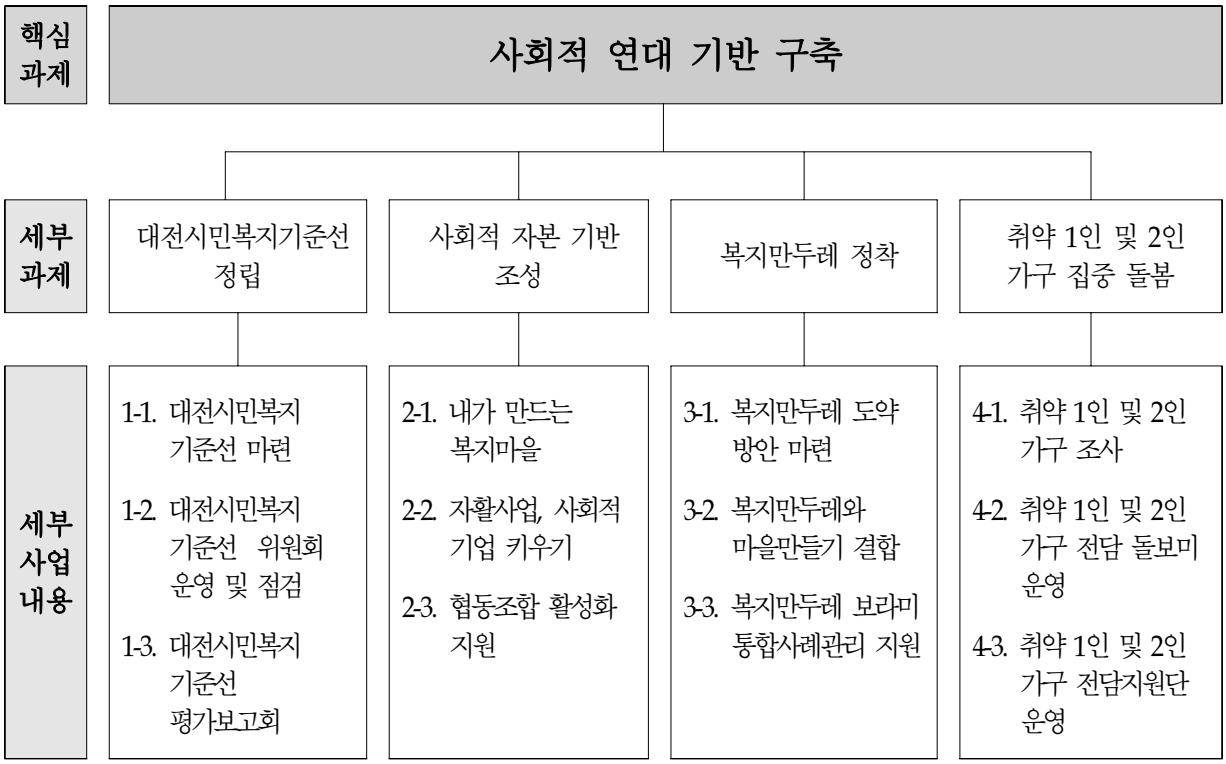
○ 대전시민복지기본선 마련, 취약 1인 및 2인 가구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여 기본틀을 구성한 후 사업의 정착, 확대를 꾀해야 함.

○ 사회적 자본 키우기를 위한 시책은 시행된 지 1년여밖에 되지 않아 점검 및 확산이 필요. 사회적 자본과 연관된 마을만들기,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그리고 복지만두레는 모두 시민이 수행 주체가 되어야 하고, 시나 구는 지원 주체로 기능하면서 각 활동들이 공동체성을 확장하면서 자발적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함. 또한 행사성, 단발성 사업을 재검토하여 지속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아울러 사회적 자본이 취약 계층을 포함한 사회적 연대 의식으로 확장되어야 함.

○ 도움이 필요한 주민에 대해 개인이 돕는 것에서 나아가 마을이 돕거나, 함께 돕는 문화를 정착시켜 궁극적으로 도움을 받은 주민이 지역 속에서 어우러져 생활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어야 함.

○ 복지만두레는 태동기와 확장기를 거쳐 정립 및 도약기를 준비해야 함.

3) 세부과제의 내용과 추진 방향



4) 세부사업 개요

(1)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정립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대전시민복지기준선 마련	예산	100			
	성과목표	대전시민복지기준선 확정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운영위원회 운영	예산		100	100	100
	성과목표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정착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정착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정착
대전시민복지기준선 평가보고회	예산		100	100	100
	성과목표		보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보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보고회 개최 및 의견 수렴

⑵ 사회적 자본 기반 조성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내가 만드는 복지마을	예산				
	성과목표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키우기	예산				
	성과목표				
협동조합 활성화	예산				
	성과목표				
그루터기 운동	예산				
	성과목표				

⑶ 복지만두레 정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복지만두레 도약 방안 마련	예산				
	성과목표				
복지만두레와 마을만들기 결합	예산				
	성과목표				
복지만두레 보라미 통합사례관리 지원	예산				
	성과목표				

⑷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집중 돌봄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세부사업 연차별 계획			
		2015	2016	2017	2018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조사	예산	50			
	성과목표	취약가구 선정 및 연결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전담 돌보미 배치	예산	400	400	400	400
	성과목표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전담지원단 운영	예산	150	150	150	150
	성과목표	취약가구 관리	취약가구 관리	취약가구 관리	취약가구 관리

7.2 세부사업 계획

7.2.1. 세부과제 1.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정립

1) 세부사업 1-1 : 대전시민복지기본선 마련

- 추진배경

○ 지금까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 추진은 중앙정부의 정책을 지방정부가 재정 매칭을 하는 수동적 의미가 강함.

○ 중앙정부의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다양한 영역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과 지방 특유의 사회복지 정책 개발만으로 실제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음.

○ 새로운 사회적 위험의 도래와 이에 대한 대응이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한 면밀한 평가와 향후 계획에 대한 지속적 대응 여부가 여전히 불확실함.

○ 지방 정부 차원에서 시민복지기본선에 대한 마련과 평가는 서울시에서 이미 2012년부터 시작되고 있음.

○ 따라서 대전 차원에서 시민복지기본선을 마련하고, 이를 기초로 대전시민의 복지기본선을 확인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평가하여 실질적으로 대전시민복지의 향상을 꾀하고자 함.

• 사업내용(활동)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마련을 위해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추진위원회 구성.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용역 시행 및 수행.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조례 제정

2) 세부사업 1-2 : 대전시민복지기본선 운영위원회 운영

• 추진배경

○ 향후 마련될 대전시민복지기본선은 그 내용의 확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준선이 실제 대전시민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앞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적용할 것인지, 현재 어느 정도까지 달성되었는지, 그리고 시민 입장에서 어떤 평가와 요구가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대안 마련, 목표 설정 등이 필요함. 이를 위해 대전시민복지기본선 운영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어야 함.

• 사업내용(활동)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연착륙을 위한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운영위원회 구성.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우선 순위 선정.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각 부서별 적용 기준 발표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목표 달성 평가.

3) 세부사업 1-3 : 대전시민복지기본선 평가보고회

• 추진배경

○ 향후 마련될 대전시민복지기본선은 단순히 지방 정부의 구호가 아니라 이의 달성을 위한 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함.

○ 이를 위해 대전시민기본선 확정부터 시행까지 시민의 의견 청취와 모니터링, 그리고 시행 시기와 내용에 대한 시민의 합의가 중요함. 이를 위해 대전시민복지기본선 확정 후 이의 운용 및 성과에 대한 보고회를 통해 시민의 공감 및 동의를 이끌어낼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평가 보고회 개최

○ 대전시민복지기준선 시민 의견 수렴 및 반영

7.2.2. 세부과제 2. 사회적 자본 기반 조성

1) 세부사업 2-1 : 내가 만드는 복지 마을

- 추진배경
  - ○ 2013년에 시작된 사람 존중의 대전마을 만들기 사업을 기반으로 하되, 그 중에서 재능 기부, 공동 육아, 공동 밥상 등 지역의 취약 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특화하여 집중 지원.
- 사업내용(활동)
  - ○ 재능 기부, 공동 육아, 공동 밥상 등 취약 계층과 함께 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발굴

2) 세부사업 2-2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키우기

- 추진배경
  -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은 취약 계층 위한 사업을 진행하거나, 취약 계층의 자립을 도모하는 기업이므로 이들 기업이 성장하는 것은 사회적 연대의 매우 중요한 토대임.
  -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의 성장은 지역사회의 공공과 민간의 배려가 없으면 유지와 성장이 매우 어려우므로 대전시 전체 차원에서 이들의 성장을 도모해야 함.
- 사업내용(활동)
  -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사업 분야 아이디어 공모
  -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의 품질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 지원
  - ○ 자활기업, 사회적 기업 제품 홍보 및 수요 시장 확대

3) 세부사업2-3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활동)
  - ○ 협동조합 설립, 운영을 위한 교육 확대
  - ○ 협동조합 수 늘리기
  - ○ 협동조합 간 협동을 위한 정보 교환 및 교류 확대

4) 세부사업 2-4 : 그루터기(그 자리에서 누구나! 터 잡은 데서 기초를!) 운동

- 추진배경
  - ○ 지역에 수없이 많은 체육, 문화, 예술, 독서, 여행, 등산 등의 동네 동호인들의 모임을 기초로 취약계층과 함께 지역 인재 양성의 기초를 다지자는 운동.
- 사업내용(활동)
  - ○ 동네 동호인 모임과 취약 계층의 체육, 문화, 예술 인재 발굴 및 연결

7.2.3. 세부과제 3. 복지만두레 정착

1) 세부사업3-1 : 복지만두레 도약 방안 마련

- 추진배경
  - ○ 2004년에 사업이 시작된 복지만두레는 대전의 대표 복지브랜드로서 태동기와 확장기를 거쳐 10년이 경과하고 있음. 지난 10년의 복지만두레를 점검하고, 본격적인 도약 기반을 마련할 시점이 됨.

2) 세부사업 3-2 : 복지만두레와 마을 만들기의 결합

- 추진배경
  - ○ 복지만두레는 1만 세대 결연 지원 사업 및 취약계층 지원 사업, 지역공동체 특화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사업이 마을 만들기 사업과의 결합 및 외연 확대가 필요.

3) 세부사업 3-3 : 복지만두레 보라미 통합사례관리 지원

- 추진배경
  - ○ 복지만두레 보라미는 복지사각시대 발굴을 넘어 취약 계층의 사후 모니터링의 주요 인력임. 중구에 한정된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인 '희망틔움'을 전 구에 확대할 시 이에 따른 통합사례관리 보라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

7.2.4. 세부과제 4.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집중 돌봄

1) 세부사업 4-1 :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조사

- 추진배경
  - ○ 대전시 가구원수별 가구 분포 조사 결과를 보면 1인 및 2인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에 상당수는 돌봄이나 긴급 지원이 필요한 가구일 가능성이 큼.
  - ○ 따라서 1인 및 2인 가구 중 취약성이 두드러진 가구를 선정하여 전담 돌봄 체계를 구축되어야 함.
- 사업내용(활동)
  - ○ 1인 및 2인 가구에 대한 조사를 통하여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선정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에 대한 기존의 돌봄 체계 조사

2) 세부사업 4-2 :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전담 돌보미 운영

- 추진배경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로 선정된 대상자의 경우 상시, 주기적 방문을 통하여 제도의 안내나 자원 연결, 긴급지원 등이 제공되어야 함. 이를 위해 전담 돌보미제가 운영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로 선정된 대상자별 돌보미 배치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에 대한 일상 돌봄, 제도 안내, 자원 및 긴급 지원 연결

3) 세부사업 4-3 :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전담지원단 운영

- 추진배경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에 대한 전담 돌보미 제도의 운영, 교육, 지도 점검, '희망틔움' 및 민간 사례관리기관과의 협조, 조정 등의 업무를 담당할 전담지원단 운영이 필요함
- 사업내용(활동)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주사례관리기관 및 주사례관리자 지정.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주사례관리 실태 점검.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전담 돌보미 운영.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 전담 돌보미 교육, 관리, 지도 점검.
  - ○ 취약 1인 및 2인 가구 돌봄 관련된 기관과의 협조, 조정 역할

4 행정·재정 계획

1. 인력 계획

1) 보건복지부 인력 확충 추진

○ 찾아가는 서비스 강화 등 체감도 높은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복지담당공무원 6,000여명 증원추진 (‘1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신규복지직 1,177명 포함)

- 업무부담 경감을 위해 읍면동·시군구 기능조정 및 민간연계 강화 우선 추진
- 기존 행정직 재배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화 방안 마련(지자체 합동평가지표 개선, 복지분야 2년간 전보제한 등)

○ 향후 복지업무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과 중장기 복지인력 수급계획 수립 추진

- 전달체계개편 시범사업(‘14년) 결과, 필요인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복지담당 인력규모 산출·확정 및 단계적 충원 추진(’15~‘16)
- 본청과 읍면동간·지역간 복지공무원 편차를 감안한 인력확충 및 배치방안 마련
- 2015년 공공복지전달체계 신규사업으로 동기능보강 및 희망복지지원단 강화사업으로 복지직 1,000여명 충원 계획 → 배치 문제는 안전행정부와 논의 中

2) 처우 개선 및 역량 강화

○ 장기 근무자 특별승급 확대, 근무평정 및 성과상여금 지급 시 가점 부여, 전보희망부서 우선배치 등 인사상 우대 추진

○ 개인정보 신변보호를 위한 공용이동전화 지급 등 안전한 근무여건 조성

○ 복지직공무원의 전산망 권한 확대 등 협업 환경 조성

- 특정시기에 업무가 집중되지 않도록 복지사업 시기 분산 등 업무처리시기 탄력성 확대

○ 신규직원 선 교육후 배치, 사이버 강좌 개설, 부처합동 집합교육, 동장 등 기관장 교육 실시(연2회) 등 복지담당자 교육 강화를 통한 역량강화

- 2~3년차 복지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심화과정 교육을 확대

3)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 **사업 목표**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보수 수준 및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

○ 사회복지시설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종사자들이 만족하고 일할 수 있도록 급여체계 현실화 및 근무능률 향상방안 마련

☐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14~2018년

○ 사 업 비 : 총 150억 원(시비)

○ 주요내용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및 지위향상 지원

-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구성·운영 및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
- 종사자들의 위험한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인권보호

☐ **세부사업계획**

①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구성·운영 및 근무환경 등 실태조사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구성 : 2014. 8월

- 사회복지전담공무원과 비교한 보수 수준 및 근무환경 조사, 시설별 급여체계 분석 등 : 2014. 8~12월
- 조사결과를 토대로 급여체계 현실화 및 근무능률 향상방안 등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 2015.1~6월

  * 여성 사회복지사들의 가정과 일을 양립할 수 있는 가정친화적 환경 조성 방안 포함
- 복지포인트 지급 등 복지수준 제고는 타 시·도 사례와 재정여건 등을 감안 검토 추진

② 종사자들의 위험한 근무환경에 대한 안전장치 마련 및 인권보호

- 종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가이드라인 및 인권침해 사례 예방, 위험상황 대처에 대한 행동 매뉴얼 등 마련 : 2015. 1~6월
- 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실천 수범사례 발굴 및 확대지원

☐ **연도별 사업추진일정**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단위사업	세부내용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
처우개선위원회 구성 및 종사자 실태조사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운영			■	■	■	■	■	■	■	■	■	■	■	■	■	■	■	■	■	■
	보수 수준, 근무환경 등 조사			■	■																
	처우개선 지원계획 수립					■	■														
근무환경 안전장치 마련	가이드라인, 행동매뉴얼 마련					■	■														
	실천수범사례발굴 및 확대지원					■	■	■	■	■	■	■	■	■	■	■	■	■	■	■	■

☐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

① 추진개요

- 연구추진기관 : 대전복지재단

❍ 연구기간 : 2014. 6. ~ 12.(7개월)

❍ 연구대상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전수 600개소 및 종사자 1,200명

❍ 주요내용 :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근로환경(직무내용 및 수준, 인권보장 등)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비교분석

· 대전광역시 소재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직무환경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분석

√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분석(생활시설, 이용시설)

√ 사회복지시설 대상자 유형별 분석(아동, 노인, 장애인 등)

·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연구방법 : 문헌연구, 설문조사, 처우개선위원회 및 실무자 간담회, 공청회 등

②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4. 10. 1. ~ 10. 14. (2주간)

❍ 조사대상

· 사회복지시설 대상 조사(전수조사) : 사회복지시설 625개소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조사(층화표집조사)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1,136명

※ 대전 소재 사회복지시설 중 20%를 '생활·이용시설별', '노인·장애인·아동 등의 대상별 시설유형별', '종사자 규모별(수)'에 따라 층화표집하여 125개소를 추출, 추출된 기관의 종사자 수 총 1,136명(종사자 규모에 대한 기초자료 출처 : 시 보건복지여성국)

❍ 조사내용

연번	시설 대상 조사	종사자 대상 조사
1	시설일반현황	인구사회학적 특성
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근로환경(임금 등)
3	인력현황 및 인건비 지급 개요	남녀평등과 일가정 양립
4	보수체계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보호
5	근로여건	근로환경 만족도 및 이직
6		삶의 질
7		사회복지 직무특성
8		수퍼비전 · 교육 및 훈련

③ 향후계획

- 사회복지시설 및 종사자 조사 자료 분석 및 초안 작성 : 11월
- 연구초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12월 초
- 보고서 최종본 집필 완료 및 배부 : 12월 말

☐ **기대효과**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급여체계 현실화 및 근로조건 개선으로 복지분야의 양적·질적 성장 도모

2. 전달체계 정비 계획

1) 추진 배경 및 필요성

○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사회복지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고, 그 증가율도 가장 빠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체감도가 기대만큼 높아지는 것 같지 않으며, 여전히 누락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중복에 따른 비효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 이는 복지 공급이 복지 수요의 증가 속도를 따라가고 있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겠지만, 현재의 전달체계가 복지 공급을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와 재편 과제도 간과할 수 없게 함.

○ 특히 사회복지에 대한 지방 정부의 역할이 과도하게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 정부의 책임 범위와 그 역할에 대한 재조명과 별도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전달체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과 검토가 요구되고, 이를 토대로 지방 정부 차원에서 그 지역을 중심으로 촘촘하고 든든한 전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2) 현황

○ 대전시는 2012년 대전복지재단 주관으로『대전시 공공사회복지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연구』를 수행하였음.

○ 이 연구에서는 중앙정부에서 주도했던 '희망복지지원단'의 체계와 운영상의 한계를 밝히고, 공공사례관리 운영체계의 재구조화를 제안함.

○ '희망복지지원단'의 한계는 무엇보다 통합사례관리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 자치구와 동에서 분절적으로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 제공체계 하에서는 통합사례관리가 제대로 수행되기가 어렵다는 것, 그리고 대부분 지역에서 '모든 복지' 업무가 복지전담공무원에게 맡겨지는 상황에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제공하라는 것은 실행되기 어려운 주문이라는 것임.

○ 따라서 이 연구의 제안은 현재 구 단위로 운영되고 있는 희망복지지원단의 통합사례관리 기능을 좀 더 현장에 접근시켜야 한다는 것임.

[효율화 방안 연구 결과]

○ 이를 위해 구 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 체계를 권역동 중심으로 조정하여, 권역동에 사회복지직 6급 팀장을 배치하여 이들을 주축으로 권역동에 민간 통합사례관리사를 추가 배치하고, 민간 보라미로 사례관리팀을 구성하도록 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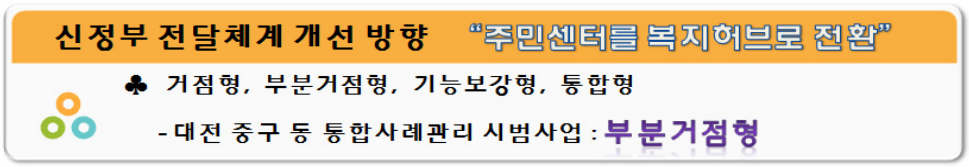
○ 한편, 민과 관 통합사례관리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지원단을 대전복지재단에 설치·운영하여 대전시의 통합사례관리를 지원하고, 이 전담 기구를 통해 솔루션위원회나 권역사례회의, 전문 컨설팅 제공 등 전문적 개입이 필요한 사례에 대해 다각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임.

○ 이 안에 따라 2013년 5월부터 5개 자치구 중 중구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 대전형 통합사례관리 시범사업인 '희망 T(tree)움'임. '희망 T(tree)움' 운영 체계는 다음 그림과 같음.

[권역팀 운영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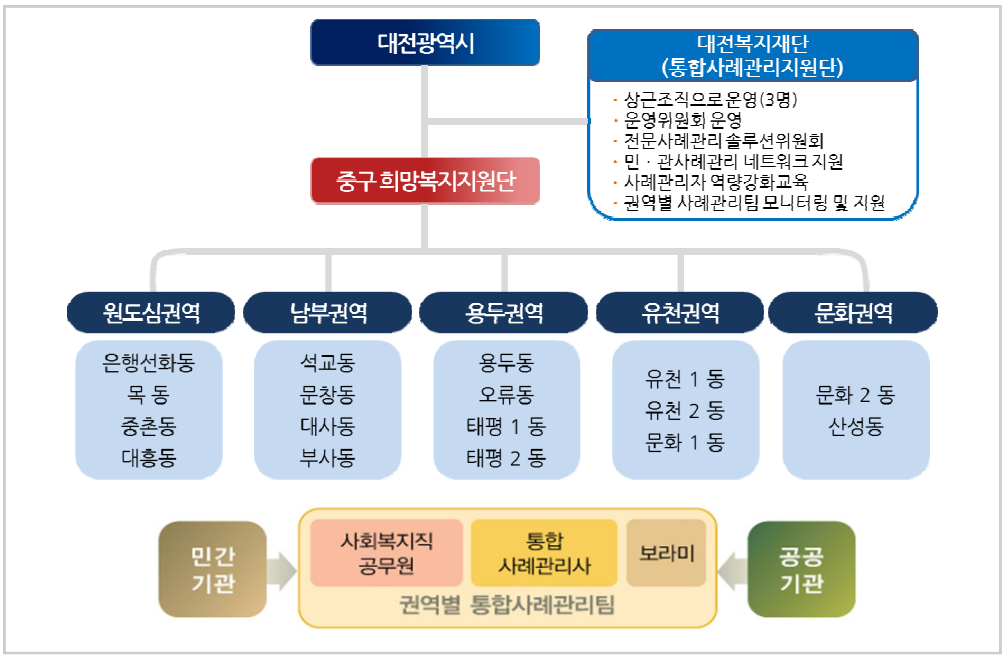
○ 이러한 안은 현재 박근혜 정부의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향과 궤를 같이 하고 있음.

[박근혜 정부 복지전달체계 개선방향]



○ '희망 T(tree)움'의 모형과 인력 배치는 다음과 같음.

[추진모형]



[인력배치]

○ 대전시 중구의 시범 사업은 두 차례에 걸친 효과성 검증 연구를 거쳐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됨.

○ 다만, 결정권자의 의지, 구청 실무자의 의지, 그리고 동장 및 팀장의 관심과 지원 등이 좀더 강조되어야 하고, 권역에서 나아가 동 중심의 민간 통합사례관리사 배치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아울러 지역의 공공 및 민간 자원의 조사와 활용도를 높일 방안을 마련해야 함.

3) 대전광역시 복지전달체계 개선 방향

(1) '희망 T(tree)움' 구축

① 세부사업 1-1 계획 : '희망 T(tree)움' 확대

• 추진배경

– '희망틔움'은 대전형 사회복지전달체계 모형으로서 대전시 중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중이며, 전달체계의 효율성을 높이는데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으며, 전국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전달체계 개편 모형 중의 하나임. 따라서 이 모형을 점차적으로 전 구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업내용(활동)

– 희망틔움 전 자치구로 확대

– 권역 단위 통합사례관리 수행을 위한 통합사례관리사, 보라미 배치

– 권역통합사례관리팀장 배치

– 통합사례관리지원단 운영

• 단계별 추진 계획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희망틔움' 확대	주요내용	3개구 희망틔움 운영	5개 구 희망틔움 운영	5개 구 희망틔움 운영	5개 구 희망틔움 운영
	성과지표	사례관리 충실화 및 대상자 만족도 증가	사례관리 충실화 및 대상자 만족도 증가	사례관리 충실화 및 대상자 만족도 증가	사례관리 충실화 및 대상자 만족도 증가

② 세부사업 1-2 계획 : '희망 T(tree)움' 구별 성과 비교 조사

• 추진배경

– 중구 '희망 틔움'을 전 구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구별 차이가 있는지, 더 나은 구조나 인력 배치에 대한 고려, 동이나 권역 특성에 대한 고려 등이 평가된다면 구나 권역에 보다 적절한 모형 적용이 가능할 것임. 이를 위해 격년으로 '희망틔움'에 대한 성과 비교가 필요함.

• 사업내용(활동)

– '희망틔움' 성과 비교 조사 연구 수행

– 비교 결과를 구 및 권역에 반영

• 단계별 추진 계획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희망틔움' 성과 비교	주요내용		3개 구 '희망틔움' 성과 비교		5개 구 '희망틔움' 성과 비교
	성과지표		비교 결과 및 반영 정도		비교 결과 및 반영 정도

(2) 지역복지자원 DB 구축 및 활성화

• 추진배경

– 통합사례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선 공공 및 민간 지역복지자원의 동원 및 활용이 중요함. 이를 위해 대전 전체의 복지자원 DB가 구축되어야 하고, 이를 실무자들이 적시적소에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유지, 활성화시켜야 함.

• 사업내용(활동)

– 지역복지자원 DB 구축 및 업그레이드

– DB 활용 활성화

• 단계별 추진 계획

사업구분		연차별 사업계획			
		2015	2016	2017	2018
지역복지자원 DB 유지 및 활성화	주요내용	지역복지자원 DB 구축	지역복지자원 DB 활성화	지역복지자원 DB 활성화	지역복지자원 DB 활성화
	성과지표	복지자원 양	이용 용이성 및 활용도	이용 용이성 및 활용도	이용 용이성 및 활용도

MEMO

MEMO

MEMO

MEMO